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

2017. 6.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4
III . 감사결과 총괄	7
IV . 분야별 감사결과	11
1. 국회감사요구사항	11
2. 문화·관광 분야	113
3. 체육 분야	229
4. 기타 분야	315
[별표 목차].....	345
V . 개별처분요구 및 통보 (인사자료)사항	406

[표 목차]

[표 1] 문체부 인력 현황	5
[표 2] 문체부 세입 예산 현황.....	5
[표 3] 문체부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6
[표 4] 계약을 통한 위탁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차이.....	29
[표 5] 플레이그라운드의 문화행사 보조금 위법·부당 수령 내역.....	41
[표 6]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사업 조성 현황.....	50
[표 7] 관광진흥개발기금(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57
[표 8] 대한승마협회 1차 요구사항.....	75
[표 9] 대한승마협회 2차 요구사항 및 제주승마협회 조치사항.....	76
[표 10] 대한승마협회 최종 점검의견.....	77
[표 11] 늘품체조 제안 경위에 대한 문체부 답변 내역.....	87
[표 12] 승마 국가대표 결격사유.....	90
[표 13] 승마 국가대표 훈련일지에 나타난 문제점.....	92
[표 14] 2014년 9월 승마 국가대표 훈련일지상 훈련일수.....	93
[표 15] 정유라 선수의 2015년 10~12월 해외훈련장 사용확인 서명 일자.....	93
[표 16]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세.....	107
[표 17]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분야 시책 추진 주요 기관 현황.....	114
[표 18]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분야 예산 편성 현황.....	114
[표 19] 관광진흥개발기금 연도별 예산 현황.....	115
[표 20]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리모델링) 사업 개요.....	173
[표 21] 경제성분석 판단기준.....	174
[표 22]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결과.....	176

[표 23]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시간표.....	180
[표 24] 경제성 분석 결과.....	186
[표 25]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과 K-Style Hub와 관련한 예산액 및 집행액....	190
[표 26] 문체부 소관 기금 변경 현황.....	193
[표 27]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미집행, 이월한 사례.....	194
[표 28] 예측가능하거나 사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삭감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례...	195
[표 29] 열린공간 및 독립공간 입주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203
[표 30] 독립공간 입주기업 사무실 출입 현황.....	203
[표 31]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총점 10점) 현황.....	205
[표 32] 연장평가 심사결과와 점수 재산정 결과.....	206
[표 33] 신청회차별 투자인정기간(2016년).....	208
[표 34]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나라장터의 2인 견적 수의계약 비교.....	219
[표 35] 사전 등록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사후 미등록 현황.....	223
[표 3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평가에 참여한 이해관계 있는 평가위원 현황...	224
[표 37] 체육 관련 재원 현황.....	229
[표 38]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229
[표 39]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 현황.....	230
[표 40] 주요 체육단체 현황.....	230
[표 41]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운용계획 금액 및 비중 현황.....	247
[표 42]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현황.....	250
[표 43]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으로 추진된 2015년 골프인식개선 사업 명세...	252
[표 44] 영재센터에 대한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지원 내역.....	283
[표 45] 강릉시 사업계획서 중복 내용.....	311
[표 46] 2016년·2017년 동계올림픽 1교 1프로그램 지원 현황.....	313

[표 47]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제 추진 내역.....	315
[표 48] 위니월드 조성사업 사업비 증액 내역.....	319
[표 49] 위니월드 조성사업비 부담 증액 내역.....	320
[표 50]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증감 현황.....	332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지난 2016년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대두됨에 따라 의혹 해소와 진실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상당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추진한 각종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고,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정농단 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이 있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국회는 2016. 12. 30.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번 감사 과정에서 국회감사요구사항도 확인하였다.

【국회감사요구사항 요지】

- ▶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영업지원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 사업(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
- ▶ 차은택과 연관된 늑골건강체조 부당지원 및 은폐, 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운영관리 부실 및 훈련수당 부당 지급, 훈련일지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의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감사 및 콤프 부적정 사용 관행, CREDIT 제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감사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일부 타 부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이유로 명시한 ①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승인과정 ②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③ K-스포츠클럽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영업지원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부당행위 ④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⑤ 밀라노엑스포 부처 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⑥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⑦ 차은택과 연관된 늘품건강체조 부당지원 및 은폐 ⑧ 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운영관리 부실 및 훈련수당 부당지급, 훈련일지 위조 의혹 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과정의 특혜 의혹 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지원 의혹 ⑪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콤프 부적정 사용 관행 ⑫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CREDIT 제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7. 1. 9.부터 같은 해 1. 13.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 19.부터 같은 해 3. 10.까지 감사인원 38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업무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2. 27.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6. 1.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¹⁾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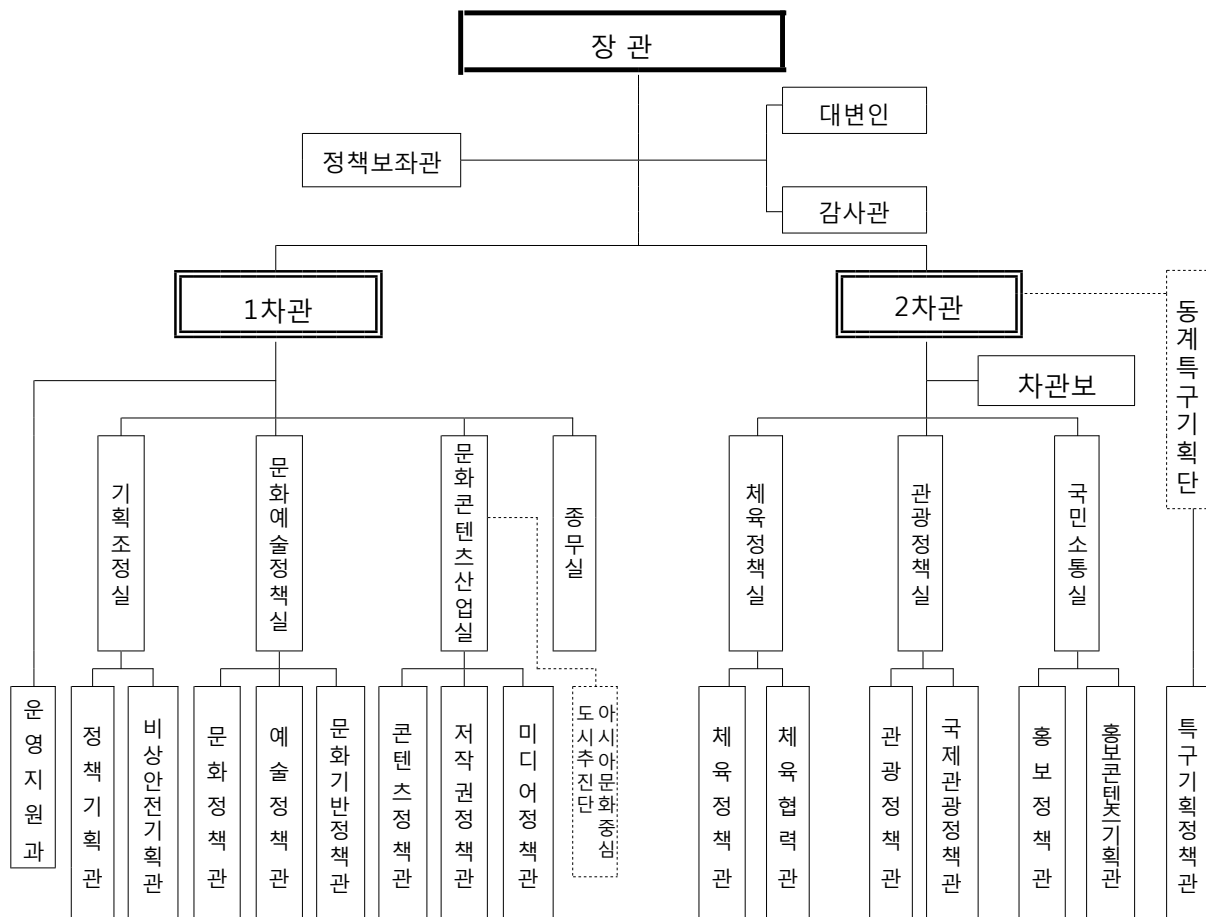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문화체육비서관실

1. 조직 현황

문체부는 2017년 2월 현재 본부의 경우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 51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해외문화홍보원 등 18개 기관이 있다.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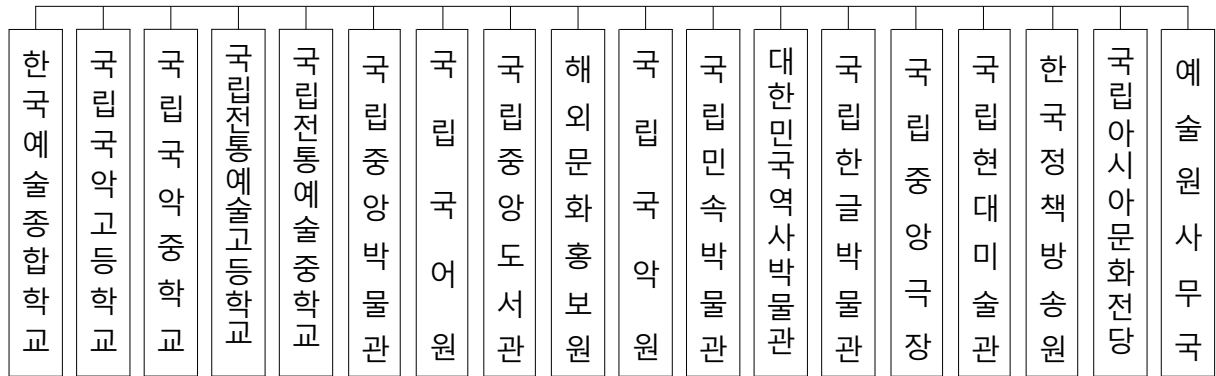
주: 1. 동계특구기획단장은 2차관이 겸임, 특구기획정책관은 관광정책관이 겸임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자료: 문체부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소속기관] 18개 기관



자료: 문체부

2. 인력 현황

문체부의 2017년 2월 현재 정원은 [표 1]과 같이 2,722명(본부 641명)이다.

[표 1] 문체부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본부	641	3	4		634
소속기관	2,081	1		272	1,808
총계	2,722	4	4	272	2,442

자료: 문체부

3. 예산과 기금 등 재정규모 현황

문체부의 2017년도 세입 예산은 [표 2]와 같이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합쳐 131,007백만 원으로 전년(132,670백만 원) 대비 1,663백만 원(△1.3%) 감소하였다.

[표 2] 문체부 세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 (C=B-A)	증감률(C/B)
합계	132,670	131,007	△1,663	△1.3
○ 일반회계	43,280	49,080	5,800	13.4
○ 지역발전특별회계	10,436	10,436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8,954	71,491	△7,463	△9.5

자료: 문체부

한편, 문체부는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소관 기금으로 6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표 3]과 같이 전년(2,832,050백만 원) 대비 73,458백만 원(2.6%) 증가한 2,905,508백만 원이고, 기금은 전년(2,858,279백만 원) 대비 66,685백만 원(△2.3%) 감소한 2,791,594백만 원으로 총 지출재정 규모는 5,697,103백만 원이다.

[표 3] 문체부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B)	증 감 (C=B-A)	증감률 (C/B)
	본예산	추 경 (A)			
지출재정 총 계	5,494,795	5,690,329	5,697,103	6,774	0.1
<예산 합계>	2,769,776	2,832,050	2,905,508	73,458	2.6
○ 일반회계	1,909,175	1,939,249	2,012,892	73,642	3.8
○ 지역발전특별회계	781,647	813,847	821,417	7,570	0.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8,954	78,954	71,200	△7,754	△9.8
<기금 합계>	2,725,019	2,858,279	2,791,594	△66,685	△2.3
○ 문화예술진흥기금	232,037	232,037	228,226	△3,811	△1.6
○ 영화발전기금	82,535	82,535	74,847	△7,688	△9.3
○ 지역신문발전기금	9,609	9,609	9,207	△402	△4.2
○ 언론진흥기금	23,557	23,557	23,195	△362	△1.5
○ 관광진흥개발기금	946,609	1,079,869	1,058,575	△21,294	△2.0
○ 국민체육진흥기금	1,430,672	1,430,672	1,397,544	△33,128	△2.3

자료: 문체부

Ⅲ.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7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만 원)

구분	합계	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일반	인사 (인원)		
건수	79	20 (28)	4 (36,384)	37	13	2 (4)	2	1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주요 행위는 크게 발생원인별·분야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발생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보조사업 업무운영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비 예산통제시스템이 미비하여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공개 공모를 통해 집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적립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를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영함에 따라 제2차관 김중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면 공모절차 등 없이 해당 단체나 개인에 예산이 지원되었고,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예산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제2차관 김중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에게 법적 근거 없는 빙상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위탁사업비로 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자 외부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지원됨으로써 2016년 연간 34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

둘째,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재검토 건의 등 의견개진 없이 지시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배제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문화 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무상의 독립성을 훼손하였으며,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특혜 선정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소속 태권도시범단인 K-스피릿을 태권도 시범행사에 참여시켜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제2차관 김중의 지시에 따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하 “최서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지원하고 차은택과 관련된 늘품건강체조를 보급하였다.

또한, 문체부 관련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는 제2차관 김중의 요청에 따라 채용·입찰절차를 무시하고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선수를 채용하고 더블루 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KL사회공헌재단은 제2차관 김중과 GKL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당초 지원 계획에 없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예산 2억 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와 문체부는 차은택과 관련된 300억 원 규모의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추진(B/C 분석결과 0.71)하였고, 직장에 재직 중이어서 전일제 교육이 어려운 교육생을 절반 이상 선발하고 교육생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교육사업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분야별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감사요구사항

- ▶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에 재단법인 설립 시 필수요건인 설립자 재산 출연, 정관날인과 인감증명서 일치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재단법인 설립 허가
- ▶ 문체부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주)플레이그라운드를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자 특혜인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15억 원)을 교부하였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태권도시범단인 K스피릿을 참여시켜 예산 1억 원 낭비
- ▶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은 K-스포츠클럽육성사업의 사업권 선정 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도와 줄 것을 지시하고,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부당 지시
-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분야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기금 변경을 위한 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 밀라노 엑스포 총괄감독은 전시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데도 공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차은택으로 하여금 총괄감독 임무를 수행토록 허용
- ▶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는 부당하게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과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으며, 담당자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

2. 문화·관광분야

- ▶ 문체부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를 산하 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
- ▶ 검증 소홀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B/C 0.71)이 부족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되었고, 교육생 선발 후 학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설립 목적도 미달성
- ▶ 공모절차도 없이 국고보조사업(글로벌 광고인재센터 사업)에 (사)○○○을 선정하여 2015~2016년 2년간 10억 원 지원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사로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차은택이 추천한 (주)○○○의 견적만 받아 해당 업체를 부당 선정(계약금액 34억 원)하였고, 기준과 다르게 산정된 이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업체에 2억여 원 과다 지급

- ▶ 국가브랜드 홍보용역 수행업체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㉔㉔(주)를 선정하여 구두로 발주하였고, 홍보용역이 취소되자 용역비 보전을 위해 다른 '홍보전략기획용역'을 수의계약(95백만 원) 체결

3. 체육분야

- ▶ 공익사업적립금 등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11개 사업(9억여 원) 부당지원
-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민간위탁사업자인 (주)㉔㉔에 빙상팀을 창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이 체육진흥기금으로 2016년 빙상팀 창단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원금액(34.4억 원)만큼 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 초래
- ▶ 공모절차도 없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6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1.3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
- ▶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한 (주)㉔㉔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 연구비 1.4억 원을 부당 수령하였는데도 환수하지 않고 방치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운용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예산통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IV. 분야별 감사결과

1.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결과 요약>

국회가 요구한 12개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법인 설립 승인과정’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에 「민법」 등에서 규정한 재단법인 설립 시 필수요건인 설립자 재산 출연, 정관날인과 인감증명서 일치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검토를 태만히 하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주)플레이그라운드를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자 특혜인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 15억여 원을 교부하였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태권도시범단인 K스피릿 참여 시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행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주)플레이그라운드는 항공권 인보이스를 조작하는 등 보조금 52백만 원을 부당하게 정산하였다.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의 부당 선정·참여를 그대로 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촉구를 요구하고 부당 정산한 52백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허위 정산한 (주)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하였다.

◎ ‘K-스포츠클럽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영업지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이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사업권 선정 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도와줄 것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자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과 함께 지자체를 출장 방문하는 등 지원하였으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최종 사업권 선정 시 탈락하였고, 자문위원 위촉도 대한체육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김종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점검한 결과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범위는 관련 규정상 관광목적뿐 아니라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문체부가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범위에 부합되어 부적절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었다.
 -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관광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위 변경 증액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서울사옥 리모델링, 한식전시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령을 위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업체가 설계 변경 사유로 증액요구한 12억여 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광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공사계약과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 ‘밀라노엑스포 부처변경 및 차은택 감독 선임’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밀라노엑스포 개막을 7개월 앞두고 소관부처가 급하게 바뀐 점은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소관부처 변경이 결정되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 그리고 밀라노엑스포가 전시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으므로 차은택 감독 선임 변경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다만 총괄감독은 전시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데도 문체부는 차은택을 총괄감독으로 공식 임명하지 말라고 한국관광공사에 지시하여 총괄감독이 서면 계약체결도 없이 국가 주요 행사를 담당하였는바, 이점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앞으로 국가 중요행사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계약서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 ‘2014 전국체육대회 승마장소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히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대한승마협회와 제주도간 이견에 대해 뒤늦게 대응함으로써 충분한 조정없이 대한승마협회의 의견에 따라 경기장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장에게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중앙경기단체간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점검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 ‘농품건강체조 부당지원 및 거짓 해명 요청 은폐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문체부는 과학적 검증이 안된 농품건강체조를 2015년 국민체조로 보급하였고, 농품건강체조 개발 경위에 대한 국회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앞으로 과학적 검증이 안된 체조를 보급하거나 국회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

◎ ‘승마국가대표 운영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 2015년 승마국가대표선수인 정유라의 활동기록, 대회출전기록 등이 없었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가대표 유지기간은 1년이므로 정유라의 국가대표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었고, 훈련 일지가 부실 작성되었으나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 한편, 대한체육회는 대한승마협회가 제출한 부실한 훈련결과보고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유라 등 승마국가대표선수에게 선수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장에게 선수수당 등에 대한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 ‘GKL의 장애인 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 GKL 대표이사는 사규에 따라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채용절차 없이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계약을 지시하고, 입찰절차도 없이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으며,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전속계약금(60백만 원)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GKL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구하였다.

◎ ‘GKL의 콤프 부적정 사용 관행’에 대해 점검한 결과

-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업소에서 콤프가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GKL이 성매매 등으로 행정처분된 업체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해당 업소에서 콤프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대해 GKL대표이사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 예산 지원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 GKL 대표이사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의 부탁을 받고 GKL사회공헌재단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예산(2억 원)을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GKL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구하였다.

◎ ‘GKL 크레딧 제도의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 GKL은 2013년 신고 없이 국내 크레딧 에이전트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지적되어 과태료 16억 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2015년 1월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현재는 관련 법령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승인과정 관련

국회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승인과정이 이례적이고 불투명한 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 처리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5. 10. 26.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로부터 한국 전통문화 발굴 및 지원, 한국 문화예술 브랜드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미르(출연금액 469억 원, 대표자 A, 이하 “미르재단”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 후 같은 해 10. 27. 미르재단 설립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2016. 1. 12. 전경련으로부터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 종목별 인재 양성, 체육 교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출연금액 269억 원, 대표자 B, 이하 “K-스포츠재단”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 후 같은 해 1. 13. K-스포츠재단 설립을 허가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및 출연사실 증명서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관련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설립자가 날인한 정관, 재산출연증서 등을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로 받고 있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²⁾(2014년 법무부) Part 2. 민법상 비영리법인, Chapter 1. 법인의 설립, 01. 법인설립절차, 주무관청의 허가서 교부, 나.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 (2) 기속적 검토사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 시 설립발기인의 재산출연증서 및 정관의 날인,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상 날인과 인감을 대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한 것을 확인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재산출연증서 및 정관에 날인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형적)과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는 것은 기명 날인자인 설립자가 실제 재산을 출연하였고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재단의 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 등 재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용인감계³⁾와 대조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 「민법」에서 정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거나 정관 및 재산출연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 등의 인영과 일치하지 않아 설립자 의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설립신청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요청하고, 보완 불능 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민법」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민법」에 규정된 법인(재단 및 사단) 편이 너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업무 담당자들이 법인의 설립 및 허가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위 기관들에 배포한 편람
3) 기업체 등 법인에서 인감 대신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인장을 사용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미르재단의 경우

문체부 ○관 C와 □과장 D는 2015. 10. 22. 오후2시경 대통령비서실에서 개최된 한류 관련 회의⁴⁾에 함께 참석하였고, 이때 회의를 주재한 경제수석비서관실 △관 E (현 기획재정부 ⊗관)로부터 전경련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법인 현판식⁵⁾을 2015. 10. 27.에 해야 하니 문체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 요청을 받은 C는 D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D는 같은 과에 근무 중인 F에게 전경련 ▷팀장 G와 연락하여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면서 법인설립이 허가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F는 G에게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안내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접수 전인 2015. 10. 22.경⁶⁾ G로부터 이메일로 미르재단의 설립자 날인이 없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받고⁷⁾ 이를 검토하면서 H와 D에게도 수령한 정관 등을 전달하였고, H와 D도 정관 등을 미리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F는 D의 지시⁸⁾에 따라 2015. 10. 26. 서울특별시 ㄱ동에 있는 문체부 사무소로 출장을 가서 G로부터 같은 날 17시경 미르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원본을 수령하였다.

4) 전경련 ▽본부장 IP와 ▷팀장 G도 참석함

5) E는 재단법인 현판식을 2015. 10. 27.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날까지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함

6) F는 G로부터 이메일로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받은 날짜가 2015. 10. 26.에 서울 ㄱ동 사무소로 출장을 가기 2~3일 전이라고 기억하고, 담당관 H는 정확하지 않으나 10. 22.경이라고 기억함

7)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에는 출연자들의 날인 등이 없었음

8) D는 G의 요청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류 원본을 서울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F에게 출장을 지시함

그 후 F는 위 사무소에서 G로부터 수령한 신청서류 원본 중 미르재단의 재산 목록 등 일부를 스캔하여 문체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인 나루시스템에 신청서 접수를 하기 위해 D에게 결재⁹⁾를 상신하였다.

이후 F는 설립대표자인 A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자 20인 중 14인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른 인장을 정관에 날인하는 등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20시 07분에 미르재단 법인설립 허가문서를 기안¹⁰⁾한 후 20시 10분 H, 20시 27분 D가 결재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5. 10. 27. 08시 09분 C는 F가 상신한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 문서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는데도 F 등에게 보완 요청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결재하여 09시 36분 ◇실장 R의 전결로 미르재단의 설립이 허가 되도록 하였다.

2) K-스포츠재단의 경우

한편, 문체부 ●관 S와 ■과장 T는 2016. 1. 8. 대통령비서실 ☉관실 행정관 U(현 □원장)로부터 전경련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위 요청을 받은 S는 2016. 1. 11. T와 V에게 법인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허가해주라고 지시하였고, T는 V에게 G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안내를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9) D는 2015. 10. 26. 19시 37분경에 재단설립 신청서류의 접수 선람 결재를 하였고, H는 19시 48분에, F는 20시에 선람

10) 미르재단 설립허가 기안문에 '재단법인 미르 설립허가 검토', '법인 정관', '법인설립 허가서' 등이 첨부되었으며 이 중 정관은 재단설립자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V는 G에게 재단법인 설립 관련 안내를 하였고, 2016. 1. 12. 2차례(14시경 및 18시경)에 걸쳐 전경련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PDF파일로 접수¹¹⁾하여 이를 출력한 후 W 및 T에게 제공하여 재단법인 설립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V는 설립대표자로 명시된 B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자 20인 중 16인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른 인장을 정관에 날인하는 등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6. 1. 12. 20시 24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 등을 첨부¹²⁾하여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문서를 기안하였고, 같은 날 20시 25분 W, 같은 날 21시 16분 T가 결재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6. 1. 13. 10시 8분 S는 V가 상신한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신청 문서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는데도 V 등에게 보완 요청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위 기안문을 결재하여 같은 날 10시 14분 ▲실장 X의 전결로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미르재단의 경우

(1) H의 경우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과 H는 2015. 10. 26. 19시 48분경 F가 나루시스템에 올린 미르재단 설립허가 신청 접수 문서(문서명: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를 선람¹³⁾하면서, 첨부¹⁴⁾된 미르재단의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증서를 보고 재단설립자 중 설립대표자인 A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1) 원본 신청서류는 2016. 1. 13. 9시 30분경 문체부에서 수령함

12) ‘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 ‘케이스포츠재단 정관’,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한글 파일로 첨부

13) F가 G로부터 수령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전자화 하고,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같은 부서 내부에 알리는 신청문서 등록과정(전자결재 시스템에서의 문서접수 행위)

14)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예정자 및 취임승낙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증서’를 PDF 파일로 첨부

그런데 H는 F가 작성한 미르재단 설립 허가 기안문(문서명: 재단법인 미르 법인 설립 허가)을 검토하면서 첨부된 미르재단의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증서를 검토하지 않아 F에게 설립자 재산 미출연 흠결을 보완 요청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시 10분경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더욱이 H는 F가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미르재단 설립 허가 기안문에 첨부¹⁵⁾된 파일 중 ‘법인정관’이 위 신청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이 아니라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자들이 정관에 인장을 날인한 내역과 간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H는 정관과 재산출연증서에 날인된 인영을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와 비교하고 설립자가 모두 간인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F가 기안한 법인설립허가 문서를 결재하여 2015. 10. 26. 20시 27분 D, 같은 해 10. 27. C의 검토 후 R의 최종 결재로 위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민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설립대표자 A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으며, 재단 설립자 20인 중 ㉠주식회사(대표이사 I, J, K) 등 14인¹⁶⁾이 사용인감계 제출도 없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른 인장을 정관에 날인하였고 --주식회사(대표이사 L)의 경우 정관에 날인된 인장과 재산출연증서에 날인된 인장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관 각 장마다 20개의 날인이 있어야 하나 정관 마지막쪽에는 20개의 간인이 있고 그에 연결된 재산총괄표에는 18개의 간인만 찍혀 있는 등 신청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도 미르재단 설립이 허가되도록 하였다.

15) ‘재단법인 미르 설립허가검토’,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서’를 한글 파일로 첨부

16) A 및 ㉠주식회사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정관 등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하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등 6인은 인감과 동일하거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2) D의 경우

청년위원회 ▶부 과장 D는 2015. 10. 26. 19시 37분경 나루시스템을 통해 미르재단 설립허가 신청문서(문서명: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결재하면서, 첨부된 미르재단의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증서를 보고 재단설립자 중 설립대표자인 A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D는 F가 작성한 미르재단 설립 허가 기안문(문서명: 재단법인 미르 법인 설립 허가)을 검토하면서 A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토를 태만히 하여 F나 H에게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시 27분경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더욱이 D는 F가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미르재단 설립 허가 기안문에 첨부된 정관의 파일이 위 신청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이 아니라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자들이 정관에 인장을 날인한 내역과 간인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F가 정관의 날인 및 간인 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그 결과 D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를 태만히 하여 “4-1)-(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K-스포츠재단의 경우

(1) V의 경우

◆실 ♠관실 ♥과 V는 2016. 1. 12. 14시경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전경련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설립자들의 재산출연증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전체를 PDF 파일로 받아 이를 검토하면서 정관 및 창립총회회의록에 B 등 설립자 20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자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여 18시경에 인감이 날인된 정관 등을 다시 받았다.

그런데 V는 설립대표자로 명시된 B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검토한 재산출연증서를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B가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어 설립자가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하였다.

또한 V는 위 재단 설립 신청서류 중 정관에 기명날인된 20인의 설립자 중 ○○주식회사(대표이사 M) 등 16인의 설립자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른 인장을 정관에 날인하면서 사용인감제도 제출¹⁷⁾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지 않았다.

더욱이 K-스포츠재단의 설립자는 20인으로 정관에 날인된 간인은 각 장마다 20개여야 하나 정관 제30조 내지 제34조가 기재되어 있는 장에는 21개의 간인이 날인된 반면 설립자로서 기명날인한 장¹⁸⁾에 날인된 간인은 18개에 불과한 등 정관의 간인 숫자에 흠결이 있었는데도 2쪽 정도의 일부 간인만을 확인하고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 검토를 태만히 하여 「민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설립자의 재산 미출연, 정관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 불일치 등 중대한 흠결이 있는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기안하였다.

그 결과 V는 2016. 1. 12.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기안문을 작성하여 W에게 상신하였고, 이후 T 등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 13. S의 결재 후 X의 최종 결재로 위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게 하였다.

17) B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정관 등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및 ※주식회사(대표이사 P)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등 4인은 인감과 동일하거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18) 주식회사 ○○ 내지 주식회사 ☆☆가 설립자로서 기명날인한 장

(2) W의 경우

◇실 ♣관실 ♠과장 W는 V로부터 2016. 1. 12.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신청 서류 PDF 출력본 일체를 전달받아 신청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고, V가 2016. 1. 12. 20시 24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기안하면서 첨부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¹⁹⁾ 등 첨부 문서도 결재 전에 미리 전달받아 검토하였다.

그런데 W는 위 신청서류 PDF 출력본²⁰⁾ 및 허가 기안문의 첨부 문서²¹⁾를 검토하여 설립대표자인 B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재단설립자 모두가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하는 등 검토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또한 W는 법인 설립 시 출연자들의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정관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위 재단 설립 신청서류 중 정관에 기명날인된 20인의 설립자 중 ○○주식회사(대표이사 M) 등 16인의 설립자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른 인장을 정관에 날인하면서 사용인감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하거나 V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4-2)-(1)항”의 내용과 같이 정관의 간인에 흠결이 있었는데도 W는 간인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V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채 V가 2016. 1. 12. 20시 24분에 기안하여 올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불과 1분 후인 20시 25분에 결재하였다.

그 결과 W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를 태만히 하여 “4-2)-(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19) V가 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작성한 신청서류 검토보고서

20)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출력하여 재산출연증서 등을 살펴보면 B의 재산 미출연 사실을 알 수 있음

21) 첨부 문서 중 V가 작성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를 살펴보면 B의 재산 미출연 사실을 알 수 있음

(3) T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과장 T는 V로부터 2016. 1. 12.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류 PDF 출력본을 전달받아 신청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T는 위 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재산출연증서 등을 통해 설립대표자인 B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²²⁾을 알 수 있었고, V가 20시 24분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문서를 기안하면서 첨부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를 통해서도 B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하여 V나 W에게 추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채 V가 2016. 1. 12. 20시 24분에 기안하고, W가 20시 25분에 결재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문서에 21시 16분에 결재하였다.

또한 T는 위 재단 설립 신청서류 중 정관에 기명날인된 20인의 설립자 중 ☉☉ 주식회사(대표이사 M) 등 16인의 설립자가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장을 정관에 날인하면서 사용인감계도 제출하지 않았는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한 채 직접 검토하거나 V나 W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4-2)-(1)항”의 내용과 같이 정관의 간인에 흠결이 있었는에도 T는 직접 신청서류를 검토하였으면서도 간인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V나 W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채 V가 기안하여 상신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문서를 결재하였다.

그 결과 T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를 태만히 하여 “4-2)-(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2) T는 문답에서 재단법인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 건의 경우 설립자들의 재산출연증서와 인감을 비교하느라 B의 재산 미출연을 간과하였다고 진술함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이 건 관련 전반적인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이견이 없고 「문체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문체부는 재산출연과 관련하여 「민법」 제43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에는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은 없고,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의 다수의 설립자 중 설립 대표자 1인이 재산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각 재단법인의 설립대표자는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어서 설립대표라기보다는 법인의 대표자 개념으로 보고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요한 흠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재단의 목적,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 등 중요사항을 정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것이 법정사항이므로 재산 미출연자는 설립자가 될 수 없고, 설립자들을 대표하는 설립 대표자도 될 수 없는 중요한 흠결이며, 이에 따라 정관에 설립대표자로 기명날인한 A와 B가 단지 이사장 취임 예정자이기 때문에 설립대표자가 아니라는 답변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민법」에서 정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문체부는 인감대조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인감대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민법」 제43조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에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용어사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 인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라고 해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명날인의 용어해설은 어음·수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위 설명에서도 은행거래에서 미리 신고한 인감과 인영을 대조한 경우 면책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에 기명날인한 인영과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 인영의 일치 여부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법무부가 각 중앙행정부처 등의 법인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만든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2014년 법무부)에도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 설립자의 날인 등을 인감과 대조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명날인 시 인감(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인장)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③ 문체부는 간인에 대해서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없고, 실무자들이 정관의 간인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나 모든 간인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항이 중대한 흠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간인(間印)이라 함은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그 용지가 서로 이어졌다는 것과 위·변조 방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각 장마다 도장의 반분이 찍히도록 도장을 누르는

것으로서 단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단운영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인 정관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설립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를 태만히 하여 일부 설립자의 재산 미출연 등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V, H, W, D, T, S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V, H, W, D, T: 경징계 이상, S: 정직)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0번 참조】

※ V는 이 건 행위와 ‘2-(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계약업무 부당 처리’,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5) 스포츠인 역사보존 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9번 참조】

※ W는 이 건 행위와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8번 참조】

※ T는 이 건 행위와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7번 참조】

※ S는 이 건 행위와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44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및 관련 규정 불합리’,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5번 참조]

② 앞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민법」에서 규정한 재단법인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요건 흠결이 있는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인설립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관련

국회는 대통령의 해외순방행사와 관련하여 플레이그라운드와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 선정 및 정산 부담 처리

1. 업무 개요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이라 한다)은 2016. 3. 28.과 같은 해 5. 20.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Y,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한다)에 “멕시코 문화행사”(교부금액: 459,685,000원, 행사일: 2016. 4. 3.) 및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교부금액: 1,114,930,000원, 행사일: 2016. 5. 28.~5. 31.) 대행을 맡기기 위해 계약 대신 국고보조금을 각각 교부하여 대통령 해외 순방계기 문화행사를 추진하였다.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부적정

1) 대통령 해외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관련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5. 4. 1. 기획재정부 지침) II. 14.에 따르면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단순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사업”은 계약을 통한 위탁사업비(210-15목)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²³⁾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4] 계약을 통한 위탁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차이

구분	계약을 통한 위탁사업	민간보조 사업
근거 법령	국가계약법	보조금법
사업 대상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단순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사업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주체	국가	국가 외의 자
사업자 선정 방법	·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고, 법령에 열거된 예외의 경우만 수의계약 가능 · 보안상 필요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	·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외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지정 가능

자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국가계약법, 보조금법

이처럼 ‘계약을 통한 위탁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은 [표 4]와 같이 근거 법령, 사업 대상, 사업 주체,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서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해문홍은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해외 순방계기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 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행사대행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방법으로 행사대행 업무를 위탁하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여러 업체가 제출하는 견적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3) 기획재정부의 2010. 11. 11. 견적서 제출제도의 취지 관련 유권해석(계약제도과-366)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문홍 ♣과 Z와 ♣과장 AA는 2016. 1. 20.경과 같은 해 2월(정확한 날짜 모름) 각각 대통령비서실 ●관 AB²⁴⁾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를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문홍 원장 AC에게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하도록 지시받았다는 내용만 보고하였을 뿐 보고 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다른 대행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해문홍은 위 문화행사 개최가 가까워오자 2016. 3. 28.과 같은 해 5. 20. 각각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대행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업무 위탁하지 않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대로(멕시코: 459,685,000원, 아프리카 3개국: 1,114,930,000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해문홍은 국가행사를 대행해본 경험도 없고 사실과 다른 실적²⁵⁾을 제출하는 등 순방계기 문화행사를 대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위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고, 문화행사 대행업체 및 대행 용역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24) AB는 대통령비서실 ●관 AF로부터 문화행사 대행업체를 플레이그라운드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AB의 지시를 받은 행정관 AG가 2016. 1. 20.경 해문홍 Z에게 전화하여 플레이그라운드를 멕시코 문화행사 준비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하였으며, Z가 같은 해 2월경 AB에게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도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행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음(AF는 AB에게 플레이그라운드로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AB와 진술 상충)

25)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 3. 24.과 같은 해 5. 20. 주요사업실적으로 '미르재단 K-Project 실행'을 기재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의료재단 소녀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용역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마저도 용역 계약일자는 2016. 5. 12.로 멕시코 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같은 해 3. 24.보다 나중임)

2) 태권도 시범단의 문화행사 참여 승인 관련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을 위하여 국기원²⁶⁾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기원 시범단은 1974년 창단 이래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을 순회하며 공연하여 품새와 격파 등 정통 태권도 시범에 강점을 가진 실력이 검증된 단체이며 단중 심사 등을 통한 자체 수입이 있어 국가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²⁷⁾ 외에는 행사 참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해문홍은 [별표 1] “태권도 시범단의 국외 문화행사 참여 시 예산소요 내역”과 같이 품새와 격파 등 정통 태권도 시범으로 공연할 경우에는 주로 국기원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태권무 등 음악과 결합한 공연을 할 경우에는 민간 시범단인 **++**²⁸⁾를 행사에 참여시키고 있다.²⁹⁾

따라서 해문홍은 문화행사 대행업체의 행사계획에 태권도 시범공연이 포함될 경우 과거 유사 문화행사 참여 경험에 있는 국기원이나 민간 태권도 시범단 등과 공연 내용 및 소요 예산 등의 비교를 한 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태권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7) 국외공연 시 사례비는 지급받지 않고, 공연 별로 시범단원 1인 당 10만 원의 훈련비만 지급받음

28) 1990년 창단하였고 태권도와 K-POP 등 음악을 접목한 다수의 해외 공연 경험을 갖추고 있음

29) 해문홍이 행사계획 수립 시부터 문화행사 대행업체와 행사 준비회의를 하며, 공연팀 선정도 같이 논의한 후 최종 승인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문홍은 이란³⁰⁾과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에서 품새와 격파 등 정통 태권도 시범을 계획하면서도 2016년 3월(정확한 날짜 모름) 대통령비서실 ㉠관 AF가 K-스포츠재단에서 창단할 예정³¹⁾인 태권도 시범단 ‘K스피릿’을 순방계기 문화행사 공연팀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³²⁾하자, 국기원이 참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사례비 등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태권도 시범단과 공연경험이나 예산 소요액 등을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29.(아프리카)과 같은 해 4. 12.(이란) 태권도 시범공연을 K스피릿이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행사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등 K스피릿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하였다.³³⁾

그리고 K스피릿은 2016년 4월(정확한 날짜 모름)³⁴⁾과 같은 해 5. 13. 각각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이하 “☆☆”이라 한다)과 플레이그라운드에 이란 및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출연 건적서를 제출하며 [별표 1] “태권도 시범단의 국외 문화행사 참여 시 예산소요 내역”과 같이 사례비(이란: 20,000,000원, 아프리카 3개국: 45,000,000원)뿐만 아니라, 공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생 태권도 시범단이어서 문화행사 공연을 하기 위한 훈련비(이란: 7,403,400원)와 프로그램제작비 및 안무·음악감독 인건비(이란: 10,700,000원, 아프리카 3개국: 3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각각 계 42,800,000원과 계 77,000,000원을 요구하였다.

30)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 계약금액: 447,813,240원, 행사일: 2016. 5. 2.

31) K스피릿은 2016. 4. 25.에야 단원들과 정식 계약하였고, 같은 해 5. 2. 이란 문화행사에서 첫 공연(2016. 4. 14.부터 전라북도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에서 합숙하며 문화행사 대비 훈련 실시)

32) 대통령비서실 ㉠관 AF가 2016년 3월 초경 ㉠관 AB를 통해서 K스피릿을 태권도 시범단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전달

33) K스피릿은 멕시코 문화행사부터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공연 준비가 부족하자 문화체육관광실이 국기원으로 공연 시범단을 변경하였음

34) K스피릿은 2016. 4. 28. 이란 문화행사를 대행한 ☆☆에 건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문홍이 같은 해 4. 26. 이미 K스피릿의 사례비 등 계 42.8백만 원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4. 26. 이전부터 해문홍은 건적금액을 알고 있었음

이후 해문홍은 2016. 4. 27.과 같은 해 5. 20. 이란과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시 각각 42,800,000원과 77,000,000원 등 계 119,800,000원을 K스피릿에 지급하는 견적서대로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플레이그라운드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³⁵⁾

그 결과 위 순방행사는 정통 태권도 시범으로 진행되어 정통 태권도 시범에 강점이 있는 국기원 참여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해보면 국기원은 해외 시범공연 훈련비로 3,800,000원[2,000,000원(이란, 20명) + 1,800,000원(아프리카 3개국, 18명)]만 소요되는 반면 K스피릿은 위 2개 행사에 행사용품(송판, 대리석)과 물품 이송비 등 태권도 시범에 필요한 공통 운영비는 제외하더라도 계 115,103,400원이 소요되어 예산 111백만여 원(115,103,400원 - 3,800,000원 = 111,303,400원)을 낭비하였다.

3)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AC의 경우

가. 대통령 해외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부당 선정

◆실장 AC는 2015. 3. 31.부터 2016. 4. 3.까지 해문홍 원장으로서 2016. 1. 20. Z로부터 “◆실 행정관 AG가 플레이그라운드의 AH를 같은 해 1. 22.에 열릴 멕시코 문화행사 대비 자문회의에 참석시키라는 전화를 하여 AH를 참석시켰고, 플레이그라운드가 멕시코 문화행사 주관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또한, AC는 Z로부터 2016년 2월경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도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행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관 AB에게 확인받았다”는 내용도 보고받았다.

35) 해문홍 원장부터 과장, 사무관, 주무관까지 전원이 국기원이 더 나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충분히 K스피릿을 대체할 수 있었고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까지 있기에,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국기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진술

따라서 AC는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해외 순방계기 문화행사 개최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방법으로 행사대행 업무를 위탁하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AC는 AB가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 등 국가행사를 대행해 본 업체들이 아니라 처음 들어 알지 못한 업체³⁶⁾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지정한 데 대하여 의문을 가졌으나³⁷⁾, Z 등 실무자에게 국가행사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용역대가 비교 등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 1. 22. 멕시코 문화행사 준비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해 3. 2. 부터 3. 11.까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대비 사전답사를 다녀오는 등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사실상 결정하였다.

게다가 AC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Z 등 실무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은 채 2016. 3. 28.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출한 견적서(459,685,000원)를 그대로 인정하고 멕시코 문화행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를 결재하였다.

그 결과 AC는 “2-1)항”의 내용과 같이 국가행사를 대행해 본 경험도 없고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를 대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플레이그라운드에 국가계약법 등과 다르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특혜를 주었고,

36) 2015. 10. 12. 법인 설립

37) 해문홍 원장 AC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조차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실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플레이그라운드에 견적서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가행사를 경험해본 다른 업체들을 찾아보았을 것이라고 진술

문화행사 대행업체 및 대행 용역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나. 민간 태권도 시범단 문화행사 참여 부당처리

AC는 2016. 3. 29. Z로부터 케이 프로젝트(K-Project) 관계부처 회의에서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태권도 시범단으로 K스피릿을 검토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국기원이 아닌 K스피릿이 참여하게 될 경우 사례비 등으로 인해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내용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C는 대행업체의 문화행사 계획에 태권도 시범공연이 포함되었다면 과거 유사 문화행사 참여 경험에 있는 국기원 및 민간 태권도 시범단 등과 공연내용 및 예산 소요 등을 비교한 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AC는 Z로부터 K스피릿 참여 시 다른 태권도 시범단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는 등 K스피릿의 참여를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에 K스피릿이 참여하면서 사례비 등으로 77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위 순방행사는 정통 태권도 시범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정통 태권도 시범에 강점이 있는 국기원 참여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해보면 국기원은 18명의 시범단원이 공연 시 180만 원의 훈련비만 소요되는 반면 K스피릿은 77백만 원이 소요되어 예산 75백만여 원을 낭비하였다.

(2) AI의 경우

해문홍 ■과장 AI는 2016. 3. 7.부터 같은 해 7. 3.까지 ♣과장으로 2016. 4. 11. 이란 문화행사 준비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K스피릿의 공연이 문화행사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국기원이 아닌 민간 태권도 시범단 K스피릿을 문화행사에 참여시킬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생 태권도 시범단이기 때문에 훈련비 등까지 지원이 필요하여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I는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계획에 태권도 시범공연이 포함되었다면 과거 유사 문화행사 참여 경험에 있고 대체 가능한 공연을 하는 국기원 및 민간 태권도 시범단 등과 공연내용 및 예산 소요 규모 등에 대한 비교를 한 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 등을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AI는 K스피릿이 참여하는 이란과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공연은 국기원이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K스피릿을 순방계기 문화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례비뿐만 아니라 훈련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예산소요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기원이나 다른 민간 태권도 시범단과 비교한 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Z 등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AI는 2016. 4. 26.과 같은 해 5. 20. 이란 문화행사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시 각각 42,800,000원과 77,000,000원 등 계 119,800,000원을 K스피릿에 지급하도록 작성된 견적서대로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플레이그라운드에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그 결과 AI는 “2-2)항”의 내용과 같이 K스피릿을 대통령 해외 순방계기 2개 문화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국기원을 참여시켰을 경우에 비해 예산 111백만여 원을 낭비하였다.

(3) AJ의 경우

◎실장 AJ는 2016. 3. 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관 또는 해문홍 원장으로서 2016. 3. 29. K-Project 관계부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아프리카 3개국 문화 행사에 K스피릿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Z는 같은 해 4. 11. 이란 문화 행사 준비회의에 다녀온 다음 날 문화체육비서관실의 검토 지시로 이란 문화행사에도 K스피릿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국기원이 참여할 경우와 비교하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AJ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AJ는 대행업체의 문화행사 계획에 태권도 시범공연이 포함되었다면 과거 유사 문화행사 참여 경험에 있고 공연내용으로 볼 때 대체가능한 국기원 및 민간 태권도 시범단 등과 예산 소요 규모 등에 대한 비교를 한 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AJ는 국기원이 아닌 K스피릿을 문화행사에 참여시킬 경우 사례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Z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에도, 문화체육비서관실이 K스피릿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유로 Z 등 실무자들에게 견적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AJ는 2016. 4. 26.과 같은 해 5. 20. 이란 문화행사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 행사 시 각각 42,800,000원과 77,000,000원 등 계 119,800,000원을 K스피릿에 지급하도록 계획된 견적서대로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플레이그라운드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결재하였다.

그 결과 AJ는 “2-2)항”의 내용과 같이 K스피릿을 대통령 순방계기 2개 문화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국기원을 참여시켰을 경우에 비해 예산 111백만여 원을 낭비하였다.

3.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 부적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³⁸⁾(2015. 1. 22. 문체부 훈령) 제15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정산 보고 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해문홍이 2016. 3. 28.과 같은 해 5. 20.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시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은 멕시코 및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문홍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심사하여 문화행사와 무관하게 집행한 비용 등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정산보고 시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8)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문체부 소관 예산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국고보조금에도 적용됨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문홍 ♣과 AK는 2016. 12. 22. 멕시코 문화행사 정산확정을 하며 플레이그라운드 직원 AL이 멕시코 문화행사 종료 후 위 문화행사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귀국함에 따라 추가 발생한 항공료 2,430,000원³⁹⁾을 정산에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확정을 하였다.

또한, AK는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AM이 2016. 3. 24.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며 직원 AH와 AL이 문체부의 국외여비로 멕시코 사전답사(2016. 3. 15.~3. 19.)를 다녀온 것을 보조금으로 사전답사를 다녀온 것처럼 항공료 6,815,600원을 거짓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게다가 해문홍은 AM이 [별표 2] “AM의 멕시코 문화행사 항공료 부담 수령 내역”과 같이 항공권 발권 대행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120,571,500원으로 제출한 항공료 청구서(INVOICE, 이하 “인보이스”라 한다)의 금액을 조작하는 방법⁴⁰⁾으로 13,362,900원⁴¹⁾이 더 많은 133,934,4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인보이스를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산확정하는 등 플레이그라운드가 멕시코 문화행사를 대행하며 위법·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계 22,608,5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39) 플레이그라운드 직원 AL과 AN은 2016. 3. 31. ㄴ편을 타고 같이 출국하였으나 귀국 시 AN은 같은 해 4. 5. 경유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AL은 같은 해 4. 7. 개인적 사유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입국한 결과 AN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 항공료 2,430,000원을 정산에 포함

40) ◇◇에서 엑셀(Excel)파일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보냈기 때문에 쉽게 숫자를 고쳐서 제출함

41) AM은 ◇◇에 본인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또 다른 여행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로부터 2016. 3. 31.과 같은 해 4. 1.에 각각 15,135,200원과 5,445,300원 등 계 20,580,500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음[20,580,500원과 보조금 부담수령액 20,178,500원(= 13,362,900원 + 6,815,600원)과의 차액인 402,000원은 AM이 ◇◇로부터 다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되어 있던 금액이 포함된 것]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가 2017. 1. 17. ◆◆회계법인의 정산검증⁴²⁾을 거쳐 해문홍에 제출한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증빙자료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점검한 결과⁴³⁾,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는 멕시코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별표 3] “플레이그라운드의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항공료 부담 수령 내역”과 같이 항공권 발권 대행사인 :: ::에서 제출한 인보이스 금액 208,662,400원을 231,145,000원으로 조작⁴⁴⁾하여 22,482,600원을 더 추가한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 5. 23. 전체 항공료 231,145,000원을 :: ::으로 송금하였고 당일에 :: ::으로부터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계좌로 22,482,600원⁴⁵⁾을 송금받았다.

또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우간다 현지 제작사인 ◇◇ 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영수증 금액 미화 3,000달러를 미화 8,000달러로 조작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 직원 AP와 AN이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종료 후 행사와 무관하게

42)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3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침(2016. 12. 13. 멕시코 문화행사 정산검토를 마치고 반환대상 국고보조금은 1,460,380원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문홍은 같은 해 12. 22. 그대로 정산확정)

43)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플레이그라운드는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가 종료된 2016. 5. 31. 이후 2개월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뒤늦게 제출하여 해문홍의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회계법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문화행사 공연팀 ○○와 4,000,000원에 계약하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6,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서상 금액 보다 추가 지급한 출연료 2,000,000원과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 5,748,907원을 반환대상 국고보조금으로 확인)

44) :: ::는 pdf파일로 변환할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한글(hwp)파일로 인보이스를 보냈고, 이에 숫자를 고쳐서 제출 가능하였음

45) 플레이그라운드 ↔이사 AM이 ↔팀장 AO에게 2016. 5. 23. :: ::으로 231,145,000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AO는 이후 정산과정에서 :: ::에 송금한 금액은 231,145,000원인데 :: ::에서 제출한 인보이스 총액은 208,662,400원이어서 AM이나 :: ::에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보이스의 숫자를 고쳤다고 진술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여 귀국함에 따라 추가 발생한 항공료 계 3,291,500원⁴⁶⁾을 정산에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결국 플레이그라운드는 [표 5]와 같이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를 대행 하며 보조금 계 52,853,000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표 5] 플레이그라운드의 문화행사 보조금 위법·부당 수령 내역

(단위: 원)

행사	위법·부당 수령 내역	반환 근거	금액
멕시코 문화행사	여행사가 제출한 인보이스 금액을 조작하여 보조금 추가 수령(AM)	거짓 신청	13,362,900
	해문홍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답사 항공료를 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여 보조금 추가 수령(AM)	거짓 신청	6,815,600
	행사와 무관하게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귀국함에 따라 항공료 추가 발생	교부조건 위반	2,430,000
	멕시코 문화행사 합계		22,608,500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여행사가 제출한 인보이스 금액을 조작하여 보조금 추가 수령(플레이그라운드)	정산 시 서류 위·변조 제출	22,482,600
	우간다 현지 제작사가 발행한 영수증의 숫자를 조작하여 보조금 집행금액 증액 ^{주)}	정산 시 서류 위·변조 제출	4,470,400
	행사와 무관하게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여 귀국함에 따라 항공료 추가 발생	교부조건 위반	3,291,500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합계		30,244,500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총계			52,853,000

주: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 5. 23.(환율: 1,192원/달러)에 9,000,000원(7,550달러)을 환전하였으나, 실제로는 4,529,600원(3,800달러)만 사용한 것이므로(조작되지 않은 영수증 800달러 포함) 차액 4,470,400원(9,000,000원 - 4,529,600원) 반환 필요
자료: 해문홍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해문홍은 앞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문화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플레이그라운드의 위법·부당 수령액 52,853,000원에 대해 재정산을 통해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며, 다만 K스피릿의 참여에 대해서는 사례비 등이 더 집행되었으나 태권도 시범단 선정은 선택의 문제이며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라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6) AP는 2016. 5. 23. ㄷ편을 타고 문화행사 스태프 AQ 등 4명과 같이 출국하였으며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지 않고 귀국한 스태프들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 항공료 1,561,200원을 정산에 추가적으로 포함하였고, AN은 2016. 5. 24. ㄹ편을 타고 문화행사 스태프 AR 등 2명과 같이 출국하였으며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지 않고 귀국한 스태프들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 항공료 1,730,300원을 정산에 추가 포함

그러나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공연경험도 거의 없는 태권도 시범단에 사례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은 K스피릿을 검토해보라고만 지시했고, K스피릿은 당초 멕시코 문화행사부터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공연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여 2016년 3월 중순(정확한 날짜 모름)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기원으로 공연 시범단을 변경한 상황에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면 멕시코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에도 K스피릿의 참여가 재검토될 수 있었는데도,⁴⁷⁾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타당한 사유 없이 동일·유사한 공연을 하는 다른 태권도 시범단보다 예산을 더 많이 소요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의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C, AJ와 AI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개별처분요구사항 11번 참조 】

※ AC는 이 건 행위와 ‘2-(1)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3번 참조]

47) 대통령비서실 ○관 AF와 ●관 AB의 진술

②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52,853,000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시정)

③ 앞으로 행사위탁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외여비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을 국고보조금으로 정산확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사위탁사업 계약업무 및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며

④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고사항]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AM은 국고보조금을 여행사가 제출한 멕시코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참여자의 항공료 청구금액보다 42백만 원 만큼 더 많이 신청하고 교부받아 사기 등의 혐의가 있고, 직원 AO와 AL은 정산을 하며 항공료 청구서를 조작한 후 제출하여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가 있어 2017. 4. 25.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음

(3)**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국회는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의 영업지원과 관련한 문체부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3)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지원 부적정**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3년부터 지역단위의 스포츠클럽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전문체육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평가를 통해 K-스포츠클럽(거점 및 지역형)으로 선정(2016년 거점형 3개, 지역형 11개)하고, 3년간 최고 24억 원(거점형 연간 8억 원, 지역형 연간 2~3억 원)을 지원하는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2차관 김종이 소속 부서 실무자에게 2016년 기존의 지역 K-스포츠클럽 이외에 추가로 이를 총괄·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K-스포츠클럽을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2016년 3월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같은 해 1월 설립되어 거점 K-스포츠클럽 운영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재단 직원과 함께 공무출장을 가도록 지시하여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파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직원과 면담을 알선해주도록 하였고, ②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을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2. 문체부의 위법·부당행위 검토

1) K-스포츠재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위 재단 직원과 함께 남양주시 등 지방자치 단체에 공무출장을 다녀오도록 지시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문체부 훈령) 제13조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클럽 운영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 직무관련자⁴⁸⁾에 해당하는 민간 재단법인에 사업 관련 특혜를 줄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공무출장 보내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중은 2016년 1월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에 법인설립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K-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취득할 목적을 가진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 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같은 해 3월 중순경 소속 공무원에게 동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과 공무출장을 다녀오도록 지시하였다.

48)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건의 경우 K-스포츠재단은 거점 또는 지역 K-스포츠클럽 선정, 운영 등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 있는 단체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업 소관과(과) 직원은 곧바로 대한체육회 사업 담당 부장에게 전화하여 K-스포츠클럽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섭외하여 같이 출장을 가도록 요구하였고, 2016. 3. 17.부터 같은 해 3. 21.까지 K-스포츠재단 직원과 함께 3일간 남양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K-스포츠재단 직원이 K-스포츠클럽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담당자들과 업무연락 관계를 형성하도록 알선하는 등 업무지원을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K-스포츠재단은 남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후 2016. 7. 19. 대한체육회에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거점형 K-스포츠클럽 선정분야에 응모 하였으나 같은 해 11. 1. 최종 탈락하였다.

2) 소속 직원에게 K-스포츠재단 직원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시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로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제42조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로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15명 이내)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이사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여 스포츠클럽

육성의 기본방침, 운영 및 지원, 스포츠클럽 선정 평가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체육회 자체 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 위촉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을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하여 위원 자격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대한체육회와 협의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거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중은 2016년 4월 말경 민간법인인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AS가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위원 자격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도 없이 소관과 소속 직원에게 AS를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지시를 받은 담당 직원은 AS가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곧바로 대한체육회에 전화하여 AS를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문체부가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줄 것을 요청한 AS의 전문성과 경력을 검토한 결과 AS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역임 전에 30년간 은행원으로 종사한 인물로서 문체부의 스포츠클럽 사업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대한체육회 직원이 K-스포츠재단에 전화하여 K-스포츠재단 임원이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하자 K-스포츠재단이 직접 문체부에 당초의 요청을 철회함으로써 AS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는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민간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소속 직원을 공무출장을 보내거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을 요청하는 등의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중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김중이 2016. 10. 31.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 김중은 이 건 행위와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 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주)㉮㉮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3-(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등 부당지원 및 관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보(인사자료)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4)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국회는 문체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변경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 등에 사용된 171억 원⁴⁹⁾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그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의 지원범위에 부합하여 부적절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4)-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부적정

1. 문화창조벤처단지 및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K-Style Hub 사업) 운용계획 변경 경위

문체부는 정부가 2015. 2.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을 공표하면서 2015년 말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ㄴㄷ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에 K-Style Hub 외에도 문화콘텐츠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자 2015. 4. 16.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5. 4. 17.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추진계획 (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사옥을 리모델링하여 [표 6](“계획변경 전 층별 구성” 참조)과 같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서울사옥 13개 층에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운영(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 입주공간 등 10개 층, ▲▲: 공연장 등 3개 층)하도록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서울사옥 전체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와

49) 감사요구한 사업 명칭이 불명확하여 2017년 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의: 15년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 등에 사용된 171억 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변경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함께 나머지 5개 층에 관광안내센터·쇼핑관·한식체험관(한식재단이 별도 조성) 등을 설치하는 K-Style Hub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6]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사업 조성 현황

구분 (조성·운영주체)	층	계획변경 전 층별 구성(2015. 4. 17.)	계획변경 후 층별 구성(2015. 9. 16.)	
문화창조벤처단지 (한국콘텐츠진흥원, MM)	7~17층	▪ 벤처·중소기업 입주 공간 ▪ 벤처·한류수출 지원기관 ▪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좌동	
K-Style Hub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6층	▪ 관광공사 서울센터 사무실	〃	
	5층	▪ 한식체험관(요리교실 등)	▪ 상품홍보관(공예품 등 판매)	한식문화관 (3~5층)
	4층	▪ K-Product 쇼핑관(한류상품 판매 등)	▪ 한식체험관(요리교실 등)	
	3층		▪ 한식전시관(전통한식문화 전시)	
	2층	▪ 관광안내센터	좌동	
문화창조벤처단지 (MM)	지하 1층~ 1층	▪ 융복합 공연장 등	〃	
기타	지하 4층~ 지하 2층	▪ 주차장 등	〃	

주 1. ▶ 계획변경 전 구성: 관광공사가 2015. 4. 17. 수립한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추진계획(안)” 기준
 ▶ 계획 변경 후 층별 구성: 문화창조융합본부가 2015. 9. 16. 수립한 “K-Style Hub 마스터플랜” 기준
 2. 한식재단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4층에 자체 예산 14억 8,700만 원을 들여 한식체험관을 별도로 조성·운영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편 문체부는 위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K-Style Hub 구축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26억 원⁵⁰⁾을 151억 원으로 125억 원을 증액하고자 2015. 6. 30. 기획재정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협의요청하여 같은 해. 7. 1. 승인을 받았다.

문체부는 2015. 4. 15. 및 같은 해 7. 17. 한국관광공사에 2차례에 걸쳐 151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2015. 5. 21. 및 같은 해 7. 23. 2차례에 걸쳐 위 151억 원 중 80억 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재교부하였다.

50)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재건축 실시설계비로 26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음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2015년 4월 미래 창조과학부 산하에 신설된 문화창조융합본부(본부장 차은택)는 2015. 9. 16. “K-Style Hub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표 6](‘계획변경 후 층별 구성’ 참조)과 같이 한국관광공사가 3층과 5층에 한식문화시설(3층: 한식전시관, 5층: 상품홍보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K-Style Hub에 대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⁵¹⁾한 후 이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의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2015. 9. 24.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증액(20억 원)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2015. 9. 25.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같은 날 한국관광공사에 이를 교부하였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검토

1) 변경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내역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등 9개⁵²⁾ 사업분야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등 6개⁵³⁾ 사업분야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2015. 4. 3. 문화창조융합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위촉된 차은택은 자신이 총괄 감독으로서 관여하고 있던 밀라노 엑스포 (2015. 5. 1.~10. 31.)의 한국관 전시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3층~5층을 한식문화에 대한 체험·교육·쇼핑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위 “K-Style Hub 마스터플랜”을 수립

52)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53)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 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2차에 걸쳐 증액한 관광진흥개발기금 145억 원의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26억 원과 함께 사용한 위 기금 171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① 171억 원 중 한국관광공사로 교부하여 한국관광공사 서울 사옥 리모델링과 3층·5층에 한식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K-Style Hub 사업추진에 사용한 91억 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그리고 위 171억 원 중 문체부가 문화콘텐츠 육성 분야인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경유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재교부한 80억 원⁵⁴⁾의 경우에도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을 통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이 제작한 한류콘텐츠의 소비(체험·판매)채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에 포함되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위배된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대상 관련 규정 불합리

문체부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분야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하여 내부지침 등에 보다 명확하게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의 당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문체부는 관광사업의 다양화와 산업 간 융·복합 추세에 따라 관광사업 지원분야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1)항”에 기술한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과 같이 사업추진의 주목적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54)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된 26억 원 중 2015. 5. 21. 교부된 금액 4.3억 원과 2015. 7.1. 기금변경을 통하여 2015. 7. 23. 교부한 75.7억 원을 합쳐 총 80억 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부

그 결과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 가까운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1)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하였는바, 보조사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그대로 둔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국가재정법」 제74조 제2항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및 기금집행지침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지출항목으로 정해진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⁵⁵⁾을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출석하여 심사와 토의를 통해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55)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문체부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체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28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한번도 출석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로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문체부는 이 건 ‘K-Style Hub 및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을 위한 125억 원의 기금변경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15. 6. 30. 서면결의로 진행하면서 외부위원 중 한 명(---은행 *본부장 AT)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변경 승인을 받은 날(2015. 7. 1.)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015. 7. 22. 서면결의에 동의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같은 해 7. 17. 한국관광공사에 해당 금액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문체부는 이 건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위원간 대면토론·협의 등이 없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① 관광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등 일부 규정에 대해 사업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대면심사 원칙,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관광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집행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서면결의로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위원회의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4)-②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개발기금⁵⁶⁾으로 서울사옥에 문화창조벤처단지⁵⁷⁾ 및 케이스타일 허브(이하 “K-Style Hub”⁵⁸⁾라 한다)를 각각 조성할 목적으로 2015. 8. 13.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계약(건축부문, 계약금액 32억 568만 원)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8.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 한다)와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의계약(계약금액 9,900만 원)으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리모델링 공사와는 별도로 서울사옥 3층과 5층에 한식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과 공사를 일괄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친 후 2016. 11.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금액: 18억 9,900만 원)을 체결하였다.

5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사업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57) 문화콘텐츠 벤처·중소제작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집적하여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사업화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서울사옥 지하 1층~지상 1층 및 지상 7~17층에 조성함

58) 한류문화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복합한류 테마파크로서 서울사옥 지상 2~6층에 조성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 6월부터 서울사옥에 대한 K-Style Hub 조성사업을 추진⁵⁹⁾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2015. 2.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을 공포하면서 2015년 말까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서울사옥에 문화창조벤처단지도 조성하기로 하자, 한국관광공사는 2015. 4. 17.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표 6](‘계획변경 전 층별 구성’ 참조)과 같이 서울사옥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실시)와 함께 5개 층에 쇼핑관 등을 포함한 K-Style Hub를 직접 조성하고 나머지 13개 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이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운영(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 입주공간 등 10개 층, ■■■: 공연장 등 3개 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 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신설된 문화창조융합본부가 2015. 9. 16. “K-Style Hub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표 6](‘계획변경 후 층별 구성’ 참조)과 같이 한국관광공사는 쇼핑관 대신 3층과 5층에 한식문화시설(3층: 한식전시관, 5층: 상품홍보관)을 조성하고 한식재단은 4층에 한식체험관을 조성하여 ‘한식문화관’으로 통합·구성하는 내용으로 K-Style Hub에 대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⁶⁰⁾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문화창조벤처단지 및 K-Style Hub 조성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7]과 같이 총 171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59)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 10월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당초 본사로 사용하던 서울사옥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2014. 6. 9.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협의하여 서울사옥에 K-Style Hub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에 K-Style Hub 실시설계비로 2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60) 2015. 4. 3. 문화창조융합본부 초대 본부장 차은택은 자신이 총괄 감독으로서 관여하고 있던 밀라노 엑스포(2015. 5. 1.~10. 31.) 한국관 전시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3~5층을 한식문화에 대한 체험·교육·쇼핑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K-Style Hub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2015. 9. 25.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밀라노 엑스포 관련 전시콘텐츠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한국관광공사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171억 원 중 80억 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재교부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91억 원으로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및 한식문화시설을 포함한 K-Style Hub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

[표 7] 관광진흥개발기금(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 현황			집행 현황	
교부일자	교부금액	용도	구분	집행실적
합계	1,709,700	-	합계	1,704,882
2015. 4. 21.	109,100	■ 서울사옥 리모델링 및 문화창조벤처 단지 조성사업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집행)	794,990
2015. 8. 11.	1,400,600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709,892
2015. 10. 20.	200,000	■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200,000

주: 1. 한국관광공사는 80억 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재교부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
 2. 한국관광공사는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비로 2015년 교부받은 위 20억 원 외에 201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7억 2,373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자체예산 4억 4,271만 원을 투입하여 31억 6,644만 원에 준공하였음
 3. 한국관광공사는 총사업비 171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 5,118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 7,571만 원을 합하여 2억 2,689만 원을 정산처리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2.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및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계약업무 부당처리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위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와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담당자들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한식문화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U의 경우

AU는 2015. 1. 1.부터 2016. 9. 20.까지 한국관광공사 ◆단(현 ♣팀, 이하 “♣팀”이라 한다)⁶¹⁾에서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⁶²⁾인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규정시행세칙」(2013. 10. 4. 한국관광공사 세칙 제267호) 제59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에 관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2,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르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또는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3. 3. 4. 계약제도과-233)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공사계약과 관련된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서 용역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서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61) 한국관광공사는 K-Style Hub 조성사업(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포함)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TF)으로 2014년 9월 ◆단을 신설한 후 K-Style Hub 운영을 위한 상설조직으로서 2015. 10. 15. 위 추진단을 ●팀으로 직제개편하였음

6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면서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추정가격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감액·조정되었음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팀)에서 위와 같이 공사계약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용역계약에도 임의로 확대·적용하여 특정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AU는 계약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서 2015. 8. 13. ■■건설과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계약(건축부문, 계약금액 32억 568만 원)을 체결하자 같은 날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은 시기에 서울사옥 지하 1층~지상 1층에서 공연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과 일부 공사구역이 연접⁶³⁾ 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계약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수의계약 조항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을 근거로 ■■의 공사구역을 감리하고 있던 ■■건축⁶⁴⁾과 9,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한 후 같은 해 8. 17. 같은 ❀팀 팀장 직무대리 AV의 결재를 받았다.

더욱이 위 감리용역은 계약금액이 9,900만 원으로서 「회계규정시행세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대상인데도 AU는 2015. 8. 18. ■■건축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자 추가배정 등을 이유로 2015. 9. 23.부터 같은 해 12. 1.까지 2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1억 3,16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도 직접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 권한도 없는 AU가 국가계약법령을 위배하여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임의로 용역계약에도 확대·적용하여 특정

63) ■■이 시행하는 지하 1층~지상1층의 공연장 공사구역에 일부 연접하여 한국관광광사는 지상 1층에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음

64) 서울사옥 지하 1층~지상 1층 및 9층 리모델링 공사 시행자인 ■■은 2015. 9. 1. ■■건축과 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1,100만 원)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의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고 있었음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위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업체들은 입찰참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가 어지럽게 되었다.

2) AW의 경우

AW는 2015. 9. 1.부터 2016. 5. 15.까지 ❀팀에서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이행관리(공사감독 등)와 사후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한식문화시설 발주방법 검토 부적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이하 “적격심사제”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격심사제 적용대상인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⁶⁵⁾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와 제14조에 따르면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에는 설계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입찰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65)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2015. 7. 20., 공개번호: 1420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식기반사업을 시설공사로 추진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회신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 적격심사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최저가낙찰제의 폐단(계약이행 능력부족 업체의 덤핑입찰 등)을 개선하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우량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예정가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최고한도 비용을 미리 추산함으로써 계약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시키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전시관·상품판매관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또는 적격심사제) 등을 통해 먼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계약은 해당 설계서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AW는 2015. 9. 14.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발주방법을 검토하면서 적격심사제로 설계용역과 공사를 각각 발주하는 방법도 있으나 위 한식문화시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위 용역과 공사를 일괄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친 후 1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같은 ❀팀 팀장 직무대리 AV에게 보고하였다.⁶⁶⁾

그리고 나서 AW는 2015. 9. 24. AV 등의 결재를 받아 경영지원팀(계약담당 부서)에 위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소요예산 20억 원)에 대하여 용역과 공사를 일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요청하였다.

6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와 제85조의2 및 제87조 등에서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먼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결정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는 것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용역과 공사를 동시 입찰에 부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과는 적용대상, 계약절차 등이 근본적으로 다름

이에 따라 경영지원팀은 위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⁶⁷⁾ 2015. 9. 25. 용역과 공사를 일괄하여 용역으로 입찰공고한 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영상 담당업체) 등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해 10. 15. ♣팀에서 실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⁶⁸⁾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팀은 2015. 10. 19. ⊕⊕와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 19. 해당 업체와 18억 9,900만 원에 계약(당초 계약기간: 2015. 11. 19.~2016. 1. 31.⁶⁹⁾)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AW가 국가계약법령을 위배하여 적격심사제 적용대상인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설계용역과 일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한 결과 특정 1개 업체가 용역뿐 아니라 공사계약도 수주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2)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공사감독 및 정산 등 계약관리 부적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에는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추정가격: 18억 1,727만 원)의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것)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2015. 3.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1호) 제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6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6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는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69) 한국관광공사는 차은택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과업내용 등에 따라 한식문화시설 공사기간이 늘어나자 2015. 12. 4. 사업기한을 2016년 2월로 변경한 데 이어 2016. 2. 23. 사업기한을 2016년 4월로 다시 변경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3. 4. 24. 계약제도과-457)에 따르면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식문화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우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를 반영한 설계서’(이하 “기준설계서”라 한다)와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시공방법·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준설계서를 바탕으로 공사물량 증감에 대한 근거자료(수정도면·공사비 증감 증빙자료 등)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약금액을 정확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에 필요한 계약당사자(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행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AW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도록 내버려 둔 채 공사물량의 증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일 등이 없도록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AW는 2015. 10. 19. ⊕⊕와 기술협상을 완료한 후 같은 해 11. 26. ⊕⊕가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도 ⊕⊕로 하여금 기준설계서와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차은택⁷⁰⁾이 ⊕⊕의 제안서 내용이나 위 기술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수시로 공사현장

70)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차은택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

등에서 ㊤㊤로 하여금 전시시설 설치공사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⁷¹⁾ 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둔 채 이와 같은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감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보조금법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5. 3.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8호) 제9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AW는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물량 증감내역 및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AW는 2016. 3. 28. ㊤㊤로부터 서울사옥 2층 관광안내센터 재시공 비용(5억 6,364만 원)⁷²⁾까지 포함한 한식문화시설 설계용역·공사비로 계약금액을 31억 6,644만 원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받고는 ㊤㊤가 ‘준공시점에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이하 “정산내역서”라 한다)만을 근거로 지출증빙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추진단에 두도록 되어 있는 3명의 단장 중 민간인 신분의 비상임 단장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임. 한편 차은택을 제외한 2명의 단장 중 1명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1급 공무원(상근)이 맡았고 나머지 1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비상근)이 맡았음

71) ㊤㊤가 2015년 10월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콘텐츠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차은택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전면 수정·시공되었음

72) 서울사옥 2층에 위치한 관광안내센터는 서울사옥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담당한 ◀▶건설에 의하여 2015. 12. 18.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팀은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디자인 및 콘텐츠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은택의 요청을 이유로 관광기금 1억 2,093만 원 및 자체 예산 4억 4,271만 원 등 계 5억 6,364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마련하여 ㊤㊤로 하여금 관광안내센터 인테리어를 재시공하도록 하였음

없이 같은 해 4. 26. ⊕⊕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 날인 4. 27.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최종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준공처리하면서 ⊕⊕가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 반환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등 33,460,000원의 보험료를 정산하지 아니하였다.⁷³⁾

이와 같이 AW는 사업비가 당초 계약금액(18억 9,900만 원)보다 1.7배 늘어난 31억 6,644만 원으로 증가하는데도 ⊕⊕로 하여금 기준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지 않았고, ⊕⊕로부터 제출받은 정산내역서만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증액함으로써 ⊕⊕가 실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33,460,000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등 계약이행관리 및 사후정산 등을 부실하게 하였다.

3) AV의 경우

AV는 2015. 5. 1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팀 팀장 직무대리의 직위에서, 그리고 2015. 10. 15.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위 ♣팀 팀장의 직위에서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및 K-Style Hub(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사감독 등 계약이행관리 및 사후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1)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계약 부당 처리

AV는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총괄 담당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감리용역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일반 경쟁에 부치도록 요청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했다.

7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약정에 따르면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AW는 2016. 3. 28. ⊕⊕로부터 계약금액을 31억 6,644만 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로부터 차은택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며 그 추가공사비를 ⊕⊕가 납부하지 않아 반환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등 33,460,000원과 상계해도 되는지 여부를 요청받자 ⊕⊕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지출증빙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AV는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체결하고자 하면서 “2-1)항”의 내용과 같이 2015. 8. 13. AU로부터 공사계약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을 임의로 확대·적용하여 **XX**건축과 9,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제출받고는 같은 해 8. 17. 그대로 결재하여 “2-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한식문화시설 발주방법 검토 부적정

AV는 K-Style Hub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 담당으로서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 되게 한식문화시설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AV는 “2-2)-(1)항”의 내용과 같이 2015. 9. 14. AW와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발주방법을 검토하면서 한식문화시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이라는 이유로 설계용역과 공사를 일괄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친 후 1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24. 경영지원팀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AV는 “2-2)-(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공사감독 및 정산 등 계약관리 부적정

한편 AV는 2015. 10. 15.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와 같은 해 10. 19. 기술협상을 완료하고도 계약당사자도 아닌 차은택의 요청을 이유로 같은 해 10. 30. 차은택 및 **⊕⊕** 관계자와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전시 콘텐츠 및 공간연출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이하 “연출협의”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AV는 연출협의 과정에서 차은택이 “앞으로 연출협의를 주식회사 **ⓈⓈ** (차은택이 소유한 광고제작업체, 이하 “**ⓈⓈ**”라 한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팀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차은택이 2015. 11. 17.까지 4차례에 걸쳐 **⊕⊕**와

㉔㉔에서 추가로 실시한 연출협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1. 19. ㉔㉔와 18억 9,900만 원에 설계용역·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차은택이 같은 해 12. 18.까지 6차례에 걸쳐 ㉔㉔와 실시한 연출협의를도 참석하지 않은 채 차은택이 ㉔㉔의 제안서 내용 및 기술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전시콘텐츠 및 공간연출 방법을 임의로 수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⁷⁴⁾

더욱이 AV는 “2-2)-(2)항”의 내용과 같이 ㉔㉔가 2015. 11. 26.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도 ㉔㉔로 하여금 기준설계서와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차은택이 위 연출협의뿐만 아니라 착공 이후 공사 현장에서도 수시로 ㉔㉔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전시시설 설치공사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⁷⁵⁾ 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감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AV는 2016. 3. 28. ㉔㉔로부터 한식문화시설 설계·공사비(2층 관광안내센터 재시공비 5억 6,364만 원 포함)로 계약금액을 31억 6,644만 원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받고는 ㉔㉔의 정산내역서만을 근거로 같은 해 4. 26. ㉔㉔와 위 요청금액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인 4. 27. 한식문화시설에 대한 최종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준공처리하면서 ㉔㉔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33,460,000원의 보험료를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74) 차은택은 2015. 10. 30. 제1차 연출협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 18. 제12차 연출협의까지 12차례에 걸친 연출협의를 실시하였는데, 10차례의 연출협회는 자신 소유의 광고제작업체인 ㉔㉔에서 실시하면서 ㉔㉔ 직원과 민간인(한국예술포럼학교 교수)을 임의로 참석시킨 채 ㉔㉔ 관계자는 배제하였음(AV 등 ㉔㉔ 관계자는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2015. 10. 30. 개최된 제1차 및 같은 해 11. 26. 개최된 제7차 연출협의에만 참석)

75) 차은택은 12차례의 연출협의 외에도 한식문화시설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㉔㉔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직접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한식문화시설은 ㉔㉔가 2015년 10월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중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 콘텐츠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차은택의 요구에 따라 전면 수정되었음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로 하여금 실제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33,460,000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①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팀 AW(현 ♡단)와 서울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용역 및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관리·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팀장 AV를 한국관광공사 「징계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고(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12번 참조】

② 한식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33,460,000원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시정)

③ 앞으로 공사계약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 등이 없도록 하고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물량 증감내역의 확인과 보험료 정산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⑤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밀라노 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관련

국회는 밀라노 엑스포와 관련하여 주관부처 변경과 차은택을 감독으로 선임한 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주관부처 변경과 감독 선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5) 밀라노 엑스포 전시·영상 총괄감독 선임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4. 10. 31. 대외경제장관회의(기획재정부 주관)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밀라노 엑스포’⁷⁶⁾ 사업(총사업비: 33,016백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6,700백만 원, 문체부 26,316백만 원)의 주관부처⁷⁷⁾ 지위를 이관받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주관기관⁷⁸⁾의 지위를 이관받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엑스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전시기획안, 설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주관부처 변경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영상 용역 우선협상대상자였던 ⊕⊕⁷⁹⁾로 하여금 전시·영상 총괄감독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후 문체부는 ‘밀라노 엑스포’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26,173백만 원(국고: 20,695백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478백만 원)을 한국관광공사에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였다.

76) 엑스포(EXPO)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서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일정한 주제하에 전시하고, 개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임

77) 정부에서 엑스포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뜻함

78) 엑스포 사업의 추진 실무를 맡는 실행기관을 뜻함

79) 한국관광공사는 ⊕⊕와 2014. 12. 24. 6,215백만 원의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영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6. 10,080백만 원으로 증액 변경 계약을 체결

2. ‘밀라노 엑스포’ 주관부처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문체부는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밀라노 엑스포’ 사업을 이관받았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2013. 4. 5. 대통령령 제24494호) 제2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르면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 계획과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부처 변경에 대하여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 주관부처를 변경하였으므로 주관부처 변경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한편 ‘밀라노 엑스포’ 사업 이관 전인 2014년 5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구식량 공급, 생명에너지, 농업·생물 관련 과학기술, 음식과 문화 등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에 맞춰 우리나라의 엑스포 전시 주제를 ‘한식’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체부는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역시 음식관광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처 및 주관기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엑스포 전시 주제였던 ‘한식’과 관련 없는 기관이 사업을 맡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밀라노 엑스포’ 주관부처 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② ‘한식’과 관련된 음식관광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문체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밀라노 엑스포’ 주관부처 변경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차은택에 대한 전시·영상 총괄감독 선임에 관한 적정성 검토

1) 총괄감독 변경에 따른 작품 미활용에 관한 검토

⊕⊕는 주관부처와 주관기관이 각각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되기 전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AX 교수와 2014. 8. 19. 전시·영상 총괄감독비 1억 원을 포함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메인쇼 제작에 대하여 총 16억 5천만 원 (부가세 포함)의 계약⁸⁰⁾을 맺고, 같은 해 8. 21. 선금 5억 5천만 원을 AX 교수 측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문체부는 주관부처 변경에 따라 전시기획안 및 설계, 전시·영상 총괄 감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2014년 11월 초순경 ⊕⊕로 하여금 전시·영상 총괄감독이었던 AX 교수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는 AX 교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6. 6. 15. 5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6억 5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시·영상 총괄감독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6억 5백만 원이 투입되어 AX 교수가 작업 중이었던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메인쇼 작품은 제작이 중단되어 결국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관련자 면담 및 자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33,016백만 원이 투입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은 약 230만 명(전체 관람객의 10.7%⁸¹⁾)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에서 평가한 전시부문 은상(금상: 일본, 동상: 러시아)을 수상하는 등 3개 상⁸²⁾을 수상하였고, 이탈리아 현지 등 해외언론에서

80) ⊕⊕의 계약상대방인 주식회사 ◆◆은 AX 교수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서 AX 교수의 총괄감독 시 메인 작품을 수행한 업체이며, 이 건 계약에 대하여 AX 교수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음

81) 2005 아이치와 2010 상하이 엑스포의 경우 한국관은 각각 349만 명(전체관람객의 15.8%)과 725만 명(전체관람객의 9.9%)이 관람하였음

호평을 받는 등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시·영상 총괄감독 변경으로 인하여 6억 5백만 원이 투입된 작품이 활용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전시기획안에 따른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성공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므로 ‘밀라노 엑스포’ 전시·영상 총괄감독 변경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2) 총괄감독 선임 및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문체부는 전시기획안 등의 변경에 따라 전시·영상 총괄감독을 교체하면서 2014. 11. 3. 한국관광공사와 ⊕⊕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차은택을 전시·영상 총괄감독으로 선임하여 ‘밀라노 엑스포’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1) 총괄감독 선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문체부장관 김종덕은 2014년 10월 말경 ◇실장 AY(2016. 2. 29. 문체부 ⓧ관으로 퇴직)에게 차은택을 전시·영상 총괄감독으로 선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Y는 위 지시에 따라 2014. 11. 3. 한국관광공사와 ⊕⊕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차은택을 전시·영상 총괄감독으로 선임하여 ‘밀라노 엑스포’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관련자 면담 및 자료를 통해 검토한 결과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조성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상 전시·영상 총괄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요건이 없었고, AX 교수를 전시·영상 총괄감독으로 선임할 당시 ⊕⊕가 검토했었던 후보자 리스트에 차은택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살펴볼 때, 차은택을 총괄감독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82) 그 외에 ‘2015 엑스포파빌리온 헤리티지 어워즈’(미래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관에 수여하는 상) 특별상 2등(1등: 모나코, 3등: 이탈리아), ‘2015 레드닷’(세계 3대 디자인 상) 전시 디자인 분야 본상(36개 수상작 중 2개는 밀라노 엑스포 전시관이 수상하였으며 수상관은 한국관과 독일관임)도 수상

(2) 총괄감독 선임계약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①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조성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전시·영상용역 업체는 총괄감독을 선임하여 한국관의 전시·영상물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불릴 만큼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로서 세계 각국이 일정한 주제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하여 진행되는데 개관 전 기획·설치된 전시물이 6개월⁸³⁾ 동안 전시되므로 개관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계획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전시물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시·영상 총괄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엑스포와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국제행사는 성공할 경우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실패할 경우 국가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전시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괄감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선임을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문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83) 밀라노 엑스포는 5년에 1회 실시되는 등록박람회로서 6개월간(2015. 5. 1.~10. 31.) 전시를 하였음

따라서 문체부는 전시·영상물 기획과 설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에 대하여 총괄감독에 대한 정식 선임 및 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및 ㉠㉠가 차은택에 대하여 전시·영상 총괄감독 선임 계약서 없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알고도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은택이 부탁했다는 이유로 2015년 2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 차은택을 총괄감독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차은택을 밀라노 엑스포 전시·영상 총괄감독으로 정식 문서로 선임하지 않은 채 구두로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괄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만약 밀라노 엑스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그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국가 중요행사 및 유사사업에 전문가를 기용할 경우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명시적인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소관 국가 중요행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 소관기관이 민간전문가와 계약서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2014년도 전국체육대회 승마장소 변경 관련

국회는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장소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2014년도 전국체육대회 승마장소 변경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업무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는 구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 동계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25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각 경기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에 대해 각 중앙경기단체가 사용확인을 하면 경기장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10. 1. 18.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후 2012. 12. 12. 승마경기 개최를 위한 승마경기장 착공을 시작하여 2014. 6. 30. 제주대학교에 승마경기장을 완공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이하 “제주승마협회”라 한다)는 2013. 11. 21.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승인 관련 실사 협조요청’ 공문을 대한승마협회에 보냈고, 대한승마협회는 같은 해 12. 11. [표 8]과 같이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시설 승인을 위한 세부사항을 제주승마협회에 송부하였다.

[표 8] 대한승마협회 1차 요구사항

구분	내용
가. 경기장 바닥	돌(암석) 위에 지름 5mm 정도의 공자갈을 10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롤러로 다진 후 규사를 6cm정도 깔아야 함 ※ 바닥 토목공사 시 대한승마협회와 협의요망
나. 마사	본마사 200칸 설치(임시마사 불가) (근대5종연맹에서도 말 참가계획 중)
다. 세마장	30두를 동시에 수용 가능한 세마장 확보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제주승마협회는 2014. 7. 21. 대한승마협회에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공·승인을 위한 사전점검을 요청하였고, 대한승마협회는 같은 해 8. 25. 시·도 승마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실외마장 부직포 공사 등 [표 9]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후 같은 해 9. 12. 경기장 바닥 개보수에 관한 진행 상황 등을 제주승마협회 등에 질의하였으며, 제주승마협회는 같은 해 9. 17. [표 9]와 같이 시설 관련 사항이 일부 완료 및 조치 중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표 9] 대한승마협회 2차 요구사항 및 제주승마협회 조치사항

구분	대한승마협회 요구 및 확인사항	제주승마협회 조치사항
2014.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마장, 실내마장 부직포 공사 - 마방먹이통 제거 - 가마사 150개 이상 준비(철제와 나무된 3x3, 철제 및 스트레스 재질 지붕 - 부직포 공사, 깔짚 설치 시 대한승마협회와 상의 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모래로 잘 되어 있으나 부직포 공사를 할 시 왜 부직포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향후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한승마협회 경기부 관련 임원 파견 및 매뉴얼 협조 후 완료 예정 - 마장마술 경기 시 실내마장을 연습마장으로 사용토록 조치 등
2014.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기장,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 진행 상황 및 결과 - 연습마장의 확보 진행 상황 및 결과 - 마필 안전을 위한 본마사 내의 고정형 사료통과 물통의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 - 승마경기를 위한 추가 마사확보 진행 상황 및 구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마사내의 고정형 사료통 제거조치 완료, 물통 안전 조치 완료 - 기존에 사용하는 가마사(천막)와는 달리 시멘트 바닥에 가마사 150개 설치 조치 중(철재, 나무 재질)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78명의 전국승마선수협의회(당시 회장 IX) 선수들은 2014. 9. 28. 대한승마협회에 선수들이 안전하게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한승마협회는 2014. 10. 1. 다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을 현장 실사한 후 같은 해 10. 6. ‘경기장 바닥 개보수 등 기존에 요청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선수와 마필의 안전이 우려되고, 참가선수 및 시·도승마협회의 의견을 종합 판단한 결과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보다는 내륙에서 개최하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보다 나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후 다음 날인 10. 7.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의 내륙 변경 요청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2014. 10. 10. 대한승마협회, 제주도체육회와 함께 승마경기장 관련 사항을 논의한 후 같은 해 10. 13. 대한승마협회에 제주 승마경기장 경기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을 요청하였다.

대한승마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2014. 10. 14. 제주 승마경기장을 최종 현장 점검한 후 여전히 경기장 배수가 되지 않는 등 [표 10]과 같은 이유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같은 해 10. 15. 대한체육회에 통보한 후 같은 해 10. 20. 대한체육회에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 경기는 제주도 승마경기장의 준비사항 미흡으로 ㄱ 승마장(인천소재)에서 개최함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표 10] 대한승마협회 최종 점검의견

구분	대한승마협회 점검의견
Footing	바닥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마필의 환경적응을 위하여 입사하는 기간과 개최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에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모래가 미끄러워 140~150cm의 높이를 비월하는 선수와 마필이 착지 시 등에 사고의 위험이 있음
경기장 펜스	경기장 펜스와 시설물 외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수 및 마필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음
마사시설	2013년 11월경에 고정형 마사로 200칸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014년 9월경에 철재 및 나무재질의 가마사로 150칸을 준비함을 회신받은 상황에서 천 재질의 가마사 90칸을 사용하는 것 및 마사 안 물통을 고무재질로 보완한 것은 마필의 마사 대기 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음
점검결과	경기장 바닥의 안전성, 마사 및 임시마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개최시기에 따른 보수에 필요한 기간 및 재점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제주대학교 내 전국체전경기용 승마장은 사용이 불가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14. 10. 20. 경기장을 제주에서 인천으로 변경개최하는 것을 확정된 후 제주도와 제주대한체육회에 승마경기장 승인 불가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 口 승마장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가 口 승마장에서 실시되었다.

2. 승마경기장 장소 변경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검토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구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 정관」(2014. 3. 12. 개정된 것) 제42조 등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구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전국대회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당해연도 2월 말까지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경기단체의 사용확인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4. 4. 8. 대한승마협회에 제주 승마경기장 사용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4년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승마경기장은 경기 개최 약 4개월 전인 2014. 6. 30. 준공되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2014년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일정(2014. 10. 29~10. 30.)과 제주 승마경기장의 늦은 준공을 감안하여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의 개최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장 사용확인 권한이 있는 대한승마협회로 하여금 조속히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2014. 6. 30. 제주 승마경기장이 준공되어 사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진행상황을 파악하거나 대한승마협회에게 제주 승마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대한승마협회가 제주 승마경기장 준공 후 약 2달이 지난 2014. 8. 25.에서야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어 경기장 시설 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체육회는 2014. 10. 6.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제주도 승마경기장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야 경기장 배수문제 등으로 승마경기 개최가 어렵다는 대한승마협회와 시설 보완을 통해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는 제주도간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해 10. 10. 대한승마협회, 제주도(제주체육회) 등 관계자와 경기장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승마협회에 추가 현장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 시점에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임박하여(2014. 10. 29. 승마경기 개최) 대한승마협회와 제주도간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조치를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4. 10. 20. 제주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한승마협회의 의견에 따라 제주 승마경기장 승인 불가를 제주도에 통보한 후 인천광역시 〇 승마장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60여억 원을 투입하여 승마경기장을 신축한 제주도가 2015. 2. 2.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⁸⁴⁾하는 등 분쟁을 야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승마경기장 변경은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선수의 안전 및 경기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로 배정된 경기장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할 경우 경기장 변경 여부에 대하여 개최지 조직위원회, 해당 회원종목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앞으로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중앙경기단체간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점검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4)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1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84,443,545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년 3월 현재 2심 진행 중임

(7) 차은택과 연관된 늘품건강체조 부당 지원 및 은폐 의혹 관련

국회는 차은택과 연관된 늘품건강체조(이하 “늘품체조”라 한다) 부당지원 여부와 늘품체조는 AZ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거짓 해명하는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국민체력 증진 등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국민건강생활체조로 보급할 목적으로 코리아체조를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1월 민간에서 개발한 늘품체조를 ‘대통령 참석 문화의 날 행사’에서 시연하고 이를 보급하는 업무를 추진하였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라 한다) 소속 박홍근 의원 등으로부터 2015. 1. 23.부터 3회에 걸쳐 늘품체조 최초 제안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다

2. 코리아체조 개발·보급 및 늘품체조 시연·보급⁸⁵⁾

1) 코리아체조 개발과 늘품체조 시연

문체부는 2014. 4. 11. “국민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계획(안) 보고”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코리아체조를 개발(개발기간: 2014년 6~12월, 예산: 2억 원)하도록 하고 2014. 6. 23. 선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코리아체조를 개발하여 2014년 9월부터 10월 까지 2회에 걸쳐 시연을 하고, 8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85) 문체부 기안 단계에서는 국민건강생활체조였으나 한국스포츠개발원 개발과정에서 명칭이 코리아체조로 변경되었으며, ‘늘품’이란 단어의 뜻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임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문체부는 2014년 12월까지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이 참여한 코리아체조 동영상 제작 및 발표회 개최, 2015년 1월부터 교사 및 체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KBS와 연계하여 체조시연방송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과 일반인에게 보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은 2014. 10. 20. ◇과장 BA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코리아체조가 아닌 예산 1억 8천만 원이 명시된 늘품체조 PT자료와 ●●⁸⁶⁾ 소속인 BB의 연락처 등⁸⁷⁾을 주면서 “개발자를 만나보고 늘품체조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A는 2014. 10. 24.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BB와 체조 개발자인 AZ를 만나 늘품체조에 대한 간단한 명칭 및 동작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BA는 BB를 만나고 와서 면담결과를 김종에게 보고⁸⁸⁾하였고 김종은 “체조를 한번 봐야겠으니, 2014. 10. 30. 시연준비를 하라”고 BA에게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서울특별시 용산구 ㄱ동에 있는 문체부 서울사무실에서 늘품체조 개발자인 AZ의 시연을 보고, 시연자리에서 김종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통령 앞에서 하게 될 테니 준비하라”고 BA에게 지시하였다.

이후 문체부는 김종 참석하에 3회에 걸쳐 추가로 늘품체조 시연을 보고, 2014. 11. 26.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 늘품체조를 시연하였다.

86) 늘품체조를 개발하였다는 회사, BB가 2014. 10. 24. BA 과장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대표라고 소개하였으나, 법인등기부 등본상 당시 대표이사는 차은택으로 되어 있었음(차은택은 2015. 2. 10. 대표직에서 사임)

87) 김종 전 제2차관의 진술에 따르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부터 PT자료와 BB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진술

88) 면담한 내용에 대해 당시 담당국장인 BC ●관에게 보고를 하였고 BC ●관은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음

2) 늑땡체조 제작비 지급 여부

김중은 “2-1)항”의 내용과 같이 2014. 10. 20. 예산 1억 8천만 원이 명시된 늑땡체조 PT자료를 BA에게 주면서 “개발자를 만나보고 늑땡체조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BA는 위 지시를 늑땡체조 개발비 지급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산으로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같은 해 11. 12.과 11. 28. 개발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2차례에 걸쳐 김중에게 보고하였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12월 초(날짜 모름) 김중은 BA에게 “개발비는 주지 않기로 했다. 기증받기로 했다”고 하였고, 같은 해 12. 31. 늑땡체조 개발자인 AZ 등 5명은 늑땡체조 저작권을 문체부에 기증하였다.

3) 늑땡체조 보급 부적정

문체부가 2014년 4월 개발·보급하기로 한 국민체조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국민체조는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따라하기 적합하고 체육과학적인 분석 방법(생리학, 역학, 인지·발달학 등 측면에서 효과 검증)을 통해 체조 동작의 안전성 등 인체에 미치는 효과 검증이 이루어진 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BA는 2014. 11. 12. 김중에게 “늑땡체조는 체조 비전공자가 개발하여 체육계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운동 역학적 분석 및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영리법인에게 국민체조 개발을 맡긴 전례가 없다”는 내용의 “늑땡건강체조 개발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고, 같은 해 11. 28. “늑땡체조 개발주체가

체육계가 아닌 영리법인으로 체조 동작이 스포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운동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코리아체조가 개발 중이어서 예산낭비 및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저작물 구매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늘품 건강체조 보급 및 선결과제 검토 보고”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중은 늘품체조가 모든 연령층에게 적합한지와 체조 동작의 위험성이 없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부하직원에게 위 사항을 검증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BA에게 늘품체조의 보급을 지시하였다.

이에 BA는 2014. 12. 9. 코리아체조와 늘품체조를 동시에 보급하는 “늘품 건강체조 보급·확산 방안”을 작성하여 김중과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장관은 늘품체조가 모든 연령층에게 적합한지와 체조 동작에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2015. 3. 5. 코리아체조와 늘품체조 시연을 보고 코리아체조와 늘품체조 2개를 동시 보급하는 것은 어려우니 늘품체조만 보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A의 후임 과장 BD는 2015. 3. 9. “늘품체조와 코리아체조를 동시에 보급하지 않고 늘품체조만 보급하되, 국회 및 언론의 예산낭비 지적을 감안하여 늘품체조를 따라할 수 없는 일부 노약자들을 위해 코리아체조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늘품체조 코리아체조 보급방안”을 보고한 후 같은 해 3. 27. 구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에 늘품체조의 동작 및 음악성 평가, 늘품체조의 과학적 효과 입증, 보급 등을 위한 ‘늘품건강체조보급지원’(사업기간: 2015년 4~11월) 사업에 보조금 350백 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구 국민생활체육회는 2015. 4. 1. 놀품체조의 동작 구성, 동작의 위험성, 음악의 적합성 등 놀품체조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소속 스포츠과학자에게 ‘놀품건강체조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사업(사업기간: 2015년 4~6월)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연구진 12명)은 놀품체조의 동작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나 2015년 6월 작성된 ‘놀품건강체조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사업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정된 놀품체조는 전신 근육 동원이 가능한 체조이지만, 기존에 개발·보급된 국민체조들보다 높은 운동 강도를 보이므로 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체조’이며 ‘현재의 운동강도 보다 낮은 강도의 놀품체조 개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수정된 놀품체조가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체조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문체부는 체육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놀품체조 동작의 안전성 등 인체에 미치는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6월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재 검증 결과 놀품체조가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체조가 아니라고 평가되었는데도,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270백만 원을 들여 생활체육단체·공공기관 등에 놀품체조를 보급하였다.

그 결과 코리아체조는 보급이 되지 않아 2017년 3월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놀품체조도 2016년도 부터는 보급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었다.

3. 국회 답변자료 작성 등 부적정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로부터 정부에 대한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5. 1. 23. 국회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놀품체조를 문체부에 기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문체부에 서면 질의하자 ◇과 BE가 위 질의에 대해 ●관 BC에게 보고하였고, BC는 보고를 받고 나서 김종에게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며, 김종이 “답변자료 작성 시 외부로부터 놀품체조 발표자료를 받아와서 ◇과장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답변자료에 넣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BC는 BE에게 “외부로부터 놀품체조 발표자료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빼고 작성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E는 ‘놀품체조를 문체부에 기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원 박홍근의 질의에 “놀품체조 개발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과장이 10월경 AZ 체조개발자를 만나서 놀품체조 개발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 들었으며, 체조 콘텐츠 다양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주일 후 놀품체조 시연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한 뒤, 놀품체조 개발 관련자인 BB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개발자들이 먼저 문체부로 연락을 하여 놀품체조를 제안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니, 나중에 언론 등에서 연락이 오면 개발자들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등 [표 11]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 사이에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놀품체조 최초 제안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종의 지시에 따라 ‘놀품체조 개발자가 ◇과장에게 먼저 전화하여 제안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

이후 2015. 2. 27. 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재정 의원이 장관에게 “놀품체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라고 질의하자 장관은 “놀품체조를 개발한 분이 자기네 체조도 한번 봐 달라고 그래서 ◇과장이 한번 만났다”고 답변하였다.

[표 11] 놀품체조 제안 경위에 대한 문체부 답변 내역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의내용	답변일자	답변내용
2015. 1. 23.	박홍근	놀품체조를 문체부에 기증하게 된 경위	2015. 1. 26.	놀품체조 개발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과장이 10월경 AZ 체조개발자를 만나서 놀품체조 개발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 들었으며, 체조 콘텐츠 다양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주일 후 놀품체조 시연회 자리를 마련하였음
2015. 1. 30.	박홍근	놀품체조 개발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방법, 사람, 일시, 내용, 조치	2015. 2. 2.	연락을 받은 방법은 유선 또는 핸드폰으로 기억되고, 최초 연락은 놀품체조 개발자인 AZ로부터 ◇과장이 2014. 10. 20. 오후 경에 받았으며, AZ로부터 놀품체조를 개발한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 들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10. 24. 첫 만남을 가졌음. BA 과장이 10. 24. 9시 서울 ●●호텔 커피숍에서 AZ 개발자 등 3명으로부터 설명과 제안을 받았고, 같은 날 제안내용을 ●국장과 2차관에게 보고하였음
2015. 2. 25.	배재정	놀품체조가 처음 문체부 ◇과에 어떻게 제이가 들어왔는지 경위	2015. 3. 2.	2014. 10. 20.경 AZ 놀품체조 개발자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고 10. 24. ◇과장이 AZ 개발자를 만나서 놀품체조 개발 배경 및 내용 설명을 들었으며, 체조 콘텐츠 다양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10. 30. 놀품체조 시연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놀품체조는 김중이 개발뿐 아니라 대국민 보급까지 직접 챙겼던 사안으로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국민체조 개발 보급사업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보급하겠으며, 2015년 당시 국회 서면 답변 등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국회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한 BC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BC는 이 건 행위와 ‘2-(1)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3-(1) 공익사업 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4번 참조]

※ 김중은 이 건 행위와 ‘1-(3)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지원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 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주)대우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3-(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등 부당지원 및 관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보(인사자료)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② 앞으로 소정의 계획, 예산투입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 국민체조 개발을 임의 중단하는 대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운동효과 및 위험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체조를 국민체조로 보급하거나 국회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훈련 관리 부실 관련**

국회는 승마국가대표 선수(정유라)의 2015년 국가대표 활동기록, 출전기록 등이 없고, 국가대표훈련보고서의 훈련일지가 부실 또는 허위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점 등 국가대표 훈련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정감사의 지적과 관련하여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8) 승마국가대표 훈련 관리 등 부적정**1. 활동 및 출전기록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정유라)의 국가대표 자격 적정성 여부**

승마국가대표선수는 대한승마협회의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제17조 제4호에 따라 전년도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회 및 국제승마협회가 주최한 국제승마 대회의 순위를 통합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포인트로 환산하여 각 종목별 통합순위를 산정한 후 통합순위가 높은 선수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부의하여 당해연도 국가 대표 선수를 선발 심의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데, 정유라(개명전 정유연, 이하 “정유라”라 한다)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15. 2. 24. 2015년도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한편,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제5조에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표 12]와 같이 8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 유지 기간은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제14조에 따라 1년으로 정해져 있다.⁸⁹⁾

[표 12] 승마 국가대표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자료: 대한승마협회 제출자료

이와 같이 2015년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활동기록이나 출전기록이 없다⁹⁰⁾는 사유는 국가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유라가 2015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1년간 국가대표자격을 유지하였던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2. 국가대표 훈련 관리의 적정성 여부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1조 등에 따라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중인 선수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앙경기 단체가 제출한 촌외훈련계획서에 따라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을 지급한 후 훈련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급한 보조금의 정산을 승인하고 있으며, 훈련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촌외훈련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89) 국가대표자격 유지기간은 2011년 7월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음

90) 출전기록은 없으나, 2015년 10~12월 국가대표 훈련수당은 수령하였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중인 선수에 대한 수당은 매월 훈련참가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3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르면 촌외훈련을 실시한 중앙경기단체의 장은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훈련기간, 장소, 훈련방법, 일자별 훈련참가 현황 등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촌외훈련 실시결과 보고를 지연할 경우 대한체육회는 국고보조금 보조를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촌외훈련을 실시한 중앙경기단체의 장이 제출한 촌외훈련 결과보고서에 훈련장소, 일자별 훈련참가 현황 등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훈련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훈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훈련보조비가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한 후 정산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2017. 1. 19.~3. 10.) 동안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에 지급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정산서 및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관리 미흡

대한승마협회는 2014~2015년 사이 선수들의 월별 촌외훈련을 마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와 훈련결과보고서를 [별표 4] “대한승마협회 정산서 등 제출일”과 같이 길게는 243일까지 지연하여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정산서 등의 제출을 독촉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중지 또는 환수하는 등 지연 제출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촌외훈련 관련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 정산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2014~2015년 사이 [별표 5]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액”과 같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의 촌외훈련 관련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정산하였다.

그런데 2014년의 경우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지급 근거로 대한승마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월별 촌외훈련결과보고서에는 선수들의 훈련장소가 ‘촌외 개인별 소속훈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훈련장소를 알 수 없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2015년 9월의 경우 장애물 종목의 훈련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월별 일일훈련일지의 경우 정유라의 2014년도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았고,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등 [표 13]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표 13] 승마 국가대표 훈련일지에 나타난 문제점

문제점	선수	내용	비고
서명 불일치	정유라	- 2014년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서명 불일치 - 2015년 10~12월 서명 불일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정유라	- 2014년 3~12월	- 3~6월, 12월분 도장 모양과 7~10월 분 도장 모양이 다름 - 2015년 3~9월 선수수당 미수령
	BF	- 2014년 7~12월 - 2015년 10~12월	- 2014년 3~6월 선수수당 미수령 - 2015년 3~9월 선수수당 미수령
서명 없음	정유라	- 2014년 5월 5주차	
	BG	- 2015년 9~11월	
훈련일지 미제출	BG	- 2015년 12월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4년 9월의 경우 마장마술 선수에게 28일분 선수수당(1일당 5만 원)이 지급되었고, 장애물종목 선수에게는 27일분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훈련일지에는 [표 14]와 같이 마장마술 선수가 25~26일, 장애물종목 선수가 26일을 훈련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표 14] 2014년 9월 승마 국가대표 훈련일지상 훈련일수

(단위: 일)

구분	선수	수당지급일수	훈련일지상 훈련일수
마장마술	정유라	28	25
	BH	28	25
	BI	28	25
	BF	28	26
장애물	BJ	27	26
	BK	27	26
	BL	27	26
	BG	27	26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정유라의 2015년 10~12월 친외훈련결과보고서의 경우 해외훈련장사용 확인서의 서명 일자가 [표 15]와 같이 훈련기간 중으로 되어 있어 사용기간 모두 실제 승마장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표 15] 정유라 선수의 2015년 10~12월 해외훈련장 사용확인 서명 일자

해외 승마장 사용기간	사용확인 서명(일자)
2015. 10. 1.~10. 31.	2015. 10. 14.
2015. 11. 1.~11. 30.	2015. 11. 9.
2015. 12. 1.~12. 31.	2015. 12. 11.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2014~2015년 사이 대한승마협회의 친외훈련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도 대한체육회 ◆부 주무 BM(2014년 1월~2015년 4월)과 BN(2015년 5월~2016년 6월 퇴사)은 친외훈련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 승인에

대한 기안을 하였고, ◆부 부장 BO(2014년 1월~2015년 1월)와 BP(2015. 1. 15.~2016년 3월 현재)는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정산을 승인하는 등 국가대표 승마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3. 국가대표훈련보고서 훈련일지의 허위, 위조 제출 여부

위 “2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유라의 2014년도 훈련일지가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제출되어 훈련 미 실시 및 훈련일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정유라가 훈련하였다는 승마장의 경우 훈련 일지나 마방 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⁹¹⁾,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승마종목 등 상시 촌외훈련 종목의 경우 직접적인 점검이 어렵고 문서에 의존해 그 훈련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향후 촌외훈련 종목에 대한 점검활동을 확대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고·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국가대표 촌외훈련에 대한 관리·감독과 촌외훈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91) 문제부와 대한체육회가 2016년 11월 실시한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통해서도 이같이 확인되었음

(9)**그랜드코리아레저 (주)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 특혜 의혹 관련**

국회는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이하 “GKL”이라 한다) 장애인 휠체어펜싱팀 창단과 관련하여 최서원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더블루케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체부와 GKL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9)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 및 에이전트 계약업무 부당 처리**1. 업무 개요**

GKL은 문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장애인수영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5. 11월경 424,000천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준비하였으나 GKL 대표이사 BQ⁹²⁾는 같은 해 12월 초 장애인 수영팀 창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영팀 창단 보류를 지시한 후 2016. 5. 13. 장애인 휠체어펜싱팀(이하 “휠체어펜싱팀”이라 한다)을 창단하였다.

GKL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제3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임원은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번 감사결과 GKL 대표이사 BQ는 GKL 스포츠단 단장으로서 ◆국장 BR에게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결재하는 등 GKL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공고 및 채용절차 없이 주식회사 더블루케이⁹³⁾ 소속 휠체어

92) 2015. 11. 30. 임기 3년의 GKL 대표이사에 취임

93) 스포츠 선수 관리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전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가 이사로 재직)로 2016. 8. 2. 폐업

펜싱 선수 등 5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을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단으로 비밀리에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6. 5. 11. 입찰절차 없이 더블루케이와 ‘장애인펜싱팀 에이전트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해 5. 24.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 60,000천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GKL 대표이사 BQ의 위법·부당 행위

1)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GKL은 2015. 9. 8. 문체부의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장애인체육과-1056) 공문에 따라 ①실 ♂팀장 BS와 같은 팀 대리 BT는 같은 해 9. 9. 장애인실업팀 후보 검토안(1안: 수영, 2안: 양궁, 3안: 스노보드)을 만들어 ①실장 BU, ♀본부장 BV, 부사장 BW의 검토를 거쳐 전 대표이사 BX(재직기간: 2013. 9. 30.~2015. 10. 12.)에게 최종 보고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장애인수영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BS와 BT는 2015. 9. 16.부터 같은 해 10. 18. 사이에 문체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연맹으로부터 장애인수영팀에 관한 지도자 및 선수 현황, 실업팀 현황, 지도자 채용 조건 및 공고문 등 “장애인 수영팀 창단 관련 자료”(○○연맹-629)를 제출받아 선수단 모집 일정 등이 포함된 “장애인 실업팀 창단 계획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2015. 10. 19. 부사장 BW에게 최종 보고(2015. 10. 12. 전 대표이사 BX가 퇴직하여 공석)한 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수영팀 창단을 최종 의결할 ‘이사회 부의(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2015. 11. 30. 취임한 BQ는 2015년 12월 초(날짜 모름) ⚡팀 업무보고 시 BS로부터 장애인수영팀 창단을 위한 지도자 1명 및 선수 3명(계약직), 예비비 424,000천 원이 포함된 “2016년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안)” 문건을 보고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수영팀 창단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GKL 「인사규정 시행세칙」(이하 “인사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신규 직원(계약직 직원, 스포츠단 선수 포함)을 채용할 때에는 7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친 후 인사세칙 제5조(전형요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스포츠단 실업팀 선수들도 계약직 직원으로서 위 인사세칙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휠체어펜싱팀 창단 선수들을 채용할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BQ는 2016. 1. 24.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중범으로부터 더블루케이와 함께 GKL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은 후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 제2차관 김종에게 보고한 후 인사세칙에 따른 공고 및 채용 절차 없이 더블루케이 소속 펜싱 선수 등 5명을 비밀리에 채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단 창단 업무를 맡은 적이 없는 ⚡팀장 BR을 향후 스포츠팀 창단 관련 실무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2016. 1. 25.부터 같은 해 3. 30. 사이에 BR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ㄱㅇ 인근 카페(상호 모름) 등에서 비밀리에 4~5회 정도 더블루케이 대표 BY를 만난 후 휠체어펜싱팀에 관한 더블루케이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2016년 3월경 더블루케이에서 작성한 “2016년 펜싱 실업팀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넘겨받았다.

이후 2016. 3. 30. BR을 스포츠단 창단 TF팀장으로 임명한 후 BR 등에게 지시하여 예산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1,065백만 원으로 증액하게 하고 위 운영계획서대로 더블루케이 소속 선수 등 5명을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단(감독 BZ, 코치 CA, 선수 CB, CC, CD)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TF팀원인 BT 등은 휠체어펜싱 선수가 81명(2016. 1. 20. 기준)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공고나 채용 절차 없이 감독 및 계약직 직원(선수)을 채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경영위원회 부의안 문서기안을 거부하고, 더블루케이 소속 선수를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BR을 통해 BQ에게 보고하는 등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6. 4. 8. 경영위원회 회의 시 감사 CF와 △본부장 CG는 선수 채용의 공정성에 이견을 제시하였고, 2016. 4. 25. 이사회 회의 시 사외이사 CH는 이미 선수단 채용을 가정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선수 채용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사외이사 CI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회사 경영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휠체어펜싱팀 창단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BQ는 BR에게 지시하여 모집공고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인사세칙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 채 휠체어펜싱팀 선수단 채용을 추진하게 하고 경영위원회와 이사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한 채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과시킨 후 2016. 5. 13. 선수단 5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휠체어펜싱팀을 최종 창단하였다.

2)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2-1)항”의 내용처럼 BQ는 이사회 등을 통해 더블루케이 소속 휠체어펜싱 선수 등 5명을 그대로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단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2016년 4월 말경 김종으로부터 더블루케이와 휠체어펜싱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BR에게 더블루케이를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GKL-선수-더블루케이 3자 간 「장애인펜싱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이하 “에이전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Q는 2016. 5. 3. 위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된 스포츠단 창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게 할 목적으로 기존 스포츠단 TF팀을 스포츠단으로 확대·개편한 뒤 자신이 스포츠단장을 겸직하고 스포츠단 TF팀장이었던 BR을 스포츠단 ◆국장으로 임명하였다.

GKL 「계약 및 검사·검수규정」(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등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 입찰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 등은 실업팀 선수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해 본 적이 없으며 문체부도 이를 위해 스포츠팀을 운영 중인 산하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등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달해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선수 관리 및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들의 권익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절차 등을 통해 업체를 선발하여야 한다.

한편, BQ로부터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BR은 2016. 4. 29. BT에게 더블루케이 대표 CJ와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니 오전 10시까지 GKL 인감도장을 회사로 가져오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BT는 더블루케이와 단독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①실장 BU, GKL 사내변호사 CK 등과 함께 ① 계약규정에 따른 입찰절차 없이 더블루케이를 단독으로 에이전트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② 인원이 적은 선수단(5명)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서 에이전트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③ 계약 체결에 대한 기본품의가 이루어진 대표이사의 결재문서와 회사 인감 신청 절차 없이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④ 선수위촉계약서상에 더블루케이가 선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에이전트 계약 체결⁹⁴⁾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BR과 BQ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도 BQ는 2016. 4. 29. 당일 BR에게 지시하여 “휠체어펜싱팀 계약서 체결(안)”을 BR이 직접 기안하고 자신이 바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기본 결재문서를 만들도록 한 후 같은 날 BR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에이전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 에이전트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BR이 2016. 4. 29. 당일 문체부와 전화통화에서 에이전트 협조요청 공문 시행을 거부당하자 BQ 자신이 직접 김종에게 공문 시행 협조를 부탁한 후 2016. 5. 2. 직접 문체부 CL과 통화하여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공문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후 다음 날인 5. 3. 문체부로부터 ‘장애인 전문 스포츠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 공문(장애인체육과-199)을 접수받아 2016. 5. 11. 더블루케이와 휠체어펜싱팀 에이전트 계약(금액: 선수단 연봉 및 전속 계약금 283,440천 원, 계약기간: 2016. 5. 11.~2017. 5. 10.)을 체결⁹⁵⁾하였다.

94) ❶팀에서 인감도장을 내주지 않아 실제 2016. 4. 29. 계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음

95) 추후에 GKL-선수단-더블루케이 간 계약해지가 합의됨에 따라 실제 에이전트 계약은 2016. 8. 2.까지만 유지되고 같은 해 8. 5. GKL과 선수단 간 직접적인 양자 계약 체결

3) 전속계약금 지급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GKL은 “2-2)항”의 내용처럼 2016. 5. 11.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하면서 선수 위촉계약서 제3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선수 3명(CB, CC, CD)에게 전속계약금 6천만 원(선수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속계약금이란 유명선수가 특정 실업팀에서만 활동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펜싱팀 선수들은 GKL실업팀 소속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른 실업팀을 위해 활동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GKL 「스포츠단 운영규정」(2016. 5. 4.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더블루케이이는 2016. 3. 5. 선수들의 전속계약금 50%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들과 더블루케이 양자 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를 이미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GKL이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전속계약금의 50% 금액은 더블루케이가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BQ는 더블루케이 측에서 계약 체결 전(날짜 모름)에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관련 서류 제출)하자 스포츠단에 이를 지시하여 2016. 5. 4. 「스포츠단 운영규정」에 전속계약금 지급 근거(제14조의3)를 만들게 한 후 위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5. 11 더블루케이와 전속계약금 지급을 담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4. 전속계약금 6천만 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전례가 없고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전속계약금 6천만 원이 선수들에게 지급되었고 이 중 3천만 원은 선수가 아닌 더블루케이에 지급되었다.

3. 스포츠단 ◆국장 BR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BR은 2016. 3. 30.부터 같은 해 5. 2.까지 스포츠단 TF팀장, 2016. 5. 3.부터 같은 해 7. 5.까지 스포츠단 ◆국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BQ의 지시에 따라 휠체어 펜싱팀 선수 채용, 에이전트 계약업무, 전속계약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앞서 “2항”의 내용처럼 BT 등 실무자들은 BR이 스포츠단 실무팀장임에도 스포츠단 창단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인사세칙, 계약규정 등을 위배하여 휠체어 펜싱팀 선수를 채용하고 에이전트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BR은 BT 등 실무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실무진을 배제한 채 자신이 문서를 작성하여 BQ에게 바로 최종 결재를 받는 등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더블루케이가 요구한 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2016. 5. 11. 에이전트 계약 체결 후 개최된 1회차 광주 전지훈련 및 청주 장애인 펜싱대회 시 BT와 CM은 선수위촉계약서 등에 대행료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스포츠단에서 직접 선수단 지원업무를 수행하자고 주장하였으나 BR은 더블루케이에 선수단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후 더블루케이 측에서 선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491,500원을 2016. 6. 21. 더블루케이 법인계좌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BQ는 더블루케이에서 최초 요구한 일반 배드민턴팀과 펜싱팀 창단 대행 용역계약(연간 80억 원 규모)이 무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자고 제안한 후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더블루케이 소속 선수 등을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단으로 채용하여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GKL이 추진한 장애인수영팀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BR로부터 휠체어펜싱팀 선수들의 자질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사세칙, 계약규정 등 일부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위법·부당한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휠체어펜싱팀 창단과정에 더블루케이가 요구하는 용역의 규모를 설령 줄였다 하더라도 기관 이익에 부합하는 최적의 팀인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업체와 공모하여 창단을 결정하고,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라 업체에서 미리 정해놓은 선수들을 채용한 잘못과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필요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함으로써 관련예산을 낭비한 잘못이 크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수영팀 창단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R, BS, BT 등 관련자들이 BQ에게 그동안의 장애인수영팀 창단과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분명하게 보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문답서, 확인서)하고 있어 BQ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한 지시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BQ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수시로 반대의사를 전달(문서 기안 거부, 구두로 반대의사 전달 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Q 자신이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 및 에이전트 계약문서 등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BQ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BR은 위 모든 행위를 대표이사 BQ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무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책임이 있고, 더블루케이에 지급한 대행료는 BQ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BR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BQ의 해임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 BQ는 이 건 행위와 ‘1-(11)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 자금 지원 부당요청’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문책요구(해임)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3번 참조】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장애인 휠체어펜싱팀 선수채용과 에이전트 계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고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에 선수단 지원업무 대행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BR을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징계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13번 참조】

※ 이 건 관련자인 김중은 이미 GKL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2016년 12월 기소(직권남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10) GKL의 콤프(COMP) 부적정 사용 관행 관련

국회는 GKL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콤프(COMP) 부적정 사용 관행(성매매 의혹 업소 사용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10) GKL의 콤프 사용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GKL은 「콤프 운영 지침」(2006년 1월 최초 제정) 등에 따라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콤프(Comp: Complimentary, 카지노 이용고객 포인트 혜택) 집행을 관리하고 있다.

GKL은 콤프를 VIP 고객용과 일반 고객용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고객은 콤프를 주로 교통카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VIP 고객의 경우 유흥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한 바(GKL 직원을 동반) 최근 3년(2014~2016년)간 VIP 고객이 유흥업소에서 총 55억 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에서 GKL이 공기업의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해 유흥업소에 콤프를 집행하면서 상위 10개 업소의 결제금액이 전체의 63%에 달한 것으로 보아 GKL이 유흥업소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서 콤프를 사용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지적에 대해 GKL은 2016년 10월 ① 유흥업소 콤프 사용 관리·감독 강화 ② 유흥업소 콤프 제공 중지 등의 방안을 검토한 후 ②안은 카지노 산업 전체를 통제하므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①안을 채택하여 불법 영업 유흥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콤프 사용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본 결과, GKL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자체감사를 통해 고객 콤프의 유흥업소 집행 내역을 중점 점검하여 직원이 콤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향응 수수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유흥업소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업소에서 계속하여 콤프를 집행하고 있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유흥업소에 대한 GKL의 콤프 사용·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최근 3년간(2014~2016년) GKL의 유흥업소에 대한 콤프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1천만 원 이상 콤프를 집행한 상위 70개⁹⁶⁾ 유흥업소 중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단속된 업소(이하 “단속업소”라 한다)는 10개(336건, 총 10.2억 원 집행) 업소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위 10개 단속업소에 대한 콤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콤프가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성매매 의혹 유흥업소에 대한 콤프 집행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찰청 단속 정보나 유흥주점 영업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의 행정처분 정보를 GKL이 제공받아 해당 업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 단속정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청인 허가관청에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 준시장형 공기업인 GKL이 경찰청 단속정보를 직접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6) 전체 유흥업소 콤프 사용액 55억여 원의 95%인 52억여 원을 집행하였고, 70개 업소 중 51개는 서울특별시(강남구 47, 서초구 2, 용산구 2)에 소재하고 나머지 19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2, 해운대구 7)에 소재

반면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은 유흥주점 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어 공개된 위 정보는 GKL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GKL이 이용한 70개 유흥업소 중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및 GKL이 해당업소를 이용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16]과 같이 4개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허가관청으로부터 5회 영업정지 처분(이 중 2회는 추후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개 업소(업소명: ●●)의 경우 2013년, 2014년 2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GKL이 2016. 12. 31. 현재까지 29회(집행액: 128,950천 원) 콤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세

업소명	소재지	경찰청 단속일자	행정처분 확정일자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기간	비 고
●●	서울 강남구	2013. 5. 15.	2013. 11. 26.	영업정지 1개월	2013. 12. 23. ~2014. 1. 21.	
		2014. 4. 25.	2014. 9. 15.	영업정지 2개월	2014. 9. 17. ~2014. 11. 15.	2차 영업정지 이후 2016. 12. 31.까지 29회(집행액: 128, 950천 원) 콤프 이용
●●	서울 강남구	2015. 8. 18.	2016. 8. 1.	영업정지 3개월	2016. 8. 31. ~2016. 11. 28.	검찰청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2016. 10. 7. 처분 취소
●●	서울 강남구	2015. 8. 18.	2016. 8. 1.	영업정지 3개월	2016. 8. 31. ~2016. 11. 28.	검찰청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2016. 10. 7. 처분 취소
●●	부산 부산진구	2016. 5. 30.	2016. 11. 25.	영업정지 3개월	2016. 12. 1. ~2017. 2. 28.	2017. 3. 3. 자진 폐업

주: 1. 2005. 1. 1. 이후 콤프 집행 상위 70개 업소 중 10개 업소가 19회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2. '●●'의 경우 1984. 7. 14.부터 현재의 소재지에서 '●●'이라는 업소명으로 영업 시작 후 10차례 업소명 변경, 2015. 1. 28. '●●'에서 '●●'로 업소명 변경 후 2017. 2. 9. '●●'로 업소명 재변경

자료: 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GKL의 콤프 집행 담당부서인 V본부는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된 업소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성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콤프 사용을 예방하려는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GKL은 성매매 알선 등 위법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던 유흥업소의 경우 변종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풍속영업의 허가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처분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업소에서의 콤프 집행을 금지시키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관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유흥업소에서 콤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국회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GKL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 자금지원 부당요청

1. 업무 개요

GKL은 「공익목적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2%를 GKL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고 있고, 재단은 2015. 11. 15.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체육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스키 유망주 발굴 사업인 ‘GKL 프리스타일 스키캠프’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6년에 위 예산을 동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라 한다)에 지원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재단의 「사회공헌사업 운용지침」 제6조에 따르면 재단이 사업의 주제를 정하여 기획하고 이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기획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사업기획, 사업계획 작성, 심의위원회, 이사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일반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7조에 따르면 재단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의 권한은 GKL이 아닌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있다.

따라서 재단 자금은 재단이 기획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고, 재단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GKL은 재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확인된 사실

그런데 GKL 대표이사 BQ는 2016년 1월 말 문체부 제2차관 김종으로부터 재단에서 영재센터에 2억 원 정도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로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재단 이사장 IB에게 재단의 사회공헌 자금 2억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BQ는 2016. 2월초 재단 회장 IC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재단 사회공헌자금에서 영재센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시켰다.

그 결과 재단은 GKL 프리스타일 스키캠프에 편성된 예산 2억 원을 2016년 4월과 6월 지원 계획에 없던 영재센터에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등 공익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BQ는 이 건 행위와 ‘1-(11)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 자금 지원 부당요청’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문책요구(해임)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3번 참조]

※ 이 건 관련자인 김종은 이미 GKL에 압력을 행사하여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직권남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재단이 「감사원법」상(제22조, 제23조, 제24조)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재센터에 대한 재단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12) GKL 크레딧(Credit) 제도의 법령 위반 관련

국회는 GKL의 크레딧⁹⁷⁾(Credit) 제도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개요

GKL과 같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자가 외국인인 고객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경우 물리적 제약, 해당 국가에서 도박 채무에 대한 변제 금지 등의 이유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GKL은 2006년 회사 설립 직후 한국은행장에게 채권매매 1인당 한도 등의 신고를 마쳐 크레딧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2011년 자체 실태 조사 과정에서 크레딧 돌려막기나 크레딧 회수금을 직원이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점을 적발하고 크레딧 제공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후 GKL은 크레딧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차단할 목적으로 2012. 1. 1.부터 크레딧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의 요지는 GKL이 크레딧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크레딧 에이전트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고, 미리 제공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크레딧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으로 GKL이 크레딧 에이전트 제도를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 검토결과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였다.

97)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 대여하는 것

2. 검토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2015. 1. 1. 이전까지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국외 크레딧 에이전트)와 거래당사자인 거주자(GKL) 간 거래는 외국환 거래 신고 예외사항이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 크레딧 에이전트)와 거래당사자인 거주자(GKL) 간 거래는 거래 발생 시 한국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GKL은 크레딧 에이전트 업체로 하여금 일정 규모의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나, 2013. 10. 13. 부산세관으로부터 GKL이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인 ○○주식회사(국내 크레딧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인 고객이 카지노 게임을 통해 잃은 1,009억여 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신고를 한국은행장에게 하지 않았다는 사유⁹⁸⁾로 과태료 1,614,911,160원을 부과 받고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이후 GKL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외국 크레딧 에이전트)로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운영하였고 2014년 5월 감독부처인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 위 신고 예외사항의 불합리성을 사유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같은 해 10. 31. 기획재정부는 GKL과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 크레딧 에이전트)간 거래도 신고 예외사항에 포함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완료하였고 동 규정은 2015. 1.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5. 1. 1. 이후 GKL의 크레딧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8) 고객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인인 크레딧 에이전트의 계약예치금이 공제되는 경우 부산세관은 이를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를 통한 수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

2. 문화 · 관광 분야

현 황

1. 관계 법령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에 따라 문화, 예술, 출판, 관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화예술분야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당 분야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직 · 인력

문체부의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분야 주요 시책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관광정책실이 각각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정책실(3관, 11과, 2017년 4월 기준)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교부·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 등 산하기관이 [표 17]과 같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소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실(3관, 10과, 2017년 4월 기준)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교부·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표 17]과 같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등 소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광정책실(2관, 7과, 2017년 4월 기준)은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 등 산하기관이 [표 17]과 같이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소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표 17]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분야 사업 추진 주요 기관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설치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
현원 (정원)	181 (194)	37 (16)	97 (99)	60 (61)	245 (228)	591 (605)
2016년 예산	2,195	258	3,750	363	3,485	3,452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예기금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회관 기반 구축 및 종사자교육 문화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전용관 등 지원 영화발전기금 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양성 양서 출판 장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영상물 유통 수출 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자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3. 관련 예산

문체부의 2016년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분야 예산(3조 8,709억 원)은 문체부 전체 예산(5조 4,848억 원)의 70%에 해당하고, [표 18]과 같이 문화예술정책실 등 3개 실이 일반예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기금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8]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 예산	기금	계	일반 예산	기금	계	일반 예산	기금	계
문화예술정책실	11,750	1,868	13,618	12,058	1,952	14,010	12,932	2,320	15,252
문화콘텐츠산업실	3,823	1,362	5,185	4,524	1,203	5,727	6,407	1,257	7,664
관광정책실	3,760	8,556	12,316	4,432	11,345	15,777	4,964	10,829	15,793
합계			31,119			35,514			38,709

주: 각 실 소관 기금명은 문화예술정책실의 경우 문예기금, 문화콘텐츠산업실의 경우 영화지역발전·언론기금, 관광정책실의 경우 관광기금임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반 현황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 [표 19]와 같이 운용·관리하고 있다.

[표 19] 관광진흥개발기금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7,150	7,774	8,930	9,274	12,770
사업비 소계	6,088	6,910	8,550	9,074	9,461
- 관광진흥기반 확충 사업비	1,012	1,134	885	1,017	1,192
- 관광산업 육성 사업비	759	784	767	926	903
-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비	1,856	2,072	2,098	2,631	2,366
- 관광산업 육성 사업비	2,461	2,920	4,800	4,500	5,000
기금운영비	6	6	5	5	5
정부내부거래지출	600	600	-	-	589
여유자금운용	456	258	375	195	2,715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문제점

<주요 감사결과 요약>

-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산하 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독립성을 훼손
- 문체부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차은택이 추천한 업체의 견적만 받아 해당 업체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사로 부당 선정(34억 원)하였고, 과다 산정된 이윤을 그대로 인정하여 업체에 2억여 원 과다 지급
- 문체부는 2015년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보조금 5억 원)하면서 공모도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였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016년에 재차 동일한 업체를 선정(보조금 5억 원)
- 기재부는 편익을 과다 산정,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B/C 1.09) 문화창조아카데미 기본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B/C 0.71) 되었고,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교육생 선발 후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교육생 참여가 극히 부진하여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운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체부는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없이 방치
- 문체부는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위배하여 예측 가능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 신규사업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확정하지 않아 집행잔액을 민간보조사업자 계좌에 방치

2-(1)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과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라 한다), 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이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와 제20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고, 한문연은 같은 법 제38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예기금을 재원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⁹⁹⁾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3조 등에 따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며,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등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세종도서사업¹⁰⁰⁾ 등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이 문화예술인·단체 등 지원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문체부의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예술, 영화, 출판 분야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아래 “특정 문화예술계 부당 지원배제 경위”와 같이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체부에 지시

99)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민간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국립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100) 매년 출판산업 진흥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학술·문학·교양 등 3개 분야별로 출판물을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된 후 선정된 도서별로 10백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

하여 문예위 등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부당하게 지원배제하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문화예술계 부당 지원배제 경위

- ▶ 2013년 9~11월 문화예술계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자 문화체육관광실은 2013년 말부터 문체부에 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 2013년과 2014년에 문체부(●관실) 소관 우수도서 선정에서 이념편향적 작품 선정이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실은 2014년 초부터 문체부에 각종 심사위원의 책임성 및 자격심사를 요구하며
- 2014년 초부터 문화체육관광실은 진보성향 작품·단체 등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체부(◇관실)에 문예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위원 및 지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고 그중 특정 인사·단체를 선정·배제하도록 지시
- ▶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o’ 상영이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실은 2015년 1월 문체부(○관실)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축소를 지시하고 문체부는 이를 영진위에 지시하여 이행시킴
- ▶ 2014년 6월부터 문체부(◎실)는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 담당부서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실적 등을 이행관리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구성·운영

2. 예술 관련 문예기금 지원사업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1) 문예위 문예기금 지원사업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다양성¹⁰¹⁾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 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제2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예위 위원과 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문예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등을 통해 문예위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문예위 규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문예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예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위원장 포함)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¹⁰²⁾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예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하거나 문예위 공모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지원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문화 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고 국민의 문화권 및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이와 같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예위는 심의위원 후보자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예위 공모사업 등에서 선정·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문예위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문예위 문예기금 지원대상 등 부당 배제

① 책임심의위원 선정 관련

그런데 문체부(◇관실)는 2014년 3월 문화체육비서관실에 2014년도 문예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송부한 후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105명 중 IY 등 19명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문체부(◇관실)는 2014년 3월 문예위(사무처)에 2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¹⁰³⁾ 위 19명을 문학·시각·연극 등 분야별 책임심의 위원에 선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103) 문예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정함

이에 대하여 문예위(사무처)는 2014. 3. 28. 문예위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2015. 8.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으로 개정하기 전의 것, 문예위 규정) 등¹⁰⁴⁾과 달리 문체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문예위 위원장과 전체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문학 분야 IY 등 위 19명을 2014년도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별표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부당 선정배제 명세”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명(책임심의위원 19명, 심의위원¹⁰⁵⁾ 47명)을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문예위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②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관련

한편 ◇관 BC와 ◇과장 AG는 문체부(◇관실)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아 지원배제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비서관실과 문체부(◇관실) 간 지원배제에 대한 전담 연락 창구역할을 하는 ◇관실 ◇과 CN이 2015년 9월경 ◇실 선임행정관 U에게 문예위 공모사업 등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후 U로부터 문예기금 지원배제 명단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나서 문체부 ◇과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년 9월경 문예위의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96개 단체 중

104)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위원장은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105) 문예위는 2015년 8월 기존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함

사단법인 ▼▼ 등 22개의 특정 문화예술단체명을 문예위(사무처)에 유선으로 알려주면서 지원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예위(사무처)는 위원장 CO가 문체부(◆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실제 지원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아 지원배제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0. 27. 심의를 주도할 수 있는 친정부 성향의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고 지원배제 명단을 공유한 후 심의과정에서 배제대상자가 지원후보로 거론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부실 등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의 신청자인 사단법인 ▼▼ 등 22개 단체가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③ 공연예술스태프 지원사업 관련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 □과는 2016년 5월 말경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문예위 공모사업 등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후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문예기금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나서 문체부 □과는 2016년 6월 초순경 ■실장¹⁰⁶⁾ AC, ◆과장 AU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아 지원배제

106) ■실은 ◆관실, ▣관실, ▢실 등 3개로 운영됨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문예위의 “공연예술스태프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316개 단체 중 사단법인 ▼▼ 등 36개 문화예술단체명을 문예위(사무처)에 우선으로 알려주면서 지원배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예위(사무처)는 위원장 CO에게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CO가 부당한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자 2016년 6월 중순경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 과정에 간사로 참석하여 선정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등 심의위원들에게 지원배제 지시 내용 언급 및 이행의 고충을 토로하고 배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단법인 ▼▼’ 등 19개 단체¹⁰⁷⁾가 지원배제되도록 하는 등 [별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 배제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문예위 공모사업 등에 지원을 신청한 단체 중 총 298개¹⁰⁸⁾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심의과정에서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예위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특정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 배제하거나 공모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문예기금 지원에서 배제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 및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07)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던 36개 단체 중 17개 단체는 심의과정에서 지원배제 개입 없이 탈락함

108)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나.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① CP의 경우

문체부 ◇실 ○관 CP는 2014. 11. 11.부터 2015. 7. 30.까지 ◇관의 직위에서 예술진흥 정책의 수립,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 ◇관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CP는 2014년 11월경 U로부터 문예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신청자 현황 및 세부 명단을 제출하고 신청자 중 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문예위를 담당하는 CN에게 전달하면서 U에게 공모사업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CP는 2015년 1월 U로부터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CQ 등 12명의 성명(또는 단체명)을 유선을 통해 전달받으면서 “지원대상에서 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CP는 지원배제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시키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위 사업 신청자 CQ 등 12명의 성명(또는 단체명)을 별도의 메모지에 적어 CN에게 전달하면서 U가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CP는 CN 등 ◇관 소관 부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지원사업 신청자 중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CP는 본인이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CN에게 지원배제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CN이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는 등 10~20차례에 걸쳐 ◇관 소관 부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¹⁰⁹⁾

이에 따라 문체부 □과 CR이 2015년 4월경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문예위의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321개 단체 중 ‘극단 AA’ 등 31개 단체 명을 문예위 ■원 전문위원 CS에게 유선으로 알려주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문예위 ■원장 CT는 2015. 5. 22.(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및 2015. 6. 11.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 간사로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는 정부 방침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지원배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 전부가 폐지되어 모든 단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정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극단 AA’ 등 31개 단체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P가 ◇관으로 근무한 기간(2014. 11. 11.~2015. 7. 30.) 동안 문예위 등 산하기관이 심의과정 등에서 지원배제를 이행하는 등 총 187개¹¹⁰⁾의 특정 문화 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 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한편,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09) CP는 지원배제가 일상적인 일이었으므로 ◇관 소관 부서가 지원배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더라도 지원배제가 시스템화되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음

110)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② BC의 경우

문체부 국립국어원 ■부장 BC는 2015. 7. 31.부터 2017. 2. 2.까지 ■실 ◇관의 직위에서 예술진흥 정책의 수립,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을 총괄·감독하였다.

BC는 2015년 8월경 전임자인 CP로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지원배제를 요구하면 이를 문예위 등이 이행하도록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원배제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았고, 또한 AG 등으로부터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아 문체부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BC는 AG로부터 지원배제 체계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이미 지원배제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6년 6월 초순경 문예위의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자 중 특정인사·단체의 지원배제 지시 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가-③항”의 내용과 같이 문예위의 공연예술스태프 지원사업 신청단체 중 ‘사단법인 ▼▼’ 등 19개 단체가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BC는 ◇관으로 근무한 기간(2015. 7. 31.~2017. 2. 2.) 동안 문예위가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47명)하거나 공모 지원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162개)하는 등 총 209건¹¹¹⁾의 선정 및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한편, 문예위 등 산하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11)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③ AC의 경우

문체부 ◆실장 AC는 2016. 4. 11.부터 2016. 11. 22.까지 ㄹ실장의 직위에서 문화예술 분야 정책 전반 등을 총괄하였다.

그런데 AC는 2016년 4월 AU로부터 문예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 및 문체부(ㄹ실)의 이행사실을 자세히 보고받고도 위 지시의 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가-③항”의 내용과 같이 문체부 ㄹ실의 지시에 따라 문예위가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단체 중 사단법인 ▼▼ 등 19개 단체를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AC가 ㄹ실장(2016. 4. 11.~11. 22.)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이 지원배제 지시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아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47명)하거나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 지원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59개)함으로써 총 106건¹¹²⁾이 선정 및 지원이 배제되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한편, 문예위 등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④ CO의 경우

문예위 위원장 CO는 2015. 6. 9.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예위를 대표하고 문예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문예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심의·의결하는 등 문예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12)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한편 CO는 2015년 6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문예위 1본부장 HH 등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하여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CO는 2015년 6월 중순경 HH 등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중 위 지원사업의 심의위원들이 2차 심의(2015. 3. 31., 2015. 4. 1.)를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94명의 특정 문화예술인 중 지원배제를 지시받은 14명이 포함되었고, 3차 심의(2015. 6. 5.)에서 위 14명이 배제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심의를 재개하여 논의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전임 위원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사유로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전임 위원장과 협의했던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CO는 2015년 7월 초순경 HH로부터 3차 심의(2015. 6. 26.)에서 심의위원들이 위 14명을 지원배제하지 않은 채 94명을 선정한 데 대해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7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원배제 지시가 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위 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이 많다는 사유로 빨리 처리하라고만 지시하였다.

이후 CO는 2015. 7. 16. 문예위(사무처)가 지원배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7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하여 문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 후, 같은 해 7. 17. 자신이 직접 서면결의하고 다른 위원들도 서면결의하도록 하는 등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직접 이행함으로써 위 지원사업에서 25명의 특정 문화예술인이 부당하게 지원배제되었다.

또한 CO는 2015년 6월 중순경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문예위 ■원장 CT로부터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문체부(◇관실)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고, 이를 전체회의 전 분야별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재심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CO는 2015. 6. 25. 개최된 제162차 문예위 전체회의에 문체부 지원 배제 지시가 반영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 후 CT가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지원배제 지시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위 회의에서 설명하였는데도 심의·의결하여 ‘극단 AA’ 등 15개 단체가 지원배제되도록 하는 등 문예위(사무처)가 심의과정에서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지원배제를 이행하는 것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면서도 지원배제 지시 이행을 중지하도록 지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CO가 위원장으로 근무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예위 (사무처)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배제를 이행하였고, CO는 문예위 전체회의 의장으로서 지원 배제가 반영된 심의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문예위 심의 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47명)하거나 문예위가 추진하는 지원사업 등에서 특정 문화 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208개)하는 등 총 255건¹¹³⁾을 선정·지원배제함으로써 해당 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편,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13)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2) 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제40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문연의 설립을 인가하고, 문체부 예산의 범위에서 한문연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검사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한문연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작품성 및 대중성 등이 검증된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정하고 이 중 각 지역문화예술회관¹¹⁴⁾이 특정 공연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문연이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14)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 또는 재단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방의 문화예술회관

특정 공연을 지역문화예술회관에 배정하고 경비의 일부¹¹⁵⁾를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하 “문화공감사업”이라 한다)’¹¹⁶⁾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문연이 문화공감사업의 지원 대상 공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매년 마련한 「심사계획」에 따르면 심의단계별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¹¹⁷⁾을 선정하여 작품성, 사업수행능력, 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모자격의 결격사유¹¹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문연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공연단체를 문화공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공연단체가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2-1)-(1)항”과 같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문연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아 특정 공연단체가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지원비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광역시 및 도립의 경우 40% 지원, 재정자립도 20% 이상인 경우 50% 지원,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경우 60% 지원)

116) 2015년 사업예산: 5,200백만 원

117) 1차(분야별) 심사: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다원예술 장르별로 3인씩, 총 15인

2차(선정) 심사: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7인

3차(예산) 심사: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5인

118)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등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 □과 CR이 2015년 1월 ◇관 CP의 지시에 따라 ◇실 선임행정관 U에게 2015년도 문화공감사업 신청자 839개 공연단체 명단을 송부한 후 U로부터 주식회사 □□ 등 22개 공연단체의 이름이 적힌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한문연(사무처)에 위 명단의 단체를 지원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문연(사무처)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5. 1. 28. 문화공감사업 1차 심의 시 심사위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공연단체들과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배제지시가 있었던 단체들의 명단을 함께 알려 주었다.

그 결과 [별표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9개¹¹⁹⁾ 공연단체가 부당하게 문예기금 지원에서 배제되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문화공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문체부(◇관실)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배제 지시에 따라 문예위와 한문연 이외에 ∴ ∴ 재단 등 6개 기관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별표 9] “∴ ∴ 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와 같이 계 34건을 지원배제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예위 등 8개 기관이 총 417건¹²⁰⁾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지원배제하였다.

119)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던 22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120)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3. 영화 관련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특정 전용관 등 부당 지원배제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3조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영진위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승인을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영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와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영진위 규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영진위는 영화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고,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영화기금의 관리·운용 등과 관련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영진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전용관 등을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전용관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2-1)-(1)항”과 같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진위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아 특정 전용관 등이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영진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영진위 영화기금 지원대상 부당 배제

가. 특정 전용관 부당 지원배제

그런데 문체부(○관실)는 2014. 4. 23. 영화 ‘ㅂ’를 상영한 ㄱ(예술영화전용관)을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¹²¹⁾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영진위(사무국)에 하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진위(사무국)는 ㄱ을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초 2014. 4. 16.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진행된 예비심사 결과(ㄱ 등 25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를 철회한 후 상대적으로 지원금 의존율이 높고¹²²⁾ 시설이 열악한¹²³⁾ ㄱ에 불리한 “지원금 의존율 개선 실적” 등¹²⁴⁾ 심사항목을

121)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694백만 원(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 1,340백만 원, 독립영화전용관

추가하거나 “상영관 시설”¹²⁵⁾ 등 심사항목의 배점을 높인 후 위 사업을 재공고하여 2014. 7. 2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진행된 재심사 과정에서 시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문체부(○관실) ㉠과 CU는 ㉠과장 CV로부터 2014년 10월 중순경 영화 ‘ㅇ’ 등을 상영한 특정 독립영화전용관(ㅈ, ㅊ)을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¹²⁶⁾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실 행정관 CW의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문체부 ○관 AC에게 보고한 후¹²⁷⁾ 영진위 ㉠부장 CX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X는 2015년 1월 중순경과 같은 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ㅈ(서울 성북구 소재)과 ㅊ(서울 종로구 소재)을 지원배제하기 위해 국회 지적사항(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편중 지원 개선 필요) 등을 명분으로 하여 ㅈ, ㅊ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 지역 이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안)”(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영진위 위원장 CE에게 보고하자, CE는 문체부의 지시대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진위는 2015. 4. 29.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위 사업계획의 내용과 같이 개편하는 등 ㅈ과 ㅊ을 “2015년도 전용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운영지원 894백만 원, 시네마테크전용관 운영지원 460백만 원)

122) 영진위가 2014. 5. 9.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상대적으로 지원금 의존율(매출액 대비 지원금)이 높은 전국 11개 단관형 전용관의 평균 5개 연도(2009~2013년) 지원금 의존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ㅈ(143%)은 3번째로 지원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123) ㅈ은 관람객 대기실 등에 난방시설 없이 구형 난로를 사용하고, 영화 상영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물(상영관 중앙에 위치한 기둥)로 인해 영사기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 영상 화질이 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전용관에 비해 관람객 유치 및 영화 상영에 열악한 시설임

124) 당초 2014년 4월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예술영화 수급구조 안정에 대한 기여도”(총점 100점 중 10점 배점)를 평가하였으나 2014년 8월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지원금 의존율 개선 실적, 자구책 마련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총점 100점 중 15점 배점)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배점을 조정하였음

125) 당초 2014년 4월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총점 100점 중 10점을 배점하였으나 2014년 8월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총점 100점 중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126)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914백만 원(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1,560백만 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894백만 원, 시네마테크전용관 선정지원 460백만 원)

127) AC는 CU로부터 CW의 지시에 따라 ㅈ과 ㅊ에 대해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지원금 지원을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도록 그대로 두었음

나. ㄱ(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의 영화 ‘ㅇ’ 상영요청 부당 거부

영진위는 2010년부터 독립영화 등을 상영하는 ㄱ을 직접 운영하면서 특정 독립영화의 상영요청을 받은 경우 영화상영 일정 등을 검토한 후 문화 다양성 및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를 위해 가능한 한 상영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CV는 CW로부터 2014년 10월 중순경 영화 ‘ㅇ’의 상영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문체부(○관실) ㉠과 CY 등을 통해 AC에게 보고하였으나 AC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후 CY는 CV로부터 위 지시를 전달받아 2014. 10. 17.경 영진위(사무국)에 영화 ‘ㅇ’을 상영할 예정인 일부 전용관에 상영 중지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영진위(사무국)는 2014. 11. 6.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ㄱ에서의 영화 ‘ㅇ’ 상영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영화를 상영할 경우 문체부(○관실)로부터 받게 될 압박감과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영화 ‘ㅇ’을 상영해도 되는지 문체부(○관실)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문체부(○관실)가 상영하지 않도록 지시하자 영진위(사무국)는 위 상영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부당 삭감

더욱이 CV는 2015년 4월 CW로부터 영화 ‘ㅇ’을 상영¹²⁸⁾하였다는 사유로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 지원금의 50% 내외 수준(약 730백만 원)으로 삭감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후 문체부 ○관 C에게 보고하였으나 C는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두었다.¹²⁹⁾

128)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2014. 10. 2.~10. 11.)를 개최하면서 2014. 10. 6.과 같은 해 10. 10.

이후 CE는 CV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후 영진위(사무국)로 하여금 2015. 4. 17.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이 집중 (전체 사업비의 42.9%)되어 있는 점¹³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¹³¹⁾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예산을 1,000 백만 원 이하로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을 부각하는 등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는 심사 자료를 배포하도록 결재하였다.

그리고 CE는 2015. 4. 27. 위 지원사업의 결정심사를 진행하면서 총 7명¹³²⁾ 중 4명(의결정족수 5명)의 심사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750백만 원으로 삭감 등)에 대해 반대하자 가결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 백만 원(예비심사결과 대비 50백만 원 상향)으로 제안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심사위원 중 2명에게 휴회 시간 중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문체부(○관실)의 지시사항¹³³⁾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남은 심사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거세게 내자 예비 심사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일부 상향을 전제로 재심사하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영화 ‘○’을 상영하였음

129) 당초 CV는 2015년 1월 말 CW로부터 영화 ‘○’을 상영하였다는 사유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인 AC(전임)와 C(후임)에게 보고한 후 일부 삭감 검토 요청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CW에게 보고한 바 있음

130)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비심사(2015. 4. 17.)의 심사자료에는 최근 4개년(2011년~2014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체 예산규모 대비 영진위의 평균 지원금 비중이 약 12%로 위 지원사업에 신청한 영화제 중에서 가장 낮거나 2번째로 낮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위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비중이 약 43%인 점을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 참고 사항”을 통해 부각하였음

131)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 등에 따른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4. 관리 일반에 따르면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00백만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1,000백만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국제영화제는 2018년부터 지원예산을 1,000백만 원 이하로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132)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결정심사에는 8명의 심사위원이 참석(1명 미참석)하였으나 이 중 1명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영진위)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결권자는 7명이었음

133) CE는 휴회 시간 중 영진위(사무국) 담당자(CE는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함)로 하여금 문체부(○관실)의 의견을 우선으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문체부(○관실)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 이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를 전달받음

제안한 후 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유도하여 이와 같이 예비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처리하였다.

이후 예비심사위원회는 2015. 4. 28.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결정심사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액을 80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CE는 이를 결정심사에 재상정하여 결정심사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전년도 대비 660백만 원 삭감)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별표 1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와 같이 문체부 등 외부기관의 지시 등에 따라 계 5건¹³⁴⁾이 영화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특정 전용관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 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진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2)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AC의 경우

문체부 ◆실장 AC는 2014. 10. 13.부터 2015. 3. 30.까지 ◇실 ○관의 직위에서 콘텐츠 분야 정책 전반 등을 총괄하면서 영진위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AC는 2014년 10월 중순 및 2015년 1월 말경 문체부(○관실) ◻과장 CV 등으로부터 ◇실 행정관 CW가 영화 ‘○’을 상영한 전용관 지원배제 및 부산국

134) 문체부(○관실)는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특정 전용관 등에 대한 계 8건의 지원배제 지시를 받아 이를 영진위(♣국)에 전달하여 이 중 5건은 영진위(♣국)가 지원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였고, 나머지 3건(영화 ‘트’ 등 3개 영화)은 “2015년도 예술영화제작 지원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점수미달로 탈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영진위(♣국)가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2)-(1)-가~다항”의 내용과 같이 문체부(○관실)는 영진위(사무국)에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여 이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영진위는 ㄱ와 ㄷ를 “2015년도 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였으며, 부산국제영화제의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지원금을 2014년 대비 45%(1,460백만 원에서 880백만 원으로 삭감) 삭감하였다.

나. CE의 경우

영진위 위원장 CE는 2014. 12. 31.부터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진위를 대표하고, 영진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영화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심사·의결하는 등 영진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도 CE는 부임 이후 2015년 1월 중순경과 같은 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영진위 회부장 CX로부터 영화 ‘ㅇ’ 등을 상영한 특정 독립영화전용관(ㄱ, ㄷ)을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라는 문체부(○관실) ㉠과 CU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지적사항(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편중 지원 개선 필요) 등을 명분으로 하여 ㄱ(서울 성북구 소재) 및 ㄷ(서울 종로구 소재)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안)”(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상세하게 보고받고도 문체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은 채 보고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E는 영진위 담당자 CX로 하여금 2015. 2. 11. 개최된 ‘2015년 제2차 임시회의’에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였으나 위원들이 2014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수행평가(2015. 1. 14.~1. 15.) 결과(ㄷ: A등급, ㅈ: C등급)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반대하자 CX에게 관련 근거 및 논리 등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CX 후임인 *본부장 CZ는 법률 자문 검토를 받거나 위탁 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CE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CE는 2015. 4. 27. 개최된 제5차 정기회의와 2015. 4. 29. 개최된 제6차 임시(서면)회의에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재상정하도록 결재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후 최종적으로 ㅈ와 ㄷ이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CE는 2015년 4월 CV로부터 영화 ‘ㅇ’을 상영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2014년도 지원금(1,460백만 원)의 50% 내외 수준(약 730백만 원)으로 삭감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CE는 CV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2015. 4. 27. 진행된 결정심사에서 총 7명 중 4명(의결정족수 5명)의 심사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750백만 원으로 삭감 등)에 대해 반대하자 가결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00백만 원(예비심사결과 대비 50백만 원 상향)으로 제안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문체부(○관실)의 지시(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상한액 800백만 원)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는 등 결정심사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전년도 대비 660백만 원 삭감)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하였다.

4. 출판 관련 세종도서사업 특정 도서 부당 지원배제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2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출판·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판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하는 것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6조의4, 제21조와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출판진흥원 지침) 등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양서출판 의욕을 진작시키고 국민의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술·문학·교양 등 3개 분야별로 출판물을 심사하여 선정된 후 각 선정된 도서(이하 “세종도서”라 한다)별로 10백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세종도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출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출판진흥원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도서가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2-1)-(1)항”과 같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아 특정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관실) 圖과장 DB는 2014년 11월 ◆실 행정관 DC에게 세종도서사업 최종 심사대상 도서목록을 송부한 후, DC로부터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아야 할 도서(이하 “지원배제 대상도서”라 한다)의 목록(문학 분야 9종¹³⁵⁾)을 전달받아 출판진흥원에 알려 주면서 지원배제 대상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출판진흥원(사무처)은 위 지시를 따르기 위해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 분야 최종 심사 시(2014. 11. 14.) 심사위원들이 지원배제 대상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표”에 대해 논의할 때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와 관련된 도서인 “ㅎ”가 2013년도 우수도서(전 세종도서)로 선정된 데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문체부 등의 우려¹³⁶⁾를 언급하여 “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출판진흥원(사무처)은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대상 도서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부각되게 설명하여 해당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¹³⁷⁾으로써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2015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해서도 문체부 圖과장 DB는 2015년 10월 ◇실 행정관 DC가 지원배제 대상도서 목록(2015년 문학분야와 교양분야 15종¹³⁸⁾)을 알려주면서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자 이를 상급자인 ●관 DA에게 보고 하였으나 DA는 DB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유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B는 출판진흥원 ○본부장 DD에게 ◇실 행정관 DC로부터 전달받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를 알려주고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출판진흥원(사무처)은 2014년도의 경우와 같이 문체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2015년도 세종도서 최종 심사 시(문학 분야: 2015. 10. 29., 교양 분야: 2015. 11. 6.) 지원배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논의할 때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부각되게 설명하여 해당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¹³⁹⁾으로써 총 13종¹⁴⁰⁾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135) 문체부가 최초 15종 가량의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출판진흥원이 지원배제 대상 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9종으로 축소

136) 2014년 2월 언론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일생을 홍보하고 미화하는 “ㅎ”이 2013년도 우수도서(전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다는 보도

137) 출판진흥원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부각되게 설명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138) 문체부가 최초 20종 가량의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출판진흥원이 지원배제 대상 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최종 15종으로 축소

139) 출판진흥원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부각되게 설명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140) 지시받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 15종 중 2종은 세종도서로 선정

그 결과 [별표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부당 선정배제 명세”와 같이 문체부 등 외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총 22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는 등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세종도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5.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이행 총괄관리 TF 부당 운영

문체부(기획조정실)는 정치 편향적인 작품 등에 대한 지원배제 등 문화체육 비서관실 지시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6월경부터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이하 “건전TF”라 한다)¹⁴¹⁾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문체부장관 김종덕이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건전TF를 구성하여 2015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였다.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영상·출판·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2~4항”의 내용과 같이 ◇관실 등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141) 문체부(◎실)에서 2014년 6월에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TF(실장급 회의체)를 구성하였으나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전TF가 운영됨. 2014년 10월 구성·운영된 건전TF는 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등을 위해 ◎실장을 TF 단장으로, ::관을 TF 부단장으로, ●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관(또는 -과장), ◇관(또는 ◆과장), ▢관(또는 -과장), ○관(또는 ⊕과장)과 ●관(또는 ≡과장) 등이 매주 1회 참석하여 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지원 배제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됨

문예기금 등을 지원하는 산하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중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 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이 명단을 알려주며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에서 건전TF는 지원배제 실적 점검 등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 ◎실장 DE는 2014년 10월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장관으로부터 문체부 지원사업 중 정치적인 작품 등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 후 대응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DE는 ◎실 ○담당관 DF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후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별 정치편향 작품 등을 지원배제하기 위한 세부 대응전략이 기술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¹⁴²⁾을 참고하여 DF가 작성·정리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이하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이라 한다)¹⁴³⁾ 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142) 2014년 6월에 최초 작성된 후 2014년 8월에 반정부 성향에 대한 심사강화 등 내용이 추가·수정되었고, 2014년 10월에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장관이 DE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후 DE는 DF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DF가 2014년 8월 작성된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위 실행계획을 작성함. 위 실행계획 내용은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전단계에서 지원심의 및 관리운영기준을 강화하고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 편향 작품, 단체, 예술가 선정을 배제하며 정치 편향성이 강한 진보 인사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공모 및 심사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및 대응을 하도록 하는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이 기술

143)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은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지원)의 경우 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와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 검토하고,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하는 등 심사 강화와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다음 연도 지원예산 삭감, 타 영화제 작품 선정 시 사전에 문제영화 차단효과)가 필요하며, 미디어(우수도서 선정)의 경우 심사 절차, 심사 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 세부 분야별 개선방향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위험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절차 및 기준 개선, 업무처리 단계별 세부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 철저,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그 후 DE는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등 보고내용¹⁴⁴⁾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건전TF의 단장으로서 건전TF를 2015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였다.

그런데 DE는 건전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의 특정 문화 예술인·단체 지원배제 관련 ◇관실 등 소관 실·국·과 참석자들과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경과와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관련 실적 등 현황 점검 및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¹⁴⁵⁾하였다.

그리고 건전TF 간사인 ○담당관 DG 등으로 하여금 건전TF에서 논의된 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015. 2. 25., 3. 16., 4. 20.) 문서 등¹⁴⁶⁾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화체육비서관실에 위 문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DE는 2015년 2월경 건전TF 회의에서 ‘장르,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란’으로 구성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명단을 ◇관실 등 소관 실·국·과 참석자와 공유하였다.¹⁴⁷⁾

144) DF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보고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한 기억은 없으나 ◇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건전TF 회의에 제출하였고 회의 내용이 장관과 대통령비서실까지 보고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건전TF 회의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보고서가 3개 분야(예술, 영화, 출판)에서 지원배제가 실행되는 액션플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함

145) CV가 건전TF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의 상영관 수, 관람객 수까지 궁금해 한다”고 하였고 DE는 “그런 내용이 TF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문예위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라”라고 언급함

146)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015. 2. 25., 3. 16., 4. 20.) 문서에는 미디어(출판)분야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이념편향성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공모 시 공공성을 보다 고려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거나, 예술의 경우 “각종 리스트 관리·공유 중, 사전 스크리닝 부담에 따른 추진상 애로 가중” 등 건전TF에서 논의된 사실이 기술

147) DG에 따르면 2015년 2월경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은 없지만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건전TF 회의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당시 건전TF 회의에 ◇관실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2015. 2. 18. 설 연휴 직전에 있었던 건전TF 회의에서 DG가 AG에게 지원배제 명단을 뒤늦게 전달함

그리고 나서 2015년 3월경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ㄱ’와 ‘ㄷ’ 등이 문예위 공모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DE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질책을 받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AG를 불러 ‘ㄱ’ 등을 지원배제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¹⁴⁸⁾하고 재발방지를 지시¹⁴⁹⁾하였다.

이와 같이 DE는 건전TF 단장으로서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전TF 회의를 통해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경과와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관련 실적 및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회의결과를 문화체육비서관실에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명단을 건전TF 참석자와 공유한 후 이에 대한 이행관리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실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이행 관련 부서는 건전TF 회의에 제출한 산하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지원배제 관련 보고내용을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2~5항”의 내용과 같이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그 직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계속 받고 있으면서 문체부 및 문예위 등 산하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이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문체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 등의 심사 방해 금지 및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급

148) 장관의 지시로 DE가 AG를 불러 위 2개 단체를 지원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 물어보았고, AG는 지원배제 명단을 늦게 받아 참고사항으로 판단해서 참고만 했고 지원배제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DE는 장관이 경위서에 따라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여 AG는 이와 같은 사실을 경위서에 적어 DE에게 제출함

149) DE는 AG를 불러 ‘장관께 위 ㄱ 등이 지원배제되지 않은 경위를 보고드렸고, 장관이 앞으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함

기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¹⁵⁰⁾ 2016년 9월 까지 계속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문체부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자 예산편성과 심의절차,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규정을 추가할 예정¹⁵¹⁾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문체부는 특정 문화예술인 부당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당시 문화체육 비서관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질책, 인사조치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무자들이 매우 어렵게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적용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답변과 함께 건전TF는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원배제 요구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구성·운영된 회의로서 주로 해당 실·국이 진행하는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 관련 사업 등 추진상황이나 특이사항, 애로점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지원배제 논의나 지시, 지침 시달, 실적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배제 이행관리를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50) 문체부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생각 하기는 하였으나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151)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 관련하여 2017. 3. 9. 문화예술 지원배제 재발 방지대책으로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절차 등을 개선하여 문화예술지원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표현의 자유·심사 방해 등 형사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예술가 권익 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문체부 행동강령을 개선하는 등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임

그러나 DE는 감사원 문답과정에서 건전TF는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과 등 소관 과가 실시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실적을 취합·보고하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좋아하지 않는 특정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었고, 건전TF 간사인 ●담당관 진행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예술, 영화, 출판 관련 국·과장 등이 순차적으로 소관 분야별로 공모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경과,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실적 등 현황, 그리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제시할 만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관련자들도 감사과정에서 건전TF 회의는 지원배제를 직접 지시하는 통로는 아니었지만,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직접적인 지원배제 지시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시스템으로서, 문체부장관의 지시로 ◎실장이 ◇관실뿐 아니라 영화, 출판 등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는 관련 실·국·과의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원배제 지시사항 이행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독려하는 문체부 내부의 관리시스템이었고, ◇과 등 관련 부서는 건전TF 회의에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회의 내용이 장관과 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보고되고 있어 건전TF 회의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지원배제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건전TF 회의에서 지원배제 논의나 지시, 지침시달, 실적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문예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가 문예위 공모사업에 선정·지원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문예위의 정책

신뢰도 저하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독립성, 책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③ 한문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부기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특정 공연단체가 지원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④ 영진위는 상급기관의 특정 전용관 지원배제 지시에 대해 거부할 경우 기관의 업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영진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앞으로 지원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거나 영진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의 예비심사 자료의 경우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 자문회의 등의 의견을 제고하고 관계 훈령 및 지침을 확인하여 사업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심사자료의 “3.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 참고사항”은 전체 사업비의 약 42.9%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가 실시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에 비해 예산 규모가 최소 3.2배, 최대 13.1배 크고 이로 인해 예산규모 대비 영진위의 지원금 규모가 약 12%(위 지원사업에 신청한 7개 영화제 중 가장 낮거나 2번째로 낮음)인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등 균형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훈령(「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일뿐만 아니라 2016년도 사업 심사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영진위 위원장 CE와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담당자(ℳ부장 DH, ℳ부팀장 DI)의 진술에 따르면 위 심사자료가 심사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자료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영진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출판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종도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지 아니한 CP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5번 참조】

※ AC는 이 건 행위와 ‘1-(2)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 선정 및 정산 부당 처리’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3번 참조]

※ BC는 이 건 행위와 ‘1-(7) 출판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4번 참조]

②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부당 지원배제를 주도하는 등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CO의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며

③ 특정 전용관 등에 대한 부당 지원배제를 주도 등을 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영화예술단체 등을 차별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CE의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④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공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실적 점검 등을 하여 해당
부서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행되도록 총괄 관리한 DE(현 문화체육관광부 ⓧ관)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며[통보(인사자료)]

【개별처분요구사항 14번 참조】

⑤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산하기관 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행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⑥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고(주의)

⑦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심사방해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직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심의위원을 선정배제하고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외부기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공연단체를 지원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전용관 등을 지원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그리고 문체부는 2014년 12월 초 공예진흥원에 구두 및 메일로 ‘전통공예 체험·전시부분 등’에 대하여 ㉠㉡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429백만여 원)하도록 요청한 후 2014. 12. 9. 계약금액 등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문체부도 2014. 12. 10. ㉠㉡와 나머지 ‘오·만찬장 조성 및 문화공연’ 부분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206백만여 원)하였다.

2.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문체부는 차은택의 추천을 받아 ㉠㉡를 문화행사 대행사로 선정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문체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재부 계약법규 해석(2012. 12. 18. 계약제도과-1610)과 다르게 외주비용이 포함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윤을 인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정당한 이윤보다 계 291백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였다.

1)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계약업무 부당 처리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르면 긴급한 행사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문화행사 계약업무 담당자들은 긴급한 행사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DL의 경우

◇실 ●관실 ●과장 DL은 2014. 10. 23.부터 2015. 10. 5.까지 ㉔실 ㉔관실 ㉔과에 근무하면서 2014년 11월 초(날짜 모름) 차은택으로부터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㉔㉔를 추천¹⁵⁸⁾ 받은 ㉔실장 DJ¹⁵⁹⁾가 ㉔㉔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하자 ㉔㉔의 부장 AH에게 ㉔㉔의 행사대행 실적과 문화행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DJ에게 ㉔㉔는 2010년 G20 정상회의 문화행사 등 다자정상회의 행사를 대행한 경험이 많아 문화행사 대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DJ는 2014년 11월 초(날짜 모름)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 없이 ㉔㉔를 문화행사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DL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DL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DL은 ㉔㉔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DJ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㉔㉔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2014년 11월 초(날짜 모름) ㉔㉔를 위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하였고, 같은 부서 V에게 ㉔㉔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¹⁶⁰⁾하여 V가 2014. 12. 10. 기안한 ㉔㉔와의 문화행사 대행 계약 체결문서를 결재하였다.

158) IQ는 DL이 ㉔㉔의 부장 AH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DL은 당시 정황상 IQ와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차은택이 IQ에게 ㉔㉔를 추천하였고, IQ가 본인에게 ㉔㉔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

159) 한-아세안 정상회의 추진지원단 단장이었으며, 2016. 12. 19. 퇴직

160) V는 계약업무를 맡을 당시 DL이 ㉔㉔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㉔㉔를 대행사로 선정된 상황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㉔㉔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

그 결과 문체부는 2014. 12. 10. 다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등을 비교하지 아니한 채 ㉠㉠와 문화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계약 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나. V의 경우

◆실 ♠관실 ♥과 V는 2012. 2. 8.부터 2015. 4. 26.까지 ㊦실 ㊦관실 ㊦과에 근무하면서 2014. 11. 3. 위 문화행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장 DL으로부터 ㉠㉠와 위 문화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긴급한 행사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업체와 비교 없이 특정업체인 ㉠㉠를 위 문화행사 대행사로 선정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V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았고,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은 채 DL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와 계약을 체결하여 “2-1)-(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업무 부당 처리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예정가격¹⁶¹⁾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161)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 등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 제외)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문체부가 2012. 12. 4.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체결한 문화행사 대행용역의 이윤산정 시 외주비용 제외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윤계상 시 외주비용은 제외¹⁶²⁾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2012. 12. 18. 계약제도과-1610)하여 이를 나라장터 홈페이지¹⁶³⁾의 ‘계약법규 해석조회’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문화행사 계약업무 담당자들은 ㉔㉔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기관에 ㉔㉔와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과 관련 계약법규 해석 사례를 확인하여 외주비용을 제외하고 이윤을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고, 정산 검토를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V의 경우

V는 문화행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법규 해석 사례가 공개되어 있는데도 이윤계상 시 외주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162) 이윤 = {(노무비 + 경비 - 외주비용) + 일반관리비} × 이윤율

163) www.g2b.go.kr

또한 V는 2014년 12월 초 공예진흥원에 외주비용을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한 계약금액(429백만여 원)으로 ㉠㉠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구두로 요청¹⁶⁴⁾한 후 2014. 12. 8. 공예진흥원에 계약체결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한국전통공예전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DL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V는 2014. 12. 9. 외교부에 외주비용을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한 계약금액(812백만여 원)으로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공연 등 계약 요청” 문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고 기안하여 DL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V는 2014. 12. 10. 위와 같이 외주비용을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한 계약금액(2,206백만여 원)으로 ㉠㉠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문화행사 등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DL 등의 결재¹⁶⁵⁾를 받았다.

이와 같이 외주비용을 제외하고 이윤을 계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문화행사가 완료된 후 V는 2015년 3월 초 ㉠㉠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와 외교부 계약부분의 사후원가계산보고서¹⁶⁶⁾를 검토¹⁶⁷⁾할 때 외주비가 포함되어 산정된 이윤을 그대로 인정하여 2015. 3. 9.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행사 사후 원가계산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DL 등¹⁶⁸⁾의 결재를 받았고, 공예진흥원의 계약부분도 외주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된 이윤이 포함된 용역대가로 집행되었다.

164) 2014년 12월 초 공예진흥원 DN 팀장 등에게 전화 및 메일로 요청

165) 최종 결재자는 IQ 팀실장(퇴직)임

166) ㉠㉠는 위 문화행사 대행계약 이행 이후 2015. 1. 7. 문체부가 지정한 사단법인 ㉠(이하 “㉠”라 한다)과 원가계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원가계산을 실시하면서 ㉠㉠가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이윤 계상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문체부와 ㉠㉠가 합의한 세부 산출내역서에 따라 대행수수료[(재료비+노무비+경비)×대행수수료율]를 계상하고 사후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

167) 문체부는 외교부와 계약부분 사후원가계산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공예진흥원 계약부분은 문체부, 외교부의 계약이행부분과 중복되는지 정도만 확인하였다고 답변

168) 최종 결재자는 IQ 팀실장(퇴직)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기재부의 계약법규 해석에 따라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의 이윤 등을 재산정한 결과, 문화행사 대행사인 ㉠㉠은 문화행사 대행업무의 대부분을 협력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DM)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IS)에 외주를 주고 경비 항목에서 외주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적정 이윤은 [별표 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계약 이윤 등 재산정 명세”와 같이 문체부가 지급한 이윤¹⁶⁹⁾ 175백만여 원¹⁷⁰⁾보다 168백만여 원 적은 6백만여 원¹⁷¹⁾이었다.

그 결과 문체부는 [별표 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계약 이윤 등 재산정 명세”와 같이 ㉠㉠에 적정 이윤으로 계산한 적정 용역대가인 1,990백만여 원¹⁷²⁾보다 185백만여 원¹⁷³⁾ 많은 2,176백만여 원¹⁷⁴⁾을 지급하였고, 외교부와 공예진흥원도 ㉠㉠에 적정 이윤으로 계산한 적정 용역대가인 740백만여 원¹⁷⁵⁾ 및 392백만여 원¹⁷⁶⁾보다 각각 69백만여 원 및 36백만여 원을 과다 계상하여 각각 809백만여 원¹⁷⁷⁾ 및 429백만여 원¹⁷⁸⁾을 지급하는 등 적정 용역대가 계 3,123백만여 원보다 계 291백만여 원을 ㉠㉠에 과다 지급하였다.

169) 사후원가계산보고서에는 대행수수료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행수수료도 이윤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아닌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비목으로서 이윤으로 볼 수 있음

170) (노무비 15,000,000원 + 경비 1,735,633,690원) × 10%

171) (노무비 15,000,000원 + 경비 1,735,633,690원 - 외주비 1,735,633,690원 + 일반관리비 52,519,010원) × 10%

172) 노무비 15,000,000원 + 경비 1,735,633,690원 + 일반관리비 52,519,010원 + 이윤 6,751,901원 + 부가가치세 180,990,460원

173) 적정 이윤과의 차액 168,311,468원 + 부가가치세 16,831,146원

174) 노무비 15,000,000원 + 경비 1,735,633,690원 + 일반관리비 52,519,010원 + 이윤 175,063,369원 + 부가가치세 197,821,606원

175) 경비 651,340,728원 + 일반관리비 19,540,221원 + 이윤 1,954,022원 + 부가가치세 67,283,497원

176) 경비 345,502,820원 + 일반관리비 10,365,084원 + 이윤 1,036,508원 + 부가가치세 35,690,441원

177) 경비 651,340,728원 + 일반관리비 19,540,221원 + 이윤 65,134,072원 + 부가가치세 73,601,502원

178) 사후원가계산 결과 총원가인 429,460,004원과 계약금액 429,350,000원 중 작은 금액인 계약금액으로 지급

나. DL의 경우

DL은 V가 2014. 12. 8. 및 2014. 12. 9. 각각 기안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한국전통공예전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공연 등 계약 요청” 문서를 검토하면서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과 계약법규 해석 사례 등을 준수하여 외주비용을 제외하고 이윤을 계상할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요청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재하여 공예진흥원과 외교부가 이와 같이 외주비용을 포함하여 이윤을 산정한 금액(각각 429백만여 원 및 812백만여 원)으로 ㉠㉠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DL은 V가 2014. 12. 10. 기안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계기 문화행사 등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검토하면서 이와 같이 외주비용을 제외하고 이윤을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적정하게 체결하는 것인지 확인¹⁷⁹⁾하지 아니한 채 결재하여 문체부도 이와 같이 외주비용이 포함된 이윤으로 산정된 금액(2,206백만여 원)으로 ㉠㉠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DL은 2015. 3. 10. V가 기안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행사 사후 원가계산결과 보고” 문서를 결재하여 “2-2)-(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감사결과 검토사항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2)항”과 관련하여 ①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시 외주비용을 이윤 계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

179) DL은 V에게 특이사항이 없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

해석」(2011. 1. 7. ↑↓ 발행,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와 JE 과장 공저)에서 공연과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모든 경비가 외주로 이루어져 외주비용에 대한 이윤을 포함하지 않으면 기획사의 이윤이 거의 없게 되므로 외주비용 자체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해당 이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 ③ 2003. 3. 2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하는 부분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2012년 유권해석의 ‘외주비용’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것인지 해석이 다르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외주비용의 이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④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유권해석 등을 찾아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질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의 규정에 위배된 점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평균적 수준의 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문서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에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평균적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⑤ 국내 주요 대행사의 경우 대부분 외주를 통해 행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이윤을 계상할 경우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윤 계상 시 외주비용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면 대형기획사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경우 문화행사 대행 계약을 대형기획사가 아닌 다수 업체에 분할발주하게 되면 비효율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행사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①과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용역계약의 이윤계상 시 외주비용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용역계약의 이윤계상과 관련된 규정(제28조 제2항)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용역의 원가계산 시 외주비용을 이윤계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예규에 준하여 공개하고 있고, 위 ②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2011. 1. 7. 건설경제 발행)의 해설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저자의 주장에 불과하며, 기획재정부는 2012. 12. 4. 문체부 해문홍으로부터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문화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와 이윤 산정 관련 쟁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받아 이윤 계상 시 외주가공비(외주비용)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에도 해석하는 등 계속 같은 기조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 ③과 관련하여 2003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외주가공비는 설계도면 등에 따라 구분되는 금액으로서 이를 제외하고 이윤을 산정하여야 하고, 하도급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는 부분으로서 예정가격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하도급이 외주가공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고, 이 건 문화행사는 ㉠㉡가 행사준비를 대부분 진행한 후 행사일 직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요청 등을 하여 계약체결 당시 외주비용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계약법규 해석 등에 따라 외주비용을 제외한 경비 등으로 이윤을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사후원가검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하여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④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통상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유권해석 등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은 통상의 계약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었으

므로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유권해석도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 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계약법령 관련 ‘용역계약’으로 제목을 검색했을 때 관련 내용이 3건에 불과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해당 해석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리고 위 ⑤와 관련하여 문체부 해문홍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총 8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그중 7건은 대행사가 외주없이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1건은 외주비용을 제외하고 이윤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㉞㉞가 아닌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획사의 이윤이 거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건은 문체부 이외에 외교부, 공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였으므로 각 기관이 각각 계약 상대방을 관리할 경우 분할 발주에 의한 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체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체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L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9번 참조】

※ V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9번 참조】

2-(3)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광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글로벌 광고인재센터”(이하 “광고인재센터”라 한다) 사업(2014년도 보조금 교부액 90백만 원, 2015 및 2016년도 보조금 교부액 각 490백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 2015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¹⁸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신청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2015. 1. 22. 문체부 훈령 제246호, 2016. 8. 29. 문체부 훈령 제295호로 폐지¹⁸¹⁾, 이하 “문체부 보조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80)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보조사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임

181) 기획재정부에서 2016. 7. 28.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정·공포

따라서 보조금법과 문체부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른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체부 ●과 DO는 2014년 10월경 2014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대표 DP)가 2015년도 보조사업 수행 포기의사를 밝히자 2015년도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도 광고인재센터 사업에 자문위원, 강사 및 멘토 등으로 참여한 광고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이들로부터 광고교육단체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DO는 2015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라 한다)의 광고교육원과 민간광고교육단체인 ☐☐ 및 사단법인 ○○협회가 각각 광고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광고인재센터 사업은 보조금법 및 문체부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른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광고교육단체들이 기존에 운영 중인 커리큘럼과 강사진 구성 및 교육 방식이 광고인재센터 사업과 맞지 않아 광고인재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단체들에게 광고인재센터 사업의 목적과 요구되는 교과과정 및 강사진 구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업 참여 의향을 확인하지 않았는 등 공모절차의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나서 DO는 2015. 3. 4. 2014년도 광고인재센터 사업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였던 광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¹⁸²⁾(이사장 IR,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3. 5. ‘법인

이사진이 한국 대표 광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광고대행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어 현업 광고인들을 강사·멘토로 유치하여 산업 현실에 맞는 실무 교육을 실시하기에 용이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15년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운영 사업계획 검토”(이하 “사업계획 검토”라 한다) 문서를 작성하여 ●과장 D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DA는 2015. 3. 5. DO가 작성하여 보고한 사업계획 검토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문서의 검토 내용이 타당하고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을 공모절차 없이 2015년도 광고인재센터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DO는 2015. 3. 5. DQ가 위 사업계획 검토 문서를 첨부하여 △△에게 2015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2015년도 광고인재센터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를 검토하여 DA에게 상신하였고, DA는 이를 결재하여 △△을 2015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로 확정하였다.

3.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2-1)항”의 내용과 같이 보조금법과 문체부 보조금관리규정에는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체부 ●과는 2015. 3. 6. 문체부에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112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두 공모절차 없이 특정 사업자로 지정한 데 대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칙적으로

182) 2015년 2월 Y과 DZ 등 자문위원·강사 등 광고업계 관계자들이 설립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문체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므로 문체부 ●과는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기존에 보조사업자를 공모절차 없이 지정한 경우라도 보조금법의 공모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여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2)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부적정

(1) DR의 경우

문체부 ●과 DR은 2015. 5. 11.부터 2017. 3. 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직에서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DR은 2015. 3. 6. 민간경상보조사업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문체부 ●과에 통보된¹⁸³⁾ 후, DQ로부터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결정 전 ‘문체부가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지 않고 지정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원에 지적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서도 위 부서에 통보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2016. 2. 11. △△으로부터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 검토하면서 2015년도 광고인재센터의 보조사업자를 공모절차 없이 △△으로 선정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과장 DS에게 2015년도 보조사업자인 △△을 공모절차 없이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로 재선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2016. 2. 15. DQ가 기안한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운영 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를 검토하여 DS에게 상신하였다.

183)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2015. 3. 4.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문체부 ●과 등 콘텐츠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과에서는 같은 해 3. 6. 접수하였음

(2) DS의 경우

문체부 □과장 DS는 2015. 4. 3.부터 2016. 7. 3.까지 위 관서 ●과장의 직위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DS는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DR로부터 2015년도 보조사업자인 △△을 2016년도에도 보조사업자로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고서 보조금 관련 규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확인하여 공모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전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검토한 사유가 타당하고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의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6. 2. 15. DR이 상신한 2016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를 결재하여 △△을 2016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시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참여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였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2015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정착과 연속성 유지 및 사업 이해도가 있는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성 등으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이고, KOBACO 광고교육원, 사단법인 ○○협회, ○○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 국고보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2015년도 보조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조사업자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문체부 보조금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명시된 경우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의 ‘예산’에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설명자료까지 포함되는데, 광고인재센터의 2016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피보조기관으로 △△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보조사업 공모 시 광고인재센터의 사업 목적과 취지 및 교육과정과 강사진 구성 등을 공고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선정하면 위 사업 목적 및 취지대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데도 신규사업, 연속성 유지, 사업 이해도, 기존 보조사업자의 수행 성과를 사유로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사단법인 ○○협회는 2017년도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¹⁸⁴⁾ 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KOBACO 광고교육원도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확인한 결과, 2017년도 공모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공모절차 없이 △△만이 광고인재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된

184) 문체부는 2016년 11월 언론에서 광고인재센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2017년도 사업부터는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6. 12. 23. ~ 2017. 1. 3. 공모를 실시하였음

‘예산’을 정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예산’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5. 12. 3. 제337회 국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12. 11. 관보에 게재 된 ‘2016년도 예산’(2015. 12. 11. 대통령 공고 제261호)의 문체부 소관 세출예산에는 △△이 보조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설명자료는 국회 예산 심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설명자료에 기재만 하면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조금법상 보조사업 참여자 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확대 해석이므로 문체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2016년도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이 있었는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모절차 없이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R과 DS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7번 참조]

②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각 호 등의 규정에 따른 공모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에도 공모절차 없이 특정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4) 문화창조아카데미사업 계획 및 운영 부적정

1. 업무 개요

정부(대통령비서실)는 2015. 2. 11. 영상·음악·패션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민·관 협력의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제작→구현→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을 거행(서울 ㅅ동, ㉸㉸)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2015. 4. 16. 위 조성계획의 사업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4대¹⁸⁵⁾ 거점을 설정하였고, 4대 거점 가운데 콘텐츠 R&D 및 인재육성은 문화창조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가 담당하며 아카데미 운영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계획”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구 산업연구원(KIET) 부지¹⁸⁶⁾와 건물을 활용하여 아카데미 조성·운영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015. 6. 16.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이하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30. 위 기관들로부터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2월 현재 [표 20]과 같이 건설비 16,325백만 원 및 토지매입비 13,657백만 원, 계 29,982백만 원의 예산을

185) 4대 거점별 주요기능으로 ① 콘텐츠 기획·개발은 “문화창조융합센터”, ② 콘텐츠 제작사업화는 “문화창조벤처단지”, ③ 콘텐츠 R&D, 인재육성은 “문화창조아카데미” ④ 콘텐츠 구현은 “K-Culture Valley”로 구분하여 담당

1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ㄱ동동에 소재한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로 부지면적은 총 21,891㎡

투입하여 구 산업연구원 사옥(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383㎡)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아카데미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었다.

[표 20]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리모델링) 사업 개요

(단위: 백만 원, 사업기간 : 2016년 4월~2017년 2월)

구분	내용	전체 사업비		
		건설비	토지매입비	합계
사업내용	구 산업연구원 건물(지하 1층~지상 3층 건물, 건축 연면적: 6,383㎡)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연구시설(강의실, 연구실, 공연장 등) 조성	16,325	13,657	29,982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산업현장에서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전개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347.25억 원¹⁸⁷⁾(2017년 이전 예정인 서울 홍릉아카데미 공연장 조성비 80억 원 미포함)을, 2017년에는 170.9억 원을 국고 지원받아 2016년 3월부터 입학생(45명)을 모집하여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2개 층(7~8층)에서 융복합콘텐츠 전공 과정을 운영한 후 2017년부터는 구 산업연구원 사옥에 조성된 교육시설로 이전·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검수 부적정

1) 관련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구 산업연구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과 아카데미 조성·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015. 6. 16.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착수회의(2015. 6. 19.) 및 최종용역결과를 직접 보고

187) 2016년 347.25억 원은 ① 융복합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35.90억 원 ② 융복합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76.0억 원 ③ 융합콘텐츠 아카이브 구축관리 16.0억 원 ④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지원사업 99.10억 원이며, 2017년 170.90억 원은 ① 융복합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22.50억 원 ② 융복합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9.6억 원 ③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지원사업 90.80억 원 ④ 특수장비실 운영 및 건물유지보수 및 관리비 15.0억 원 ⑤ 홍릉 시연장 테스트베드 조성비 33.0억 원임

(2015. 9. 9.)받은 후 위 용역기관들로부터 납품받은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을 문체부의 의견 수렴¹⁸⁸⁾을 거쳐 같은 해 10. 30. 준공처리하였다.

이후 위 용역결과에 따라 아카데미의 설립단계와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구성하면서 설립단계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참여협조하에 기획재정부가 주도 하고, 운영단계는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제7장 1.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분석기간(30년) 동안 총비용(C), 총편익(B)에 대한 연차별 현금흐름을 산정한 후 [표 21]과 같이 편익/비용비(이하 “B/C”라 한다), 순현재가치(이하 “NPV”라 한다), 내부수익률(이하 “IRR”이라 한다)의 3가지 판단기준을 근거로 $B/C \geq 1$, $NPV \geq 0$, $IRR \geq 5.5\%$ 인 경우 대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 경제성분석 판단기준

분석 기법	산출 방법	판단 기준
편익/비용 비율(B/C)	현 시점으로 할인된 총편익 대 총비용의 비율	$B/C \geq 1$
순현재가치(NPV)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	$NPV \geq 0$
내부수익률(IRR)	편익흐름의 현재가치 합과 비용흐름의 현재가치 합이 같아지는 할인율(r)	$IRR \geq r$ 여기서, 할인율(r) = 5.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기본계획(198쪽) 내용을 재구성

또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립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이하 “타당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세금 등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지출이므로 사업주체에 따라 비용도 되고 편익도 되기 때문에

188) 기획재정부는 당초 구 한국개발연구원과 구 산업연구원 부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 주도하되 한국개발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하여 각각의 사업의 추진사항을 관리·자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

재무성분석에는 반영하나, 국가 재원이나 국부 창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수행주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용역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경제성분석 비용·편익항목의 기초자료(아카데미 운영 로드맵 등)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¹⁸⁹⁾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은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다른 용역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2015. 10. 30. 국토연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납품한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성과품을 검수·준공 처리할 때에는 경제성분석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세금, 교육비(등록금, 입학금) 등 이전지출이 반영되었는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다르게 비용·편익항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성분석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확인·검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국토연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교육비(등록금, 입학금)를 기관 직접편익으로 경제성분석에 반영하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9. 30. 학생모집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연간 실습비 350만 원을 납부하고 연구 지원비를 매월 인당 5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모집 공고하였으므로 실제 학생 1인당 연간 250만 원의 비용이 발생¹⁹⁰⁾하는데도 이를 비용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89)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따라 사업수행주체가 아닌 독립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190) 문체부는 2016년부터 아카데미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연구지원금 240백만 원 등 총 3,590백만 원의 아카데미 운영예산(안)을 제출받아 2016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9. 30. 2016년 3월 2년 6학기제로 운영되는 아카

그리고 오히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학원 대학 연평균 등록금 407만 원, 입학금 56만 원(1회)을 학생 정원과 입학금 및 등록금의 부가가치 창출분(76%)으로 곱한 후 3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총 32,937백만 원의 기관 직접편익¹⁹¹⁾을 편익항목으로 반영하여 경제성 판단기준인 B/C 1.09, NPV 5,257백만 원, IRR 6.8%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과 ☐팀 용역검수자 DT와 팀장 EZ는 2015. 10. 30. 국토연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타당성지침을 준용하겠다는 아카데미 조성 기본 계획 이행계획서 및 2016년 아카데미 학생모집 공고 등의 내용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한 후 납품한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체부에 의견을 조회하였다는 사유로 그대로 검수하였다.

[표 22]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당초 기본계획	감사원 감사 시 경제성 재분석 결과	
		① 이전지출 미반영(교육비 없음)	② 교육비 실비 반영 (연 350만 원 납부, 50만 원/월 지원)
B/C	1.09	0.85	0.71
NPV	5,257	-8,802	-17,247
IRR	6.8	3.2	0.8

자료: 국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2017. 1. 19.~3. 10.) 동안 아카데미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지침에 따라 ① 등록금·입학금 등 이전지출을 편익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9. 30. 학생 모집 공고한 내용대로 경제적

데미를 개강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350만 원을 받고 인당 월 50만 원 씩(연간 600만원)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0여 명의 아카데미 학생모집을 공고하였음

191) 기관 직접편익 = 학생수×{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407만원)+입학금(50만원)}×부가가치율(73%)

타당성을 재분석한 결과 [표 22]와 같이 아카데미 조성사업은 B/C가 0.71~0.85, NPV가 -172~-88억 원, IRR은 0.8~3.2%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근거로 실제 타당성이 없는 아카데미 조성사업(총사업비 29,982백만 원)이 그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3.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선발 및 학습과정 관리

1)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선발

(1) 관련 업무 개요

문체부가 2015. 4. 16.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같은 해 9. 30.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의적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 6학기제(1학기 16주) 비학위 과정으로 40명의 크리에이터(학생)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공고한 이후 1차례 추가 모집을 통해 2015. 12. 22. 크리에이터 4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아카데미 개소에 앞서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수행한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제6장 2. 아카데미 구성 및 설계’에 따르면 ‘내실 있는 아카데미 운영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풀타임(full-time) 교육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2015. 9. 30. 크리에이터 모집공고를 하면서도 ‘교육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 6학기제의 전일제 교육 형태로 운영한다’고 안내하였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아카데미 크리에이터를 선발할 때는 아카데미 사업이 콘텐츠 분야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국고를 투입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아카데미 조성 기본계획 및 선발 공고와 같이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우선 선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9. 30. 1차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1명을 모집하였고, 이후 1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을 공고하여 크리에이터 45명을 같은 해 12. 22. 최종 선발하면서, 기본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직장에 재직 중이어서 풀타임(full-time) 또는 전일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크리에이터 24명(전체 45명 가운데 53%)을 포함하여 선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크리에이터로 선발된 45명이 교육과정이 시작된 2016. 3. 2.부터 2017. 1. 20.까지의 교육기간 동안 아카데미 이외의 재직 실태를 확인·검토한 결과, [별표 13] “크리에이터의 재직 실태 내역” 및 [별표 14] “크리에이터가 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에 재직한 내역”과 같이 크리에이터 10명이 교육과정이 진행 중인 학기 중에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주 5일 12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른 직장에 재직하거나 기업 대표(1인 기업 포함)로 재직하고 있어 교육과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사례] 재직 중인 크리에이터의 교육과정 미참여

- ▶ 크리에이터로서 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대표이었던 DU의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 2. 29. 수립한 ‘아카데미 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의 경우 ‘1크리에이터 1프로젝트 참여’ 계획이었으나, 위 2명은 참여 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단 한 차례도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함

2)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관리

(1) 관련 업무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마련한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스튜디오 및 프로젝트 과정으로 구분되고, 프로젝트 과정은 주도 주체에 따라 ‘랩장¹⁹²⁾ 주도형’과 ‘크리에이터 주도형’으로 다시 세분된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10. 6.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수요원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1. 9. 면접을 통하여 문화체험기술총감독 등 4개 분야에 DV 등 4명의 교수요원을 최종 선발하였고, 문화체험기술 총감독 및 지식융합 분야에 선발된 DV와 DT로 하여금 각각 “스튜디오 과정”을, 문화체험창작분야 및 혁신서비스분야에 선발된 DY와 DX로 하여금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과정”을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 분야 현장전문가 16명을 랩장으로 초빙하여 프로젝트 제안 요청을 받은 후 프로젝트를 제안한 DW 등 5명으로 하여금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과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표 23]과 같이 2016. 3. 4. 스튜디오 과정은 매주 3회(수요일~금요일, 교육시간 10:00~12:00) 실시하고, 프로젝트(랩장 및 크리에이터 주도형) 과정은 매주 4회(화요일~금요일, 교육시간: 13:00~15:00, 15:00~17:00) 실시하며,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과정은 1인 1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카데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192) 2015. 11. 19. 아카데미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4명의 교수요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사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계약직원 신분이나, 이와 달리 “랩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채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프로젝트 수행 시 전문가활용비(인건비) 명목으로 시간당 20만원 상당을 지급

[표 23]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시간표

일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10:00~12:00)		스튜디오(미래지식융합)	스튜디오(문화지식융합)	스튜디오(창조문화)
오후1(13:00~15:00)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오후2(15:00~17:00)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야간(19:00~21:00)	스튜디오(창업특강)			

주: 스튜디오 코스는 1~2학기 진행, 프로젝트(랩장주도형, 크리에이터 주도형) 코스는 1~3학기 진행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그리고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아카데미 학사운영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마련한 「문화창조아카데미 학칙」 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시간은 (10:00~12:00, 13:00~15:00, 15:00~17:00)이며, 출석과 학습태도 등을 반영하여 매 학기 강좌별 평가를 하고 무단결석이 5일 이상 지속된 자는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과정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초빙한 랩장 16명 가운데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5명의 랩장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크리에이터에게 시연한 후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위 5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참여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선발된 45명의 크리에이터는 공연 등 8개 분야¹⁹³⁾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등 관심 분야가 다양하여 랩장 5명이 시연한 프로젝트와 활동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¹⁹⁴⁾

또한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은 크리에이터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진도관리와 더불어 수행방향 등에 대하여 아카데미 교수요원

193) 2015. 12. 22. 최종선발 당시 45명의 크리에이터 향후 활동을 희망하는 분야는 공연 15명(33%), SW공학 7명(16%), 전지 6명(13%), 애니메이션 5명(11%), 방송 3명(7%), 영화·스토리텔링·HW공학 각 1명, 기타분야 6명 등이었음

194) 랩장 5명(DW는 'ㅈ', EA는 'ㄱ', EB는 'ㄴ', EC는 'ㄷ', EE는 'ㄹ')은 본인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주제로 각각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수행

(DX와 DY)으로부터 지도·점검받고 있고, 지도·점검 내용을 토대로 매달 50만 원의 연구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3. 4. 수립한 교육운영계획과 아카데미 학사 운영 등을 위해 마련한 학칙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크리에이터들이 출석하는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크리에이터의 활동 희망분야에 부합하는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하는 등 1크리에이터 1랩장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크리에이터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교수요원에게 지도·점검 일정 및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관리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 본부장(G1) EE는 아카데미 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육운영계획 및 아카데미 학칙에 따라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5일 이상 결근자를 제적 처리하여 크리에이터들이 더 이상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다니기가 어려워 자퇴하는 경우 정부 주도로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문화창조융합본부 및 아카데미 교수요원과 협의하여 크리에이터의 교육과정 출석(참여)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크리에이터의 활동 희망분야와 5명의 랩장이 수행계획을 제출한 프로젝트 분야가 서로 달라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확인하여 해당분야 프로젝트를 새로이 발굴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였고,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진행관리 등의 확인에 대한 기준(예: 매주 2회 이상)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학생들의 참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① 스튜디오 과정 중 문화지식융합분야의 경우 아카데미 조성기본 계획 용역 수행 등을 근거로 편성한 교육과정은 전체 크리에이터 45명 중 2016년 3월 1학기 시작 당시에는 20여 명, 4월 중순부터는 평균 5~6명만이 참석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②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의 경우 [별표 15]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참여횟수 내역”과 같이 전체 크리에이터 44명(2016. 4. 26. JD 휴학)중 22.7%에 해당하는 10명은 크리에이터의 활동분야와 5개 프로젝트분야가 서로 달라 처음부터 참여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체 프로젝트 39회를 운영하면서 신청자 34명 중 10명만이 참여대상 횟수의 절반인 20회 이상을 참여하였고, 이 중 3명은 5회 미만 참여하는 등 크리에이터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게 운영되었다. ③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작성한 후 아카데미 교수요원(DY, DX)에게 확인받은 프로젝트 학습일지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진행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별표 16]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수행 내역”과 같이 1주 또는 2주에 1회 지도·점검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례]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아카데미 교수요원 지도·점검 확인사례

- ▶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명 “L N”을 진행하였던 크리에이터 EF와 EG는
- 프로젝트 초기인 9월경에는 1주일에 1회 교수요원(DX)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으나, 프로젝트가 진행된 11월 경부터는 2주일에 1회 미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와 같이 아카데미 설립 목표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풀타임(full-time) 또는 전일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이들이 교육과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하였고, 또한 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및 학칙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출석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여 교육과정 참여가 저조하게 운영함으로써 당초 아카데미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아카데미 운영 주관 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하여 교육시설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개선 등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기본계획 성과품을 검수·준공 처리하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 내용은 ① 전문적이고 ② 학생모집 공고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어 알기 어려웠으며 ③ 기본계획 성과품의 내용 검토를 문체부에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대로 준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도 검수책임을 맡은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이자 사업의 기본 내용인 학생모집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수행주체와 운영기관의 내용 검토만을 믿고 그대로 준공하는 등 형식적인 행정처리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역의 검수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교육과정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참여(수행)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크리에이터를 선발할 때는 현장수요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면밀하고 적절한 선발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의 출석(참여)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크리에이터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강의, 워크숍 및 프로젝트 수행 진도점검 등 학사일정 전반에 대해 출석률을 학칙에 반영하고 학업평가기준의 하나로 삼아 학기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교육 참여와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아카데미 시설 개편 및 운영 개선방안 등 사업 효율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잘못 분석한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전일제 교육이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크리에이터 참석률(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현행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5) 문화창조벤처단지 · K-Style Hub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5. 2. 11. 청와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및 정책발표”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육성-기획-제작-유통-구현) 구축을 위해 2015년 4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14. 12. 26. 구 한국관광공사 사옥을 철거 후 신축하는 “K-Style Hub” 구축(총사업비 600억 원 규모)¹⁹⁵⁾ 계획을 마련하여 문체부에 보고하였으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및 정책발표”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의 거점 중 하나인 문화창조벤처단지와 K-Style Hub를 조성[총공사비 146억 원(관광진흥개발기금), 이하 “구축사업”이라 한다]¹⁹⁶⁾한 후 2015년 10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5. 4. 15. 구축사업 재원 마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파급효과 및 필요성 검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면서 당초 “K-Style Hub” 구축에 편성된 2015년 예산 26억 원 중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 11억 원을 배정 승인하자, 문체부는 같은 날 구축사업

195) 한류 확산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콘텐츠 유통 확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사옥(2014년 12월 강원도 원주 이전)을 개발한 후 문화콘텐츠 업체를 입주시켜 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기능 및 한류 체험·K-product 판매 기능을 복합한 ‘문화창조벤처단지’로 조성·운영

196) 한국관광공사 서울 사옥에 문화콘텐츠 업체를 입주시켜 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기능 및 한류 체험·K-product 판매 기능을 복합한 ‘문화창조벤처단지’로 조성·운영

공사비 증액(당초 편성된 공사비 26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120억 원 증액)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15. 4. 27. 한국관광연구원(소장 IT)와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계약금액: 4,900만 원, 계약기간: 2015. 4. 27. ~6. 30.)을 체결¹⁹⁷⁾한 후 같은 해 6. 30. [표 24]와 같이 구축사업의 편익/비용 비율(1.0929)이 1 이상 등[「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한국개발연구원)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5.5%) 적용]¹⁹⁸⁾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사¹⁹⁹⁾한 후 최종 납품받았다.

[표 24]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비율, 금액, %	판단 기준
편익/비용(B/C) 비율	1.0929	B/C 비율 > 1.0이면 타당성 있음
순현재가치(NPV)	29,900백만 원	NPV > 0이면 타당성 있음
내부수익률(IRR)	6.70%	IRR > 5.5%이면 타당성 있음

자료: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중 하나인 경제성 분석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

197) 한국관광연구원은 연구용역보고서 중 타당성 분석은 한국관광연구원(원장 IZ)이 수행[용역계약(500만 원)]하도록 함

198)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니나, 기획재정부에서 재원마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자, 한국관광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등에서 정한 사회적 할인율(5.5%)을 적용하는 등 위 지침을 적용한 경제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 위 연구용역을 실시함

199) 문화창조융합본부 주재로 문체부(문화창조융합벨트지원 TF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연구용역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후 한국관광공사가 이에 대해 검사 완료함

하여 분석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며,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편익/비용(B/C)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한국개발연구원)²⁰⁰⁾에 따르면 예상되는 부가가치를 추정할 때 단순한 이전수입(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단순히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은 배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관광 시설의 편익은 본 시설의 입장수입 및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 등으로 구분되는데 입장수입 혹은 매출액 등의 결정은 단순한 가격(price)이 아니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에 입각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K-Style Hub 구축사업 재원마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준거하고 있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확인하여 기획재정부와 공사비 증액 등 예산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실제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를 운영하면서 연구용역보고서 등에서 예상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지원 효과 등이 발생하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1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연구용역보고서에 기재된 경제성 분석 중 공연장 운영 수익,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벤처 지원 효과 등 편익이 아래 “편익 추정 부적정 사례”와 같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기존 유사 시설의 이전 수요가 아닌 해당 시설에 대한 잠재적 고객 등을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통한 신규 수요)를 적절하게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지 않았고, 소규모 공연장 조성을 계획하는 데 중규모 공연장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편익을 추정하였다.

게다가 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 소속 전문가(4인) 자문의견에 따르면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분석 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 구성비 중 영업잉여와 인건비 비중을 고려한 것으로 2011~2013년 평균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0.3143, 음식업 부가가치율은 0.3165)을 적용하여 연간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3,899백만 원)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율(소매업 부가가치율 0.55742, 음식업 0.35194)을 적용하여 연간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6,506백만 원)를 과다 계상 등을 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편익 추정 부적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운영 수익,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벤처지원 효과 등 편익을 분석하면서 적정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잠재 공연 관람객이나 벤처단지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용의향, 입장료 수준, 입주회사 등에 대해 수요조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연구 수행기간(한 달 이내)과 경비(500만 원) 등의 부족으로 이를 하지 않고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 ▶ 위 구축사업 공연장의 규모는 소규모인데도 소규모 공연장 준거사례가 아닌 세종문화회관, 충무아트홀, 예술의전당 등 중규모 이상 공연장의 공연 횟수, 공연 원가율 등 적합하지 않은 기존 자료를 활용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같이 예상되는 부가가치를 추정할 때 단순한 이전편익은 배제하고 순증 부분만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명확한 근거없이 기존 한국 대표상품 쇼핑관과 식당의 시장 수요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임의 가정(이전편익이 없다고 가정)한 후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를 산정하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벤처기업의 특성(자본, 인력 등)이 상이하므로 입주가 가능한 잠재적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회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일반 산업단지의 입주 신규나 확장 수요(23~37%)를 준용하여 벤처단지 입주업체 중 40%가 신규 창업인 것으로 임의로 가정하여 벤처지원 효과 등 편익을 분석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 소속 전문가(4인)에게 위 구축사업 타당성에 대해 자문하여 경제성을 재분석한 결과, [별표 17] “경제성 분석 재산정 결과”와 같이 위 구축사업의 편익/비용 비율(0.9522)이 1 미만이 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후 2015년 6월에 연구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구축사업 공사비로 286억 원(당초 편성된 공사비 26억 원에서 260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고, 예산협의 과정(2015. 6. 30., 9. 24.)을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해 9. 25. 총 공사비 171억 원(당초 편성된 공사비 26억 원에서 145억 원 증액)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하여금 구축사업 공사를 추진 하도록 한 후 문화창조벤처단지와 K-Style Hub를 각각 2015. 12. 29.과 2016. 4. 11. 개소 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에 각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편익으로 추정된 ‘공연장 운영 수익’,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벤처지원 효과’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별표 18] “연구용역보고서상 예상 편익과 실제 발생 편익 비교”와 같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벤처단지 입주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672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벤처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2016년 매출액은 350억여 원(예상 매출액의 약 52%)으로 나타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예상한 매출액(약 804억 원)에 비해 실제 매출액(약 355억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문체부는 2016년에 문화창조벤처단지 93개 입주업체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으로 53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나, 입주기업의 벤처단지 입주 후 매출액(2016년

350억여 원)과 입주 전 매출액(2015년 338억여 원)의 차이(벤처단지 입주 후 신규 창출된 매출액)는 [별표 18] “연구용역보고서상 예상 편익과 실제 발생 편익 비교”와 같이 12억여 원(연구용역보고서의 예상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 112억 원의 약 10%)에 불과하였다.

[표 25]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과 K-Style Hub와 관련한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억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15년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	-
	K-Style Hub	171	170.5
	소계	171	170.5
2016년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390.06	255.6
	K-Style Hub	54.2	22.14
	소계	444.26	277.74
2017년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213.76	집행 예정
	K-Style Hub	12.85	집행 예정
	소계	226.61	집행 예정
계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603.82	255.6
	K-Style Hub	238.05	192.64
	계	841.87	448.24(226.61 집행 예정)

자료: 문체부 예산설명서 등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과 “K-Style Hub” 관련한 2016년 예산 444억여 원을 편성받아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업체 등에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등에 277억여 원을 집행하는 등 [표 25]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매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어 그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향후 유사사업의 타당성 검증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콘텐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문체부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경제성 분석은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기보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고려사항의 하나였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타당성 조사의 핵심은 경제성 분석이며,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가 경제성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고려사항의 하나로 보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앞으로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의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문화창조벤처단지 지원 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6)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정산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2~2016년 기획재정부, 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산의 예측가능성, 시급성, 기존 사업 보완 여부 등 기금변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되,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변경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신규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문체부 소관 6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26]과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변경횟수가 누적 55회로 다른 기금의 누적평균변경횟수 8.4회²⁰¹⁾에 비하여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위 5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표 26] 문체부 소관 기금 변경 현황

(단위: 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문화예술진흥기금	1	11,499	1	11,024	3	12,682	2	44,637	-	-	7	79,842
지역발전신문기금	-	-	-	-	-	-	-	-	-	-	-	-
언론진흥기금	-	-	-	-	-	-	-	-	-	-	-	-
영화발전기금	3	1,200	-	-	-	-	-	-	2	10,000	5	11,200
국민체육진흥기금	5	43,964	13	18,694	4	14,237	5	2,535	3	15	30	79,445
관광진흥개발기금	14	45,013	12	31,750	18	119,430	10	19,527	1	2,115	55	217,835

주: 1. 목간 조정은 제외

2.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연례적 조건부 기부금 사업 수입 초과 달성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 기금 변경 부분은 국회지적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1)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미집행, 이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국립공원 캠핑장조성 지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12. 10. 4. 600백만 원, 2013. 6. 18. 2,900백만 원을 추가 보조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등 [표 27]과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다.

201) 8.4회=(7회+0회+0회+5회+30회)/5개 기금

[표 27]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미집행, 이월한 사례

(단위: 백만 원)

연 번	변경대상 사업	기금변경 금액	기금변경일자	사업내용	비고
1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립공원 캠핑장 조성 지원)	600	2012. 10. 4.	숙박시설형 캠핑장, 서민형 풀오피션 캠핑장 조성 목적	전액 이월
2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립공원 캠핑장 조성 지원)	2,900	2013. 6. 18.	국민여가캠핑장 정비 및 확충	전액 이월
3	관광레저 기반 구축 (강변 레저문화 활성화 사업)	1,915	2012. 6. 18.	자전거도로 관광자원화 사업, 강변캠핑 활성화 사업, 강변문화관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액 이월
4	관광레저 기반 구축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	1,500	2012. 10. 4.	수상레저 체험장 설치, 수상레저 체험장 운영	전액 이월
5	관광레저 기반 구축 (레포츠 관광 활성화)	1,050	2014. 10. 29.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산지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액 이월
6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4,117	2014. 8. 11.	해외 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지원	전액 이월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2) 예측가능하고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 및 국회 등이 예산 삭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 중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10억 원)은 예측가능하고 시급성이 떨어져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2015. 9. 25.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한국 의료관광 대전 및 동남아 로드쇼 개최” 사업(30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확정 시 26.9억 원을, 국회가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는데도 2014. 8. 11.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표 28]과 같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시급성이 떨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4개의 사업과 국회·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3개의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였다.

[표 28] 예측 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삭감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례

(단위: 백만 원)

연 번	변경 대상 사업	기금변경 금액	기금변경일자	사업내용	비고
1	문화재 해외전시 및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 (국내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영상물 제작)	200	2012. 10. 4.	국립중앙박물관의 영상물 제 작 비용 지원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2	와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역 메가이벤트 연계 지방관광 활성화)	400	2012. 10. 4.	지역개최 메가이벤트 연계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도모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3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호텔산업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200	2013. 8. 8.	2013년 호텔산업채용 박람회 추진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4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1,000	2015. 9. 25.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5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300	2013. 6. 18.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및 활동비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 26억 원 감축
6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광화문권역 전통문화행사 지원)	600	2013. 8. 8.	전통문화재현 및 체험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 3억 원 감축
7	의료관광 육성 (한국 의료관광 대전 및 동남아 로드쇼 개최)	3,000	2014. 8. 11.	한국의료관광대전(상해) 및 동 남아 의료관광 로드쇼 개최	기획재정부가 한방의료 관광 활성화 지원 등 26.9억 원 감축 및 국회 1억 원 감축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2.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산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정산·확정하여 집행잔액을 반납받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훈령 제140호)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거나

증빙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집행잔액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정산 기한(60일) 이내에 보조금을 확정 통보하여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2017. 3. 10.) 동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집행된 민간보조사업(1,486건)의 정산실태를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화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금액 8,300백만 원, 사업기간: 2013년 1월~2014년 3월) 종료 이후인 2014. 6. 9.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고서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확정 통보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잔액 391백만 원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 계좌에 남아 있는 등 [별표 19]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산 미완료 현황”과 같이 145건의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최대 48개월 동안 정산확정통보를 하지 않아 집행예산잔액 11,043백만 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민간보조사업자 계좌에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재단의 사례와 같이 2014년, 2015년 “글로벌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각각 2백만 원, 21백만 원을 재단 계좌로 이체하여 재단운영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지출사업에 대해 증액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정산 확정 등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 정산업무 관리 소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하여 예산을 이월하거나 국회 등이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광진흥개발 기금 정산업무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민간보조사업자 계좌에 계속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정산 사업 145건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여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잔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7) 한식체험관 조성사업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한식재단(이하 “한식재단”이라 한다)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4층에 한식체험관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2015. 12. 22. ⊕⊕와 설계용역 및 공사를 일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금액 14억 8,700만 원)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3. 12. 4. 기획재정부 훈령 제153호)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²⁰²⁾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이하 “적격심사제”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격심사제 적용대상인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 적격심사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최저가낙찰제의 폐단(계약이행 능력 부족 업체의 덤핑 입찰 등)을 개선하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우량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예정가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최고한도 비용을 미리 추산함으로써 계약금액을 예산의 범위

202)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2015. 1. 30. 한식재단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음

내에서 한정하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한식재단이 한식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또는 적격심사제) 등을 통해 먼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해당 설계사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적격심사제로 공사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15. 2.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을 공포하면서 2015년 말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에 문화창조벤처단지와 K-Style Hub를 조성하기로 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해 2. 12. 서울사옥에 한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4월 신설된 문화창조융합본부(본부장 차은택)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서 한식콘텐츠 개발·보급·홍보 관련 전문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으로 하여금 서울사옥 1개 층²⁰³⁾에 한식체험관을 조성·운영하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식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을 담당하던 한식재단 ■팀 팀장 EH는 2015년 9월경 한식체험관 설계 및 공사의 발주방법을 검토하면서 전시관 등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사례²⁰⁴⁾ (지방자치단체의

203) 당초 한식재단은 한식체험관을 서울사옥 5층에 조성·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2015. 9. 16. 수립한 “K-Style Hub 마스터플랜”에 따라 4층에 조성·운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204) EH는 2015년 9월경 한식체험관에 대한 발주방법을 검토하면서 의정부시가 같은 해 5. 4.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공고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체험관·전시관 등의 발주사례를 참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물품·용역’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에 대한 언급은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전시관 등)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도 시설공사가 포함된 사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다만, 물품·용역에 극히 일부분의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음(회신일자: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 참조)를 근거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한식체험관 설치공사를 설계용역과 일괄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친 후 1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5. 10.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식체험관 조성사업을 입찰공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EH는 2015. 10. 20. “한식밸리²⁰⁵⁾ TF팀 구성 계획(안)”을 수립 하면서 한식체험관 조성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한식밸리 TF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같은 해 10. 20. 사무총장(JA, 2016. 3. 30. 퇴직)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2015. 10. 30. 구성된 위 TF팀에 한식체험관 조성 사업을 위한 계약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한식밸리 TF팀은 한식체험관 조성사업 입찰에 ⊕⊕ 등 2개 업체가 참가하자 2015. 11. 17.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²⁰⁶⁾한 결과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와 같은 해 11. 17.부터 12. 1.사이 에 3차례에 걸쳐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 22. 14억 8,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EH가 국가계약법령을 위배하여 적격심사제 적용대상인 체험관 조성 공사를 설계용역과 일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에 부친 결과 특정 업체가 용역과 공사계약을 모두 수주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2015. 5. 22., 공개번호: 139662)

205) 한식재단은 한식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시 ‘한식밸리’라는 명칭을 임시로 사용하였음

20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는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지방계약법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 개정

-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6. 11. 14.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외에도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단,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로서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또는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단, 건축공사는 제외) 설치공사'는 '실시설계서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공사임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하여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성 등으로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 등이 잇따르자 행정자치부는 2016. 9. 13.부터 모든 공사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폐지

관계기관 의견 한식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한식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적격심사제 적용대상인 공사를 용역과 일괄하여 동시에 발주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8) 문화창조 벤처단지 운영 사업 추진 부적정

1. 업무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사옥에 문화창조 벤처단지(이하 “벤처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콘텐츠분야 우수 벤처·스타트업²⁰⁷⁾ 기업에 사무공간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벤처단지 입주공간 지원사업과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투자유치마중물 지원사업 등 “문화창조 벤처단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벤처단지 사무실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1) 벤처단지 사무실 입주업체 선정업무 부적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8. 7.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모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 29. 720개 업체가 제출한 벤처단지 입주신청서를 평가하여 독립공간²⁰⁸⁾ 42개, 열린공간 51개 등 계 93개 업체에 벤처단지 내 사무공간을 지원²⁰⁹⁾하고 2016. 1. 1.부터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신청서류를 제출한 720개 업체 중 [표 29]와 같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167개, 2차 발표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104개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93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입주기업 경쟁률이 모집 기업

207)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용어로서 1990년대 후반 이른바 ‘닷컴 버블’로 창업 붐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신조어임(출처: 函지식)

208) 독립공간은 28개 기업에 37~52㎡, 7개 기업에 69~86㎡, 7개 기업에 99㎡ 이상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열린공간은 20개의 4인 기업, 31개의 1인 기업에 각각 4인용 및 1인용 테이블을 제공함

209)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에 5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열린공간의 경우 기업별 월 임차료는 720,873원이고, 11층부터 15층까지 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독립공간의 경우 월 임차료 지원 금액이 37~52㎡ 사무실은 3,327,448원, 69~86㎡ 사무실은 5,648,212원, 99㎡ 이상 사무실은 7,302,374원임(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관광공사에 임차료로 납부하는 금액을 입주기업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대비 2배 또는 19.6배에 달하고, 예비 입주기업이 독립공간의 경우 1개 또는 4개 업체, 열린공간의 경우 5개 업체 등 계 11개 업체가 선정되는 등 입주 희망업체에 비해 지원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9] 열린공간 및 독립공간 입주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

사무실 규모 (모집기업 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 업체 수		모집기업 대비 신청 기업 비율 (①/②)
		평가대상 업체 수①	통과 업체 수	평가대상 업체 수	통과 업체 수	입주②)	예비	
열린 공간	1인 기업(80)	65	40	40	31	31	-	2.1
	4인 기업(20)	90	42	42	25	20	5	4.5
독립 공간	37~52㎡(28)	291	56	56	32	28	4	10.4
	69~86㎡(7)	136	15	15	8	7	1	19.4
	99㎡ 이상(7)	138	14	14	8	7	1	19.6
계		720	167	167	104	93	11	

주: 벤처단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724개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 등이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벤처단지 입주 등 사무공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30]과 같이 벤처단지 이외에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16개에 이르고 있다.

[표 30] 독립공간 입주기업 사무실 출입 현황

(단위: 개, 일)

사무실 규모	기업 수	벤처단지 이외 사무실 보유		벤처단지 이외 사무실 미보유	
		기업 수	평균 출입일수	기업 수	평균 출입일수
37~52㎡	28	11	107	17	116
69~86㎡	7	2	75	5	187
99㎡ 이상	7	3	78	4	117
계	42	16	87	26	140

주: 1. 입주기업 직원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벤처단지 총별 출입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출입 시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출입일수를 산출하였음

2. 출입기간: 2016. 1. 1.~2016. 12. 3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그리고 벤처단지 독립공간 이외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위 16개 업체는 사무실을 2개소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자체 사무실이 없는 다른 벤처단지 입주업체 26개의 사무실 이용률(평균 출입일 수 140일)보다 그 이용률(평균 출입일 수 87일)이 62%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벤처단지 입주지원사업 이외의 창작발전소지원사업 등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동일 업체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단지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에 사무실을 국가 등이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거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입주 신청기업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내 사무실(11.55㎡)에 2015. 6. 30.부터 2016. 12. 31.까지 입주하고 있는 '㉠'를 열린공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고양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대학교로부터 임차료 무료 또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 등 5개 업체²¹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5. 10. 29. 입주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독립공간 사무실(규모 49.5㎡)에 입주한 주식회사 ㉡가 자체 사무실²¹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기업으로 선정 하였다.

210) ㉠ 이외에 용인시가 지원하는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제주대학교가 지원하는 주식회사 ㉤ 계 5개 기업이 있음

211) 자체 사무실은 없으나 벤처단지 이외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업체도 입주기간 동안 이중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음

(2) 사무실 지원 연장평가 심사 결과 미확인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1. 1.부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열린공간에 입주한 48개 업체²¹²⁾에 대하여 같은 해 6. 9. ‘열린공간 입주기업 연장평가 심사 계획’ (이하 “연장평가 심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²¹³⁾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6. 13. 연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연장평가 심사계획에 따르면 7명의 내·외부 평가위원²¹⁴⁾으로 하여금 연장평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동안 열린공간에 입주한 48개 업체의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의 항목을 정성평가(90점) 방식으로 평가하게 하고, [표 31]과 같이 상반기 매출·투자·홍보 실적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10점)를 실시하여 합계 70점 이상인 업체²¹⁵⁾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총점 10점) 현황

(단위: 백만 원, 건, 점)

구분	상반기 매출 실적(5)						투자 유치(2)		홍보 건수(3)		
실적	10 이상	10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매출 없음	실적 있음	실적 없음	3건 이 상	2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5	4	3	2	1	0	2	0	3	2	0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그리고 7명의 평가위원들은 48개 입주기업이 상반기 매출 실적, 연장기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에 의한 예상 매출 실적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연장계약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직접 채점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12) 열린공간에 입주한 51개 기업 중 3개 업체는 연장평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하였으며, 열린공간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 6개월 후 연장평가를 실시하여 6개월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독립공간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 2년 후 연장평가를 실시하여 2년 연장함

213) 연장평가 심사업무 담당자 차장 EI와 팀장 EJ가 같은 날 각각 결재

214)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이 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여 ●팀장 EJ가 참여하였음

215)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를 평균함

한편 사무실 지원 연장계약 여부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원장이 결재하여 최종 결정되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평가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평가 당일 늦게 참석하여 정량평가 점수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평가위원 EK가 ‘○○’의 경우 상반기 매출 및 투자유치 실적은 없고, 홍보실적만 있어 2점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6점으로 평가하는 등 36개 신청 기업에 대하여 배포된 정량평가 점수표 및 심사기준과 다르게 정량평가 항목의 점수를 많게는 8점을 더 주거나 3점을 덜 주는 등으로 평가하여 채점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심사업무 담당자 EI는 이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EK의 채점표를 그대로 반영하여 연장평가 심사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고 ●팀장 EJ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리고 EJ는 정량평가 점수표와 평가위원 채점표를 대조하는 등으로 채점결과에 정량평가 점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2016. 6. 16. 연장평가 심사결과 보고 문서를 결재한 후 본부장 EM, 부원장 EN, 원장 O에게 결재를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표 32] 연장평가 심사결과와 점수 재산정 결과

(단위: 점)

업체명	당초 평가결과			정당 평가결과		
	매출 등 정량평가	기타 정성평가	계	매출 등 정량평가	기타 정성평가	계
○○	2.7	67.7	70.4	2	67.7	69.7
오오	1.2	69.0	70.2	0	69.0	69.0
중중	1.4	69.6	71.0	0	69.6	69.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그 결과 정량평가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표 32]와 같이 실제 2016년 상반기에 매출 등 실적이 없어 70점 미만인 ‘○○’ 등 3개 업체가 70점 이상으로 잘못 평가되어 2016. 6. 30. 연장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2) 투자유치마중물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부터 벤처단지 기업지원사업 중 하나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융복합 콘텐츠 관련 투자를 유치한 cel멤버십 기업²¹⁶⁾(이하 “멤버십 기업”이라 한다)에 투자유치금의 20%(지원금 1회 최대 100백만 원, 기업당 최대 200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투자유치마중물 지원사업”(2016년도 예산 2,172백만여 원, 이하 “마중물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구 ■팀의 차장 EI는 2016. 2. 29. “2016년 투자유치마중물 지원사업 추진계획”(이하 “마중물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지원대상²¹⁷⁾을 “공고 이후 접수마감일 2개월 이내에 적격투자자로부터 투자(프로젝트 또는 지분)를 유치(투자계약)한 멤버십 기업”으로 기재하여 기안하고, 팀장 EJ의 검토를 거쳐 구 cel벤처단지본부장(EM), 부원장(EN), 원장(EO)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EI(1차)와 대리 EP(2~5차)는 마중물 추진계획에 따라 [표 33]과 같이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격월로 5차례에 걸쳐 마중물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 안내문에 ‘지원대상’을 “접수마감일 2개월 이내에 적격투자자로부터 투자(프로젝트 또는 지분)를 유치(투자계약)한 멤버십 기업”으로 기재하고 투자인정기간을 기재하여 안내하였다.

216) cel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입주기업 최종평가에 참여한 업체, cel파트너즈(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기술적 협력, 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추천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가입자격을 부여

217) 멤버십 가입 전 투자를 유치한 경우까지 마중물 지원을 하게 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벤처단지 투자유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존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시켰다는 외부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멤버십 가입 후 투자받은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어느 문서에도 위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함

[표 33] 신청회차별 투자인정기간(2016년)

회차	신청기간	투자인정기간
1	2. 29. ~ 3. 7.	1. 7. ~ 3. 7.
2	4. 29. ~ 5. 9.	3. 8. ~ 5. 9.
3	7. 1. ~ 7. 12.	5. 10. ~ 7. 12.
4	9. 5. ~ 9. 19.	7. 13. ~ 9. 19.
5	10. 31. ~ 11. 7.	9. 20. ~ 11. 7.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재구성

따라서 멤버십 기업에 안내한 투자인정기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업체를 선정하되 지원기준이 불분명할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다시 공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검토할 때에도 지원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했다.

그러나 EP는 4차 신청접수 기간(2016. 9. 5.~9. 19.) 중 투자인정기간(2016. 7. 13.~9. 19.) 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멤버십에 가입(2016. 7. 19., 8. 5., 8. 30.) 하기 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중물 지원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묻는 업체들이 많았는데도 문의한 업체에만 멤버십 가입 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명확하게 다시 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EP는 2016. 9. 19. 4차 신청서를 받아 검토하면서 멤버십 가입일과 투자계약일을 비교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EQ), 주식회사 ♢♢(대표이사 ER), 주식회사 ★★(대표이사 ES) 등 3개 업체의 경우 투자인정기간(2016. 7. 13.~9. 19.) 중 투자계약을 체결(각각 2016. 8. 14., 8. 18., 8. 23.)하였으나 멤버십에 가입(2016. 8. 30.)하기 전 계약한 것이라는 사유로 같은 해 9. 20. ‘2016년 4차 마중물 사업 평가

계획’(이하 “4차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기안하면서 위 3개 업체를 “조건 미달”로 기재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간 검토자 차장 EI와 팀장 EX는 대리 EP가 기안한 4차 평가계획을 그대로 결재하여 본부장 EM의 결재를 받았다.

반면, EP는 5차 신청접수(2016. 10. 31.~11. 7.) 시 4차 신청접수 기간 중 문의받아 안내하고 적용한 멤버십 가입 후 투자계약만 인정된다는 내용을 5차 사업 신청 안내문에 포함하지 않은 채 공지하였다.

그런데 5차에 신청서를 접수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ET, 이하 “(주)○○”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계약일이 2016. 9. 26.이고 멤버십 가입일이 같은 해 9. 27.이며, 주식회사 ㉸㉸(대표이사 EU, 이하 “(주)㉸㉸”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계약일이 같은 해 9. 21.이고 멤버십 가입일이 같은 해 10. 25.로 4차 접수 시 조건 미달로 탈락한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의 경우와 같이 멤버십 가입 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EP는 4차 접수 시와 달리 투자계약일과 멤버십 가입일을 비교·검토하지 않아 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 2개 업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같은 해 11. 14. “2016년 5차 마중물 사업 평가 계획”(이하 “5차 평가계획”이라 한다) 문서를 기안 및 상신하였다.

그리고 차장 EI는 EP가 상신한 5차 평가계획 문서를 검토하면서 신청 업체들의 멤버십 가입일과 투자계약일을 비교하여 선후관계를 직접 검토하거나 EP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팀장 EX도 멤버십 가입 후 투자된 것이 맞는지 EP와 EI에

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토(결재)하여 본부장 EM의 결재를 받아 심사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과 (주)ㄹㄹ은 지원적격성 심사를 받았고, (주)ㄹㄹ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100백만 원의 지원금²¹⁸⁾을 받았다.

그 결과 마중물 사업은 안내된 바와 다른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그마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지원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신뢰성도 일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벤처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자가 보유 사무실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도 업체규모, 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평가담당자가 평가위원이 잘못 평가한 정량 평가 점수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평가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정량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중복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마중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추가 지원 없이 사업을 종료하였고, 2017년 사업 재편 등으로 신규 선발 없이 2017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나 기타 지원사업 실시 시 지원대상 및 제한사항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공지하고, 평가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여부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8) (주)○○○은 지원 적격성 심사 시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탈락

조치할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 ① 사무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국가 등이 동일업체에 사무실을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벤처단지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선정평가 등 평가위원이 심사기준과 다르게 잘못 평가한 심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③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여 안내하고, 안내된 인정기준을 신청자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④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9) 국가브랜드 홍보사업 계약업무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5년 12월(날짜 모름) □□ 주식회사(대표이사 EV·EW, 이하 “□□”라 한다)에 국가브랜드 명칭²¹⁹⁾ 개발과 홍보영상 제작 등이 포함된 홍보용역을 구두로 의뢰하였고, 2016. 6. 23. □□와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추진방향 및 홍보전략 기획”²²⁰⁾ (계약금액 95,000,000원, 계약기간: 2016. 6. 23.~7. 22.)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 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체부장관 김종덕은 2015년 12월경(날짜 모름) 이와 같이 □□에 국가브랜드 명칭 개발과 홍보영상 제작 등이 포함된 홍보용역을 구두로 의뢰한 후 문체부 □관 AY를 통해서 □실 □관 EY에게 □□와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219) 문체부는 2016. 7. 4.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Creative Korea’를 발표

220) 명칭 개발 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용역

그런데 EY는 국가브랜드 명칭 개발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 아닌데도 □□를 특정하며 구두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위반임을 알면서도 장관에게 경쟁입찰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에 홍보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뢰²²¹⁾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용역금액도 확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 2016. 2. 2.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토론회’에서 ‘Wonderland Korea’를 국가브랜드 명칭 개발 용역의 결과물로 발표하였으나, 같은 해 2. 11. 국가 브랜드 명칭이 ‘Creative Korea’로 최종 결정되자 □□는 이미 집행한 명칭 개발 용역비 등 홍보용역비 3억 원을 지급요구하였다.

그러자 EY는 ⊗반장 EZ, FA와 함께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와 3차례 대면협상²²²⁾ 및 수차례 유선협상을 하였고, 문체부는 국가브랜드 명칭 개발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같은 해 1. 19.부터 계획²²³⁾한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추진방향 및 홍보전략 기획” 용역을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²²⁴⁾를 들어 같은 해 6. 23.에 □□와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추진방향 및 홍보전략 기획”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계약금액 95백만 원)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는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한 채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계약질서를 훼손하였다.

221) EY는 2015년 12월(날짜 모름) AY와 함께 □□ 대표이사 FB를 1차로 면담하였고, 2016년 1월(날짜 모름) FA와 함께 □□ 본부장 FC를 2차로 면담하여 국가브랜드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설명

222) 2016. 3. 3. ㄱ동 찻집, 같은 해 4. 15. ㅎ대 근처 찻집, 같은 해 4. 22. ㄱ동 카페에서 명칭 개발비에 관하여 협상하였고, 이후에도 유선협상을 지속하여 총계약금액을 95백만 원으로 협의

223) 문체부는 2016. 1. 19.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종합홍보용역 추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종합홍보용역(안)에 ‘연간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을 포함하여 홍보전략 기획 용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224) 긴급한 행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하였으나, EY는 사실 홍보영상 제작 등 다른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 위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에 2015년 12월경 구두로 기 의뢰한 용역 수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하였다고 진술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약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이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인정하는 수의계약 가능사유가 아닌데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하거나 구두로 계약을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0)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문예위가 집행한 문예기금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예위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문예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여 민간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오페라 분야(우수작품 제작지원)와 연극 분야(우수작품 제작지원) 별도로 각각 3억 원과 10억 원을 편성한 후 이를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예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문예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과 부담금 등이고,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문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문예위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예위는 보조금법 규정과 국고와 기금의 역할 분담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예기금 중 민간에 교부할 보조금은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위가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을 국가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도록 위법·부당한 간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문예위는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사업에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예위 소속 구 창작지원부(이하 “창작지원부”라 한다)는 2015년 9월 말경 문체부로부터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의 우수작품 제작지원 용도로 편성된 보조금 예산 중 미집행 중인 총 6억 원(오페라 분야 3억 원과 연극 분야 3억 원)²²⁵⁾을 국립중앙극장에서 ‘그녀’를 제작·공연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요청받은 데 대해 민간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 예산이라는 사유로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체부가 계속 위 사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자 2015. 10. 23. 문체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은 후 문예위 위원 중 오페라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과 연극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민간에 지원할 예산을 국립중앙극장에 지원하기 곤란한데도 문체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예산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페라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과 연극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은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문예기금을 국립 단체(기관)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알고 있었지만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창작지원부는 문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의결될 때 해당 분야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이 그대로 수용되는 관례를 고려하여 2015년 10월 말경 예산 6억 원을 ‘향연’의 제작·공연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나서 창작지원부는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게 ‘민간에 지원할 예산을 국립중앙극장에 지원하기 곤란한데도

225) 오페라 분야의 우수작품 제작지원 예산 3억 원은 2015. 6. 9.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작품이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 중이었으나 2015. 6. 25. 개최된 제162차 문예위 회의에서 향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규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고, 연극 분야의 우수작품 제작지원 예산 10억 원 중 7억 원은 2015. 4. 7.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작품을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문체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해당 분야 위원들의 사전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예위는 2015. 11. 13. 제17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의 예산 총 6억 원을 민간이 아닌 국립중앙극장에서 ‘향연’을 제작·공연하는 사업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의결한 후 2015. 11. 24. 국립단체(기관)에 직접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립중앙극장이 아닌 재단법인 국립극장진흥재단에 위 예산 6억 원을 교부한 후 국립중앙극장의 ‘그날’ 제작·공연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예위가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6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국립중앙극장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한편, 문예기금을 집행하는 문예위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예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번 사례와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을 국가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도록 위법·부당한 간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다르게 국가기관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내부 규정인 「계약사무처리규칙」과 함께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에 관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2016. 3. 13. 개정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5호 가항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항 제1항,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공고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2. 19. 추정가격이 3천만 원으로 나라장터에 견적공고하여야 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공간정비 및 교육시설 확충공사”를 자체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만 견적공고한 후 주식회사 《이 단독으로 견적을 제출하자 1인 견적을 근거로 위 업체와 그대로 수의계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지난 3년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용역 71건(계약금액: 1,843 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34]와 [별표 20] “지난 3년간 나라장터 견적공고 미실시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 견적을 공고하지 않은 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함으로써 견적을 제출한 업체 수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평균 2개)²²⁶⁾에 불과하여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경우에도 나라장터의 낙찰률(89%)보다 높은 낙찰률(95%)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 34]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나라장터의 2인 견적 수의계약 비교

(기간: 2014. 1. 1.~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건, %)

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나라장터		낙찰률차이 (C=A-B)
	계약금액	건수	평균업체 수	평균낙찰률 (A)	평균낙찰률 (B)	평균 참가자	
합계	1,843	71	2	95	89	27	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의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로 계약함으로써 약 117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2천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용역 등의 계약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보다 많은 업체들이 견적을

226)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만 견적을 공고한 경우 견적 제출업체 수가 평균 2개 업체인데 반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견적을 공고하는 경우 지난 2년간 평균 26개 업체로 다수의 업체가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제출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처리규칙」 등을 개정하는 한편, 나라장터에 견적공고해야 하는 용역계약을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계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나라장터에 견적 공고해야 하는 수의계약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업무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이하 “심의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 6. 24.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콘텐츠 지원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 풀(Pool) 내부시스템(이하 “Pool 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3회 연속 평가참여 등 19개 배제항목²²⁷⁾ (이하 “배제항목”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심의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 등은 Pool 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및 관련 협회·학회, 주무부처, 내부전문가 중에서 선발하되 사업의 특성상 Pool 시스템에서 사전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Pool 시스템에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심의지침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심의지침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 당해 연도 동일 지원사업에 3회 연속 참여하는 자나 기타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해당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심의지침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대표자의 출신학교, 지원과제

227) 내부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 중 3회 연속 참여자, 보조사업 신청기업의 대표자와 동일 학교, 지원과제 연구책임자의 동일 학교, 동일한 심사에 참여했던 자, 이전 참여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 소속 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평가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19개 항목임

연구책임자의 출신학교 등 신청자 관련 자료와 Pool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의 소속, 학력 등 신상 자료를 비교하여 배제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평가위원을 3배수로 추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ool 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별 전문가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19개 배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3배수로 추천할 평가위원 후보자 수가 부족하여 19개의 배제항목 중 일부 배제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ool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 수가 부족하여 배제항목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 전문가 수를 늘리고 사전 등록 없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을 사후 등록한 경우에만 이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 전문가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와 같이 배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 전문가를 3배수로 추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임의로 정한 일부 배제항목만 적용하여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있는데도 등록 전문가 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 35]와 같이 사전 등록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중 39명은 사후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회 이상 평가에 참여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해당 평가 이후 등록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35] 사전 등록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사후 미등록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평가 참여 평가위원 수						사전 미등록 평가위원 평가 참여 횟수			
	계		사전 등록		사전 미등록		계	1회	2회	3회 이상
	위원 수	평가횟수	위원 수	평가횟수	위원 수	평가횟수				
2015	451	585	390	509	61	76	61	48	11	2
2016	571	840	453	675	118	165	118	92	17	9
계	1,022	1,425	843	1,184	179	241	179	140	28	1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콘텐츠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022명 중 3회 연속 동일 사업 평가에 참여하거나 배제항목 중 하나인 ‘보조사업 신청자와 해당 사업 평가위원이 동일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9. 4.부터 같은 해 10. 1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선정평가를 실시한 ‘2015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FD가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 등 [별표 21] “3회 연속 동일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세”와 같이 6명의 평가위원이 많게는 5회, 적게는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표 36]과 같이 평가위원 47명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55개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학교이거나 지원과제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학교 등인데도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심의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표 3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평가에 참여한 이해관계 있는 평가위원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 있는 평가위원 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수
	계	대표자와 동일 학교	지원과제 연구책임자와 동일 학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와 모두 동일 학교	
2015	26	5	8	13	32
2016	21	3	9	9	23
계	47	8	17	22	55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그 결과 콘텐츠 지원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과정에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신규 전문가 Pool 확대를 위해 현재 등록절차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학력, 재직, 경력 증명)을 간소화하거나 먼저 등록 후 일괄 검증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전문가 인력 풀(Pool) 내부시스템의 등록 전문가 부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등록 전문가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13) 국고보조금 정산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3. 2. 20.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센터”라 한다)에 “2013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²²⁸⁾(총사업비 900백만 원, 사업기간: 2013. 1~12월)”을 수행하도록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고 2014. 11. 12. 정산확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사업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교부조건 포함)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금액을 확정 통보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체부가 2013. 2. 20. 예술센터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붙인 교부조건에 따르면 타당한 사유 없이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금을 감액 집행한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정산 시 자부담금의 감소율만큼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이행하도록 예술센터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시 하달한 교부조건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하고, 예술센터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심사할 때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자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감액조치하여야 했다.

228) 우리나라 우수 공연작품에 대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공연예술 특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스테이지 코리아 기획형(Center Stage Korea Focus)’과 한국공연예술의 해외 투어를 지원하는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공모형(Center Stage Korea International Touring)’으로 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예술센터는 2013. 4. 5. “2013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기획형²²⁹⁾’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²³⁰⁾(대표 FE)이 총사업비 174백만여 원(국고보조금 50백만 원, 해외초청기관 지원금 32백만여 원, 자체부담금 92백만여 원) 중 자부담금 92백만여 원과 국고보조금 50백만 원²³¹⁾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자 문체부가 하달한 위와 같은 내용의 교부조건을 첨부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10. 국고보조금 50백만 원의 교부 결정을 통지²³²⁾ 하였다.

그리고 예술센터는 같은 날인 2013. 4. 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기획형” 사업에 선정된 ▲▲ 등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부담금에 대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정산관련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센터는 ▲▲이 같은 해 11. 4. 당초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금 (92백만여 원)보다 7백만여 원 적은 85백만 원(인건비 26백만 원, 영상제작비 59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 하자 같은 해 11. 15. 자부담금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산확정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3. 2. 20. 예술센터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간접 보조사업자에게도 위 교부조건을 통지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2. 10. 예술센터가 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정산 증빙자료 없이 ▲▲ 등

229) 해외기관들로부터 협력사업의 제안서를 직접 공모받아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한 후 해외기관이 초청한 단체에 항공료 및 화물운송료를 지원(해외기관은 단체에 숙박비 등을 지원)

230) 사업기간: 2013. 8. 16.~8. 23. 영국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ㄱ’ 공연 개최

231) 항공료 및 화물 운송료

232) 2013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기획형 사업 지원금 교부결정 및 통지(시장개발팀-13-0072)

“2013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4. 11. 12.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이 정산보고한 자부담금 계 85백만 원의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60백만 원은 2012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유럽 전통 건축양식 맞춤형 미디어스킨 기술개발 사업²³³⁾”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여 실제 ▲▲의 자체 자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계 22백만여 원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는 ▲▲이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금보다 69백만여 원을 적게 집행하였으나 예술센터가 ▲▲에게 자부담금 이행 및 미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교부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실적 보고서 심사 시에도 자부담금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간접보조사업 정산확정을 한 데 대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산확정함으로써 자부담 감소율(75%)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37백만여 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예술센터가 ▲▲에 자부담금 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교부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므로 ▲▲이 자부담금을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면서도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등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233) 주관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사업기간: 2012. 11. 1.~2013. 9. 30., 총사업비: 계 70백만 원(보조금 60백만 원, 자부담: 10백만 원), 사업내용: 연구를 토대로 한 기술개발과 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으로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그스’를 공연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및 보조금 확정 통지 등을 할 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예술센터에 총사업비 중 92백만여 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부담은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이 자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자부담금의 감소율만큼 국고보조금을 감액조치하지 않은 채 정산확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정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체육 분야

현황

1. 체육 관련 자원 현황

체육진흥을 위한 자원은 [표 37]과 같이 중앙정부의 국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37] 체육 관련 자원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체육단체 자체재원	계
2013	1,717	8,799	32,130	2,724	45,836
2014	1,488	8,951	35,527	2,045	48,290
2015	1,344	11,605	34,819	3,690	51,458

자료: 문체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출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표 38]과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과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표 38]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경륜·경정 수익금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복권 수익금	이자수입	기타	계
2013	7,594	329	12	506	60	515	9,016
2014	10,450	255	440	529	71	549	12,294
2015	11,194	492	467	528	61	520	13,262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 기금 지출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표 39]와 같이 국민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39]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보조금				기금관리비 등	계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 등	장애인체육		
2013년	1,322	2,814	4,199	464	317	9,116
2014년	2,072	2,089	4,161	629	388	9,339
2015년	3,262	3,305	4,511	527	407	12,012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3. 주요 체육단체 현황

주요 체육단체는 [표 40]과 같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으며 체육회별로 종목별 경기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표 40] 주요 체육단체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설치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016. 3. 7.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통합)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2017년 예산	3,764	548	20,336 (법인회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 장애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사업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사업 등

자료: 문체부

문 제 점

<주요 감사결과 요약>

- 문체부는 공익사업적립금을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용하면서 공모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였고 정산도 미 실시
-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타 체육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공모절차 없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였고 정산도 미 실시
- 문체부는 민간위탁사업자인 (주)에이치에 빙상팀을 창단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빙상팀 창단·운영비를 보전, 지원금액(34.4억 원)만큼 기금수입 감소 초래
- 문체부는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공모 없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위 영재센터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1.3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
- 문체부는 사전 협의 미이행, 출장여비 용도외 사용 등 경미한 사유로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과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 취소하여 대한체육회에 2.1억 원의 손실 등 초래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및 정산업무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경륜·경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경륜·경정 수익금의 2% 또는 2.5%를 세입세출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공익사업에 지원(2015년 148억 원, 2016년 41억 집행)하고 있다.

2.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① 소관과(공익사업적립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담당과: ■과, ◇과, ▼과 등)는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 ② 주관과(공익사업적립금 총괄담당과: ■과)는 소관과에서 제출된 지원계획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적립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과는 지원계획에 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③ 연초에 지원이 확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 연도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 소관과는 해당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관과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④ 주관과는 매년 6. 30.까지 전년도 적립금 지원실적을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6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초(매년 1월 말)에 확정되는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수시 지원 사업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원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대상 사업을 알지 못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적립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명과 금액만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하며, 집행 실적을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급자가 학연 등을 사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에게 법령 위반 및 부당성을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별도의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 등에 공익사업적립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공익사업적립금을 관련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용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분야의 195개²³⁴⁾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체부는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대상 사업을 공지하지 않았고, 수시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는 적립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15년도 적립금 지원실적²³⁵⁾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사업을 관련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은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기 어려워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34)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지 아니한 184개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공익사업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특정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235) 2016년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실적 공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17. 6. 30.까지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감사종료일(2017. 3. 10.) 현재 약 3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음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대로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지원

이와 같이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대상 사업을 공지하지 않고, 수시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제2차관 김중은 2015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운용규정」 제12조 등의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절차를 위반하여 ●관 S에게 자신이 재직한바 있는 대학교 교수로 친분이 있는 √√대학교 □학부 교수 FF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를 특정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부당한 지시를 받은 S는 이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김중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시 내용대로 ☞☞학회를 예산지원 대상자로 특정하고 ☞☞학회 관계자들과 예산지원 협의를 하라고 ■과 W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와 ■과 V는 ☞☞학회와 예산지원 협의를 하였고, ☞☞학회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포럼개최 비용 지원을 요청하자 2015. 10. 5.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 연번 1~4번과 같이 ☞☞학회를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등 4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470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수시지원 계획 보고”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T 등에게 상신하였으며, T는 위 4개 사업시행자로 민간단체인 ☞☞학회가 선정되어 있는데도 W로부터 김중이 예산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고 차관의 지시라는 사유로 위 지원사업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문서에 그대로 결재를 한 뒤 ●관 S, ▲실장 X, 제2차관 김중, 장관 김종덕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김중은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으로부터 소개받은 행사업체였던 주식회사 **ㄹㄹ**(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 FG, 설립일: 2014. 11. 4., 이하 ‘**ㄹㄹ**’이라 한다)이 국제 지구력 승마연맹 교류 포럼 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1월 √√대학교에 교수로 같이 재직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사단법인 **ㄱㄱ**협회 FH 사무총장에게 ‘**ㄹㄹ**이 포럼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ㄱㄱ**협회가 포럼 행사에 대한 공익사업적립금을 교부받을 경우 **ㄹㄹ**에 전액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최서원으로부터 건네받은 **ㄹㄹ** 직원의 연락처를 문체부 **ㄷ**과 과장 BA에게 전달하며 ‘포럼 행사를 **ㄹㄹ**과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BA는 ① 비슷한 시기(2014. 11. 17. ~ 11. 18.)에 위 포럼 행사와 성격이 유사한 ‘국내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사업비: 28백만 원, 사업시행자: 사단법인 **ㄱㄱ**협회)에 대하여 이미 지원을 하였고, ② 포럼 사업인데도 사업예산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③ 포럼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 승마계에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김중에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업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김중은 재차 포럼 행사 추진을 지시하였고, BA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한 채 업무담당자 FJ에게 사업예산을 200백만 원에서 120백만 원으로 삭감하여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ㄷ**과는 ‘국제 지구력 승마연맹 교류 포럼’ 개최일(2014. 11. 29.~11. 30.) 하루 전날인 2014. 11. 28. 위 포럼 사업시행자로 **ㄱㄱ**협회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적립금 지원신청서를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협회는 위 포럼 개최가 끝나고 11일 지난 2014. 12. 11. ㉢과에 적립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과는 2014. 12. 24. 공익사업적립금 120백만 원을 ㉠㉡협회에 지원하였고 ㉠㉡협회는 교부받은 공익사업적립금 120백만 원을 두 차례(2014. 12. 26., 2015. 1. 28.)에 걸쳐 위 포럼 행사 계약도 맺지 않은 ㉣㉣에 전부 전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과 같이 김중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연 등으로 친분이 있는 교수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면 문체부 실무자들은 이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위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학회 등 4개 단체에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등 10개(819백만 원) 사업을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공익사업적립금 예산으로 부당 지원하였다.

한편, 보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 각 부처에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학회가 주관하는 “2016 한국스포츠과학자 통합학술대회” 등 4개 사업([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 연번 6~9번 사업)의 경우 2015. 8. 24. 기획재정부로부터 위 4개 사업을 지원하던 “체육학술연구 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이 소수의 학술단체 및 연구자만 지원하고 있고,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과 중복되어 별도의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체육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즉시폐지’를 통보받아 예산(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문체부는 위 4개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대체 추진(사업비 224백만 원)하였다.

(3) 문체부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공모절차 없이 지원

◇과 FK는 2015년 2월경 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 사무국장 FL로부터 유선으로 “BC 국장과 이야기가 된 사업이고 좋은 사업으로서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지원이 끊기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는 답변을 듣고 “미래창조형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과에 전달하였으며, ■과에서 2015. 3. 24. “2015년 체육·문화예술사업(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포함) 지원계획 보고” 전자문서를 장관의 결재를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FK가 2015. 4. 20. “미래창조형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시행자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간단체인 ⊗⊗으로 선정하고 120백만 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과 BE, ◇과장 BD에게 상신하였으나 BE와 BD는 “미래창조형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시행자가 민간단체인 ⊗⊗으로 선정되어 있는데도 공개경쟁을 거쳐 선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결재하여 문체부 퇴직자 등으로 구성(임원진 23명 중 19명이 문체부 퇴직자)된 ⊗⊗에 120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4)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부적정

가. S의 경우

문체부 대한민국예술원 ■장 S는 2015. 5. 18.부터 2016. 11. 10.까지 ●관의 직위에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계획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그런데 S는 ■과 등 각 과에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는 등 공익사업적립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

하지 아니 하였고, 2015년 9월경 제2차관 김종으로부터 김종과 같은 대학교 교수로 친분이 있는 VV대학교 □학부 교수 FF가 회장으로 있는 ☞☞학회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지원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거나 부당하다는 의견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과 W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예산 지원 대상자를 ☞☞학회로 특정하고, ☞☞학회 관계자들과 예산 지원 협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2015. 10. 5. ■과가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 연번 1~4번과 같이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등 4개 사업 시행자로 ☞☞학회를 선정하고 470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2015년 공익사업 적립금 수시지원 계획 보고” 전자문서에 S는 ●관으로 결재를 한 뒤 ▲실장 X, 제2차관 김종, 장관 김종덕에게 위 전자문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S는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 연번 1~9번과 같이 김종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이행하게 함으로써 ☞☞학회 등 2개 단체에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등 9개 사업(사업비 699백만 원)을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공익사업적립금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나. BC의 경우

문체부 국립국어원 □부장 BC는 2014. 3. 1.부터 2015. 3. 22.까지 ●관의 직위에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계획 업무 등을 총괄·감독하였다.

그런데 BC는 ■과 등 각 과에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는 등 공익사업적립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고, 2015년 2월경 ⊗⊗ 부원장 FO(문체부 퇴직자)로부터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는지를 유선으로 문의받았으며, FO에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사업계획서를 담당과에 제출해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FO가 ⊗⊗ 사무국장 FL(문체부 퇴직자)에게 ■과로 “미래창조형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FL은 위 지시대로 2015년 2월경 ◇과 FK와 사전 협의 없이 FK의 전자우편으로 “미래 창조형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송부하였다.

위 전자우편을 받은 FK는 FL에게 유선으로 “저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보내셨습니까?”라고 문의하였고 FL로부터 “BC 국장과 얘기가 된 사업이고 좋은 사업으로서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지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FK는 “미래창조형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과에 전달하였고, ■과는 2015. 3. 24. “2015년 체육·문화예술사업(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포함) 지원계획 보고”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BC에게 상신하였다.

이에 BC는 위 전자문서를 검토하면서 ‘미래창조형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은 2인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명과 금액만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위 전자문서와

같이 ‘미래창조형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시행자가 문체부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잘 알고 있었던 ⊗⊗으로 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 등에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공개경쟁을 거쳐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BC는 위 지원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자문서에 그대로 결재한 뒤 제2차관 김종, 장관 김종덕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과는 이를 근거로 2015. 4. 20.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에 120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X의 경우

문체부 ■실장 X는 2015. 3. 13.부터 2016. 4. 3까지 ▲실장의 직위에서, 2016. 4. 4.부터 2016. 12. 29.까지 ■실장의 직위에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계획 업무 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X는 2015. 10. 5.부터 2016. 4. 29.까지 ■과가 전자문서로 기안한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수시지원 계획보고”(2015. 10. 5.)를 검토하면서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등의 사업시행자가 ⊗⊗학회 등 민간단체나 개인으로 선정되었는데도 ■과에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이 공모절차를 거쳤는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과장이 알아서 잘 챙겼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뒤 그대로 결재하였고 제2차관 김종, 장관

김종덕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는 등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 연번 1~9번과 같이 ■과가 공익사업적립금을 비공개로 운용하면서 김종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하여 기안한 전자문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과와 ◇과는 이를 근거로 2015. 10. 19.부터 2016. 9. 20.까지 9차례에 걸쳐 ☞☞학회 등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공익사업적립금 699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김종의 경우

김종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1까지 문체부 제2차관의 직위에서 공익사업적립금·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의 기금사업 지원계획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그런데 김종은 2015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운용규정」 제12조 등의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절차를 위반하여 ●관 S에게 자신이 재직 한 바 있는 대학교 교수로 친분이 있는 √√대학교 □학부 교수 FF가 회장으로 있는 ☞☞학회를 특정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과 같이 S 등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인이 소속한 단체나 지인을 특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S 등 문체부 실무자들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고, 그 결과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등 10개 사업의 사업시행자 ☞☞학회 등 3개 단체에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공익사업적립금 819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3.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 정산업무 부적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12조 제7항,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경비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소관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관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내용에 적합한 것인가를 심사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과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실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소관과의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로(예를 들어 정산제출 기한인 60일째 되는 날 전후, 그 이후에는 30일마다) 정산보고서 제출을 문서로 독촉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는 등 정산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여러 차례 정산보고서 제출 독촉 문서를 무시하고 장기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반납금액 확정 등 회계책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산을 기한(60일) 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 증빙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문서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정산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 문화예술분야의 260여 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표 23]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 미정산 명세”와 같이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원 개원계기 조기 활성화 지원” 사업(사업기간: 2014년 4월 ~2014년 12월)을 종료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2017. 1. 9. 현재까지 24개월 동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서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지 않았고, 교부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여 24개 사업이 종료 후 2017. 1. 9. 현재까지 3~24개월 동안 정산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문서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전반적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① 향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여 부적절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②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③ 주관 부서가 반기별로 미정산 사업들을 파악하여 소관 부서로 하여금 기한 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확정을 완료하도록 독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민간단체나 개인을 특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을 지원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선정업무 검토를 소홀히 한 X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V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2-(3)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계약업무 부당처리’,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9번 참조]

※ W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5)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8번 참조]

※ T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5)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7번 참조]

※ S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㉔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및 관련 규정 불합리’,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5번 참조]

※ BC는 이 건 행위와,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2-(1)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4번 참조]

※ X는 이 건 행위와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2번 참조]

※ 김중은 이 건 행위와 ‘1-(3)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지원 부적정’,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주)㉔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3-(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등 부당지원 및 관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보(인사자료)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②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을 관련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영하거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등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고사항]

공익사업적립금으로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 포럼’ 행사 지원 관련 보조금 1.2억 원을 **☎☎**(장시호 소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김중의 혐의에 대해 2017. 4. 25.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음

3-(2)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및 정산업무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3. 2. 1. 감사원으로부터 공익사업적립금이 예산 삭감 사업이나 이미 편성된 예산사업에 추가 지원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여 재정통제를 받아 사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문체부는 2014. 12. 23.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였으나,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에 비해 비교적 소액(2015년 집행액 11억 7,000만 원)이며 당시 적립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대상에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제외하여 2016. 10. 24. 감사원으로부터 재차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도 향후 재정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해 2017년 3월 현재 「경륜·경정법」을 개정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된 구 공익사업적립금의 재정통제 및 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어 재정통제가 미흡하였고, 일부 사업은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지원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2. 기금사업을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집행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의로 운용되던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한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기금사업 내역을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일정한 범위 없이 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전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수시 지원사업 성격의 예산(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지원기준을 마련·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는 2014. 12. 23.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면서 [표 41]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심판 양성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등 6가지로만 분류하여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표 41]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운용계획 금액 및 비중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학교체육 활성화	11,788	25.00	9,500	18.65	5,139	9.29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11,814	25.05	9,024	17.71	10,016	18.10
심판 양성 및 지원	8,418	17.85	3,357	6.59	3,551	6.42
전문인력 양성	8,000	16.96	14,845	29.14	8,826	15.95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5,722	12.13	6,590	12.94	6,069	10.97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1,414	3.00	7,628	14.97	21,726	39.27
합계	47,156	100.00	50,944	100.00	55,327	100.0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또한 문체부는 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전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체육문화 예술 진흥’ 사업 예산을 일정한 지원기준도 없이 2015년도에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전체 예산 47,156백만 원의 3%인 1,414백만 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6년도에는 7,628백만 원으로 계획하여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 비중을 급격하게 증가(전체 예산 50,944백만 원 중 14.97%)시켰으며, 2017년도에는 21,726백만 원으로 그 비중을 더욱 증가(전체 예산 55,327백만 원 중 39.27%)시키고 있어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때 문체부로 하여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협의·조정하지 아니하였다.

3.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2명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은 경쟁을 통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예산으로 보조금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법 등에 따라 2명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은 경쟁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상급자가 학연 등을 사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에게 법령 위반 및 부당성을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을 관련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용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분야의 96개²³⁶⁾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체부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등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 적립금을 운용하던 때와 동일하게 비공개로 보조사업자를 결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의 존재도 알기 어려워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대로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지원

그리고 [표 42]와 같이 제2차관 김중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 1월경 ●관 S를 제2차관실로 불러 자신과 친분이 있는 ●●대학교 교수인 FQ를 소개시켜 주면서 법령이 정한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인인 FQ에게 연구용역을 지원 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236)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지 아니한 89개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특정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표 42]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금액	소관과	최초 지시자	지원계획 결정일	교부 결정일
1	K-스포츠클럽 운영개선 방안 연구	●●대학교 산학협력재단	60	◇과	제2차관 김종	2016. 3. 2.	2016. 3. 22.
2	시니어 건강을 위한 사계절운동 프로그램 개발	***협회	100	◇과	제2차관 김종		2016. 3. 14.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S는 위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김종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과 FP에게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예산지원 대상자를 FQ로 특정하면서 FQ에게 연구용역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FP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FQ에게 연구용역을 줄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연구용역 예산이 없으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과 FP와 FK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연구용역(K-스포츠클럽 운영개선 방안 연구) 예산 100백만 원 중 해외자료 수집예산 40백만 원을 삭감하여 FQ(●●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6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사업계획서를 ■과에 전달하였으며, 2016. 3. 2. ■과는 'K-스포츠클럽 운영개선 방안 연구' 보조사업자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60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체육분야 지원 계획 보고'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김중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 1월경 S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FR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회에 '시니어 건강을 위한 사계절운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S는 위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김종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시 내용대로 예산지원 대상자를 ****협회로 특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을 지원하라고 ◇과 FP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FP는 S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S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시사항을 ◇과장 FS에게 보고하였으나 FS도 S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거나 검토를 하라고 FP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FP가 S의 지시대로 같은 부서 FK에게 ****협회에 연락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은 FK는 ****협회에 ‘시니어 건강을 위한 사계절운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10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사업계획서를 ■과에 전달하였으며, 2016. 3. 2. ■과는 ‘시니어 건강을 위한 사계절운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 보조사업자로 ****협회를 선정하고 100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체육분야 지원 계획 보고’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3)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제한

▼과 과장 FT와 업무담당자 FU는 ‘골프인식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이하 “골프인식 개선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문체부에 보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로 ○○협회 등 6개 단체와 ☹☹에 대해서만 2015. 4. 28. 사업계획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신청을 인지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신청하였던 사단법인 ○○협회가 2015. 12. 4. 50백만 원을 교부받는 등 [표 43]과 같이 모두 4개 단체(연번 1~4번)에 계 210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43]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으로 추진된 2015년 골프인식개선 사업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단체·협회명	보조금액	사업내용	사업의 성격	공지 여부
1	골프대중화를 위한 골프소비자 활동 지원	○○	50	Best/Worst 골프장 선정, 캐디선택제 캠페인, 골프장 식음료값 조사 등	캠페인 및 조사	사전 공지
2	찾아가는 꿈나무 골프체험 교실	(사)○○협회	50	전국 초등학교 찾아가는 골프체험교실, 시민공원 등 순회 SNAG 체험부스 운영 등	체험 교육	
3	골프재능기부 프로젝트 KPGA 아마추어 유소년 골프교실	(사)田田협회	50	KPGA소속 골퍼가 아마추어, 여성 및 유소년 대상 무료 강습	체험 교육	
4	골프대중화 및 인식 개선 사업	(사)日日협회	60	골프대중화 다큐멘터리 제작 및 산업활성화 리포트 방송제작	방송물 제작의뢰	
	소계		210			
5	골프인식 개선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사)日日포럼	10	골프인식 개선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 개최	미공지
합계			220	-	-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또한 FT와 FU는 위 6개 단체 중 하나였던 ☒☒협회가 추천했다는 사유로 당초 지원계획에 없던 사단법인 日日포럼에 '골프인식 개선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10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일관성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공모를 통하여 지원되어야 할 골프인식 개선사업의 참여기회를 특정 단체에만 부여하는 등 공정성이 저해되었으며 본래 마련했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를 지원하는 등 일관성없이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골프대중화 및 인식개선'사업의 경우 사단법인 日日협회가 2016. 12. 23. 사업추진 1년만에 예산 집행 및 정산 방식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골프인식 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4)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부적정

가. S의 경우

문체부 대한민국예술원 ■장 S는 2015. 5. 18.부터 2016. 11. 10.까지 ●관의 직위에서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 기금 지원계획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그런데 S는 2016. 1월경 제2차관실에서 제2차관 김종으로부터 김종과 친분이 있는 ●●대학교 F학부 교수 FQ를 소개받고, 스포츠클럽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FQ에게 연구용역 1억 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2인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지원할 경우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거나 부당하다는 의견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과 FP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예산 지원 대상자를 FQ로 특정하여 연구용역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FP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FQ에게 연구용역을 줄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연구용역 예산이 없으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FP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연구용역의 예산 100백만 원 중 해외 자료 수집예산 40백만 원을 삭감하여 FQ(●●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예산 6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S는 ■과가 2016. 3. 2. ‘K-스포츠클럽 운영개선방안 연구’ 보조사업자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60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2016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체육분야 지원 계획 보고’ 전자문서에 ●관으로 결재한 뒤 ▲실장 X, 제2차관 김종, 장관 김종덕에게 위 전자문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등 김중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이행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회에 2인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K-스포츠클럽 운영개선방안 연구’ 등 2개 사업(160백만 원)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중 일정한 범위 없이 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전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 기금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나. X의 경우

문체부 ■실장 X는 2015. 3. 13.부터 2016. 4. 3까지 ▲실장의 직위에서, 2016. 4. 4.부터 2016. 12. 29.까지 ■실장의 직위에서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 기금 지원계획 업무 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X는 ■과가 전자문서로 기안한 ‘2016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체육분야 지원 계획 보고’(2016. 3. 2.)를 검토하면서 2인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K-스포츠클럽 운영개선방안 연구’ 보조사업자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되었는데도 ■과에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과장이 알아서 잘 챙겼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뒤 전자문서에 그대로 결재하였고 제2차관 김중, 장관 김종덕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는 등 ■과에서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여 기안한 전자문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결재하였다.

그 결과 ◇과는 이를 근거로 2016. 3. 14.과 같은 해 3. 22.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특정 단체에 160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김종의 경우

▽▽대학교 ←학과 교수 김종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1까지 문체부 제2차관의 직위에서 공익사업적립금·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지원계획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그런데 김종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 1월경 ●관 S를 제2차관실로 불러 자신과 친분이 있는 ●●대학교 ㄱ학부 교수인 FQ를 소개시켜 주면서 FQ에게 연구용역 (100백만 원)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인이 소속한 단체나 지인을 특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S는 지시 내용을 ◇과 등 사업 담당자로 전달하였으며, ■과와 ◇과는 이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위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단체에 ‘K-스포츠클럽 운영개선방안 연구’ 등 2개 사업(160백만 원)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중 일정한 범위 없이 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전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 기금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4. 기획재정부 예산(기금)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에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 사업비를 사용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기금관리주체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아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로 삭감된 사업에 집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는 2015. 8. 20.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편성 심사 시 기획재정부에 ‘스포츠기자 글로벌화사업’ 사업비 100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같은 해 8. 26.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스포츠기자 해외연수사업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기금 심사 과정에서 위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2016. 3. 2. 기획재정부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의 세부적인 내역 편성까지는 관여하지 않아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예산으로 ‘스포츠기자 글로벌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9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5.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정산업무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III. 보조사업자별 정산 세부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정산할 때 보조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주기(예를 들어 정산제출 기한인 60일째 되는 날 전후, 그 이후 30일마다)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문서로 독촉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는 등 정산 확정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여러 차례 정산보고서 제출 독촉 문서를 무시하고 장기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지,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반납금액 확정 등 회계책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산을 기한(60일)내에 확정하고 있는지, 정산 증빙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문서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정산 확정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 장기간 정산 확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 문화예술분야의 170여 개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기금사업에 대하여 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기금사업의 정산업무를 적정히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별표 2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미정산 명세”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2016. 3. 31.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사업’(270백만 원, 사업기간: 2015. 4. 1.~2016. 3. 31.)을 종료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2017. 1. 9. 현재 까지 7개월 동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서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면 보조사업자가 싫어한다는 등의 사유로 주로 유선으로만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사업종료 5개월 후 2016. 8. 19. 독촉 공문 1회 발송)하였고, 교부결정도 취소하지 않는 등 13개 사업이 종료 후 2017. 1. 9. 현재까지 6~12개월 동안 정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① 2018년 예산 편성 시부터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의 6개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국회의 예산 편성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중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고 집행과 관련한 지원 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며, ② 향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여 부적절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③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 심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스포츠기자 글로벌화사업’은 2017년부터 폐지하였고, ④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주체이자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산을 완료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보조금 삭감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더불어 정산 확정 지연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주기적인 교육 및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 발송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민간단체나 개인을 특정하여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예산을 지원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FT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FT는 이 건 행위와 ‘3-(3) ㉣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6번 참조]

※ S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및 정산업무 부적정’, ‘3-(3) ㉣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및 관련 규정 불합리’,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5번 참조]

※ X는 이 건 행위와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및 정산업무 부적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2번 참조]

※ 김중은 이 건 행위와 ‘1-(3)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지원 부적정’,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1) 예산외 재정인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3) (주)따따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3-(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등 부당지원 및 관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보(인사자료)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②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의 편성내역을 구체화하고, 수시 지원사업 성격의 예산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에 대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④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 사업 편성내역을 구체화하고, 수시 지원사업 성격의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보조사업자가 장기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이라 한다)의 발행사업을 승인하는 등 투표권 발행사업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에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계약을 의뢰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은 2015. 4. 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5. 4. 6. □□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수탁 세부이행조건’(이하 “세부이행조건”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업자 □□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한 □□ 빙상경기 실업팀(이하 “빙상단”이라 한다)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사업비 사용범위를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 경기의 홍보 등 투표권 발행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는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감독권 행사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했고, 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가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와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시할 때에는 위법성 유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지시인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문체부가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인 ㉡㉡가 운영할 빙상단의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빙상경기는 투표권 발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표권 발행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는 위탁사업비로 빙상단을 창단·운영할 수 없는데도 문체부는 2015. 12. 15. ㉢㉢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으로 보전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2. 17. 감독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 빙상단을 운영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 위탁사업비로 투표권 발행 대상이 아닌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문체부 지시를 거부하여야 했는데도 2015. 12. 21.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에서 실비로 보전해준다는 문체부 방침에 따라 ㉢㉢에 빙상단을 창단하도록 요청하였고,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2017년 3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위 지시사항 이행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5. 23. 서울지방조달청과 협의한 결과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은 기존 과업에서 벗어나고 ㉢㉢가 빙상단을 운영하므로 위탁계약 변경(수정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울지방조달청 의견과 다르게, 같은 해 5. 24. 문체부에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할 경우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위 협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체부는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에 없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위탁계약 주체인 서울지방조달청에 문의하지 아니한 채 2016. 7. 4. 제2차관 김종 등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하여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내부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8. 23.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하여 ㉠㉠가 운영하고 있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위탁운영비율지정 정산방법론 및 위수탁세부이행조건’ 변경(안)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하였고, 문체부는 같은 해 10. 10. 위 변경(안)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년도에 ㉠㉠ 빙상단 창단 운영비(정산결과 34.4 억여 원)를 지원한 금액만큼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이 감소되었고, 2016. 1. 12.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빙상단을 운영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문체부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FV의 경우

문체부 ○관실 □과 FV는 2013. 12. 13.부터 2015. 8. 24.까지 ▲실 ■과에서, 2015. 8. 25.부터 2015. 12. 31.까지 ▲실 ▼과에서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FV는 2015. 8. 13. ●관 S를 통해 ㉠㉠가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하겠다는 김중의 의견을 전달받았고, 같은 해 10. 23. 과장 FT로부터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S를 통해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김중의 의중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FV는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가 위탁사업비로 빙상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 운영할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FV는 ㉠ 빙상단 창단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15년 10월 말경 국민체육진흥공단에 ㉠ 빙상단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여 같은 해 11. 30.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 빙상팀 창단 계획(안)’을 받았고, 위 계획(안)을 바탕으로 2015. 12. 15.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 관련 검토 보고’를 작성하여 FT와 S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 검토보고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FT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과 과장 FT는 2014. 1. 7.부터 2015. 12. 27.까지 문체부 ▲실 ▼과 과장의 직위에서 스포츠 산업 진흥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5. 9. 1. 투표권 발행사업을 ■과로부터 이관받아 2015. 12. 27.까지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FT는 2015. 10. 23. FV에게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12. 15. FV로부터 수탁사업자가 빙상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 관련 검토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FT는 ㉠에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거나 부하직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FT는 ㉨㉨에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직접 검토하거나 FV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5. FV가 작성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 관련 검토 보고’를 김종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FW의 경우

문체부 ●관실 ▼과 FW는 2016. 1. 1.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FW는 2016. 4. 15.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 검토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수탁사업자의 신규 스포츠팀 창단은 위탁의 본질적 사항이 아닌 수탁사업자가 자사 경영환경에 맞춰 결정할 사항이고, 운영 시 비용증가도 수탁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사항이므로 계약변경(계약금액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지방조달청의 의견이 포함된 ‘기흥빙상단 운영비 지급방안 검토 보고’를 작성하였다.

한편 FW는 2016. 5. 24.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위수탁세부이행조건 변경을 통한 선수단운영비 정산방법 변경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 합의로 가능하다”는 서울지방조달청의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FW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위 서울지방조달청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에 없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위탁계약 주체인 서울지방조달청에 직접 문의하여 위탁계약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FW는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에 없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위탁계약 주체인 서울지방조달청에 직접 문의하여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7. 4. ●관 S에게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 방법으로 ‘투표권사업 위수탁 세부이행조건 변경’을 하여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하여 내부 승낙을 받았고 그 사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4) FX의 경우

문체부 ●관실 ▼과 과장 FX는 2016. 6. 13.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직위에서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FX는 2016. 7. 4. FW로부터 “위탁운영비 증가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위탁 계약변경에 해당되나 위탁운영비 증가에 따른 논란 및 조달청 반대(빙상단 운영이 □□의 필수 사업은 아니므로 계약변경 불가) 입장 등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투표권사업 위수탁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받았다.

한편 위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에 따른 위탁운영비 증가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위탁계약변경에 해당되나 서울지방조달청이 빙상단

운영은 투표권 발행사업의 필수 사업이 아니므로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에 따른 위탁운영비 증가 때문에 위탁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위탁계약을 변경하여 빙상단 창단·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체결된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하여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X는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에 없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FW의 보고가 빙상단 운영은 투표권 발행사업의 필수 사업이 아니므로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에 따른 위탁운영비 증가 때문에 위탁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서울지방 조달청의 의견과 상충되므로 위 상충되는 문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FW 등에게 위 상충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FX는 2016. 7. 4.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에 없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FW의 보고가 빙상단 운영은 투표권 발행사업의 필수 사업이 아니므로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에 따른 위탁운영비 증가 때문에 위탁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서울 지방조달청의 의견과 상충되는데도 이를 다시 검토하지 않고 FW 등에게 위 상충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하급자인 FW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김종에게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급 방법으로 ‘투표권사업 위수탁 세부이행조건 변경’을 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5) S의 경우

대한민국예술원 ■장 S는 2015. 5. 18.부터 2016. 11. 10.까지 문체부 ●관 직위에서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S는 2015. 8. 13. □□가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면 좋겠다는 김종의 지시 내용을 FV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해 12. 15. FV로부터 수탁사업자가 빙상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추가 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 관련 검토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S는 □□에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부하직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S는 □□에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FV 등 부하직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5. FV가 작성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 관련 검토 보고’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6) 김종의 경우

김종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1.까지 문체부 제2차관 직위에서 근무하면서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김중은 2015년 7월 이후 ●관 S에게 ㉠㉠가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토록 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12. 15. 과장 FT로부터 수탁사업자가 빙상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관련 검토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김중은 ㉠㉠에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부하직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중은 ㉠㉠에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FT 등 부하직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5.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관련 검토보고’를 받고 승낙하였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FY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 ■실 과장 FY는 2010. 8. 20.부터 2017년 3월 현재 까지 위 공단 위 직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 ㉨에 빙상팀 창단 협조 부담 요청

FY는 2015. 12. 15. FV로부터 수탁사업자가 빙상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추가비용 보전 및 경영 자율성 제고 관련 검토 보고’를 이메일로 받았고 같은 해 12. 17. 문체부로부터 “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등을 통한 강릉 연고 빙상팀 창단 등의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빙상팀 창단에 관한 협조 요청’ 전자문서를 받았다.

따라서 FY는 ㉨가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부당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FY는 ㉨가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1. ‘빙상팀 창단에 관한 협조 요청’ 전자문서를 팀장 FZ, 실장 GA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고 ㉨에 발송하였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서울지방조달청 의견과 다르게 내부 보고

FY는 2016년 5월 중순경 서울지방조달청 GB에게 ㉨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전하게 되었는데 수정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GB로부터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은 기존 과업에서 벗어나고 ㉨가 빙상단을 창단하는 것이므로 수정계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FY와 팀장 FZ는 2016. 5. 23. 서울지방조달청에 방문하여 서울지방조달청 GC, GB와 함께 ㉨ 빙상단 창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면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C는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빙상단 추가에 대한 언급 없이 선수단운영비 정산방식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당초 계약된 선수단운영비 내에서 선수단 운영비 지급방식 변경은 위수탁 세부이행 조건 변경 사항이니 변경 후 조달청에 통보 해 주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FY는 2016. 5. 24. GC가 답변한 ‘당초 계약된 선수단운영비 내’라는 언급을 누락한 채 “위수탁 세부이행조건 변경을 통한 선수단운영비 정산방법 변경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 합의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투표권사업 관련 서울지방조달청 협의결과 보고’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팀장 FZ의 결재를 받았고 실장 GA에게는 구두로 보고하였다.

(2) FZ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 ■실 팀장 FZ는 2015. 9. 1.부터 2017년 3월 현재 까지 위 공단 위 직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 ㉨에 빙상팀 창단 협조 부당 요청

FZ는 2015년 11월 하순경 문체부 ●관 S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 본부장 IE에게 전화하여 ㉨가 빙상단을 창단하고 강릉 빙상장을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 이라는 것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2. 17. 문체부로부터 “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등을 통한 강릉 연고 빙상팀 창단 등의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빙상팀 창단에 관한 협조 요청’ 전자문서를 받았다.

따라서 FZ는 ㉠㉠가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거나 담당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위법·부당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FZ는 ㉠㉠가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거나 FY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1. FY가 기안한 ‘빙상팀 창단에 관한 협조 요청’ 전자문서에 중간 결재한 뒤 실장 GA에게 위 전자문서를 상신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서울지방조달청 의견과 다르게 문체부에 통보

FZ는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방법과 관련하여 FY로부터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은 기존 과업에서 벗어나고 ㉠㉠가 빙상단을 창단하는 것이므로 수정계약이 어렵다’는 서울지방조달청 의견을 들었다.

또한 FY, FZ는 2016. 5. 23. 서울지방조달청에 방문하여 서울지방조달청 GC, GB와 함께 ㉠㉠ 빙상단 창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C는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빙상단 추가에 대한 언급 없이 선수단운영비 정산방식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당초 계약된 선수단운영비 내에서 선수단 운영비 지급방식 변경은 위수탁 세부이행조건 변경 사항이니 변경 후 조달청에 통보해 주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FZ는 2016. 5. 24. GC의 답변과 다르게 ㉨ 빙상단 운영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위수탁 세부이행조건 변경을 통한 선수단운영비 정산방법 변경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간 합의로 가능하다”고 문체부 FW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는 서울지방조달청 의견과 다르게 2016. 7. 4. 위탁계약 변경 없이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에 없는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GA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 ■실 실장 GA는 2015. 9. 1.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GA는 2015년 11월 하순경 문체부 ●관 S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 본부장 IE에게 전화하여 ㉨가 빙상단을 창단하고 강릉 빙상장을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2. 17. 문체부로부터 “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등을 통한 강릉 연고 빙상팀 창단 등의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빙상팀 창단에 관한 협조 요청’ 전자문서를 받았으며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GA는 ㉨가 빙상단을 창단·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거나 부하직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1. ‘빙상팀 창단에 관한 협조 요청’ 전자문서에 최종 결재하였다.

그 결과 ㉨는 2016. 1. 12. 빙상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투표권 발행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관리규정 불합리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로부터 투표권 발행사업 매출액에서 환급금과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넘겨받아 기금에 출연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기금의 운용을 위탁받아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투표권 발행사업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 제67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구분된 자금운용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 20.까지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는 매년 5. 30.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한 복권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복권매출액 등 복권판매 수입은 기금수입계획으로, 위탁사업비 등은 기금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며 그 변경사항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권판매사업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그 변경 사항을 기획재정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유는 재정통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기금 전체에 적용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II. 기금수입에 따르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은 기금수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가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금수입 및 지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환급금과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수입금 금액만큼만을 매년 기획재정부 등의 통제를 받는 기금수입계획(기타영업외수익)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위 위탁사업비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통제 없이 투표권 관련 위탁사업비를 부처 자율적으로 운용해 왔는바, 2015년 7월 수탁사업자가 변경(5년 단위로 변경)된 후 2016년 위 위탁사업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이 건 관련 문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1) □□ 빙상단 창단·운영은 ‘동계종목 진흥’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문체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이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 창단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위탁계약 변경 없이 부수적인 세부이행조건만을 변경하여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에서 보전하도록 승인한 것은 위탁계약 주체인 서울지방조달청 의견에 따른 것이며 위탁계약 변경 없이 세부이행조건만 변경하여 보전이 가능하다는 법률 및 회계 법인의 자문 결과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3) 그리고 복권판매사업 운영방식과의 차이점,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체부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의 경우 □□ 빙상단 창단·운영은 ‘동계종목 진흥’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도 법령을 준수하여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서 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빙상경기 실업팀 지원사업은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하므로 준정부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비로 빙상단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2)의 경우 서울지방조달청은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이 위탁계약 과업에서 벗어나고 〇〇가 빙상단을 창단하는 것이므로 위탁계약 변경이 불가능하고 추가적인 비용(2016년도 34억여 원)이 발생한다면 세부 이행조건계약만 변경하여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여 문체부 답변과 상반되고, 문체부는 내부 보고 과정(2016. 7. 4.)에서 빙상단 운영은 투표권 발행사업의 필수 사업이 아니므로 위탁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지방조달청의 의견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위탁계약 금액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위탁계약에 없는 사항으로 새로운 과업에 따른 추가 비용(2016년도 34억여 원)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만큼 위탁계약 금액이 변경되므로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부수적인 세부 이행조건계약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문체부의 답변과 같이 법무 및 회계 법인 자문 결과도 위탁계약 주체인 서울지방조달청의 의견과 상반되며,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원이 법령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결과이나 빙상단 창단 운영비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고 투표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므로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계약 및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하여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1) 수탁사업자의 빙상단 창단·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 위탁운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동계종목 활성화라는 정부정책, 수탁사업자의 선수단 운영 전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계약 주체인 서울지방조달청 의견에 따라 세부 이행조건을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세부이행조건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 간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점, 계약금액은 예상금액이지 최종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이행조건 변경을 통한 선수단운영비 정산방법 변경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한다.

(3) 그리고 세부이행조건의 선수단운영비 정산방법 변경으로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선수단운영비가 증가한 사실이 있으나 ㉢㉢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감소와 관련이 없고 ㉢㉢에 일체의 이윤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답변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의 경우 ㉢㉢ 빙상단 창단·운영이 ‘동계종목 활성화’을 위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현 수탁사업자의 선수단(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은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자문 결과에서도 빙상단의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표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활동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의 경우 서울지방조달청은 빙상단 창단 운영비 보전은 위탁계약 과업에서 벗어나고 ㉢㉢가 빙상단을 창단하는 것이므로 위탁계약 변경이 불가능하고 추가 비용(2016년도 34억여 원)이 발생한다면 세부이행조건만 변경하여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답변과 상반되고, 위탁계약 금액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위탁계약에 없는 사항으로 새로운 과업에 따른 추가 비용(2016년도 34억여 원)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만큼 위탁계약 금액이 변경되므로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체결된 세부이행조건을 변경하여 위탁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의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선수단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이 감소되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 빙상단 창단 운영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빙상단을 운영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주식회사 ㉢㉢ 빙상경기 실업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될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으로 그 비용을 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를 초래한 FV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6번 참조】

※ FT는 이 건 행위와 ‘3-(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6번 참조]

※ S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1) 예산외 재정인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 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위법·부당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5번 참조]

※ 김중은 이 건 행위와 ‘1-(3)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지원 부적정’,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등 부당지원 및 관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보(인사자료)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② 앞으로 주식회사 ㉨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보전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항목에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④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수탁 세부이행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주식회사 ㉨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승인하는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⑤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주식회사 ㉨㉨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를 초래한 FY와 FZ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규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16번 참조】

②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주식회사 ㉨㉨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등 부당 지원 및 관리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영재센터로부터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사업²³⁷⁾의 보조금 지원 요청을 받아 공익사업적립금²³⁸⁾을 지원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영재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²³⁹⁾을 교부 및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44] 영재센터에 대한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지원 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교부 승인 내역		재원
			세부사항	지원액	
2015년	동계스포츠 영재 캠프 (빙상)	2015. 9. ~ 11. 30.	빙상 캠프	40,000,000	공익사업적립금
2015년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5. 12. ~ 2016. 3.	제1회 스키 캠프 및 선발대회	119,600,000	주최단체지원금
			제2회 빙상 캠프	80,100,000	
			소계	199,700,000	
2016년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6. 7. ~ 12. 1.	설상 심화 프로그램	150,730,000	주최단체지원금
			빙상 심화 프로그램	133,404,000	
			제3회 빙상 캠프	78,000,000	
			소계	362,134,000	
-	-	-	계	601,834,000	-

주 1. 2015년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2015. 10. 22. 영재 심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장관 결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 18. 캠프운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보조금 교부 승인

2. 2016년 사업은 2017년 1월 감사일 현재 보조금 정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정산에 대한 부분은 감사범위에서 제외함

3. 2016년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2016. 7. 7. 제2회 스키 캠프 115,000,000원을 포함하여 교부 승인하였으나,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2. 1. 교부 취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237) 우수한 동계스포츠 영재를 조기에 선발 및 육성하여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캠프를 통해 선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구성되어 있음

238)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문화체육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배분된 금액

239)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을 통해 유소년스포츠 및 프로·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를 수행

그런데 감사원이 문체부의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업무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문체부는 [표 44]와 같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재원으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며, 영재센터는 실제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 자부담 집행분을 집행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금 지원업무 부당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4조 및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적립금을 지원하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민간보조사업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적립금은 체육·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고,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서로 유사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5년 6월말경 제2차관 김종이 영재센터를 특정하여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 공모절차 없이 재원을 달리하여 지원하였

는바, 2015. 8. 17.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 원²⁴⁰⁾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9. 7. 교부 승인하고, 같은 해 10. 22. 위 지원실적을 기초로 다시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2억 원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12. 18. 교부 승인하는 등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지원하였다.

[영재센터의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사업이 하나의 사업인 근거]

- 문체부 △과는 2015년 6월말경 제2차관 김종으로부터 ‘영재센터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7.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동에 있는 문체부 서울 사무실에서 영재센터 이사 GD 등과 만나 사업설명을 들은 이후
 - 2015. 8. 17. ‘동계스포츠 유망주 발굴·육성 사업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동계스포츠 영재 캠프(빙상) 사업에 4,000만 원(공익사업적립금)과 심화 프로그램에 2억 원(주최단체지원금)을 함께 지원하기로 장·차관에게 보고하는 등 캠프사업과 심화 프로그램을 연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지원을 결정
- 그리고 △과는 2015. 10. 22. 수시 지원사업으로 영재센터의 ‘동계스포츠 빙상 영재 심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장관 김종덕에게 올려 결재를 받았으나
 - 2015. 12. 18. 영재센터에서 “제1회 스키 캠프 및 제2회 빙상 캠프”로 당초 장관의 결재를 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재 발굴·육성프로그램은 사실상 연계된 하나의 사업임을 인정하여 △과 과장 전결로 변경된 사업내용을 승인
- 또한 2016. 3. 11. △과는 2016년 영재센터의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부사업인 제2회 스키 캠프, 제3회 빙상 캠프, 설상 심화 프로그램, 빙상 심화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업으로 주최단체지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과에 제출하여 같은 해 3. 22. 영재센터에 대한 보조금 4억 7,700만 원 지원계획을 확정
- 이와 같이 영재센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는 영재센터의 캠프사업과 심화 프로그램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 결과 사업수행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단체인 영재센터에 2015년에 공익사업적립금 및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계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16년에도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3억 6,213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계속해서 2017년 7억 5,000만 원, 2018년 15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었다.

240) 2015. 5. 11. 홍보명목으로 시행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7,000만 원을 장관결재로 확보해 둔 상태

3.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GE의 경우

문체부 ◇실 ♣관 ■과 과장 GE는 2015. 3. 23.부터 2017. 2. 2.까지 ▲실 □관 △과 과장의 직위에서 영재센터의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승인²⁴¹⁾하였다.

GE는 김중이 2015년 6월말(날짜 모름) ‘영재센터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영재센터라는 단체를 특정하여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김중에게 재 검토 등을 건의하지도 아니한 채 공모절차 없이, 2015. 8. 17. “동계스포츠 유망주 발굴·육성 사업계획(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재센터의 캠프사업 및 심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더욱이 GE는 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캠프사업 4,000만 원은 공모를 피할 수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심화 프로그램 2억 원은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다른 재원인 주최단체지원금²⁴²⁾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GE는 위 보고서대로 2015. 9. 7. 영재센터의 제1회 빙상캠프 사업에 4,000만 원의 공익사업적립금을 교부 승인하고, 이 지원실적을 기초로 같은 해 10. 22. 영재센터의 “동계스포츠 빙상 영재 심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장관 결재를 받은 이후 같은 해 12. 18. 주최단체지원금을 교부 승인하는 등 캠프와 심화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공익사업적립금 및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으로 나누어 편법 지원²⁴³⁾하였다.

241) △과 과장으로서 보조금 지원 승인업무 담당

그리고 GE는 2016. 3. 11. 2016년 영재센터의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부사업들²⁴⁴⁾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계속사업으로 한 후 ■과에 제출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보조금 4억 7,700만 원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한편 GE는 2015. 10. 26. 김종으로부터 “동계종목 유망주 발굴·육성 및 은퇴 선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을 받고 2016년 5억 원, 2017년 7억 5,000만 원, 2018년 15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 예산이 영재센터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GF의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장 GF는 2015. 4. 27.부터 2016. 11. 10.까지 각각 ▲실 □관의 직위에서 영재센터의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²⁴⁵⁾하였다.

GF는 2015. 8. 17. ‘동계스포츠 유망주 발굴·육성 사업계획(안)’ 보고서를 △과 GG에게 보고받을 때 위 사업이 김종의 관심사업이라는 것도 보고받았으므로 차관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를 특정하여 지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GF는 하급자인 과장 GE가 직접 김종으로부터 영재센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지원방안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체육협력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관으로서 영재센터에 보조금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했다.

242) 기금사업의 세부 집행내역 없이 편성되어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사업이 발생하였을 때 재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243) 이후 △과는 2016. 3. 11. 캠프와 심화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최단체지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2016년도 계속사업으로 반영

244) 제2회 스키 캠프, 제3회 빙상 캠프, 설상 심화 프로그램, 빙상 심화 프로그램

245) □관으로서 △과, *과, **과에서 발생하는 체육업무 총괄

그런데 GF는 김중의 지시에 따라 △과가 영재센터를 특정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재센터 지원 방안을 그대로 묵인하였다.

그리고 GF는 사업수행 경험이 없는 영재센터에 2억 4,000만 원을 공모절차 없이 한번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2항”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3) 김중의 경우

김중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1까지 문체부 제2차관의 직위에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계획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였다.

그런데 김중은 2015년 6월말(날짜 모름) 위 GE에게 ‘영재센터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영재센터라는 단체를 특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GE 등 문체부 실무자들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재검토 등을 건의하지도 아니한 채 위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2항”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4. 공익사업적립금 및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환수업무 처리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적립금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하여 보조사업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공익사업적립금 정산 부적정

동계스포츠 영재캠프(빙상) 사업 「공익사업적립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미집행한 경우 그 비율만큼 지원금 교부결정액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부담액을 허위 집행한 경우에는 이를 미집행한 비율만큼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액을 취소하여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영재센터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영재센터는 주식회사 * *이 보조사업 관련 행사 진행 등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미디어 광고 및 홍보 명목으로 자부담 집행분 중 5,720,000원을 허위 지출²⁴⁶⁾하는 등 [별표 25] “공익사업적립금 자부담분 불인정 명세”와 같이 자부담분 7,015,2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6) 2016년 11월 문체부가 영재센터와 관련하여 장시호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그런데도 문체부는 영재센터가 2016. 6. 7. 제출한 정산내역²⁴⁷⁾을 그대로 인정하여 같은 해 6. 27. 정산완료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는 영재센터에서 수행한 동계스포츠 영재캠프(빙상) 사업과 관련하여 14,311,680원²⁴⁸⁾만큼 보조금을 부족하게 환수하였다.

2)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정산 부적정

문체부는 주최단체지원금 지원은 직접 승인하고 교부 및 정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사업 「주최단체지원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취소하여 취소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미집행한 경우 그 비율만큼 지원금 교부 결정액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영재센터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6. 1. 19. 영재센터는 보조금 중 지도자수당을 2,400,000원 과다 지급²⁴⁹⁾하는 등 2,412,944원²⁵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자부담분 중 주식회사 * *이 보조사업 관련 행사진행 등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빙상캠프 행사진행 및 운영, 스키캠프 제작물 및 디자인 등 명목으로 51,600,000원을 허위 지출²⁵¹⁾하는 등 [별표 26] “보조금(주최단체

247) 2016. 3. 8. 영재센터가 최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을 거쳐 같은 해 6. 7. 수정본 제출

248) 환수액 = 교부액 × (자부담 집행액 - 자부담 실집행액) / 자부담 집행액 - 기반납액 = 교부액 × 자부담 미집행비율 - 기반납액 = 40,000,000원 × [30,000,000원 - (26,098,230원 - 7,015,280원)] / 30,000,000원 - 88,320원 = 40,000,000원 × 36% - 88,320원 = 14,311,680원

249) 스키캠프 지도요원 12명에 대해 200,000원씩 과다 지급

250) 기간 외 집행분 12,944원 포함

지원금) 자부담분 불인정 명세”와 같이 자부담분 54,976,92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영재센터가 2016. 9. 26. 제출한 정산내역²⁵²⁾을 그대로 인정²⁵³⁾하여 같은 해 10. 12. 정산완료하였다.

그 결과 영재센터가 수행한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20,235,944원²⁵⁴⁾만큼 보조금을 부족하게 환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재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민간보조사업 등을 위반하여 공모절차 없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GE 및 GF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8번 참조】

251) 2016년 11월 문체부가 영재센터와 관련하여 장시호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

252) 2016. 5. 30. 영재센터가 최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을 거쳐 같은 해 9. 26. 수정본 제출

253) 문서로 정식 접수한 이후 담당자간 연락을 통해 정산내역서 일부 수정

254) 환수액 = 보조금분 불인정액 + 자부담분 취소액 = 보조금분 불인정액 + 교부액 × (자부담 집행액 - 자부담 실집행액) / 자부담 집행액 - 기반납액 = 보조금분 불인정액 + 교부액 × 자부담 미집행비율 - 기반납액 = 5,462,944원 + 199,700,000원 × [102,900,000원 - (96,783,688원 - 54,976,920원)] / 102,900,000원 - 3,050,000원 = 5,462,944원 + 199,700,000원 × 59%(미집행비율) - 3,050,000원 = 120,235,944원

※ 김중은 이 건 행위와 ‘1-(3)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지원 부적정’,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및 정산업무 부적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 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주)ㄷㄷ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보(인사자료)함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 ②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부담을 미집행한 분에 대하여 동계스포츠 영재캠프(빙상) 사업 「공익사업적립금 교부조건」에 따라 산정한 환수대상액 14,311,680원을 환수하고,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부터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사업 「주최단체지원금 교부조건」에 따라 산정한 환수대상액 120,235,944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1년부터 매년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공헌한 체육인들의 경험을 보전·계승할 목적으로 스포츠영웅을 선정·홍보하도록 하고 이들의 경험과 현장기록들을 구술채록과 영상물로 제작하는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체육회가 구술채록·영상(출판)물 제작과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스포츠영웅 전자홍보관) 구축 등 내역사업을 추가하여 별도로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²⁵⁵⁾ (2015년 13억, 계속사업)을 신설·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문체부는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2015. 4. 21. 최종 승인하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한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스포츠영웅 선정사업’과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해 2015. 10. 30.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 처분을 하였고, 2016. 1. 8.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사업중단 조치를,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

255)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4년 6월 최초로 기획재정부에 동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국회로부터 ‘스포츠영웅 선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지원(단위사업)-대한체육회 운영지원(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승인을 받았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체부 훈령인 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구체적인 처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전승인 없이 보조금을 용도외로 집행한 경우 등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 이전에 위반사실의 중대성과 명백성, 처분선례, 처분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 반환 등 위반 행위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체부는 2015. 10. 30. 대한체육회가 2015. 4. 21.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집행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체부가 부가한 “사전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 출장여비를 다른 사업인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에서 선정한 스포츠 영웅 사진전시회에 참석하는데에 집행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015. 11. 19.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주장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6. 1. 8. 사업승인 전에 집행한 계약직 직원 인건비 등 일부만 수용하고 거의 당초 처분 내용 그대로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입찰진행 등 사전협의 미이행, 출장여비 용도외 집행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3억 9백만여 원 반환과 2016년 사업 중단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문체부가 주장하는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규정 위반사실들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1) “사전협의 미이행” 관련

대한체육회가 2015. 6. 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을 수행하면서 문체부에 사업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문체부는 ‘사전협의 미이행’ 위반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시킨 처분선례가 없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2015. 4. 21.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다른 보조사업에 부가하는 일반적인 교부조건²⁵⁶⁾ 외에 “입찰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문체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진행”을 하도록 별도 교부조건을 부가하였으나 대한체육회가 2015. 4. 21.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내역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문체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교부조건 위반 및 보조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부당하게 판단한 후 위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다.

2) “출장여비 용도의 집행” 관련

문체부는 “사업비 용도의 집행”의 경우 단순·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명백히 예산 집행기준을 초과하거나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금액 반환 조치만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과 ‘스포츠영

256) 문체부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을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보조금 집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적시한 교부조건을 부가, 해당 사업의 경우 다른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교부조건 일반사항 8개 항,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각각 8개항 총 24개 항을 실시. 그런데 다른 사업과 다르게 “아카이브 구축, 구술채록 및 영상물 제작 등 입찰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문체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별도의 교부조건을 부가

웅 선정사업' 집행계획 수립 시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에만 출장여비를 편성하여 같이 집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양해를 받은 바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보조금법에 용도의 집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위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다.

위 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체부는 사전협의 미이행과 출장여비 용도의 사용 등의 단순·경미한 위반에 대해 대한체육회 위 2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 처분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재정적 손실 216,172,15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단 해체로 계약직 직원(2명)이 실직하였으며, 대한체육회의 구술채록·영상물제작업체에 대한 계약대금 77,500,000원에 대한 지급도 지연(최대 1년)되어 민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자 변경²⁵⁷⁾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용역비(40,500,000원 규모의 전산용역계약)가 활용이 불가하게 되어 낭비되었다.

4. 업무 담당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1) V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4. 27. ■과에 발령받았고 같은 해 9. 1. 같은 과에 근무하는 GH에게서 '스포츠영웅 선정사업'과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인수하였다.

한편 전임자인 GH는 2015. 8. 24. ■과 W로부터 대한체육회의 두 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8. 26. 대한체육회에 공문으

257)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와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체육인 진흥과 지원, 체육역사 발굴 및 확산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대한체육회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문체부는 보조금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계속사업인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

로 요청한 사업 관련 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였고,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임의로 진행하였고, 인건비(사업승인 전 인건비 집행)와 출장여비(스포츠 영웅 사진전시회 개최)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여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진행상황 검토결과 보고”[이하 “검토보고(안)”라 한다]을 작성하여 W에게 보고하고 후임자인 V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V는 GH로부터 인수한 “검토보고(안)”과 사업 관련 서류 일체 외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추가자료를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상급자 W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며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5. 10. 27. 기존의 “검토보고(안)”에서 지적한 위반사실 외에 적발한 문제점들을 추가한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및 스포츠 영웅 선정사업 중간점검 및 정산결과에 따른 처분계획(안) 보고”²⁵⁸⁾(이하 “원처분계획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W와 ■과장 T, ●관 S에게 보고하였다.

V는 위 보고과정에서 자신이 보고한 “원처분계획보고서” 내용대로 조치하도록 승인을 받고서 2015. 10. 30.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원처분계획보고서와 처분통지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은 후 대한체육회에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015. 11. 19. 문체부에 “3-1)-(1)~(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문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검토와 선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58)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조건 위반, 비전문업체와의 계약체결, 인건비 사전집행(16,258천 원), 출장여비 1,972천원 용도외집행,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홍보동영상 제작비 부당 집행, 출장여비(30,000원) 및 사업추진비(865,000원) 용도외집행, 2014년 사전승인 없이 사진전시회 미개최, 1사업 1계좌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15년 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 처분 조치, 반환금액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통보

그러자 V는 2016년 1월 초까지 W와 함께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재검토하면서 사업승인 전 집행한 인건비 등에²⁵⁹⁾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사전협의 교부조건 위반”과 관련된 “3-1)-(1)항”과 같은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임자였던 사업담당 GJ(2014. 9. 1.~2016. 6. 30.)와 GH(2015. 7. 1.~8. 31.), W에게 각각 대한체육회와의 협의 여부를 물었으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자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출장여비를 스포츠영웅 사진전시회 개최 목적으로 집행한 데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는 “3-1)-(2)항”과 같이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보조금법 상 용도외 집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V는 대한체육회의 위반사실을 조사하면서 W와 함께 수시로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와 판단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 주장내용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 “3-2)항”과 같이 대한체육회와 사업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손실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2016년 1월 초경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각하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스포츠역사발굴사업단 보조사업 처분계획” 및 불임자료 “대한체육회 이의제기 검토결과”(이하 “이의신청 검토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는 W와 T의 검토를 거쳐 S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 8. 최종적으로 시행하였다.

259)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사업승인(2015.4. 21.) 전에 집행한 계약직 직원 인건비, ‘스포츠영웅 선정사업’ 출장여비와 사업추진비는 대한체육회 주장 수용

그리고는 V는 2016년 1월경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의 “2015년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2016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8. 9.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6년 사업 집행계획서를 승인하였다.

그 결과 “3-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W의 경우

문체부 ■과 W는 2015. 8. 25. 대한체육회의 사업단이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로 영화를 부당하게 제작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업단 단장 GI에게 전화해 문제제기 및 경위 파악을 하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T와 S에게 보고한 후 GH에게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사업 관련자료 일체를 받아 문제점을 확인하여 후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W는 2015년 9월 초경 이와 같이 GH가 작성한 “검토보고(안)”을 보고받았고, 이를 건네받아 S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2015. 9. 1. 이후 GH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V가 체육단체 통합 등 업무처리로 최종 보고서 기안이 늦어지자 10월 말경 해당 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S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V와 함께 수시로 대한체육회의 위반사실 및 처분기준에 대해 협의·검토하면서 V가 해당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데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 맞으니 그대로 조치하자고 권유 또는 설득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0. 27. V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처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하자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W는 V가 2016년 1월 초경 또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015. 11. 19. 제기한 이의신청 주장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작성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나 확인 없이 그대로 결재하여 “3- 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T의 경우

■과 과장 T는 2015년 10월 말경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V가 “원처분계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자 위반사실의 세부내용, 문체부 처분조치의 필요성, 대한체육회의 반발 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으나 이에 대해 V가 대한체육회의 위반사실이 확실하며 해당 처분에 대해 W가 동의하고 S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하자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후 T는 2016년 1월 초 V가 또다시 작성해서 결재를 요청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보고서”에 대해 담당 실무자인 V와 W가 제대로 검토했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결재하였고, 그 결과 “3-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S의 경우

S는 2015. 8. 25. W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역사 보존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로 영화를 제작하는 등 문제가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그렇다면 들여다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V, W 등 실무자들이 후속보고를 하지 않자 2015년 10월 말경 W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 빨리 처분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V가 “원처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하자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후 S는 2016년 1월 초 V가 대한체육회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작성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결재하여, “3-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2016. 1. 8. 위 사람들이 작성하고 결재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역사발굴사업단 보조사업 처분계획” 등 관련 서류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① 사전협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실무자가 전송한 휴대폰 문자는 술자리 제안에 불과하고, 이메일 전송은 사전협의를 아니라 진행상황 통보에 불과하며, 이메일 본문자료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② 출장여비 용도외사용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출장여비를 ‘스포츠영웅 선정사업’ 목적으로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양해해준 사실이 없고, 보조금법에는 용도외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처분이 전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동 처분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의 재정손실은 인정하나 국고 손실은 없었고 기업피해도 회복되었으며 사업결과물(구술채록·영상물, 아카이브시스템 설계도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사업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문체부는 답변서에 처분 사유에 대해 “3. 1). (1)~(2)”항에서 실시한 주장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① 사전협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5. 6. 5. 문체부 실무자에게 내역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들을 적시한 사업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며 전화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협의를 위해 전화 및 문자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W는 문답에서 이에 대해 협의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문체부가 대한체육회가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시에만 제출했다고 한 서류는 해당 이메일 송수신 표시화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의신청시에 첨부자료 파일 2개만 제출하고 이를 보내지 않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를 보면 “요청하신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어 당시 문체부 담당자가 사업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고 오히려 두 기관 담당자들간에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② 출장여비 용도와 사용과 관련하여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이 출장소요가 있음에도 출장여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 출장목적이 공익성이 높고 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단순히 사업비 변경 승인요청을 누락한 경미한 위반이라는 점, 보조사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체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동 처분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재정손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고손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되고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기관인 점, “3. 2)”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업 관련 업체 등에 피해가 전가된 점, 사업단이 돌연 해체되어 계약직 직원들이 준비없이 실직하게 된 점, 아카이브구축 설계도서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실상 폐기되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부당하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단시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V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2-(3)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9번 참조]

※ W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8번 참조]

※ T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7번 참조]

※ S는 이 건 행위와 ‘1-(1)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3-(2)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3-(3) ㉔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지원 및 관련 규정 불합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5번 참조]

3-(6)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연구과제 보조금 정산 부적정

1. 업무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기술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기반 조성, 인력양성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5. 2. 27. 문체부와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협약을 맺고 같은 해 3. 18.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 주식회사 ○○²⁶⁰⁾가 공동연구기관으로 포함된 ○○ 컨소시엄²⁶¹⁾과 협약을 체결²⁶²⁾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 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연구수당 등은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및 제9항 관련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을 통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260) 주식회사 ○○는 공동연구기관으로 1차 사업기간(2015. 6. 1.~2016. 3. 31.)에 참여하였으며, 연구개발 과제 중 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공연기반 기술개발, 시범콘텐츠 제작 등 담당

261) 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공동연구기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62) 1차 사업기간의 정부지원금 1,021백만 원(총연구개발비 1,458백만 원으로 자부담 437백만 원 포함) 중 주식회사 ○○에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251백만 원임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구참여업체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연구 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①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현물 부담액 부족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동안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GK에게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건비 24,425,100원²⁶³⁾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표 27] “연구 미참여 명세 및 환수대상액 산정내역”과 같이 GK 등 연구원 12명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계 147,628,780원²⁶⁴⁾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142,979,144원²⁶⁵⁾의 환수조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63) 과제 참여율 70% 해당분

264) 정부지원금분 86,569,270원(조형준 등 7명) 및 자부담분 61,059,510원(박상민 등 5명)

265) 환수대상액 =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금액 = 86,569,270원 × 94.629% + 61,059,510원 = 142,979,144원

조치할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및 제9항 관련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주식회사 ○○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개발비 142,979,144원을 환수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7)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 추진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2016년 중소도시와 스포츠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사업기간 3년, 총사업예산 120억, 선정도시 2곳, 국비:지방비 =1:1, 이하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라 한다)²⁶⁶⁾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6. 30. 사업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 용역²⁶⁷⁾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15. 12. 17. 문체부 홈페이지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위한 사전 공고를 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6년 5월 스포노믹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개발원에 후속 연구용역²⁶⁸⁾을 의뢰(연구기간: 2016년 5월~2016년 6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완료하여 2016. 6. 30. 내부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6년 7월경 국립한국문화관 사업이 공모 과열로 중단 되었다는 사유로²⁶⁹⁾ 공모를 통해 스포노믹스 사업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과의 논의를 통해 인구수 등 3단계 기준²⁷⁰⁾에 따라 후보도시를 4곳(강릉시, 충주시, 서귀포시, 광주광역시 서구)으로 축소하였고, 2016. 7. 12. 문체부와 연구책임자는 위 4곳의 후보도시를 명시하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였다.

266) 사업명이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었으나, 2016년 9월경 사업명 변경

267) 2015. 6. 30. 「스포츠도시 선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책임연구자 JB 외 5)

268) 2016년 6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추진방안」(책임연구자 JC 외 4)

269) 문체부는 2016. 5. 3. 국립한국문화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했으나, 공모 과열로 같은 해 6. 24. 사업 수행 중단

270) 1단계: 인구수(50,000~500,000명, 2016년 기준), 2단계: 국제 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또는 유치 여부, 3단계: 공공체육시설 면적 130,000㎡ 이상이고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 이상

이후 문체부는 2016. 10. 25. 후보도시 4곳에게만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6. 12. 9. 평가를 거쳐 같은 해 12. 21. 강릉시와 서귀포시를 선정하였으며, 1년차 사업비 20억 원²⁷¹⁾을 교부하여 2017년 3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2. 보조사업자 선정 범위 축소 관련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는 공모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공모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제한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의 경우 문학관 건축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과열이 예상되는 반면, 스포노믹스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 사업으로 지방비 60억 원을 확보하여야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특성상 신청 대상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스포츠도시 브랜드화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공모 과열의 가능성이 적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공모 과열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스포노믹스 사업 대상지역을 임의로 제한하여 추진함으로써 당초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스포노믹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였다.

271) 당초 1년차 10억 원, 2년차 20억 원, 3년차 30억 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1년차 10억 원, 2년차 10억 원, 3년차 사업비 미정으로 변경 됨

3.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사업의 중복가능성 미검토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및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따르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지급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적 성격 또는 지방재원 보전 성격의 사업 및 국고보조의 실효성이 적은 사업을 국고지원금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보조사업 간의 유사중복 사례 유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노믹스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할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 내용에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이나 문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신청 사업 간에 유사중복 사업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노믹스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할 지침을 수립하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문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①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스포노믹스 세부 사업계획 작성지침을 검토한 결과, 그중 일부인 지역특화 자체 이벤트 기획 및 실행 사업은 지역별 특성화 사업에 해당하여 국고보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²⁷²⁾인데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역 주민 스포츠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정례화 추진 사업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하여 보조금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전국 체육대회 운영’, ‘국제 경기대회 지원’, ‘체육 진흥시설 지원’, ‘전국 체전 시설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 방문객 방문 촉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문체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광도시 사업(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지원)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며,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지원 사업 역시 문체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종합형스포츠클럽육성사업(전국 시·군·구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설립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원)과 사업 내용이 중복²⁷³⁾되는데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다.

② 또한 위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릉시의 경우 [표 45]와 같이 ‘1교 1빙상스포츠 특기적성사업 지원’ 사업은 강릉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사업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고, 한중일 빙상스포츠 아시안시리즈 창설, 2018동계올림픽기념 「강릉빙상 스포츠축제」 개최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지역 이벤트성 특성화 사업임에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272)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273) 이러한 사유로 문체부가 2015. 5. 7. 위 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 정부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다가 2015년 11월경 국회에서 사업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2015. 12. 7. 사업 예산을 문체부 소관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

[표 45] 강릉시 사업계획서 중복 내용

구분	1교 1빙상스포츠 특기적성사업 지원	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상도시 홍보 - 빙상스포츠 체험 확대 및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 빙상스포츠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동계종목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 2018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활용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빙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설치 - 관내 각급 학교 빙상스포츠교실 및 클럽 운영 - 빙상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상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빙상 일일캠프, 빙상 체험 교실 - 스케이트 체험활동

자료: 강릉시 제출자료 재구성

③ 서귀포시의 사업계획서 내용도 검토한 결과 한중일 유소년 축구대회 사업, 유럽 명문구단 초청 제주 국제 유스 축구대회 개최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지역 이벤트성 특성화 사업인데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문체부가 사업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립하고 사업계획서 지침 작성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결과 강릉시와 서귀포시의 신청 사업 내용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수행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4.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미흡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조사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스포노믹스 사업의 추진 시기를 결정할 때 먼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수립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실현 가능한 보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확인한 결과 2016년 신규사업인 스포노믹스 사업은 2016년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개념 및 내용이 없이 추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 7월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이 잠시 중단되고 2016. 10. 19. 재개²⁷⁴⁾ 되기까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대상으로 여전히 지정되어 있는데도 충분한 준비단계 없이 연말(2016년 12월)에 급하게 실시되었다.²⁷⁵⁾

이에 따라 강릉시와 서귀포시는 2016. 12. 21. 사업 수행도시로 선정되었지만, 강릉시의회²⁷⁶⁾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²⁷⁷⁾의 2017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어 2017년 5월 말에 지방비 10억 원 편성안이 의결되더라도 스포노믹스 사업의 1년차 사업기간인 2017년 8월 까지 지방비 10억 원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집행 시한이 촉박한 실정이다.

또한 [표 46]과 같이 강릉시가 스포노믹스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원률이 2016년 초등학교 16%, 2017년 초등학교 27%에 그쳤으며 유치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016년·2017년 지원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스포노믹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 지원률은 더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274)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담당 행정관의 지시로 중단되었던 공모사업 재개

275) ▽과 업무담당자도 당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제2차관 김종도 사업 수행이 늦어진다고 질책하는 상황이었어서 예산이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도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진술

276) 제259회 임시회(2017. 5. 15.~5. 26.)에서 추가경정예산 의결 예정

277) 제351회 임시회(2017. 5. 15.~5. 26.)에서 추가경정예산 의결 예정

[표 46] 2016년·2017년 동계올림픽 1교 1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학교 수	신청 학교 수(비중)	선정된 학교 수
2016년	유치원	38	0(0)	-
	초등학교	37	6(16)	6
	중학교	12	0(0)	-
	고등학교	11	0(0)	-
2017년	유치원	38	0(0)	-
	초등학교	37	10(27)	선정 예정
	중학교	12	0(0)	-
	고등학교	11	0(0)	-

주: 2017. 2. 7. 기준

자료: 강릉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2015. 12. 17. 홈페이지 공고 항목 중 지원대상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 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대상인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 보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위 공고항목을 보면 ‘구분’란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이 표시되어 있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후보도시를 선정한 3단계 기준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위 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과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국립한국문학관 사업과 달리 공모과열의 소지가 적은데도 공모를 제한한 자체에 있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문체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예산중복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의 중복편성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본 사업 중 감사원이 지적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에 해당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지역특성화 산업과 밀접하다고 보기 어렵고, 스포츠 관련 이벤트 및 대회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상 ‘전국 체육대회 운영’, ‘국제경기대회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국 체전시설 지원’ 사업만 지원할 수 있으며, 문체부의 전임 업무 담당자는 사업 시행 전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면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상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문체부는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 예산의 사전사용을 통해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와 서귀포시의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 ② 향후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모를 제한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기타 분야

4-(1)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업무 부당 처리

1. 업무 개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2014. 4. 25. 서울경마공원 지역을 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26억 원을 투입하여 ‘위니월드 조성사업’(사업비 354억 원),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사업비 194억 원)과 ‘승마편의시설 건립사업’(사업비 378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신개념 승마테마파크 조성 추진 기본계획(안)”(이하 “테마파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2014. 4. 25.) 직후 3개 세부사업 중 「승마편의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향후 중·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표 47]과 같이 나머지 ‘위니월드 조성사업’ 및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등 2개 세부사업(총사업비 548억 원)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2014. 6. 27. “위니월드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용역”(이하 “위니월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표 47]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제 추진 내역

세부사업명	위니월드 조성사업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사업비	354억 원	194억 원
사업내용	승마 및 직업 체험시설, 각종 식음료 시설 등 조성	상징조형물, 조경시설물 등 조성
조성지역	경마트랙 내 가족공원 부지	마사회 정문부터 가족공원 출입구까지의 지역
조성면적	117,100㎡	17,200㎡

자료: 마사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마사회는 2015. 11. 24. 위니월드 조성사업의 기본·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계획(안)’(이하 “건설공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16. 2. 12. 부터 같은 해 11. 1. 사이에 건축, 조경 등 각종 공사·용역·구매계약을 발주하였다.

특히 2016. 3. 24. “위니월드 외부 테마환경 연출물 제작·설치용역”(추정가격 80억 원)을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형물(세부 품명번호: ㄴㄷ)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후 주식회사 ***(대표 이사 GM)과 같은 해 5. 25. 계약(계약금액 63억여 원)을 체결하였다.

2.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업무 부당 처리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건축·조경 등 각종 공사·용역·구매계약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마사회의 사업담당자들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N의 경우

GN은 2014. 2. 6.부터 2016. 11. 8.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테마파크 조성사업’²⁷⁸⁾ (사업기간: 2014~2016년, 최종 총사업비: 844억 원, 사업부지: 134,300㎡, 이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된 ㄴ실 ㄷ팀장²⁷⁹⁾과 田단 ‘ㄹ담당’의 직위에서 사업추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는 업무를 주관하거나 사업추진 시 공사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전반을 주관하였다.

278) 2014. 4. 25. 서울경마공원 지역을 레저·관광명소로 만들 목적으로 “신개념 승마 테마파크 조성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승마체험 등 말과 관련된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렛츠런파크 서울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음

279) 2014. 12. 3. 부서명이 ㄹ팀으로 변경되었음

(1) 외부통제절차 미실시

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실시업무 등 부당 처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 및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²⁸⁰⁾에 사업계획서 및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각각 작성·제출한 후 그 검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I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기준에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일사업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사업추진 이전단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세부사업들이 같은 사업 목적 등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했다.

280)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의 수행기관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14년 4월 말경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업무를 총괄한 GN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926억 원(위니월드 조성사업 354억 원+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194억 원+승마편의시설 건립사업 378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도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2014. 4. 25.) 직후 ▲실장 GQ에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3개 세부사업 각각의 규모는 500억 원 미만이므로 이들 사업을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하였다.

또한 GN은 “마사회장(GR)의 재임기간(임기 종료: 2016. 12. 8.)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3개 세부사업 중 ‘승마편의시설 건립사업’은 향후 추진²⁸¹⁾하는 것으로 하고 ‘위니월드 조성사업’ 및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등 2개 세부사업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사업변경 보고한 후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GN은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른다 하더라도 가족공원 부지에 위니월드를 조성함과 아울러 정문부터 위니월드 출입구까지 위니월드 방문 고객의 동선에 따라 위니월드 관련 상징 조형물,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총사업비가 548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²⁸²⁾인데도 사업계획서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지 아니하여 기획재정부 등의 외부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 27. “위니월드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용역”(이하 “위니월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주하도록 하였다.

281) 승마편의시설 건립사업의 사업내용 중 제2승마장 건립만을 남겨 둔 채 사업추진을 취소하였고, 이후 2016. 5. 13. 제2승마장 건립도 해당 사업부지에 마사(馬舍)를 이전 시킨다는 사유(마사에서 나오는 분진, 냄새 등으로 인해 연접해 있는 ‘과천뉴스테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함)로 사업추진을 취소하였음

282)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취소한 승마편의시설 건립사업비 3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548억 원(위니월드 조성사업 354억 원+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194억 원)이 되어 500억 원을 초과함

그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중 ‘위니월드 조성사업’은 [표 48]과 같이 당초 사업비 354억 원보다 333억 원 많은 687억 원으로 30% 이상 크게 증액(94.07%)하는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당초 548억 원(위니월드 조성사업 354억 원+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194억 원)에서 296억 원 많은 844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증액하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한정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사유로 기획재정부 등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표 48] 위니월드 조성사업 사업비 증액 내역

구분		당초(A)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최종(B)	비고(B-A)
변경 시기		테마파크 기본계획 (2014. 4. 25.)	위니월드 기본계획 (2014. 11. 14.)	공사 시행계획 (2015. 11. 24.)	각종 공사 발주 후 (2016. 5. 27.)	각종 공사 발주 후 (2016. 9. 9.)	-
사업비	건설비	354억 원	326억 원	449억 원	492억 원	491억 원	137억 원
	운영집기 등	-	-	38억 원	135억 원	196억 원	196억 원
	합계	354억 원	326억 원	487억 원	627억 원	687억 원	333억 원

자료: 마사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마사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아무런 외부통제를 받지 아니하여 총사업비 결정의 객관성, 투명성 등을 결여한 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²⁸³⁾하게 되었다.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누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마사회는 2015. 11. 24. 위니월드 조성사업의 ‘기본·실시설계에 따라 사업비 487억 원을 들이면 그 조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위 건설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 2. 12. 부터 2016. 2. 19. 사이에 건축, 조경 등 각종 공사를 발주하였다.

283) 마사회는 844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였으나 2016. 10. 28. 위니월드 개장 이후 2017년 1월 말까지 3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검토해 보니 1일 평균 입장객 수가 동절기가 감안된 목표인원 1,767명의 6.1%인 108명에 불과하고, 매월 791백만여 원(매월 매출액 117백만여 원-매월 영업비용 908백만여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니월드의 수탁운영사인 주식회사 xx(대표이사 GO, 위·수탁계약일자: 2016. 5. 12.)는 최근 2개월간 정규직원 60명에 대한 인건비 4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등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100분의 10 이상 증액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이하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GN은 마사회장이 각종 공사의 발주 시점에 ‘일본 테마파크 벤치마킹 출장’²⁸⁴⁾을 다녀온 후 ‘일본 테마파크와 같이 최고 수준으로 조성(이하 “고급화”라 한다) 하라’고 지시하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도 받지 아니한 채 2016년 3월경 田단장 GP와 ▲본부장 GQ에게 “고급화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되 설계변경 금액이 클 경우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일부를 신규 발주 하거나 공사 시행계획에 제외하였던 각종 운영집기 등을 신규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여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마사회는 건축, 조경 등 각종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테마파크 고급화를 사유로 [표 49]와 같이 설계변경하거나 신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 등을 받지 아니한 채 114억 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증액하게 되었다.

[표 49] 위니월드 조성사업비 부당 증액 내역

[부당 증액 방법] 부당 설계변경(114억 원)

- 2015. 4. 2.부터 2016. 2. 19.까지 계약을 맺은 4건의 건축·용역공사(낙찰률 80.07% 미만)의 경우 고급화를 위한 각종 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해 당초 계약금액(계 27,007백만여 원)보다 42.3%에 해당하는 11,431백만여 원을 증액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7번의 설계변경으로 계 10,500백만여 원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105건의 계약을 발주하여 계 931백만여 원을 증액
- 특히 지하보차도 구간에 대한 공사의 경우 2015년 공사시 127백만여 원을 들여 지하차도 바닥부분의 포장공사를 실시하고도 2016년도에 신규로 74백만여 원을 들여 같은 공사를 중복실시한 사실도 확인

자료: 마사회 제출자료 재구성

284) 인원: 마사회장 GR, 田단장 등 총 17명, 장소: 일본 오사카 기오, 도쿄 기타 등 2개소

(2) 부당 수의계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용역,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 및 제16조의 약정, 변경계약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서’(2016. 4. 20.)에 따르면 용역의 과업내용 추가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의 허용범위는 당초 계약의 목적 또는 본질을 바꿀 정도의 변경이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의 규정 등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기존 설계용역 내용과 다르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설계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하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사전에 정한 특정업체와 소액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그런데 GN은 위니월드의 개장시기에 맞춘다는 등의 사유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GS)을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업체로 사전에 특정한 후 2016. 3. 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위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계 58백만여 원)을 맺도록 하는 등 [별표 28]“특정업체와의 분할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13개 업체를 사전에 정해 놓고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47건으로 분할²⁸⁵⁾하여 위 업체들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총계약금액 454백만여 원)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13개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3년(2014~2016년)간 물품·용역의 평균낙찰률(85.09%)과 비교해 볼 때 67백만여 원²⁸⁶⁾만큼의 물품·용역비를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나) 설계용역 변경계약업무 부당 처리

그런데 GN은 2015. 11. 24. 마련한 ‘위 건설공사 시행계획’에서 이미 공사를 했다²⁸⁷⁾는 이유로 제외하였으나 고급화를 사유로 또다시 시행하는 지하보도공사(계약업체명: 주식회사 >>건설, 최종 계약금액: 15억여 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용역비 49백만여 원) 발주를 주관하면서 국가계약법령을 잘 알면서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경황이 없었다’는 사유로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테마파크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²⁸⁸⁾ [계약금액: 85억여 원, 계약일: 2015. 4. 2.,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축사

285) 마사회는 직계는 2백만여 원, 많게는 19백만여 원의 소액으로 분할하였음

286) 총계약금액 454백만여 원×(100%-85.09%)

287) ‘경마공원역 및 지하보도 전시콘텐츠 설계, 제작·설치용역’(계약일자: 2014. 7. 20., 계약금액: 680,000천 원) 및

사무소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 공동수급체”라 한다)가 수행]의 변경계약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으로 임의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GN은 실무자들에게 검토내용대로 과업내용 변경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6. 5. 26. 테마파크 추진단장 GP, 본부장 GQ에게 보고 및 결재를 하고 ⊕⊕ 공동수급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사무실을 보유하지 못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IH)²⁸⁹⁾가 지하보도 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무자격자인 주식회사 ⊕⊕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지하보도 설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특혜를 부여하게 되었다.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부당 수의 단가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청장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²⁹⁰⁾, 제3자 단가계약²⁹¹⁾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할 물품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보차도 연장공사’(계약일자: 2015. 7. 23., 계약금액: 943,592천 원)를 실시하였음

288) ⊕⊕ 공동수급체는 ‘테마파크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중 설계 부분은 주식회사 ㄹㄹ건축사사무소가, 콘텐츠 제작·설치 부분은 주식회사 ⊕⊕가 담당하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수행

289) 마사회는 발주시점인 2016. 5. 27.에 ⊕⊕ 공동수급체 중 설계분야를 담당한 주식회사 ㄹㄹ건축사사무소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 철수한 상태가 되자 주식회사 ⊕⊕에게 지하보도 설계를 맡긴 것임

290) 조달청장이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이들 업체 중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91)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품의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품에 대한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²⁹²⁾에 등록된 둘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중 최저가격을 제안한 업체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이하 “다수공급자 경쟁”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GN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LED경관 조명기구 구매용역(금액 718백만여 원)을 실무자들로 하여금 다수공급자 경쟁 기준금액보다 낮은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 2016. 3. 2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방식인 제3자 단가계약’(이하 “수의 단가계약”이라 한다)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별표 29] “수의 단가계약 명세”와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LED 경관 조명기구 등 2개 품목 계 934백만여 원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 16건의 수의 단가계약으로 부당하게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의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특혜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다수공급자 경쟁 시 낙찰 비율(89.69%)과 비교해 볼 때 96백만여 원²⁹³⁾만큼의 구매비용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2) GT의 경우

GT는 2015. 12. 3.부터 2016. 11. 8.까지 田단 ‘⊕담당’의 직위에서 위니월드 내에 각종 설치시설물 중 ‘인조수목’을 구매하는 업무를 주관²⁹⁴⁾하였다.

292) 조달청이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고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GT는 2016. 3. 24. “위니월드 외부테마환경 연출물 제작·설치용역”(추정 가격 80억 원)을 ‘중소기업자로서 판로지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형물(세부 품명 번호: ㄴ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본부장 GQ의 검토·결재를 거쳐 마사회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입찰공고하였다.

그러나 GT는 테마 연출물 설치용역의 구매대상 조형물 중 인조수목의 경우에만 입찰공고와 다르게 상징성,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사 대신 해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田단장 GP, 본부장 GQ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GT는 2016. 5. 9.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였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우선협상을 하면서 구매대상 조형물 중

293) 2개 품목 934백만여 원×(100%-89.69%)

294) GT는 田단 ⊕담당으로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조정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담당(GN) 업무로 분장된 공사관리 업무 중 인조수목 등 상징조형물 설치업무를 추가로 주관하였음

인조수목 10그룹에 대하여 **로부터 자체적으로 인조수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건의를 받았는데도 이를 수용되지 아니한 채 “직접 생산하지 말고 해외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지시하고 같은 해 5. 25. 계약(계약금액 63억여 원)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은 2016. 6. 22. 멕시코에 소재한 □□사의 국내 대행사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GU)과 인조수목 구매를 위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15억 원)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마사회는 입찰공고와 다르게 우선협상을 하는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도록 하여 판로지원법을 위반하였다.

3) GP의 경우

GP는 2015. 12. 3. 田단장으로 부임하여 2016. 11. 8.까지 田단장의 직위에서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업무를 총괄하였다.

(1)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누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GP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등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100분의 10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GP는 이와 같이 위니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GP는 각종 공사의 발주 시점인 2016. 2. 14.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일본 테마파크 벤치마킹 출장’을 다녀온 마사회장으로부터 위니월드를 고급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田단 ㊟담당 GN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GP는 GN으로부터 2016년 3월경(날짜 모름) “고급화를 위해 설계변경으로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설계변경 대신에 동일 공사를 신규 발주하거나 위 건설공사 시행계획에 제외하였던 사항을 신규 발주하는 등의 조치를 하자”는 부당한 보고를 받고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를 받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2-1)-(1)-나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부당 수의계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GP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용역,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GP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특정인의 기술·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하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사전에 정한 특정업체와 소액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그러나 GP는 ⊖담당 GN으로부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경쟁입찰로 발주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용역비 58,244천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GS)을 수행업체로 사전에 특정한 후 수의계약 기준금액인 2천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2016. 3. 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별표 28] “특정업체와의 분할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13개 업체를 사전에 특정한 후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47건으로 분할하여 위 업체들과 수의계약(총계약금액 454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2-1)-(2)-나-가)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설계용역 변경계약업무 부당 처리

그리고 GP는 2016. 5. 26. ⊖담당 GN으로부터 위 용역 수행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고 ⊕⊕ 공동수급체가 수행 중인 ‘테마파크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계약금액 8,541,880천 원)의 변경계약으로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GP는 GN이 ㊸㊸ 공동수급체 중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로서 무자격자인 ㊸㊸에 지하보도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데 대하여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함으로써 “2-1)-(2)-나-나)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부당 수의 단가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GP는 “2-1)-(3)항”의 내용과 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달물품에 대한 구매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쟁제품의 경우 수의 단가계약이 아닌 다수공급자 경쟁에 의하여 구매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GP는 GN으로부터 경쟁제품인 LED 경관 조명기구(구입금액 718백만여 원)를 다수공급자 경쟁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 2016. 3. 2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의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GP는 이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별표 29] “수의 단가계약 명세”와 같이 다수공급자 업무처리 기준상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쟁제품 2개 품목 계 934,238천 원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 16건의 수의 단가계약으로 부당하게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2-1)-(3)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4) 인조수목 구매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GP는 “2-2)항”의 내용과 같이 GT로부터 “위니월드 외부테마환경 연출물 제작·설치용역”(추정가격 80억 원)의 경우 ‘중소기업자로서 판로지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16. 5. 25. 위니월드 내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연출물 설치용역’에 대하여 계약(계약금액 6,380,000천 원)을 맺은 **이 계약목적물로서 인조수목 등 각종 조형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GP는 GT로부터 **과의 우선협상 기간(2016. 5. 9.~5. 15.) 중 **로 하여금 구매 대상 조형물 가운데 ‘인조수목’의 경우 국내사 대신 해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도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2-2)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마사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위니월드 조성사업’,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등은 서로 독립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2014. 4. 25. 테마파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테마파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직전인 2014. 2. 5. 수립한 혁신 추진 계획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던 점, 관련자 GN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실시하여야 했으나 위니월드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을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업별 규모가 자연스레 500억 원 미만이 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검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시행계획」에 세부사업들이 같은 사업목적 등으로 상호 연계 되어 있다면 이를 단일사업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마사회장은 ‘위니월드 조성사업’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GN, GT, GP를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GN: 정직, GT, GP: 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개별처분요구안 20번 참조】

4-(2)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 업무 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2009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지역(11,181천 m²)을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검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202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의 1-1공구는 인천도시공사, 1-2공구는 LH가 각각 조성공사 등을 담당²⁹⁵⁾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2015. 6. 30.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표 50]과 같이 2010년 이후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말 부채규모가 7조 2,135억 원이고 인천도시공사의 전체 부채 중 검단 택지개발사업의 부채비율 비중이 40.2%이며 검단 택지개발사업의 택지보상비로 인한 금융비용이 2016년 기준 매월 45억 원 상당 발생하고 있었다.

[표 50]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사 전체 부채(A)	48,475	64,166	69,751	70,131	72,135
검단 택지개발사업 부채(B)	18,924	25,434	25,600	29,491	29,026
검단 택지개발사업 부채비중(B/A)	39	39.6	36.7	42.1	40.2

자료: 인천도시공사 제출자료

그리고 인천도시공사가 2015. 9. 10.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각각 보고한 ‘201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도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부터는

295) 인천도시공사 및 LH가 각각 50대50 지분으로 하되 모든 비용 및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음

착공·분양하여 향후 5년간 3조 3,086억 원을 분양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분양을 통한 자금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16. 1. 22. 위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총 11,181천 m² 중 4,717천 m²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검단 신도시 스마트시티 사업’²⁹⁶⁾(이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²⁹⁷⁾하기로 하는 합의각서(MOA)를 ‘⊗⊗’ 및 ‘ㄱㄱ’ 등 3개 투자 기업(이하 “투자자 측”이라 한다)과 체결한 후 투자자 측²⁹⁸⁾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2. 판단 기준

위 합의각서(MOA)에 따르면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 총 4,717천m²는 1단계 내 LH담당 1-2공구 1,901천 m² 및 인천도시공사 담당 1-1공구 380천 m² 그리고 3단계 내 2,436천 m²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LH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지를 확보하며, 위 사업부지 내에서 방해구조물 철거 또는 건축 및 정지작업과 관련된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으로 매월 45억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 이외의 택지개발사업 부지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당초 계획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했다.

296) 총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를 인천 검단에 조성하는 국가전략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1,500개 기업(500개 외국기업 포함) 유치, 50개 외국교육기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297) 2015. 6. 29. 인천광역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및 ◀▶(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참여하지 않았음

298) 2016. 2. 12.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가 54.3%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2개 외국인투자자가 66.9%의 지분(자본금 53억여 원)을 가지고 있고, ‘ㄱㄱ’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와 협상을 담당하였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LH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가 포함된 1-2공구에서 2015. 12. 18. ∞∞ 건설주식회사와 조성공사 계약(금액 678억 원)을 체결하고 착공하여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는 2016. 2. 23.²⁹⁹⁾ 1단계 1-1공구 사업부지 중 검단 스마트 시티 사업부지 밖에 있는 1,607천 m²³⁰⁰⁾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부지인 380천 m²를 합한 1,987천 m²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대항개발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2016. 2. 25. 투자자 측으로부터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계획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스마트시티 사업 부지인 1단계 1-2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중단 요청은 하지 않은 채 스마트시티 사업 부지 일부(380천 m²)만이 포함되어 있는 1-1공구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는 위 1단계 1-1공구 중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380천 m²만 입찰조건에 따라 조성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가 아닌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지 않은 채 투자자 측의 요청에 따라 2016. 3. 2. 합의각서(MOA) 유효기간(7개월) 동안 위 1단계 1-1 공구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³⁰¹⁾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3. 3. 인천도시공사는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

299) 인천도시공사는 2015. 11. 13. 검단 1단계 1-1공구의 기반조성공사를 대항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입찰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지역기업참여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됨

300) 인천도시공사는 일부 구역(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에 편입된 380천 m²)은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해당 구역 공사 착공 시기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찰조건을 붙여 입찰공고하였음

301) 인천광역시 부시장 및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사업 추진 관련 고위 관계자가 논의하여 결정하였음

이후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와 투자자 측은 [별표 30]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정”과 같이 협의하였으나 양 당사자 사이의 이견이 계속되어 투자자 측에 기본협약 협상에 대한 입장확인을 최종 요청³⁰²⁾한 후 투자자 측의 회신이 없자 2016. 11. 16. 기본협약 협상 종료를 통보한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7. 인천광역시장이 협상종료를 선언하여 사실상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016. 11. 16. 인천도시공사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상종료를 통보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같은 해 12. 1.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1단계 1-1공구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협상하면서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1-1 공구 조성공사의 입찰공고를 중단한 2016. 3. 2.부터 다시 재개한 2016. 12. 1.까지 10개월 동안 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하지 못한 채 이자비용 116억 원³⁰³⁾만 발생하였고, 입찰공고 중단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추가적인 공사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못하여 공사기간과 분양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천도시공사가 입찰공고한 조성공사 대상지역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지구의 일부(약 380천 m²)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 측이 입찰공고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및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302) 2016. 11. 8. 인천광역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최종 협약(2016. 10. 31. 송부한 안)과 관련하여 ‘⊗’에 같은 해 11. 9.까지 입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6.까지 회신이 없었음

303) 541억 원(2016년 인천도시공사 검단새빛도시사업 관련 연간 금융비용)×273일(공사 중단일 수)/365일×1,607천m²(1-1공구 면적)/5,591천 m²(인천도시공사 담당 면적)=116억 원으로 산정됨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합의각서(2.5항)³⁰⁴⁾를 근거로 투자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상호 간 신뢰 저하로 협상결렬이 우려되어 입찰공고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협상기간 중에도 지장물 철거공사, 수목이식공사 등 선행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압축공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당초 1단계 사업기한인 2020년 12월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지 공급 또한 촉진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대규모 장기간 사업의 특성상 장래 부동산 개발여건 변화, 택지매각 금액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시로 사업성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입찰공고한 조성공사 대상지역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지구의 일부(약 380천 m², 전체 1,987천 m²의 19%)가 있다 하더라도 입찰조건에 따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지구의 일부를 조성공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위 합의각서(2.5항)에도 방해구조물 철거 및 정지작업과 관련된 활동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조성 공사는 할 수 있으며 실제 LH가 2015년 12월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지구(1단계 1-2공구)³⁰⁵⁾에서 택지개발 조성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었으나 투자자 측이 이에 대하여 항의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동산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성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 하더라도 지연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성공사 착공 지연으로

304) 본 합의각서의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305) LH는 인천광역시의 요청에도 2015년 12월부터 1단계 1-2공구의 택지개발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부터 공동주택 용지 공급 등 후속 업무가 계획되어 있어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참여하지 않았음

준공 전 분양계획도 지연되고 투자금 조기회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사 중단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도시공사사장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3)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의사 위촉 업무 부적정

1. 업무 개요

서울대학교병원은 효율적인 환자진료를 위하여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따라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진료과장³⁰⁶⁾은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로 재직하였던 자 또는 원장이 이와 동등한³⁰⁷⁾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³⁰⁸⁾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할 경우 위촉의 필요성, 위촉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306)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의 경우 진료과장이 없어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 원장이 외래진료의사 위촉대상자를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307)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상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제2조의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제2조 제1항의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음

308)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³⁰⁹⁾은 2016. 7. 4. GV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이하 “강남센터”라 한다) 원장의 추천서를 받지 아니한 채 GV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는 공문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4. 14시 11분경 GV를 강남센터 외래진료의사로 위촉(위촉기간: 2016. 7. 5. ~2017. 7. 4.)하는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신규위촉)” 공문을 기안하여 2016. 7. 4. 17시 8분경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GV가 개원의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에 위반될 수 있는 문제점³¹⁰⁾이 있었는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또한 GV는 인턴과정만 마친 일반의로 박사학위가 없어 외래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은 인사발령 공문 문서를 기안한 후 2016. 7. 4. 14시 26분경 강남센터 원장의 추천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2016년 제2차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서면결의록’ 문서를 작성하고는 나중에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 GV의 인사발령 공문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은 2016. 7. 4. GV의 외래진료의사 위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도 보완하기 위해 GV에 대한 외래진료의사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강남센터 인사팀은 외래진료의사 위촉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 강남센터의 외래진료의사 위촉 필요성에

309) 2016. 8. 9. 인제기획팀에서 인사팀으로 직제변경

310) 서울대학교병원 법무팀은 2014. 3. 31. 법무법인 b b로부터 개원의의 외래진료의사 위촉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따로 검토하지 않음

의해 위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GV에 대한 외래진료의사 위촉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추천서 제출을 거부하여 추천서는 보완되지 못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외래진료의사의 자격 등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GV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대학교병원은 GV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강남센터 원장의 추천이 없었고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외래진료의사 위촉 등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4) 금융개혁 방송광고 추진 부적정

1. 업무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5. 10. 16.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계획”(이하 “대국민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개혁 종합편’, ‘핀테크편’ 등 3개 광고물을 같은 해 11. 16.부터 홍보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금융개혁 종합편’ 등의 방송 광고물을 제작한 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KBS 등 공중파 3사, 케이블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광고를 송출하였다.

2.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는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5년 10월(날짜 모름) 자체 홍보 예산이 거의 없어 당시 금융개혁과 관련 있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 등에게 당시 금융개혁 홍보에 사용 가능한 잔여 예산을 파악하여 알려주도록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 6억 원, 한국거래소 4억 원, 기업은행 2억 원, 산업은행 1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억 원 등 5개 기관 으로부터 계 14억 원이 사용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015. 10. 22. 홍보 시작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공모절차 없이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1397’ 홍보영상 등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주식회사 JJ(대표이사 GW, 이하 “JJ”라 한다)에게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물을 100백만 원에 제작하도록 구두로 의뢰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위 방송광고를 제작하던 중 2015. 11. 9. 대통령비서실(경제 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로부터 “JJ와는 광고계약을 하지 말라”는 경제수 석비서관 안중범의 뜻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JJ가 방송광고 제작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대국민 홍보 계획의 일정대로 2015. 11. 16.부터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를 송출하기 위하여 일단 방송광고물 제작을 완성한 후 같은 해 11. 12.에 있을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시사(試寫)하기로 하고 광고제작을 계속 진행시켰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JJ가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물 제작을 완성하자 2015. 11. 12.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³¹¹⁾에서 이를 시사하였는데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 광고물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 지적없이 제작업체의 노고를 치하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홍보기획·광고물 제작의뢰 등을 총괄하면서 자체 예산이 없어 금융 공공기관 등의 예산으로 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작된 광고물에 중대한 흠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광고물을 다시 제작하게 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금융위원회는 위 방송광고물을 시사한 같은 날인 2015. 11. 12. ‘금융개혁 종합편’과 주식회사 JJ(대표이사 GX, 이하 “JJ”라 한다)가 제작한 금융개혁 방송광고 ‘핀테크편’ 등 2편의 방송광고물을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시사했는데 경제수석비서관 안중범은 ‘금융개혁 종합편’에 대해 메인 메시지가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인데 “도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못마땅해 하는 언급³¹²⁾을 하였다.

311)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개혁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JJ가 제작한 광고물에 중대한 흠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2015. 11. 17. ‘핀테크편’을 제작했던 JJ에게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 광고물을 다시 제작(계약금액 198백만 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JJ에 광고제작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 2015년 12월 초에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를 제작해 놓고도 송출을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위 공사로부터 홍보비 예산 150백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JJ(대표이사 GY, 광고대행업체, 이하 “JJ”이라 한다)과 상의하여 JJ에서 제작한 ‘금융개혁 종합편’을 전국 아파트 단지 승강기 내 모니터에 송출하기로 하고, JJ에는 당초 구두 계약금액 100백만 원이 아닌 60백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원회는 2015. 12. 7.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개혁 대국민 홍보 관련 협조요청 건” 공문³¹³⁾을 보내 위 공사 자체 예산(150백만 원 이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금융개혁 공익캠페인 광고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5. 12. 18.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금융개혁 공익 캠페인 광고”(소요예산 144백만 원)를 의뢰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JJ에 도급을 주었으며, JJ는 금융위원회로부터 JJ가 제작했던 방송광고 영상 파일을 제공받아 JJ에는 6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의 위원,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등 참석

312) JJ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라는 메인 메시지에 맞게 방송광고를 제작하였으나 안중범은 JJ를 방송광고제작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313) 금융위원회는 JJ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금융개혁 종합편’ 영상 파일이 있어 광고제작이 필요없는데도 마치 방송광고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처럼 “제작”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금융개혁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을 요청하는 위 공문을 작성·시행함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를 2편 제작하여 당초 계획한 제작비 100백만 원보다 158백만 원³¹⁴⁾이 증가한 258백만 원이 지출되도록 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2015. 11. 16. 송출을 목표로 제작하였던 ‘금융개혁 종합편’ 방송광고를 한 달여가 지난 같은 해 12. 17.에야 송출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언론 등으로부터 위 방송광고 제작업체를 변경한 데 대해 비난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방송광고 기획·제작·송출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유사한 광고물을 중복 제작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14) [60백만 원(↓↓ 지급금액)+198백만 원(↗↗ 계약금액)] - 100백만 원(당초 ↓↓ 계약금액) = 258백만 원 - 100백만 원 = 158백만 원

[별표 목차]

[별표 1] 태권도 시범단의 국외 문화행사 참여 시 예산소요 내역·····	347
[별표 2] AM의 멕시코 문화행사 항공료 부담 수령 내역 ·····	349
[별표 3] 플레이그라운드의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항공료 부담 수령 내역 ·····	350
[별표 4] 대한승마협회 정산서 등 제출일 ·····	352
[별표 5]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액 ·····	353
[별표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부담 선정배제 명세 ·····	354
[별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담 지원배제 명세 ·····	356
[별표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담 지원배제 명세 ·····	365
[별표 9] ∴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담 지원·선정 배제 명세 ·····	366
[별표 1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신청자 부담 지원배제 명세 ·····	368
[별표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선정배제 도서 명세 ·····	369
[별표 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계약 이윤 등 재산정 명세 ···	370
[별표 13] 크리에이터의 재직 실태 내역 ·····	372
[별표 14] 크리에이터가 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에 재직한 내역 ·····	373
[별표 15]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참여횟수 내역 ·····	374
[별표 16]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수행 내역 ·····	375
[별표 17] 경제성 분석 재산정 결과 ·····	376
[별표 18] 연구용역보고서상 예상 편익과 실제 발생 편익 비교 ·····	377
[별표 19]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산 미완료 현황 ·····	378
[별표 20] 지난 3년간 나라장터 건적공고 미실시 수의계약 명세 ·····	387
[별표 21] 3회 연속 동일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세 ·····	391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현황	392
[별표 23]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 미정산 명세	393
[별표 2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미정산 명세	396
[별표 25] 공익사업적립금 자부담분 불인정 명세	398
[별표 26]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자부담분 불인정 명세	399
[별표 27] 연구 미참여 명세 및 환수대상액 산정내역	401
[별표 28] 특정업체와의 분할 수의계약 명세	402
[별표 29] 수의 단가계약 명세	404
[별표 30]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정	405

[별표 1]

태권도 시범단의 국외 문화행사 참여 시 예산소요 내역

(단위: 명, 원)

연번	행사명(국가)	기간	공연 인원	사례비	훈련비	프로그램 제작비 등	총계	공연팀
1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카타르)	2015.3.4. ~3.9.	20	-	1,200,000	-	1,200,000	국기원 ¹⁾
2	B.C주 태권도의 날 상정 기원 기념행사(캐나다)	2015.8.4. ~8.11.	20	-	1,800,000	-	1,800,000	
3	주스웨덴대사배 태권도대회 및 밀라노엑스포(스웨덴, 이탈리아)	2015.9.30. ~10.10.	20	-	2,200,000	-	2,200,000	
4	주남아공대사배 태권도대회(남아공)	2015.10.22. ~10.28.	20	-	2,200,000	-	2,200,000	
5	태권도 유럽진출 50주년 기념행사(독일, 폴란드)	2015.10.29. ~11.10.	20	-	2,200,000	-	2,200,000	
6	국기원컵 태권도대회(인도네시아)	2015.11.20. ~11.24.	20	-	2,200,000	-	2,200,000	
7	주쿠웨이트대사배 태권도대회(쿠웨이트)	2015.11.25. ~11.29.	20	-	2,200,000	-	2,200,000	
8	주모로코대사배 태권도대회(모로코)	2015.12.17. ~12.22.	20	-	2,200,000	-	2,200,000	
9	스리랑카 전국체전 및 대통령 명예단 수여식(스리랑카)	2015.12.16. ~12.25.	20	-	2,200,000	-	2,200,000	
10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멕시코)	2016.3.31. ~4.7.	28	-	3,920,000	-	3,920,000	
11	국기원컵, 태국왕실공주컵 태권도대회(중국, 태국)	2016.4.29. ~5.9.	20	-	2,000,000	-	2,000,000	
12	대통령 순방계기 후속조치(케냐, 우간다)	2016.6.8. ~6.16.	18	-	1,800,000	-	1,800,000	
13	LA K-CON 및 주미국대사배 태권도대회(미국)	2016.7.29. ~8.8.	20	-	2,000,000	-	2,000,000	
14	주우즈베크대사배 태권도대회(우즈베키스탄)	2016.10.10. ~2017.1.20.	20	-	2,000,000	-	2,000,000	
15	한-유럽 세종학당 워크숍 및 폴란드 태권도 품새대회(폴란드)	2016.11.9. ~11.15.	20	-	2,000,000	-	2,000,000	
16	Feel Korea in India(인도)	2016.11.16. ~11.20.	20	-	2,000,000	-	2,000,000	
17	Feel Korea in Laos (라오스)	2016.11.23. ~11.28.	20	-	2,000,000	-	2,000,000	

연번	행사명(국가)	기간	공연 인원	사례비	훈련비	프로그램 제작비 등	총계	공연팀
18	주캄보디아대사배 태권도대회(캄보디아)	2016.11.24. ~11.28.	20	-	2,000,000	-	2,000,000	국기원 ¹⁾
19	주프랑스대사배 태권도대회(프랑스)	2016.12.15. ~12.20.	20	-	2,000,000	-	2,000,000	
20	평창올림픽 및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계기(카자흐스탄)	2017.1.27. ~2.1.	20	-	2,000,000	-	2,000,000	
21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계기 문화행사(이탈리아)	2015.6.22. ~6.26.	10	30,000,000	-	-	30,000,000	++
22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미국)	2015.10.12. ~10.17.	12	9,900,000	-	-	9,900,000	
23	UAE문화원 개원 및 피렌체 한국영화제 계기 문화행사(UAE, 이탈리아)	2016.2.22. ~3.31.	10	10,000,000	-	-	10,000,000	
24	리우올림픽 계기 문화행사(브라질)	2016.8.5. ~8.21.	8	20,000,000	-	-	20,000,000	K스피릿
25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이란)	2016.4.30. ~5.4.	20	20,000,000	7,403,400	10,700,000	38,103,400 ²⁾	
26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2016.5.25. ~6.3.	18	45,000,000	-	32,000,000	77,000,000	

주: 1. 국기원 시범단에게는 2015년은 시범단원 1인당 11만 원, 2016년부터는 시범단원 1인당 10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며, 1, 2, 10번 행사는 국기원이 당해연도 전체사업 계획 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여 훈련비 단가가 차이나는 것임

2. 행사용품(송판, 대리석)과 물품 이송비 등 태권도 시범에 필요한 공통 운영비는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AM의 멕시코 문화행사 항공료 부담 수령 내역

(단위: 원)

연번	성명	◇◇가 AM에게 제출한 인보이스	플레이그라운드가 해외문화홍보원에 제출한 인보이스	차액	소속 등
1	FB주)	(6,720,700)	-	-	가수 》》 및 매니저 등
2	-	6,719,900	7,185,700	465,800	
3	-	6,719,900	7,185,700	465,800	
4	-	6,719,900	7,185,700	465,800	
5	-	6,719,900	7,185,700	465,800	
6	-	6,719,900	7,185,700	465,800	
7	-	6,719,900	7,185,700	465,800	
8	-	6,719,900	7,185,700	465,000	
9	-	2,424,500	3,511,200	1,086,700	
10	-	2,424,500	3,511,200	1,086,700	
11	-	2,424,500	3,511,200	1,086,700	
12	-	2,424,500	3,511,200	1,086,700	
13	-	2,424,500	3,511,200	1,086,700	
14	-	2,424,500	3,511,200	1,086,700	
15	-	1,728,500	1,728,500	0	- (미디어 퍼포먼스팀)
16	-	1,728,500	1,728,500	0	
17	-	1,552,700	2,158,300	605,600	
18	-	1,552,700	2,158,300	605,600	
19	-	1,552,700	2,158,300	605,600	
20	-	1,552,700	2,158,300	605,600	
21	-	1,552,700	2,158,300	605,600	
22	-	1,552,700	2,158,300	605,600	
23	-	1,552,700	2,158,300	605,600	
24	-	1,552,700	2,158,300	605,600	
25	-	1,552,700	2,158,300	605,600	국립국악원
26	-	1,672,300	2,158,300	486,000	
27	-	1,672,300	2,158,300	486,000	
28	-	1,672,300	2,158,300	486,000	
29	-	1,672,300	2,158,300	486,000	
30	-	1,672,300	2,158,300	486,000	
31	-	1,552,700	2,158,300	605,600	
32	-	1,552,700	2,158,300	605,600	
33	-	1,552,700	2,158,300	605,600	
34	-	1,552,700	2,158,300	605,600	
35	AH	6,719,900	6,719,900	0	플레이그라운드
36	AL	4,528,500	4,528,500	0	
37	AN	2,098,500	2,098,500	0	
38	AP	1,728,500	1,728,500	0	
39	-	1,728,500	1,728,500	0	음향·영상·조명 감독
40	-	1,728,500	1,728,500	0	
41	-	1,728,500	1,728,500	0	
소계(A)		120,571,500	133,934,400	13,362,900	-
42	AH	-	5,706,600	5,706,600	플레이그라운드 (사전답사)
43	AH	-	1,109,000	1,109,000	
소계(B)		-	6,815,600	6,815,600	-
총계(A+B)		120,571,500	140,750,000	20,178,500 ^{주2)}	-

주: 1. 》》 FB는 실제로 출국하였으나, ◇◇의 실수로 인보이스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가 2016. 3. 31. 및 같은 해 4. 1. AM의 개인 계좌로 입금

자료: 문체부 및 ◇◇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플레이그라운드와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 항공료 부담 수령 내역

(단위: 원)

연번	성명	가 플레이그라운드에 제출한 인보이스	플레이그라운드와 해외문화홍보원에 제출한 인보이스	차액	소속 등
1	-	2,658,200	2,858,200	200,000	K스피릿
2	-	2,658,200	2,858,200	200,000	
3	-	2,658,200	2,858,200	200,000	
4	-	2,658,200	2,858,200	200,000	
5	-	2,658,200	2,858,200	200,000	
6	-	2,658,200	2,858,200	200,000	
7	-	2,658,200	2,858,200	200,000	
8	-	2,658,200	2,858,200	200,000	
9	-	2,658,200	2,858,200	200,000	
10	-	2,658,200	2,858,200	200,000	
11	-	2,658,200	2,858,200	200,000	
12	-	2,658,200	2,858,200	200,000	
13	-	2,658,200	2,858,200	200,000	
14	-	2,658,200	2,858,200	200,000	
15	-	2,658,200	2,858,200	200,000	
16	-	2,658,200	2,858,200	200,000	
17	-	2,658,200	2,858,200	200,000	
18	-	2,658,200	2,858,200	200,000	
19	-	2,658,200	2,858,200	200,000	
20	-	2,658,200	2,858,200	200,000	
21	-	2,658,200	2,858,200	200,000	
22	-	2,658,200	2,858,200	200,000	
23	-	2,169,800	2,469,800	300,000	국립국악원
24	-	2,169,800	2,469,800	300,000	
25	-	2,169,800	2,469,800	300,000	
26	-	2,169,800	2,469,800	300,000	
27	-	2,169,800	2,469,800	300,000	
28	-	2,169,800	2,469,800	300,000	
29	-	2,169,800	2,469,800	300,000	
30	-	2,169,800	2,469,800	300,000	
31	-	2,169,800	2,469,800	300,000	
32	-	1,460,000	1,760,000	300,000	OO (비보잉크루), - (융복합공연팀)
33	-	1,460,000	1,760,000	300,000	
34	-	1,460,000	1,760,000	300,000	
35	-	1,460,000	1,760,000	300,000	
36	-	1,460,000	1,760,000	300,000	
37	-	1,460,000	1,760,000	300,000	
38	-	1,460,000	1,760,000	300,000	
39	-	1,460,000	1,760,000	300,000	
40	-	1,460,000	1,760,000	300,000	
41	-	1,460,000	1,760,000	300,000	
42	-	1,460,000	1,760,000	300,000	
43	-	1,460,000	1,760,000	300,000	
44	-	1,460,000	1,760,000	300,000	
45	-	1,460,000	1,760,000	300,000	
46	-	1,460,000	1,760,000	300,000	
47	-	1,460,000	1,760,000	300,000	
48	-	1,460,000	1,760,000	300,000	

연번	성명	:: :: 가 플레이그라운드에 제출한 인보이스	플레이그라운드가 해외문화홍보원에 제출한 인보이스	차액	소속 등
49	-	1,460,000	1,760,000	300,000	○○ (비보잉크루), - (웅복합공연팀)
50	-	1,460,000	1,760,000	300,000	
51	-	1,460,000	1,760,000	300,000	
52	-	4,755,000	4,955,000	200,000	가수 ♫ ♫ 및 매니저 등
53	-	4,755,000	4,955,000	200,000	
54	-	4,755,000	4,955,000	200,000	
55	-	4,755,000	4,955,000	200,000	
56	-	4,755,000	4,955,000	200,000	
57	-	1,412,000	1,712,000	300,000	
58	-	1,412,000	1,712,000	300,000	
59	-	1,412,000	1,712,000	300,000	
60	-	1,412,000	1,712,000	300,000	사회자
61	-	7,607,200	7,907,200	300,000	
62	AH	6,367,800	6,667,800	300,000	플레이그라운드
63	AP	3,682,400	3,982,400	300,000	
64	AN	3,261,000	3,543,600	282,600	
65	-	2,121,200	2,321,200	200,000	행사진행 스태프
66	AQ	2,121,200	2,321,200	200,000	
67	-	2,121,200	2,321,200	200,000	
68	-	2,121,200	2,321,200	200,000	
69	-	2,440,000	2,640,000	200,000	
70	-	2,440,000	2,640,000	200,000	
71	-	2,440,000	2,640,000	200,000	
72	-	2,440,000	2,640,000	200,000	
73	-	2,440,000	2,640,000	200,000	
74	-	1,530,700	1,730,700	200,000	
75	-	1,530,700	1,730,700	200,000	
76	-	1,530,700	1,730,700	200,000	
77	-	1,530,700	1,730,700	200,000	
78	-	1,530,700	1,730,700	200,000	
79	-	1,530,700	1,730,700	200,000	
80	AR	1,530,700	1,730,700	200,000	
81	-	1,530,700	1,730,700	200,000	
82	-	1,784,000	1,984,000	200,000	
83	-	1,784,000	1,984,000	200,000	
84	-	1,784,000	1,984,000	200,000	
85	-	1,784,000	1,984,000	200,000	
86	-	1,841,000	2,141,000	300,000	
87	-	1,841,000	2,141,000	300,000	
88	-	1,841,000	2,141,000	300,000	
89	-	1,841,000	2,141,000	300,000	
90	-	1,841,000	2,141,000	300,000	
91	-	1,841,000	2,141,000	300,000	
총계		208,662,400	231,145,000	22,482,600 ^{주)}	-

주: :: :: 가 2016. 5. 23. 플레이그라운드 계좌로 입금

자료: 문체부 및 :: ::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대한승마협회 정산서 등 제출일

월별	초외훈련계획서 제출일 (보조금 교부일)	정산서 제출기한 ¹⁾	정산서/훈련결과보고서 제출일 (정산 승인일)	정산서 제출 지연 일수
2014. 3.	2014. 2. 24. (2014. 3. 3.)	2014. 4. 14.	2014. 11. 4. (2014. 11. 11.)	208일
2014. 4.	2014. 3. 25. (2014. 3. 31, 2014. 4. 25.)	2014. 5. 14.		179일
2014. 5.	2014. 4. 24. (2014. 4. 30.)	2014. 6. 14.		143일
2014. 6.	2014. 5. 23. (2014. 5. 30.)	2014. 7. 14.		115일
2014. 7.	2014. 6. 26. (2014. 6. 30.)	2014. 8. 14.		84일
2014. 8.	2014. 7. 30. (2014. 7. 30.)	2014. 9. 14.		53일
2014. 9.	2014. 8. 29. (2014. 9. 11, 2014. 9. 17.)	2014. 10. 14.	2014. 11. 10. (2014. 11. 11.)	27일
2014. 10.	2014. 9. 26. (2014. 9. 30.)	2014. 11. 14.	2014. 11. 25. (2014. 11. 27.)	12일
2014. 12.	2014. 11. 25. (2014. 11. 28.)	2015. 1. 14.	2014. 12. 29. (2015. 1. 13.)	-
2015. 3.	2015. 2. 25. (2015. 2. 27.)	2015. 4. 14.	2015. 4. 16. (2016. 6. 20.)	6일
2015. 4.	2015. 3. 26, 2015. 3. 30. (2015. 3. 31.)	2015. 5. 14.	2015. 5. 15. (2016. 6. 20.)	1일
2015. 5.	2015. 4. 16. (2015. 5. 1.)	2015. 6. 14.	2015. 6. 10. (2016. 6. 20.)	-
2015. 6.	2015. 5. 20. (2015. 6. 17.)	2015. 7. 14.	2015. 7. 15. (2016. 6. 20.)	1일
2015. 7.	2015. 6. 22, 2015. 6. 23. (2015. 6. 30.)	2015. 8. 14.	2015. 8. 13. (2016. 6. 20.)	-
2015. 8.	2015. 7. 20, 2015. 7. 21. (2015. 7. 31.)	2015. 9. 14.	2015. 9. 18. (2016. 6. 20.)	4일
2015. 9.	2015. 8. 17, 2015. 8. 19. (2015. 8. 31.)	2015. 10. 14.	2016. 6. 13. (2016. 6. 20.)	243일
2015. 10.	2015. 9. 18. ²⁾ (2015. 10. 15.)	2015. 11. 14.		212일
2015. 11.		2015. 12. 14.		182일
2015. 12.		2016. 1. 14.		152일

주: 1. 초외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2. 교부방식 변경으로 4분기 일괄교부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선수수당	급식비 등	비고
2014년	3월	8,000,000	5,600,000	
	4월	11,000,000	7,700,000	
	5월	11,000,000	7,700,000	
	6월	11,000,000	7,700,000	
	7월	15,000,000	10,360,000	국외전지훈련비 3,749,040
	8월	15,000,000	10,500,000	
	9월	17,000,000	6,881,460	숙박비 2,050,000
	10월	11,050,000	7,735,000	
	12월	14,350,000	4,668,150	
계		113,400,000	68,844,610	
2015년	3월	5,880,000	986,880	
	4월	7,140,000	947,080	
	5월	8,400,000	1,009,300	
	6월	10,080,000	2,794,200	
	7월	11,200,000	3,156,700	
	8월	12,660,000	4,019,920	
	9월	13,200,000	3,119,950	
	10월	15,900,000	2,387,360	
	11월	16,020,000	4,808,610	
	12월	17,700,000	5,465,980	
계		118,180,000	28,695,980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부당 선정배제 명세

연번	심의위원 선정	선정배제 대상자	선정(발표)일	비고
1	201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 위원 선정	Y (문학분야)	2014. 3. 28.	선정배제
2		- (문학분야)	"	"
3		- (문학분야)	"	"
4		- (문학분야)	"	"
5		- (문학분야)	"	"
6		- (문학분야)	"	"
7		- (문학분야)	"	"
8		- (문학분야)	"	"
9		- (문학분야)	"	"
10		- (문학분야)	"	"
11		- (문학분야)	"	"
12		- (문학분야)	"	"
13		- (시각예술분야)	"	"
14		- (연극분야)	"	"
15		- (연극분야)	"	"
16		- (무용분야)	"	"
17		- (무용분야)	"	"
18		- (음악분야)	"	"
19		- (전통예술분야)	"	"
20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	2016. 7. 29.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CP	"	"
28		AD	"	"
29		-	"	"
30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36		-	"	"
37		-	"	"
38		-	"	"
39		-	"	"
40		-	"	"
41		-	"	"
42		-	"	"
43		-	"	"

연번	심의위원 선정	선정배제 대상자	선정(발표)일	비고
44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	"	"
45		-	"	"
46		-	2016. 7. 29.	선정배제
47		-	"	"
48		-	"	"
49		-	"	"
50		-	"	"
51		-	"	"
52		-	"	"
53		-	"	"
54		-	"	"
55		-	"	"
56		-	"	"
57		-	"	"
58		-	"	"
59		-	"	"
60		-	"	"
61		-	"	"
62		-	"	"
63		-	"	"
64		-	"	"
65		-	"	"
66		-	"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재구성

[별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담 지원배제 명세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문학창작 활동지원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2014. 11. 11.	-	아르코창작기금	2015. 7. 17.	지원배제
2		"	-	-	"	"
3		"	-	-	"	"
4		"	-	-	"	"
5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6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7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8		"	-	-	"	"
9		"	-	-	"	"
10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1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6		"	-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	-	-	2015. 3. 31.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31		"	-	-	"	"
32		"	-	-	"	"
33		"	-	-	"	"
34	시각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	-	시각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2015. 2. 4.	"
35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지원	"	-	-	2015. 3. 31.	"
36	국제교류기반 강화지원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1차)	"	-	-	2015. 3. 31.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37	다원예술 창작지원	2014. 11. 11.	-	-	2015. 2. 4.	지원배제
38		"	-	-	"	"
39		"	-	-	"	"
40		"	-	-	"	"
41		"	-	-	"	"
42		"	-	-	"	"
43		"	-	-	"	"
44		"	-	-	"	"
45		"	-	-	"	"
46		"	-	-	"	"
47		"	-	-	"	"
48	민간국제예술	"	-	-	2015. 3. 31.	"
49	교류지원-1차	"	-	-	"	"
50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1차 (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지원)	"	-	-	"	"
51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 -1차(연극)	"	-	-	"	"
52		"	-	-	"	"
53		"	-	-	"	"
54		"	-	-	"	"
55		"	-	-	"	"
56		"	-	-	"	"
57		"	-	-	"	"
58	시각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	-	-	2015. 2. 4.	"
59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	-	-	2015. 3. 31.	"
60		"	-	-	"	"
61		"	-	-	"	"
62		"	-	-	"	"
63		"	-	-	"	"
64		"	-	-	"	"
65		"	-	-	"	"
66		"	-	-	"	"
67		"	-	-	"	"
68		"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
69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1차(기획형)	"	-	-	"	"
70		"	-	-	"	"
71		"	-	-	"	"
72		"	-	-	"	"
73	소외계층 문화순회 (농산어촌)	2014. 11. 27.	-	-	2015. 1. 21.	"
74		"	-	-	"	"
75		"	A A	-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76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회복지시설)	2014. 11. 27.	-	-	2015. 1. 21.	지원배제
77		"	-	-	"	"
78		"	-	-	"	"
79		"	-	-	"	"
80		"	-	-	"	"
81	소외계층 문화순회 (임대주택)	"	-	-	2015. 1. 21.	"
82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시범공연-일반)	2014. 12. 22.	-	-	2015. 2. 9.	"
83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시범공연- 청소년)	"	-	-	"	"
84	공연예술 행사지원	2014. 12. 23.	-	-	2015. 2. 4.	"
85		"	-	-	"	"
86		"	-	-	"	"
87		"	-	-	"	"
8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 시범공연)	2015. 1. 12.	-	-	2015. 3. 4.	"
89		"	-	-	"	"
90		"	-	-	"	"
91		"	-	-	"	"
92		"	-	-	"	"
93		"	-	-	"	"
94		"	-	-	"	"
95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2015. 1. 30.	-	-	2015. 3. 6.	"
96	차세대예술인력 육성(공연예술)	2015. 3. 11.	-	-	2015. 6. 2.	"
97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2015. 3. 16.	-	-	2015. 6. 5.	"
98	(연극-우수 작품재공연)	"	-	-	"	"
99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2015. 3. 25.	-	-	2015. 6. 8.	"
100	국제교류기반 강화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 그램참가지원-2차)	2015. 3. 26.	-	-	2015. 6. 30.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01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2차	2015. 3. 26.	-	-	2015. 6. 30.	지원배제
102		"	-	-	"	"
103		"	-	-	"	"
104		"	-	-	"	"
105		"	-	-	"	"
106		"	-	-	"	"
107		"	-	-	"	"
108		"	-	-	"	"
109		"	-	-	"	"
110		"	-	-	"	"
111		"	-	-	"	"
112		"	-	-	"	"
113		"	-	-	"	"
114		"	-	-	"	"
115		"	-	-	"	"
116		"	-	-	"	"
117		"	-	-	"	"
118		"	-	-	"	"
119		"	-	-	"	"
120		"	-	-	"	"
121		"	-	-	"	"
122		"	-	-	"	"
123		"	-	-	"	"
124		"	-	-	"	"
125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126	참가지원-2차 (기획형)	"	-	-	"	"
127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5. 3. 31.	A A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28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29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0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1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2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3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4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5		"	VV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6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7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8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9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0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1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42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5. 3. 31.	A A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5. 6. 2.	지원배제
143		"	VV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4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5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6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7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8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9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0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1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2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3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4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5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6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7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 우수작품제작)	2015. 4. 11.	-	-	2015. 6. 29.	"
159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민간단체지원	2015. 6. 3.	-	문화전문인력양성 및 배치사업	2015. 8. 5.	"
160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2015. 6. 17.	-	기초공연예술활성화	2015. 7. 3.	"
161		"	-	-	"	"
162		"	-	-	"	"
163		"	-	-	"	"
164		"	-	-	"	"
165	창작뮤지컬	2015. 7. 20.	VV	-	2015. 12. 4.	"
166	육성지원	"	VV	-	"	"
167	(대본공모)	"	-	-	"	"
16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대본공모)	2015. 7. 31.	-	-	"	"
169		"	-	-	"	"
170		"	-	-	"	"
171	공연예술발표	2015. 8. 5.	VV	-	2015. 10. 27.	지원배제
172	공간 지원사업	"	-	-	"	"
173		"	-	-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74	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사업	"	-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	"
175		"	-	-	"	"
176		"	-	-	"	"
177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78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79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0		"	-	-	"	"
181		"	-	-	"	"
182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3		"	-	-	"	"
184		"	-	-	"	"
185		"	-	-	"	"
186		"	-	-	"	"
187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8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9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0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1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2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3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회복지시설)	2015. 8. 21.	-	-	2015. 9. 22.	"
194		"	-	-	"	"
195		"	-	-	"	"
196		"	-	-	"	"
197		"	-	-	"	"
198		"	-	-	"	"
199		"	-	-	"	"
200	소외계층 문화순회 (학교)	"	-	-	"	"
201		"	-	-	"	"
202		"	-	-	"	"
203		"	-	-	"	"
204	주목할 만한 작가상	2015. 10. 29.	-	주목할 만한 작가상	2016. 1. 26.	"
205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6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7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8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9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0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1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2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3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4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5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6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17	예술가창작 역량강화	2015. 11. 30.	-	예술가창작역량강화	2016. 2. 4.	지원배제
218	((기획형)해외레지 던스참가지원-1차)	"	-	예술가창작역량강화	"	"
219	한국예술	"	-	-	"	"
220	국제교류	"	-	-	"	"
221	(국제예술	"	-	-	"	"
222	교류지원-1차)	"	-	-	"	"
223	소외계층	2015. 12. 15.	-	-	2016. 2. 26.	"
224	문화순회	"	-	-	"	"
225	(사회복지시설)	"	-	-	"	"
226	소외계층	"	-	-	"	"
227	문화순회 (농산어촌)	"	-	-	"	"
228	소외계층 문화순회 (임대주택)	"	-	-	"	"
229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2015. 12. 17.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2016. 1. 19.	"
230		"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
231		"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
232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2015. 12. 22.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2016. 2. 25.	"
233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
234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
235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2016. 1. 6.	-	-	2016. 2. 5.	"
236		"	-	-	"	"
237		"	-	-	"	"
238		"	-	-	"	"
239	공연예술 행사지원	2016. 1. 15.	-	-	2016. 2. 25.	"
240		"	-	-	"	"
241		"	-	-	"	"
242		"	-	-	"	"
243		"	-	-	"	"
244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지원	2016. 1. 29.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2016. 3. 31.	"
245		"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
246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시범공연-일 반)	"	-	-	"	"
247		"	-	-	"	"
24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시범공연-어 린이청소년)	2016. 2. 19.	-	-	2016. 5. 4.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49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2016. 2. 25.	-	-	2016. 5. 9.	지원배제
250		"	-	-	"	"
251		"	-	-	"	"
252		"	-	-	"	"
253	장애인 문화예술 향 수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2016. 3. 4.	-	-	"	"
254	장애인 문화예술 향 수지원 - 장애인	"	-	-	2016. 5. 4.	"
255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	-	-	"	"
256	장애인 문화예술 향 수지원 - 장애인	"	-	-	"	"
257	문화예술 인력 역량강화 지원	"	-	-	"	"
258	장애인 문화예술 향 수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	-	-	"	"
259	공연예술 창작산실	2016. 3. 18.	-	-	2016. 5. 24.	"
260	육성지원 (연극-우수재공연-	"	-	-	"	"
261	일반 및 어린이청 소년)	"	-	-	"	"
262	창작뮤지컬	"	-	-	"	"
263	육성지원 (우수재공연)	"	-	-	"	"
264	한국예술 국제교류 (국제예술 교류지원-2차)	2016. 3. 31.	-	-	2016. 6. 7.	"
265		"	-	-	"	"
266		"	-	-	"	"
267		"	-	-	"	"
268		"	-	-	"	"
269		"	-	-	"	"
270		"	-	-	"	"
271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모집	2016. 4. 21.	-	-	2016. 5. 26.	"
272	한-영 리서치지원	2016. 5. 23.	-	-	2016. 6. 27.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73	공연예술스태프 (공연기획·경영 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6. 5. 24.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6. 6. 29.	지원배제
274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5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6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7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8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9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0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1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2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3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4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5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6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7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8	공연예술스태프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9	(무대기술스태프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90	전문인력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91	지원사업)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92	공연예술 창작산실	2016. 7. 22.	-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2016. 9. 21.	"
293	육성지원	"	-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	"
294	(음악,오페라-오 작교프로젝트)	"	-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	"
295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2016. 8. 31.	-	-	2016. 10. 5.	"
296	인문정신	-	-	인문정신온라인서비스	2015. 10. 8.	"
297	온라인서비스	-	-	인문정신온라인서비스	"	"
298	아트원씨어터 수 시 대관	-	-	-	2016. 8. 2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재구성

[별표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 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방방곡곡 문화공감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2015. 1. 6.	□□ (EL)	-	2015. 2. 3.	지원 배제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료 재구성

[별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

연번	시행 기관명	공모 사업명	공모 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2014. 5. 8.	지원(선정) 배제
2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3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2015. 12. 2.	"
4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5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6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7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8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9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10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11	문화체육 관광부	장한어머니상	2015. 4. 3.	-	장한 어머니상	2015. 5. 7.	"
12			"	-	장한 어머니상	"	"
13			"	-	장한 어머니상	"	"
14			"	-	장한 어머니상	"	"
15			"	-	장한 어머니상	"	"
16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2015. 6. 26.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2015. 11. 10.	"
17			"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	"
18		한글유공표창	2015. 7. 24.	-	한글유공표창	2015. 10. 9.	"
19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2015. 12. 8.	-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2015. 12. 28.	"
20		2017세계태 권도선수권대 회 조직위원	-	-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	2016. 3. 22.	"
21		제35회 세종 문화상 포상	2016. 2. 26.	-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2016. 5. 12.	"
22		시시콜콜 공모사업	2016. 6. 1.	-	시시콜콜 공모사업	2016. 7. 8.	"
23			"	-	시시콜콜 공모사업	"	"
24			"	-	시시콜콜 공모사업	"	"
25			"	-	시시콜콜 공모사업	"	"
26	-	전통예술 해 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2016. 3. 4.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2016. 3. 23.	지원(선정) 배제
27		전통풍물활성 화사업	2016. 4. 15.	-	전통풍물활성화사업	2016. 5. 20.	"
28			"	-	전통풍물활성화사업	"	"

연번	시행 기관명	공모 사업명	공모 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9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연지 원	2016. 5. 20.	-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연지원	2016. 7. 4.	"
30	-	운영자문위원	-	-	운영자문위원	2015. 8. 10.	"
31			-	-	운영자문위원	"	"
32	-	해외교류기획 사업	-	-	해외교류기획사업	2016. 7. 26.	"
33			-	-	해외교류기획사업	"	"
34	-	장애인문화예 술대상	2015. 8. 21.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2015년 10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별표 1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

연번	사업연도	지원배제 확정일시	지원사업명	지원배제대상	지원배제내용
1	2014	2014. 8. 25.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入	지원금 지원배제
2		2014. 11. 10.		-	“ㄱ”에서의 영화 ‘ㅇ’ 상영요청 거부
3	2015	2015. 4. 29.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ㄷ	지원금 지원배제
4				ㄱ	
5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부당 선정배제 명세

연번	사업연도	분야	장르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2014	문학	소설	-	-	-
2				-	-	-
3			시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표	-	-
10	2015	문학	소설	-	-	-
11				-	-	-
12			시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수필	-	-	-
18			교양	-	-	-
19		교양	철학/심리학/ 윤리학	-	-	-
20				-	-	-
21			사회과학	-	-	-
22				-	-	-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 재구성

[별표 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계약 이윤 등 재산정 명세

1. 문체부가 검토한 사후원가계산 결과 및 실제 지급금액

(단위: 원)

구분	비목	문체부	외교부	공예진흥원	계	비고
사후원가 계산금액	(1) 재료비	-	-	-	-	
	(2) 노무비	15,000,000	-	-	15,000,000	
	(3) 경비 계	1,735,633,690	651,340,728	345,502,820	2,732,477,238	
	1) 직접경비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2) 외주비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4) 계	1,750,633,690	651,340,728	345,502,820	2,747,477,238	(1)+(2)+(3)
	(5) 일반관리비	52,519,010	19,540,221	10,365,084	82,424,315	(4)×3%
	(6) 대행수수료	175,063,369	65,134,072	34,550,282	274,747,723	(4)×10%
	(7) 합계	1,978,216,069	736,015,021	390,418,186	3,104,649,276	(4)+(5)+(6)
	(8) 부가가치세	197,821,606	73,601,502	39,041,818	310,464,926	(7)×10%
	(9) 총원가	2,176,037,675	809,616,523	429,460,004	3,415,114,202	(7)+(8)
(10) 계약금액		2,206,000,000	811,679,000	429,350,000	3,447,029,000	
실제 지급금액¹⁾(A)		2,176,037,675	809,616,523	429,350,000	3,415,004,198	Min[(9), (10)]

주: 1.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후원가계산 결과 ‘(9) 총원가’와 ‘(10) 계약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용역대가 지급

2. 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기획재정부의 계약법규 해석에 따른 이윤 계상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후원가계산 결과

(단위: 원)

구분	비목	문체부	외교부	공예진흥원	계	비고
사후원가 계산금액	(1) 재료비	-	-	-	-	
	(2) 노무비	15,000,000	-	-	15,000,000	
	(3)경비 계	1,735,633,690	651,340,728	345,502,820	2,732,477,238	1)+2)
	1) 직접경비	-	-	-	-	
	2) 외주비	1,735,633,690	651,340,728	345,502,820	2,732,477,238	
	(4) 계	1,750,633,690	651,340,728	345,502,820	2,747,477,238	(1)+(2)+(3)
	(5) 일반관리비	52,519,010	19,540,221	10,365,084	82,424,315	(4)×3%
	(6) 이윤	6,751,901	1,954,022	1,036,508	9,742,431	[(4)-2)+(5)]×10%
	(7) 합계	1,809,904,601	672,834,971	356,904,412	2,839,643,984	(4)+(5)+(6)
	(8) 부가가치세	180,990,460	67,283,497	35,690,441	283,964,398	(7)×10%
	(9) 총원가	1,990,895,061	740,118,468	392,594,853	3,123,608,382	(7)+(8)
(10) 계약금액		2,206,000,000	811,679,000	429,350,000	3,447,029,000	
적정 용역대가(B)		1,990,895,061	740,118,468	392,594,853	3,123,608,382	Min[(9), (10)]

주: 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실제 지급금액과 적정 지급금액 등 차이[1-2]

(단위: 원)

구분	비목	문체부	외교부	공예진흥원	계	비고
사후원가 계산금액	(1) 재료비	차이 없음				
	(2) 노무비					
	(3) 경비 계					
	1) 직접경비					
	2) 외주비					
	(4) 계					
	(5) 일반관리비					
	(6) 이윤	168,311,468	63,180,050	33,513,774	265,005,292	
	(7) 합계	168,311,468	63,180,050	33,513,774	265,005,292	
	(8) 부가가치세	16,831,146	6,318,005	3,351,377	26,500,528	
	(9) 총원가	185,142,614	69,498,055	36,865,151	291,505,820	
(10) 계약금액		차이 없음				
과다 지급금액		185,142,614	69,498,055	36,755,147	291,395,816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3]

크리에이터의 재직 실태 내역

순번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입사일	퇴사일	근무형태 (신분)	학기 중 재직기간
1	-	-	-	2015. 6. 24.	2016. 7. 1.	주중 40시간 (계약직원)	4개월
2	-	-	-	2016. 5. 2.	2017. 1. 20.	주중 12시간+자율근무	9개월
3	-	-	-	2016. 9. 1.	-	주중 30시간 근무	5개월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재구성

[별표 14]

크리에이터가 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에 재직한 내역

연번	성명	입주기업명	입주일자	퇴실일자	직위	비고
1	-	-	2016. 1. 1.	2016. 12. 31.	직원	4인 기업
2	-	-	2016. 1. 1.	2016. 12. 31.	대표	1인 기업
3	-	-	2016. 1. 1.	2016. 12. 31.	대표	1인기업
4	-	-	2016. 1. 1.	2017. 12. 31. (예정)	대표	
5	-	-	2016. 1. 1.	2017. 12. 31. (예정)	대표	
6	-	◇ ◇	2016. 1. 1.	2017. 12. 31. (예정)	대표	
7	-	-	2016. 1. 1.	2016. 12. 31.	대표	1인 기업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별표 15]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참여횟수 내역

연번	성명	참여신청	참여횟수	비고
1	-		15	
2	-	×	0	
3	-	×	0	
4	-		14	
5	-		33	
6	-		11	
7	-		3	
8	-	×	5	
9	-		18	
10	-		19	
11	-		10	
12	-		12	
13	-	×	0	
14	JF		43	
15	-		15	
16	-		5	2016. 7. 1. 자퇴
17	-		15	
18	-		11	
19	-		31	
20	-	×	4	
21	-		30	
22	-	×	0	
23	-		35	
24	-		12	
25	-		33	
26	-	×	0	
27	-		9	
28	-		13	
29	-		11	2016. 7. 1. 자퇴
30	-		10	
31	-	×	21	
32	-	×	5	
33	-		4	
34	-		3	
35	-	×	11	
36	-		17	
37	-		31	
38	-		32	
39	-		9	
40	JG		45	
41	-		11	
42	-		11	
43	-		25	
44	JD		0	2016. 4. 26. 휴학
45	-		16	
합 계		참여 34명, 미참여 10명		

주: 랩장 주도형 프로젝트에 대한 학칙 등의 수행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고, 랩장과 크리에이터가 협의하여 주1회 면담하는 형식으로 과정을 진행하였고, 학습과정은 1학기(13회), 2학기(15회), 3학기(11회) 실시 전체 39회. 단, 랩장 중 ED 감독(ㄱㄹ프로젝트)의 경우는 전체 51회 실시(주 2회 실시 12회)하였고, 크리에이터 JF과 JG는 ㄱㄹ 프로젝트에 참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6]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 수행 내역

연번	성명	전임감독 점검 횟수 (10개월)			비고
		DX	DY	합계	
1	-	10	0	10	
2	-	10	1	11	2017년 미등록
3	-	12	1	13	
4	-	4	10	14	
5	-	4	9	13	
6	-	3	9	12	
7	-	8	0	8	
8	-	4	7	11	2017년 미등록
9	-	9	5	14	
10	-	2	5	7	
11	-	4	8	12	
12	-	4	8	12	2017년 미등록
13	-	3	8	11	
14	-	3	11	14	
15	-	3	11	14	2016. 7. 1. 자퇴
16	-	3	11	14	2017년 평가탈락
17	-	10	11	21	
18	-	11	0	11	
19	-	12	1	13	2017년 평가탈락
20	-	12	3	15	
21	-	12	0	12	
22	-	16	2	18	
23	-	14	0	14	
24	-	3	11	14	
25	-	11	0	11	
26	-	2	10	12	
27	-	10	2	12	
28	-	10	3	13	2016. 7. 1. 자퇴
29	-	10	3	13	
30	-	12	2	14	
31	-	13	0	13	2016년 평가탈락
32	-	10	2	12	
33	-	1	10	11	
34	-	9	1	10	
35	-	2	11	13	2017년 미등록
36	-	2	3	5	
37	-	9	3	12	
38	-	9	1	10	
39	-	10	0	10	
40	-	11	2	13	
41	-	2	10	12	
42	-	10	1	11	
43	JD	10	0	10	2016. 4. 26. 휴학
44	-	2	1	3	
45	-	11	1	12	10명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7]

경제성 분석 재산정 결과

구분	당초	재산정	비고(판단기준 등)
편익/비용(B/C) 비율	1.0929	0.9522	B/C 비율 < 1.0이면 타당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29,900백만 원	-15,945백만 원	NPV < 0이면 타당성 없음
내부수익률(IRR)	6.70%	4.90%	IRR < 5.5%이면 타당성 없음
공연 매출	연간 982백만 원	연간 778백만 원	소규모 공연장 수입 산정에 있어 중규모 공연장 공연횟수(304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2014년 공연예술실태조사」를 근거로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서울지역 공연장 공연횟수(241회)로 조정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연간 6,506백만 원	연간 3,899백만 원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르면 부가가치 창출효과 산정 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율(소매업 0.55742, 음식업 0.35194)을 적용하기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부가가치 구성비중 영업임여와 인건비 비중을 고려한 부가가치율(소매업 0.3143, 음식업 0.3165)을 적용하므로 이에 따라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조정
주차장 수입	연간 196백만 원	-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르면 주차장은 벤처단지 등 해당 건물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기본시설이므로 주차장 수입을 편익에서 제외
임대수입	연간 4,159백만 원	연간 3,635백만 원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수익을 편익으로 측정함에 따라 공연장 임대수입(연구용역보고서상 분장실, 장비적재실 등 공연 부속시설 등을 포함한 공연장 면적이 1,851㎡이므로 당초 면적 990㎡에서 조정)을 제외하는 것이 맞으므로 전체 임대수입 조정
총사업비	173,829백만 원	188,350백만 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등에 따라 총사업비에 예비비를 반영 ^{주)} 하고 리모델링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총사업비 조정

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등에 따르면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비용항목으로 예비비(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사업비의 10% 적용하여 추정)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자료: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 등 감사자료 재구성

[별표 18]

연구용역보고서상 예상 편익과 실제 발생 편익 비교

구분	연구용역보고서상 예상 편익	실제 발생 편익
벤처 지원 효과	벤처단지 입주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672억 원	입주기업의 2016년 매출액은 350억 원 (예상 매출액의 약 52%)
	벤처단지 입주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은 112억 원	벤처단지 입주 후 신규 창출된 매출액(입주 후인 2016년 매출액 350억 원과 입주 전인 2015년 매출액 338억여 원과 차이)은 12억여 원 (예상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의 약 10%)
도소매 시설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K-Product(소매)와 한류음식문화밸리(음식)의 연간 매출액은 123억여 원	판매관과 한식체험관의 2016년 매출액은 약 5억여 원(예상 연간 매출액의 4% ¹⁾)
공연장 운영 수익	연간 공연장 매출액은 9억여 원, 연간 공연 원가는 6억여 원, 연간 공연 수익은 3억여 원	2016년에 총 21개 벤처단지 입주업체가 입장료를 무료로 cel스테이지 공·시연을 하여 공연 매출액은 미발생 ²⁾

- 주: 1. K-Product 판매(소매)공간이 당초 2,209.74㎡에서 740㎡(당초 판매공간의 33.4%)로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매출액이 예상 연간 매출액 123억 원의 4%인 약 5억여 원은 적은 수준임
2. 공연장 운영 주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에 cel 멤버십 우선의 최적화된 맞춤형 융복합 콘텐츠 창작 공간 지원을 목표로 대관료 전면 무료정책을 추진하여 영세 창작자의 융복합 콘텐츠 창작 지원을 강화하는 운영 방향을 설정

자료: 문화창조벤처단지·K-Style Hub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 등 감사자료 재구성

[별표 19]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산 미완료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1	2015	2015 MICE산업 육성 지원	-	2015. 1.	2016. 6.	20,196	14,853	5,343	2016. 10. 14.
2	2014	2014 한국관광 해외광고	-	2014. 1.	2014. 12.	27,600	26,824	776	2015. 7. 17.
3	2014	2014 MICE산업 육성	-	2014. 1.	2014. 12.	18,850	18,129	721	2016. 4. 10.
4	2015	2015 한국관광 해외광고	-	2015. 1.	2015. 12.	26,300	25,633	667	2016. 9. 12.
5	2013	2013년 중화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	한국관광공사	2013. 1.	2014. 3.	8,300	7,909	391	2014. 6. 19.
6	2014	2014년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사업	-	2014. 1.	2014. 12.	3,800	3,532	268	2015. 10. 27.
7	2015	2015년 여름 국내관광활성 화 및 지역 관광개선 지원	-	2015. 7.	2015. 12.	4,250	4,016	234	2016. 5. 25.
8	2014	2014년 중화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	-	2014. 1.	2014. 12.	7,200	6,971	229	2015. 6. 25.
9	2015	2015년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	2015. 1.	2015. 12.	1,720	1,505	215	2016. 2. 29.
10	2013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	2013. 1.	2014. 12.	1,855	1,686	169	2015. 2. 25.
11	2014	2014년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	-	2014. 1.	2014. 12.	2,294	2,141	153	2015. 4. 15.
12	2014	2014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	2014. 1.	2015. 4.	6,255	6,136	119	2015. 6. 26.
13	2014	2014MICE산업육성지원경쟁력 강화 지원	-	2014. 11.	2015. 4.	325	221	104	2015. 7. 15.
14	2013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공모 사업	-	2013. 8.	2014. 3.	667	564	103	2015. 1. 27.
15	2015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 개선지원(관광수용태세개선)	-	2015. 3.	2015. 12.	800	717	83	2016. 5. 31.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16	2015	2015년 관광주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지역협의회연계)	-	2015. 3.	2015. 12.	1,500	1,423	77	2016. 2. 29.
17	2014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관리운영	-	2014. 1.	2014. 12.	1,000	927	73	2016. 1. 22.
18	2013	2013 작은공동체 전통예술 잔치	-	2013. 4.	2014. 4.	300	235	65	2015. 1. 13.
19	2014	2014 관광여건 및 전달체계 개선	-	2014. 1.	2014. 12.	800	737	63	2015. 2..24.
20	2014	2014년 지역관광 활성화	-	2014. 1.	2014. 12.	950	889	61	2015. 2. 26.
21	2014	2014년 가을 관광주간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4. 7.	2014. 11.	1,050	998	52	2015. 1. 12.
22	2014	2014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	2014. 1.	2015. 3.	1,170	1,118	52	2015. 9. 23.
23	2015	2015년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사업	-	2015. 1.	2015. 12.	2,400	2,349	51	2016. 10. 24.
24	2014	2014년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2014. 2.	2015. 1.	798	748	50	2015. 8. 12.
25	2014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사업	-	2014. 1.	2014. 12.	185	138	47	2015. 7. 15.
26	2013	지방관광 활성화	-	2013. 11.	2014. 2.	850	808	42	2014. 4. 9
27	2015	2015 소외계층 관광 활성화	-	2015. 1.	2016. 3.	1,500	1,461	39	2016. 6. 24.
28	2013	2013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	2013. 1.	2013. 12.	2,634	2,596	38	2014. 3. 25.
29	2015	2015 전통언희 활성화	-	2015. 5.	2015. 12.	662	625	37	2016. 1. 29.
30	2015	2015년 관광주간 지역 관광 수용태세 점검 사업	-	2015. 1.	2015. 12.	285	248	37	2016. 8. 24.
31	2015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관광주간)	-	2015. 1.	2015. 12.	4,410	4,378	32	2016. 5. 20.
32	2015	우수프로그램 순회사업 국공립 전시(코리아나우)	-	2015. 11.	2016. 5.	209	180	29	2016. 6. 14.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33	2015	한류관광 활성화	-	2015. 1.	2016. 3.	2,100	2,071	29	2016. 10. 26.
34	2013	2013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	-	2013. 2.	2014. 3.	400	371	29	2014. 6. 23.
35	2014	2014년 취약계층 복지관광	-	2014. 1.	2014. 12.	400	372	28	2015. 5. 28.
36	2014	재한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 활용 FIT 활성화 홍보 사업	-	2014. 1.	2014. 12.	150	123	27	2015. 3. 31.
37	2015	2015년 관광안내서비스 개 선사업	-	2015. 1.	2015. 12.	2,284	2,257	27	2016. 7. 14.
38	2014	은퇴계층활용 전통예술 관광자원화	-	2014. 3.	2015. 4.	200	176	24	2015. 8. 21.
39	2013	2013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	2013. 2.	2014. 3.	967	944	23	2014. 5. 22.
40	2013	2013 전통예술 고궁공연	-	2013. 2.	2014. 3.	900	878	22	2014. 11. 20.
41	2014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관광 자원화	-	2014. 3.	2015. 2.	1,128	1,107	21	2015. 7. 2
42	2015	2015 글로벌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재단	2015. 1.	2015. 12.	2,500	2,479	21	2016. 2. 29.
43	2014	2014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	-	2014. 1.	2014. 12.	3,340	3,320	20	2015. 3. 12.
44	2014	2014 MICE산업 인력 양성 및 업계 지원	-	2014. 1.	2014. 12.	800	780	20	2015. 6. 26.
45	2014	2014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	2014. 1.	2015. 12.	150	132	18	2016. 3. 8.
46	2015	2015년 항공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여객행동특성 조사 사업	-	2015. 6.	2015. 12.	200	183	17	2016. 1. 25.
47	2013	은퇴계층활용관광자원화사업	-	2013. 2.	2014. 3.	200	184	16	2014. 12. 22.
48	2015	2015 전통품물활성화	-	2015. 3.	2015. 12.	400	384	16	2016. 1. 27.
49	2013	2013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	2013. 10.	2013. 12.	34	19	15	2014. 2. 14.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50	2015	2015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	-	2015. 1.	2015. 12.	450	436	14	2016. 2. 24.
51	2015	2015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사업	-	2015. 4.	2016. 2.	100	86	14	2016. 3. 27.
52	2014	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사업	-	2014. 1.	2015. 3.	100	87	13	2015. 6. 8.
53	2014	2014 PCO업계 양성 강화	-	2014. 1.	2014. 12.	410	397	13	2015. 4. 1.
54	2015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	-	2015. 1.	2015. 12.	610	599	11	2016. 4. 6.
55	2013	2013 관광의 별 선정 및 시상	-	2013. 12.	2014. 12.	300	290	10	2015. 4. 28.
56	2012	전통한옥 종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2012. 2.	2013. 12.	733	724	9	2016. 4. 15.
57	2014	크루즈 관광 활성화 주변 관광지 수용태세 점검	-	2014. 1.	2014. 12.	160	151	9	2015. 4. 28.
58	2013	일본 BS후지 한국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2013. 4.	2013. 9.	150	142	8	2013. 12. 9.
59	2015	여행업계 교류 및 판촉 지원	-	2015. 8.	2015. 12.	700	692	8	2016. 3. 31.
60	2015	2015 PCO업계 양성 강화	-	2015. 1.	2015. 12.	425	417	8	2016. 4. 12.
61	2015	한국관광 100선 및 한국관광의 별' 사업	-	2015. 3.	2015. 12.	500	493	7	2016. 3. 7.
62	2014	2014 항공여객행동특성 조사	-	2014. 5.	2014. 12.	200	193	7	2015. 1. 26.
63	2014	관광숙박업 안전매뉴얼 개발	-	2014. 1.	2014. 12.	200	193	7	2016. 5. 16.
64	2014	2014년 관광안내소 모니터링 평가사업	-	2014. 4.	2014. 12.	150	143	7	2016. 3. 18.
65	2014	2014 내나라여행박람회	-	2014. 2.	2014. 12.	756	750	6	2015. 1. 30.
66	2015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추천 가볼만한 곳	-	2015. 1.	2015. 12.	220	214	6	2016. 5. 20.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67	2015	2015년 전통고궁공연 관광 상품화	-	2015. 4.	2016. 3.	900	894	6	2016. 7. 18.
68	2015	K-POP 콘서트 개최 (추경)	-	2015. 8.	2015. 12.	1,800	1,795	5	2016. 9. 20.
69	2014	2014년 관광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사업	-	2014. 4.	2014. 10.	60	55	5	2015. 5. 13.
70	2015	2015 글로벌마이스인사이트 발간 지원	-	2015. 1.	2015. 12.	130	125	5	2016. 2. 20.
71	2015	2015년 관광주관 국민참여 실태조사	-	2015. 5.	2015. 12.	100	96	4	2016. 1. 18.
72	2013	동남아시아 여행사 관계자 초청 사업	-	2013. 9.	2013. 9.	30	26	4	2013. 12. 24.
73	2014	2014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및 서비스 인증사업	-	2014. 1.	2014. 12.	700	696	4	2015. 5. 15.
74	2013	2013년 관광안내표기 개선 사업	-	2013. 1.	2013. 12.	100	96	4	2014. 2. 21.
75	2014	권역별 해외홍보 지원	-	2014. 1.	2014. 12.	330	326	4	2015. 2. 28.
76	2015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해외 광고 및 홍보마케팅	-	2015. 8.	2015. 12.	7,000	6,996	4	2016. 3. 9.
77	2015	2015 시도국제관광전 개최 지원	-	2015. 1.	2015. 12.	302	298	4	2016. 2. 29.
78	2013	2013 창작 국악극 어워즈사업	-	2013. 2.	2014. 3.	300	297	3	2014. 5. 26.
79	2014	2014년 관광통계 관리 및 관광시장 마케팅 조사	-	2014. 1.	2014. 12.	400	397	3	2015. 2. 26.
80	201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야영장실태조사)	-	2015. 2.	2015. 12.	203	200	3	2016. 2. 22.
81	2015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활동지원	-	2015. 1.	2015. 12.	200	197	3	2016. 2. 29.
82	2014	2014 글로벌 MICE 인사이트 발간	-	2014. 3.	2015. 1.	130	127	3	2015. 3. 3.
83	2013	2013년 지역축제 육성	-	2013. 1.	2013. 12.	250	247	3	2014. 4. 21.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84	2014	2014 전통예술 고궁공연	-	2014. 3.	2015. 3.	900	898	2	2015. 8. 18.
85	2014	2014 가을 관광주간 국민 참여 실태조사	-	2014. 5.	2014. 12.	75	73	2	2015. 3. 17.
86	2015	2015 한국음식관광산업화	-	2015. 3.	2016. 5.	1,550	1,548	2	2016. 7. 29.
87	2015	2015년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개선사업	-	2015. 1.	2015. 12.	150	148	2	2016. 6. 7.
88	2014	2014 글로벌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사업	한국관광재단	2014. 3.	2014. 12.	2,800	2,798	2	2015. 3. 2.
89	2015	2015 MICE업계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	2015. 1.	2015. 12.	800	798	2	2016. 4. 12.
90	2014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개세미나	-	2014. 1.	2014. 1.	8	6	2	2014. 2. 14.
91	2014	2014 추천 내나라 여행상품	-	2014. 1.	2014. 12.	100	99	1	2015. 4. 15.
92	2015	2015 국내관광 전략 수립 및 실행 사업	-	2015. 3.	2015. 12.	50	49	1	2016. 3. 7.
93	2015	2015 추천 내나라 여행상품	-	2015. 1.	2015. 12.	135	134	1	2016. 8. 24.
94	2014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2014. 1.	2015. 5.	350	349	1	2015. 8. 10.
95	2015	2015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	2015. 1.	2015. 12.	300	299	1	2016. 12. 9.
96	2015	국민여가캠핑장조성(홈페이 지운영)사업	-	2015. 3.	2015. 12.	30	29	1	2016. 2. 22.
97	2015	기업회의 유니크베뉴 선정 사업	-	2015. 1.	2015. 12.	48	47	1	2016. 4. 12.
98	2014	한국 지역축제 실태조사	-	2014. 8.	2016. 3.	300	299	1	2016. 9. 5.
99	2012	은퇴계층활용 전통예술관광 자원화	-	2012. 10.	2012. 12.	200	199	1	2013. 2. 6.
100	2013	스페인 Festival Asia 참가	-	2013. 7.	2013. 10.	27	26	1	2013. 10. 25.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101	2015	2015 밀라노엑스포 한식 테마행사 사업	-	2015. 7.	2015. 8.	50	49	1	2015. 8. 31.
102	2013	벨기에 거문고 음반제작	-	2013. 1.	2013. 3.	6	5	1	2013. 3. 21.
103	2015	201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	2015. 5.	2015. 12.	200	200	-	2016. 2. 16.
104	2013	LA 한인축제 40주년 기념 국 악방송 특집공개방송	-	2013. 9.	2013. 10.	30	30	-	2013. 11. 1.
105	2013	프랑스 남부 초청 전통예술 공연개최	-	2013. 9.	2013. 10.	37	37	-	2013. 11. 30.
106	2013	사우디 국립박물관 개막식 공연	-	2013. 11.	2013. 12.	19	19	-	2014. 1. 2.
107	2013	호놀룰루 페스티벌 참가 및 미주 한인이주 110주년 기념공연	-	2013. 2.	2013. 3.	37	37	-	2013. 5. 2.
108	2013	제8회 워싱턴 한미문화축제	-	2013. 9.	2013. 10.	20	20	-	2013. 11. 12.
109	2015	2015 내나라 여행 박람회	-	2015. 1.	2015. 12.	756	756	-	2016. 2. 29.
110	2013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공모 사업	-	2016. 6.	2013. 8.	100	100	-	2013. 9. 5.
111	2015	2015 청도 한식특강 및 한국 요리경연대회	-	2015. 1.	2015. 12.	40	40	-	2016. 2. 1.
112	2015	2015 아름다운 한국음식 홍보전	-	2015. 1.	2015. 12.	60	60	-	2015. 8. 31.
113	2013	대만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 뤄관청스 광주' 추진지원	-	2013. 6.	2013. 12.	30	30	-	2014. 1. 31.
114	2014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촉진 사업	-	2014. 1.	2014. 12.	300	300	-	2015. 5. 31.
115	2014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국제교류 활성화 학교지원 사업	-	2014. 1.	2014. 12.	100	100	-	2015. 3. 31.
116	2015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촉진	-	2015. 1.	2015. 12.	400	400	-	2016. 7. 20.
117	2015	2015년 행복바라미 문화대 축전	-	2015. 3.	2015. 7.	200	200	-	2015. 7. 27.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118	2013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행사	-	2013. 3.	2013. 5.	200	200	-	확인안됨
119	2013	전주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	2013. 5.	2014. 2.	500	500	-	2014. 2. 18.
120	2015	2015 전북브랜드 상설공연	-	2015. 1.	2015. 12.	700	700	-	2016. 1. 20.
121	2013	북방외교 25주년 기념 한국 전통 문화의 밤 형가리 공연	-	2013. 12.	2014. 2.	30	30	-	2013. 3. 28.
122	2013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	-	2013. 10.	2013. 12.	300	300	-	2014. 1. 30.
123	2013	나이지리아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한국의날 기념 공연	-	2013. 11.	2013. 11.	40	40	-	확인안됨
124	2013	인도 뭄바이 MOOD INDIGO 축제 초청 봉산탈춤공연	-	2013. 12.	2014. 1.	30	30	-	2014. 1. 13.
125	2015	제1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2015. 1.	2015. 12.	400	400	-	2016. 2. 2.
126	2013	시애틀 Seafair Festival 참가	-	2013. 7.	2013. 7.	26	26	-	2013. 10. 14.
127	2014	2014 전주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	2014. 1.	2014. 12.	700	700	-	2015. 2. 24.
128	2013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 참가	-	2013. 2.	2013. 6.	50	50	-	2013. 12. 12.
129	2013	제1회 미국 동부지부 국악 대제전 명인열전	-	2013. 11.	2013. 11.	50	50	-	2013. 12. 12.
130	2013	루마니아 피아트라넬 페스티벌 참가	-	2013. 7.	2013. 8.	50	50	-	2013. 8. 21.
131	2014	민간 전문가 중심의 관광분야 과제발굴 및 규제개선 사업	-	2014. 12.	2015. 3.	30	30	-	2016. 11. 8.
132	2013	201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사업	-	2013. 5.	2014. 1.	100	100	-	2014. 3. 31.
133	2015	2015년 유원시설분야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015. 1.	2015. 12.	30	30	-	2016. 10. 11.
134	2015	2015년 관광기념품공모전 사업	-	2015. 1.	2015. 12.	554	554	-	2016. 4. 5.

연번	회계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년월)	사업 종료(년월)	예산액	집행액	반납 예상액	정산서 제출일
135	2013	2013년 호텔종사자 특성화 교육 및 교육기부	-	2013. 10.	2014. 1.	27	27	-	2016. 3. 15.
136	2014	2013년도 호텔업 운영현황 발간사업	-	2014. 4.	2014. 8.	9	9	-	2015. 4. 13.
137	2013	2013년 BBB운동-언어불편 해소 사업	-	2013. 1.	2013. 12.	500	500	-	2015. 5. 15.
138	2014	2014년 비비비(BBB)운동	-	2014. 1.	2014. 12.	580	580	-	2015. 5. 15.
139	2015	2015년 외국인 언어불편 해소(BBB) 지원사업	-	2015. 1.	2015. 12.	600	600	-	2016. 4. 20.
140	2014	2014년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개선사업	-	2014. 1.	2014. 12.	100	100	-	2015. 4. 23.
141	2014	2014 관광주거사후 조치 관련 관광안전(관광경찰) 홍보	-	2014. 1.	2014. 12.	20	20	-	2015. 4. 15.
142	2015	2015 한국컨벤션학회 보조 사업	-	2015. 5.	2015. 12.	55	55	-	2016. 4. 19.
143	2014	2014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	2014. 4.	2014. 12.	280	280	-	2015. 2. 27.
144	2014	2014 한국컨벤션학회 보조 사업	-	2014. 1.	2014. 12.	55	55	-	2015. 4. 9.
145	2013	2013 해인아트프로젝트	-	2013. 1.	2013. 12.	500	500	-	2014. 4. 9.
합계						203,091	192,048	11,043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0]

지난 3년간 나라장터 견적공고 미실시 수익계약명세

(기간: 2014. 1. 1. ~ 2016. 12. 3., 단위: %, 원, 개)

계약일자	견적공고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예정가격	추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견적 업체수
2014. 2. 18.	창의적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 위탁공고	-	23,000,000	20,909,091	18,000,000	78	2
2014. 3. 20.	2014년 이달의 우수게임 홍보영 상 제작·배포 견적공고	-	25,000,000	22,727,273	23,980,000	96	2
2014. 4. 25.	2014년 외국어교육 위탁용역계 약 견적공고	-	26,000,000	23,636,364	11,600,000	45	5
2014. 5. 12.	기술료 징수를 위한 2013년 매 출조사	-	29,000,000	26,363,636	26,400,000	91	3
2014. 5. 22.	해외 음악페스티벌 뮤지션 참가 지원(6월) 위탁용역 견적공고	-	27,400,000	24,909,091	21,037,500	77	1
2017. 5. 27.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갈등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견 적 공고	-	25,000,000	22,727,273	24,700,000	99	1
2014. 5. 28.	한국콘텐츠진흥원(본원) 사무기 기 임차계약 견적공고	-	25,000,000	22,727,273	24,250,000	97	1
2014. 6. 24.	20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위탁용역	-	27,000,000	24,545,455	24,300,000	90.	1
2014. 5. 29.	해외 음악페스티벌 뮤지션 참가 지원 위탁용역 견적공고	-	25,000,000	22,727,273	18,502,330	74	1
2014. 7. 29.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종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위탁용역 공고	-	30,000,000	27,272,727	30,000,000	100	1
2014. 7. 4.	콘텐츠산업 시장전망예측 계량 모형 구축 연구용역 견적공고	-	30,000,000	27,272,727	27,200,000	92	2
2014. 7. 17.	2014년 문화산업전문회사 실태 조사 위탁기관 선정 견적공고	-	30,000,000	27,272,727	28,600,000	96	1
2014. 7. 29.	해외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사례연구 용역	-	24,000,000	21,818,182	21,828,182	91	1
2014. 7. 23.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자 출입 및 안내 시스템 설치	-	29,500,000	26,818,182	28,446,000	96	2
2014. 9. 3.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25,000,000	22,727,273	24,500,000	98	1
2014. 9. 1.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방안 연구용역	-	25,000,000	22,727,273	25,000,000	100	1
2014. 9. 26.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 제작 공방(3D 랩) 기술지원 및 운영 사업자 선정 견적공고	-	30,000,000	27,272,727	27,000,000	90	2
2014. 9.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기경영목 표 수립 위탁용역 견적공고	-	28,000,000	25,454,545	28,000,000	100	1
2014. 10. 1.	KOCCA 인재육성 체계 및 프로 그램 개발 위탁용역 견적공고	-	25,000,000	22,727,273	22,490,000	90	2
2014. 11. 6.	중국 음악시장 현황 및 음악 비 즈니스 실태조사 위탁용역 공고	-	30,000,000	27,272,727	29,500,000	98	1
2014. 10. 17.	UHD방송 도입과 방송영상콘텐 츠 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견적공고	-	23,800,000	21,636,364	23,800,000	100	2

계약일자	건적공고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예정가격	추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건적 업체수
2014. 10. 20.	방송광고 시장 변화와 외주제작 시스템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용역 건적공고	-	23,800,000	21,636,364	23,800,000	100	2
2014. 10. 17.	방송영상콘텐츠 표준제작비 산 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방법 연 구 용역 건적공고	-	23,800,000	21,636,364	23,800,000	100	1
2014. 11. 1	수출실무워크숍 및 찾아가는 비 즈데스크 행사 운영(통역) 위탁 용역	-	29,000,000	26,363,636	29,000,000	100	1
2014. 11. 5.	기술로징수 2013년 매출 조사현장실사	-	30,000,000	27,272,727	28,600,000	96	1
2014. 11. 20.	글로벌콘텐츠센터운영 사후 성 과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용역 공고	-	25,000,000	22,727,273	24,000,000	96	1
2014. 11. 25.	2014년 금융투자지원업무 홍보 물 제작 및 배포사업 건적서제출 공고	-	30,000,000	27,272,727	29,722,000	99	2
2014. 12. 8.	DISCOP Istanbul 2015 참가사숙 박 지원 및 한국공동관운영 위탁 건적공고	-	30,000,000	27,272,727	25,806,000	86	1
2015. 2. 3.	K-Story 일본 진출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 운영	-	25,000,000	22,727,273	24,700,000	99	2
2015. 4. 3.	이달의 우수 게임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위탁용역사 선정	-	28,000,000	25,454,545	27,900,000	100	2
2015. 4. 9.	방송 포맷 수출입 현황 조사 연 구(2011~2014)	-	30,000,000	27,272,727	25,400,000	85	2
2015. 4. 23.	2015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실태 조사	-	30,000,000	27,272,727	29,000,000	97	1
2015. 4. 16.	콘텐츠가치평가연계정책금융제 도활성화방안연구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30,000,000	100	1
2015. 4. 28.	콘텐츠가치평가 및 산업 정보DB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공고	-	30,000,000	27,272,727	29,900,000	100	1
2015. 4. 22.	신진 디자이너 판로개척 사업 홍보 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9,480,000	98	1
2015. 4. 22.	신진 디자이너 및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8,160,000	94	1
2015. 5. 6.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7,000,000	24,545,455	27,000,000	100	1
2015. 5. 13.	2015년 해외전문 라이선싱 교육 위탁용역 공고	-	30,000,000	27,272,727	29,683,500	99	1
2015. 5. 14.	상해TV페스티벌 해외 쇼케이스 운영	-	25,000,000	22,727,273	24,000,000	96	2
2015. 5. 27.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진 출 전략 연구 위탁용역	-	27,000,000	24,545,455	27,000,000	100	1
2015. 5. 29.	방송수출전략리포트분석및트렌 드연구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9,700,000	99	2
2015. 5. 26.	문화가 있는날 스타트업 전시 설 치 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9,900,000	100	1
2015. 6. 9.	제3차한중문화산업포럼 운영위탁용역	-	25,000,000	22,727,273	23,000,000	92	2

계약일자	건적공고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예정가격	추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건적 업체수
2015. 7. 1.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고	-	25,000,000	22,727,273	19,980,000	80	2
2015. 6. 15.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부유럽 진 출방안 연구 위탁용역 공고	-	29,000,000	26,363,636	29,000,000	100	1
2015. 6. 22.	2015년분기별콘텐츠산업동향 분석보고서인쇄용역	-	24,000,000	21,818,182	23,990,000	100	2
2015. 6. 2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면광고 디 자인 및 브로슈어제작 위탁용역	-	23,000,000	20,909,091	22,759,000	99	2
2015. 6. 22.	콘텐츠산업정보시스템 수집 향 목 및 이용관리방안 연구용역	-	30,000,000	27,272,727	29,999,886	100	4
2015. 8. 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 위탁용역	-	25,000,000	22,727,273	25,000,000	100	1
2015. 8.10.	2015년완성보증업체실태조사 위탁용역	-	26,000,000	23,636,364	25,300,000	97	1
2015. 8.31.	해외 주요국 외주제작 산업 및 법제도 동향 위탁용역 건적공고	-	27,000,000	24,545,455	27,000,000	100	1
2015. 8. 31.	한 중 FTA 방송 콘텐츠 부문 대응 방안 연구 위탁용역 건적공고	-	27,000,000	24,545,455	27,000,000	100	1
2015. 8. 31.	제11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해외참가자 초청위탁용역	-	22,000,000	20,000,000	21,900,000	100	2
2015. 9. 7.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작 홍보브로슈어 제작 위탁용역	-	28,000,000	25,454,545	27,000,000	96	4
2015. 9. 24.	콘텐츠 해외 수출지원 계약 매뉴 얼 개정 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9,700,000	99	1
2015. 10. 19.	2015년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실태조사	-	30,000,000	27,272,727	28,600,000	95	2
2015.10. 28.	국산캐릭터상품카탈로그 DB시 스템개선 및 활용방안수립위탁 용역	-	30,000,000	27,272,727	30,000,000	100	1
2015.10.22.	2015 글로벌콘텐츠센터 성과 만족도 조사 위탁용역	-	25,000,000	22,727,273	22,450,000	90	1
2015.10. 27.	2015년 중남미경제협력문화콘 텐츠 카라반파견 운영 위탁용역	-	29,000,000	26,363,636	28,000,000	97	2
2015.12.1.	2015 단편애니메이션 해외영화 제출품 지원 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9,920,000	100	1
2015.12..2.	2015대중문화예술산업종합정 보시스템구축사업감리용역	-	27,500,000	25,000,000	24,750,000	90	1
2015.12. 7.	2015년 기술료 안내홍보자료 제 작 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6,900,000	90	2
2015.12. 9..	국내외 거점 한류융합 및 패션문 화마켓 활성화를 위한 한복 패 션쇼 위탁용역	-	28,000,000	25,454,545	27,500,000	98	1
2016. 8. 25.	국제공동제작 방송문화교류기 념식 개최 운영 위탁용역	-	22,000,000	20,000,000	21,274,000	97	1
2016. 6. 28.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이동식 냉 난방기 임차	-	26,180,000	23,800,000	25,323,000	97	1
2016. 3. . 4.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환경개선 위탁용역 (건적)입찰공고	-	30,000,000	27,272,727	29,000,000	97	2

계약일자	견적공고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예정가격	추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견적 업체수
2016. 3. 8.	2016대중음악성과만족도조사 위탁용역공고	-	30,000,000	27,272,727	29,000,000	97	2
2016. 2. 19.	문화창조아카데미 공간정비 및 교육시설 확충공사	《 《	30,000,000	27,272,727	28,930,000	96	1
2016. 2. 17.	문화창조아카데미해외전문가초 청강의운영위탁용역	-	30,000,000	27,272,727	28,500,000	95	4
2016. 1. 14.	2016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위탁용역	-	25,000,000	22,727,273	24,904,000	100	2
2016.1. 8.	문화창조벤처단지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	24,000,000	21,818,182	20,306,830	85	1
합 계			1,943,980,000		1,842,672,228	95	2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1]

3회 연속 동일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세

번호	평가위원		3회 이상 연속 지원사업 평가		
	이름	생년월일	세부 지원사업명	평가일시	횟수
1	-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2015. 9. 4.~10. 19.	3
2	-	-	투자유치마중물 지원	2016. 4. 20.~11. 21.	5
3	-	-			5
4	-	-		2016. 4. 20.~11. 21.	5
5	-	-		2016. 4. 20.~7. 14.	3
6	-	-		2016. 5. 11.~11. 21.	4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별표 22]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담 선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번	사업 명	사업시행자 명	금액	소관과	최초 지시자	지원계획 결정일	교부 결정일
1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학회	130	■과	제2차관 김종	2015. 10. 5.	2015. 12. 4.
2	체육계 비정상적 정상화 개혁추진 3년 성과와 향후 전략	☎☎학회	150	■과	제2차관 김종		2015. 11. 11.
3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체육 교류백서 발간	☎☎학회	100	■과	제2차관 김종		2015. 11. 11.
4	체육단체 통합 관련 포럼 개최	☎☎학회	90	■과	제2차관 김종		2015. 11. 5.
5	2015 체육교육한마당	☎☎학회	5	■과	제2차관 김종		2015. 10. 19.
6	2016년도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학회	100	■과	제2차관 김종	2016. 4. 29.	2016. 7. 28.
7	2016 한국스포츠과학자 통합 학술대회	☎☎학회	90	■과	제2차관 김종		2016. 6. 14.
8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54회 한 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학회	22	■과	제2차관 김종		2016. 9. 20.
9	제54회 체육주간 기념 제35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학회	12	■과	제2차관 김종		2016. 4. 29.
10	국제지구력 승마연맹 교류포럼	☎☎협회	120	◇과	제2차관 김종	2014. 11. 28.	2014. 12. 19.
	계		819				

주: 연번 1번, 9번 사업은 ■과 V, W, T가 담당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3]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 미정산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자	예산	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담당과
1	태권도원 개원계기 조기 활성화 지원	태권도 진흥재단	1,350	2014. 4월~ 2014. 12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 2017. 1. 9. 이후 2017. 1. 12.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1. 24. 정산 확정			
2	글로벌태권도 인재양성 - 상하이	태권도 진흥재단	21	2014. 5월~ 2014. 12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3	글로벌태권도 인재양성	태권도 진흥재단	629	2014. 4월~ 2015. 4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4	태릉 국제종합사격장 보수 보강	-	300	2014. 6월~ 2015. 5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사항 인수인계 누락			
5	12월 문화가 있는 날 '태권도 공연'	태권도 진흥재단	250	2015. 12월~ 2016. 2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 2017. 1. 9. 이후 2017. 1. 25.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2. 1. 정산 완료			
6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한 서울역 프로모션 광고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	200	2015. 9월~ 2016. 4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예산 자원종류 오인(적립금 사업 미인지) * 2017. 1. 9. 이후 2017. 1. 16.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1. 17. 정산 완료			
7	통합준비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추가교부	-	45	2016. 5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전임자 케이스포츠 대응에 따른 업무 과다로 정산 지연 * 2017. 1. 9. 이후 2017. 1. 20. 정산보고서 제출			
8	국민체력 100사업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대한장애인 체육회	391.5	2015. 10월~ 2016. 9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 사항 인수인계 누락 * 2017. 1. 9. 이후 2017. 1. 13.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1. 18. 정산 완료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자	예산	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담당과
9	리우하계올림픽 기획특 집 프로그램 제작지원	국민체육 진흥공단	700	2016. 6월~ 2016. 9월	미제출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 사항 인수인계 누락 * 2017. 1. 9. 이후 2017. 1. 25.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2. 14. 정산 완료			
	소계		3,886.5			
10	2014 국가대표선수 소청교육	대한체육회	70	2014. 7월~ 2014. 12월	2015. 6. 22.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 사항 인수인계 누락			
11	전략종목 실업팀 운영개 선 지원	대한체육회	2,890	2014. 5월~ 2015. 2월	2015. 10. 19.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 사항 인수인계 누락			
12	국제지구력 승마연맹 교류 포럼	협회	120	2014. 11. 29.~ 11. 30.	2015. 2. 25.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대행사인 ○○ 폐업으 로 보완이 지연 - 담당자 변경 등으로 정산 확정 지연			
13	광복 70주년 기념 자전거 국토순례	국민생활 체육회	50	2015. 10. 1.~ 2015. 10. 5.	2016. 3. 2.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 담당자 변경 등으로 정산 확정 지연 * 2017. 1. 9. 이후 2017. 2.16. 정산 완료			
14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창출 국제 심포지엄	-	30	2015. 6월~ 2015. 8월	2016. 3. 15.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사항 인수인계 누락 * 2017. 1. 9. 이후 2017. 1. 25. 정산 완료			
15	2015 전국청소년 특공무술대회 개최	-	20	2015. 11월	2015. 12. 21.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사항 인수인계 누락			
16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생활 체육회	300	2015. 6월~ 2015. 12월	2016. 3. 2.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사항 인수인계 누락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자	예산	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담당과
17	올림픽스포츠클럽 매각 관련 연구 용역	국민생활 체육회	30	2015. 11월~ 2015. 12월	2016. 3. 2.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사항 인수인계 누락 * 2017. 1. 9. 이후 2017. 1. 31. 정산 완료			
18	홈리스 건강축구 보급	-	150	2015. 4월~ 2015. 12월	2016. 1. 25.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 담당자 변경 등으로 정산 확정 지연 * 2017. 1. 9. 이후 2017. 1. 13. 정산 완료			
19	아리랑 합창경연대회	국립합창단	100	2015. 7월~ 2015. 12월	2016. 1. 29.	☒과
		미정산 사유	- 2016. 10월까지 9개월 동안 정산 업무 미수행, 2016. 12월 감사지원인사발령으 로 정산 확정 작업 지연			
20	장애인과 함께하는 제3회 미추홀 오픈 배드민턴 대회	-	50	2015. 12월~ 2016. 1월	2016. 3. 11.	■과
		미정산 사유	-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정산 사항 인수인계 누락			
21	통합체육회 설립준비	대한체육회	612	2016. 1월~ 2016. 7월	2016. 8. 12.	■과
		미정산 사유	- 케이스포츠 대응에 따른 업무 과다로 정산 확정 지연			
22	체육분야 국가자격 실효성 제고방안	☎☎학회	130	2015. 11월~ 2016. 4월	2016. 12. 13.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23	광복70주년 계기 남북체육 교류백서 발간	☎☎학회	100	2015. 11월~ 2016. 8월	2016. 12. 13.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24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추진 3년 성과와 향후 전략	☎☎학회	150	2015. 11월~ 2016. 8월	2016. 12. 13.	■과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소계		4,802			

주: 정산보고서 미제출 기준은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예비조사 첫날(2017. 1. 9.)을 기준으로 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미정산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보조 사업자명	예산 (백만 원)	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정산 확정일
1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사업	-	270	2015. 4. 1.~ 2016. 3. 31.	미제출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면 보조사업자들이 싫어한다는 사유 등으로 유선 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고, 문서로는 1회만 독촉공문 발송(2016. 8. 19.) * 2017. 1. 9. 이후 2017. 2. 17. 정산보고서 제출			
2	체육 단체 통합 준비 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	230	2015. 5. 1.~ 2016. 4. 30.	미제출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 2017. 1. 9. 이후 2017. 1. 23.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2. 2. 정산 확정			
3	←← 전국 직장인 탁구대회	-	50	2016. 3. 1.~ 2016. 5. 31.	미제출	미확정
		미정산 사유	- 연간사업(사업종료일이 연말)이라고 착각하여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지 않음 * 2017. 1. 9. 이후 2017. 2. 14. 정산보고서 제출			
4	골프재능기부 프로젝 트	-	50	2015. 12. 1.~ 2016. 6. 30.	미제출	미확정
		미정산 사유	- 실수로 정산보고서 제출 독촉 공문 미발송 * 2017. 1. 9. 이후 2017. 2. 9. 독촉 공문 발송			
5	스포츠4대악 근절 등 공정성 회복 홍보	-	50	2016. 4. 1.~ 2016. 6. 30.	미제출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 2017. 1. 9. 이후 2017. 2. 9.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2. 10 정산 확정			
6	무등기 배구대회	-	10	2016. 4. 29.~ 2016. 6. 30.	미제출	미확정
		미정산 사유	- 연간사업(사업종료일이 연말)이라고 착각하여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지 않음 * 2017. 1. 9. 이후 2017. 2. 14. 정산보고서 제출			
	소계		660			

연번	사업명	보조 사업자명	예산 (백만 원)	사업기간	정산보고 제출일	정산 확정일
7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	-	4,000	2015. 7. 27.~ 2016. 2. 29.	2016. 5. 13.	미확정
		미정산 사유	- 업무량이 많아 정산 확정이 지연됨 * 2017. 1. 9. 이후 2017. 2. 9. 정산 확정			
8	대학스포츠 기반 구축	-	1,700	2015. 1. 1.~ 2015. 12. 31.	2016. 5. 13.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 - 업무량이 많아 정산 확정이 지연됨			
9	세계치어리딩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파견	-	20	2016. 3. 1.~ 2016. 5. 30.	2016. 7. 22.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 2017. 1. 9. 이후 2017. 2. 14. 정산 확정			
10	찾아가는 꿈나무 골 프체험 교실	-	50	2015. 12. 1.~ 2016. 5. 31.	2016. 8. 9.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로 정산 증빙자료 제출을 독촉하면 보조사업자들이 싫어한다는 사유 등으로 유선으로 정산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문서로는 요청하지아니함			
11	발레연감 발간	-	20	2015. 1. 1.~ 2015. 12. 31	2016. 8. 9.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면 보조사업자들이 싫어한다는 사유 등으로 유 선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고, 문서로는 1회만 독촉 공문 발송(2016. 4. 5.)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 2017. 1. 9. 이후 2017. 2. 9. 정산 확정			
12	국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	400	2015. 1. 1.~ 2016. 6. 30.	2016. 9. 30.	미확정
		미정산 사유	- 문서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면 보조사업자들이 싫어한다는 사유로 유선으 로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고, 문서로는 독촉하지 아니함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 2017. 1. 9. 이후 2017. 2. 14. 정산 확정			
13	한국문화의 재발견 및 확산전시	-	2,500	2016. 1. 1.~ 2016. 6. 30.	2016. 10. 25.	미확정
		미정산 사유	- 연간사업(사업종료일이 연말)이라고 착각하여 정산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지 아니 함 -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 * 2017. 1. 9. 이후 2017. 2. 23. 정산 확정			
	소계		8,690			

주: 정산보고서 독촉 공문 및 정산 증빙자료 보완 요청 공문 발송 기준일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예비조사 첫날(2017. 1. 9.)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5]

공익사업적립금 자부담분 불인정 명세

(단위: 원)

연번	일자	업체명	내역	금액	불인정 내역
1	2015. 10. 19.	-	참가자 간식포장용지	670,000	부적격영수증 (간이영수증)
2	2015. 10. 19.	-	참가자 간식포장용지	22,500	부적격영수증 (거래명세서)
3	2015. 10. 19.	-	참가자 간식포장용지	84,000	부적격영수증 (거래명세서)
4	2015. 10. 19.	-	참가자 간식포장용지	78,400	부적격영수증 (거래명세서)
5	2015. 10. 23.	-	운영진 식대	58,000	부적격영수증 (간이영수증)
6	2015. 10. 23.	-	다과류(막대사탕 200개 등)	220,000	부적격영수증 (간이영수증)
7	2015. 10. 23.	-	레크레이션 운영물품(가위/풀 등)	32,000	부적격영수증 (간이영수증)
8	2015. 10. 24.	-	사무용품구매(A4용지 등)	10,500	부적격영수증 (간이영수증)
9	2015. 10. 24.	-	문구류	30,000	부적격영수증 (간이영수증)
10	2015. 11. 6.	※※	미디어홍보	5,720,000	허위보고
11	2015. 10. 23.	-	캠프준비 야근교통비	5,88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12	2015. 10. 23.	-	캠프 출발지 물품 이동 관련 교통비	30,00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13	2015. 10. 23.	-	ㄴㄴ빙상장 → ㄴㄴ리조트 운영요 원 교통비	54,00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계	-	-	-	7,015,280	-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별표 26]

보조금(주최단체지원금) 자부담분 불인정 명세

(단위: 원)

연번	사업명	일자	업체명	내역	금액	불인정 내역
1	스키캠프	2016. 1. 15.	-	교통비	38,02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2	"	2016. 1. 18.	-	물품배송퀵비	1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3	"	2016. 1. 29.	-	박스구매	35,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4	"	2016. 1. 29.	-	제작물 발송 퀵비	2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5	"	2016. 2. 2.	-	교통비	35,62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6	"	2016. 2. 2.	-	야근교통비	29,78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7	"	2016. 2. 3.	-	물품업체 퀵배송비	9,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8	"	2016. 2. 9.	-	야근교통비	33,28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9	"	2016. 2. 11.	-	사무국 → L口 (포스터, 리플렛 배송)	16,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10	"	2016. 2. 11.	-	물품업체 퀵배송비	1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11	"	2016. 2. 15.	-	업무 교통비	5,10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12	"	2016. 2. 15.	-	업무 교통비	3,80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13	"	2016. 2. 18.	※※	빙상캠프행사진행및운영	28,500,000	허위보고
14	"	2016. 2. 22.	-	빙상캠프 단체티 배송비	15,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15	"	2016. 2. 22.	-	신사 → 마포 배송비	1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16	"	2016. 2. 23.	-	야근택시비	29,70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17	"	2016. 2. 23.	-	야근택시비	31,80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18	"	2016. 2. 25.	-	의료진 대기실 난로기름 구매	25,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19	"	2016. 2. 26.	-	태릉 → 잠실	2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20	"	2016. 3. 4.	-	우체국 박스구매	2,6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21	빙상캠프	2015. 12. 19.	※※	온라인 광고대행	3,300,000	허위보고
22	"	2016. 12. 24.	-	사무용품 배송비	8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23	"	2015. 12. 30.	※※	스키캠프제작물 및 디자인	16,500,000	허위보고
24	"	2016. 1. 1.	-	교통비	28,74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25	"	2016. 1. 1.	-	교통비	9,32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26	"	2016. 1. 1.	-	교통비	33,02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27	"	2016. 1. 3.	-	교통비	30,08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28	"	2016. 1. 3.	-	교통비	29,48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29	"	2016. 1. 3.	-	교통비	7,080	경상경비로 사업과 무관
30	"	2016. 1. 4.	-	지도자 완장 구매	9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31	"	2016. 1. 5.	-	사무국 → 출발지 캠프물 품 운임비	4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32	"	2016. 1. 5.	-	사무국 → 출발지 캠프물 품 운임비	4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33	"	2016. 1. 6.	-	식음료 구매(지도자)	25,000	부적격영수증(개인현금영수증)

연번	사업명	일자	업체명	내역	금액	불인정 내역
34	"	2016. 1. 7.	-	스키캠프 지도자 간식	5,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35	"	2016. 1. 8.	-	인솔자 용품 수리비	120,000	개인성 경비
36	"	2016. 1. 8.	-	인솔자(교통비)	29,000	현금 사용
37	"	2016. 1. 9.	-	렌탈물품 배송(압구정-송파)	2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38	"	2016. 1. 11.	*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3,300,000	허위보고
39	"	2016. 1. 11.	-	빚조끼 배송비 (서울-횡계)	27,5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40	"	2016. 1. 13.	-	배송비	48,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41	"	2016. 1. 14.	-	사무용품 구입 (완패 부착)	1,435,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42	"	2016. 1. 14.	-	식비 (지도자)	870,000	부적격영수증
43	"	2016. 1. 15.	-	사무국용품 배송비	30,000	부적격영수증(간이영수증)
계	-	-	-	-	54,976,920	-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별표 27]

연구 미참여 명세 및 환수대상액 산정내역

1. (주)○○ 협약금액

(단위: 원)

정부지원금(A)	자부담금			합계 (E=A+D)	현금정부지분 (F=A/(A+B))
	현금(B)	현물(C)	소계(D=B+C)		
251,000,000	14,245,192	128,206,726	142,451,918	393,451,918	94.629%

2. 인건비 집행액

(단위: 원)

구분	성명	연구비	참여여부	불인정액	불인정액 합계
보조금분	-	32,850,000	-	-	86,569,270
	-	46,440,000	-	-	
	-	35,494,200	-	-	
	GK	24,425,100	미참여	24,425,100	
	-	18,412,800	미참여	18,412,800	
	-	13,967,100	미참여	13,967,100	
	-	12,969,450	미참여	12,969,450	
	-	3,329,040	미참여	3,329,040	
	-	3,606,460	미참여	3,606,460	
	-	10,563,300	-	-	
	-	15,573,600	-	-	
	-	9,859,320	미참여	9,859,320	
	-	5,548,400	-	-	
	-	9,206,400	-	-	
현물부담액	-	37,681,200	-	-	61,059,510
	-	8,461,800	미참여	8,461,800	
	-	17,713,500	-	-	
	-	6,675,750	미참여	6,675,750	
	-	16,652,250	미참여	16,652,250	
	-	14,404,500	미참여	14,404,500	
	-	14,865,210	미참여	14,865,210	
	-	6,325,000	-	-	
	-	5,427,500	-	-	
합계		370,451,880	-	147,628,780	-

3. 환수대상액

(단위: 원)

구분	금액
보조금분 불인정액 86,569,270원 × 정부지분 94.629%	81,919,634
현물 미투입액 전액	61,059,510
합계	142,979,144

[별표 28]

특정업체와의 분할 수익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기존	정당
			업체명	대표자				
1	용역	야외투표장 석면해체처리용역	주식회사 ≤ ≤	GS	2016.3.2	5,30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익계약	경쟁 입찰
2	용역	임목폐기물및소각폐기물처리용역			2016.3.28.	14,232		
3	용역	지하보도 소각대상폐기물 처리용역			2016.4.28.	9,688		
4	용역	테마파크 내 폐목재 처리용역			2016.8.3	9,790		
5	용역	임목및폐목재처리용역			2016.8.19.	9,561		
6	용역	소각 및 폐자재 처리			2016.9.8	9,673		
소계1		6건	-	-	-	58,244	-	-
7	용역	베뉴컨텐츠 변경 기획설계 용역	-	-	2016.6.20.	9,896	특정업체에 분할 수익계약	경쟁 입찰
8	용역	시계탑 제작설치			2016.9.13.	9,894		
9	용역	웨스턴 테마세면대 설치			2016.9.17.	9,900		
10	용역	트로이목마 내부 전시컨텐츠 용역			2016.9.19.	9,900		
11	용역	Wool Craft 캐릭터 기획제작			2016.10.2.	8,932		
소계2		5건	-	-	-	48,522	-	-
12	용역	인가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시행	-	-	2016.6.1.	8,80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익계약	경쟁 입찰
13	용역	GB관리계획 입안 용역			2015.8.13.	18,700		
14	용역	G/B 관리계획 건축도면 작성			2016.8.23.	9,000		
15	용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2016.8.25.	9,900		
소계3		4건	-	-	-	46,400	-	-
16	물품	분수광장 토기화분 구매	-	-	2016.9.28.	9,405	특정업체에 분할 수익계약	경쟁 입찰
17	물품	테마파크 화분 구매			2016.9.28.	8,668		
18	물품	화장실 테마화 초화류 설치			2016.10.12	3,110		
19	물품	렛츠런파크 서울 수목하부 보완용 초화류			2016.10.26.	19,170		
소계4		4건	-	-	-	40,353	-	-
20	물품	관리사무실 보양재 외 1건 구매설치	-	-	2016.7.8	3,74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익계약	경쟁 입찰
21	물품	베뉴 실외기 목재몰딩 제작설치			2016.8.22.	9,900		
22	물품	메인키친 차양 외 구매설치			2016.8.22.	9,394		
23	물품	이동식 가설건물 임차			2016.9.15.	9,777		
24	물품	야외무대 영상실 구매설치			2016.9.25.	3,850		
소계5		5건	-	-	-	36,661	-	-
25	용역	위니월드 퍼레이드카 설계	-	-	2016.4.29.	19,80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익계약	경쟁 입찰
26	용역	테마파크 콘텐츠 체험 운반구 설계용역			2016.5.23.	16,500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기존	정당
			업체명	대표자				
소계6		2건	-	-	-	36,300	-	-
27	물품	샘플베뉴 관련 소품구매	-	-	2016.3.23.	9,952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28	물품	PUB 테마화 소품 구매			2016.8.19.	9,897		
29	물품	웨스트펍 오크통 구매설치			2016.9.8.	2,444		
30	물품	테마화 소품 보완			2016.9.27.	9,984		
소계7		4건	-	-	-	32,277	-	-
31	물품	테마파크 전동화물카트 구매	-	-	2016.8.13.	19,80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32	물품	테마파크 화물전동카트 구매			2016.9.26.	9,900		
소계8		2건	-	-	-	29,700	-	-
33	물품	메인키친 주변 조명기구 구매	-	-	2016.9.26.	9,867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34	물품	키친 주변용 등기구 구매			2016.9.28.	9,768		
35	물품	잔디광장 및 비누공장 등기구 구매			2016.10.20.	9,020		
소계9		3건	-	-	-	28,655	-	-
36	물품	테마파크 웨스턴존 내외부 조명기구 구매	-	-	2016.6.22.	9,788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37	물품	마방 등 3개소 조명기구 구매			2016.9.15.	9,816		
38	물품	시계탑 등 3개소 경관조명기구 구매			2016.10.16.	5,841		
소계10		3건	-	-	-	25,445	-	-
39	물품	미화용 고압세척기 구매	-	-	2016.9.26.	8,80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40	물품	고객안내소 창고 외 1건			2016.10.1.	9,020		
41	물품	동절기 지하보도 경사로 보완 물품			2016.11.7.	6,820		
소계11		3건	-	-	-	24,640	-	-
42	물품	테마파크 F&B시설 가구 디자인용역	-	-	2016.6.1.	8,800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43	물품	위니프라자 가구 추가 구매			2016.9.28.	6,072		
44	물품	위니프라자 피크닉용 의탁자 구매			2016.9.23.	9,108		
소계12		3건	-	-	-	23,980	-	-
45	물품	테마파크 조경시설물 모델 제작	-	-	2016.2.1.	9,923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경쟁 입찰
46	물품	샘플베뉴 스튜디오형 제작			2016.2.15.	9,850		
47	물품	테마파크 배치모형 수정제작 용역			2016.3.12.	3,500		
소계13		3건	-	-	-	23,273	-	-
합계		13개 업체 47건	-	-	-	454,450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9]

수의 단가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물품명	납품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기존	정당
		업체명	대표자				
1	LED 경관 조명기구	-	-	2016. 3. 24.	63,941	수의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 리기준」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2		-	-	2016. 3. 24.	48,260		
3		-	-	2016. 3. 24.	96,200		
4		-	-	2016. 3. 24.	99,528		
5		-	-	2016. 3. 24.	26,288		
6		-	-	2016. 3. 24.	26,595		
7		-	-	2016. 5. 18.	98,408		
8		-	-	2016. 8. 29.	56,112		
9		-	-	2016. 8. 29.	19,640		
10		-	-	2016. 9. 30.	83,476		
11		-	-	2016.10.25.	58,300		
12		-	-	2016. 10. 31.	23,000		
13		-	-	2016. 11. 1.	19,020		
소계	13건	-	-	-	718,768	-	-
14	이동식화장실	-	-	2016. 10. 4.	52,700	수의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15		-	-	2016. 10. 4.	77,100		
16		-	-	2016. 11. 8.	85,670		
소계	3건	-	-	-	215,470	-	-
합계	16건	-	-	-	934,238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0]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정

일자	요청자	내용
2016. 10. 6.	기본협약서 (인천광역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부지의 토지가격 26,173억 원(용지비 19,581억 원, 간접비 5,592억 원, 기타 매몰비용 등 1,000억 원)과 이행보증금의 1차 납부시기를 2016. 11. 30., 2차 납부시기를 2016. 12. 31.까지 전액 원화 현금으로 입금, ㉠㉡는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시 제출한 '기업유치 상세계획'에 따라 기업 유치 등
2016. 10. 6.	투자자 측	'이행보증금의 1차 납부시기를 2016. 12. 30.로, 2차 납부시기를 2017. 1. 31.로 변경'하고 '㉠㉡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참여, 또는 불참 여부 합의 후 관련 문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함
2016. 10. 30.	투자자 측	이행보증금 2,617억 원 납부와 관련하여 2차 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이행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 등이 불합리하여 투자자 측의 안전장치 조항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 투자자 측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천도시공사에 1차 이행보증금 귀속 -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노력에서 의무조항으로, 인천광역시의 사업 토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노력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 - 이행보증금 지급시기를 1차는 협약 체결 후 90일 이내, 2차는 120일 이내 납부 등 주요한 14개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 요구
2016. 10. 31.	인천광역시	2016. 10. 6. 합의한 기본협약서 중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변경'(1차는 2016. 12. 30.로, 2차는 2017. 1. 31.), '㉠㉡의 사업자금조달 책임 명문화 및 기업유치계획 제출시기'만을 수정하여 투자자 측에 동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최종 계약(안)통보
2016. 11. 2.	투자자 측	인천광역시 최종 계약(안) 부동의 통보
2016. 11. 8.	인천광역시	㉠㉡에 검단 스마트시티 최종협약(안) 관련 입장 확인 요청
2016. 11. 16.	인천광역시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 종료 알림

자료: 인천광역시 및 ㉠㉡ 제출자료 재구성

VI. 개별처분요구 및 통보(인사자료)사항
